

예술정책 미래비전과 전략 연구

2017.1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예술정책 미래비전과 전략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10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 정 만

I 목 차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7

제 2 장 예술정책 이슈분석

제1절 역대 정부 예술정책 분석	13
1. 참여정부(노무현정부): 2003.02.~2008.02.	13
2. 이명박정부: 2008.02.~2013.02.	16
3. 박근혜정부: 2013.02.~2017.03.	19
4. 역대 정부별 예술정책의 성과와 한계	22
제2절 선행 정책계획 및 주요 연구 분석	23
1. 중장기 예술정책	23
2. 예술정책 주요 연구	26
제3절 예술정책 미래환경 분석	31
1. 사회문화적 환경(Socio-Cultural Environment)	31
2. 정치·경제적 환경(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36
3. 미래기술 환경(Technological Environment)	42

제 3 장 예술정책 미래 비전과 추진전략

제1절 예술정책 미래 비전과 방향	49
1. 새 정부 문화정책의 주요 이슈	49
2. 예술정책 미래 비전 및 핵심 가치	52
제2절 미래비전 추진 전략과 과제	54
전략 1. 예술지원 패러다임 재정립	55
전략 2. 예술 창작 환경 강화	56
전략 3. 예술 향유 저변 확대	58
전략 4. 예술시장 합리화 및 내실화	60
전략 5. 미래기술 수용 기반 조성	63

제 4 장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세부 사업

제1절 예술지원 패러다임 재정립	67
1. 한국형 팔길이 원칙정립	67
2. 예술지원 제도 재정비	84
제2절 예술 창작환경 강화	108
1. 예술인 창작권 강화	108
2. 예술인 사회안전망 확충	123
3. 예술공간 인프라 및 맞춤형 지원 확대	134
제3절 예술향유 저변 확대	157
1. 예술의 접근성 향상	157
2.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172
3. 예술의 지역공헌 활성화	195

제4절 예술시장 합리화 및 내실화	212
1. 예술시장 선순환 기반조성	212
2. 예술계 자생력 강화	227
3. 해외 예술시장 진출 고도화	243
제5절 미래기술 수용 기반 조성	255
1. 기술친화 참여기반 조성	255
2. 범용기술 예술융합 R&D촉진	270

표 목차

<표 1-1> 집필진 워크숍 개최 현황	8
<표 2-1> 참여정부의 핵심가치 및 주요 정책	14
<표 2-2> 이명박정부의 예술지원 4대원칙	16
<표 2-3> 박근혜정부 문화융성 정책	19
<표 2-4> 박근혜정부 국정 1기 '문화융성시대-문화가 있는 삶'	20
<표 2-5> 역대 정부 별 예술정책의 성과와 한계	22
<표 2-6> '창의한국' 5대 기본방향 및 27대 추진과제	23
<표 2-7> '예술의 힘' 4대 기본방향 및 14대 역점추진과제	24
<표 2-8> '문화예술정책 중장기 발전방안'의 방향과 과제	24
<표 2-9> '예술의 미래' 3대 목표 및 13대 과제	25
<표 2-10> 예술정책 주요 연구 정리	26
<표 2-11> 박물관·미술관 중장기 정책방향과 10대의 정책과제	27
<표 2-12> 미래환경변화에 따른 예술정책 방향 연구	29
<표 2-13> 문화진흥 기본계획 정책 과제	30
<표 2-14> 사회갈등 유형별 인식	34
<표 3-1> 미래비전 추진 전력과 과제	54
<표 4-1> 예술가권익위원회(가칭) 역할 및 기능 예시	81
<표 4-2> 문예기금 적립금 현황 및 전망	84
<표 4-3> 연도별 복권기금 전입금 규모	85
<표 4-4>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서 및 문화예술비전	86
<표 4-5> 국가재정법 출연금 조항 및 문화예술진흥법 기금조성 관련 현행 조항	87
<표 4-6> 일반회계 전입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88
<표 4-7> 연도별 복권기금 총사업비 대비 문화예술지원 사업비 지원현황	88
<표 4-8> 복권기금 법정배분비율 관련 법 개정(안)	89
<표 4-9> 복권기금 전입 시 문예기금 예산추계(안)	90
<표 4-10> 연도별 예술인활동증명 인원수(단위: 명)	108
<표 4-11> 예술인자격인증 연관 지원정책	109

<표 4-12> 심사위원회 심의실적	110
<표 4-13> 분야별 표준계약서 종류	113
<표 4-14> (사)한국물가정보의 표준노임가	114
<표 4-15> 서울문화재단의 단기기준공지(2016)	115
<표 4-16> 00문화재단: 2017년 조선통신사 예산 변경사례	115
<표 4-17> 2016년 예술인신문고 운영실적	116
<표 4-18> 우리나라 연령별 예술인 분포	119
<표 4-19> 경력단계별 창작활동 지원방향 수립	120
<표 4-20>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현황(단위: 명)	130
<표 4-21> 지자체 별 창작공간 현황	134
<표 4-22> 노르직 컬러 포인트 문화예술지원 프로젝트 사례	137
<표 4-23> 서계동 복합문화관광시설 건립 계획(안)	144
<표 4-24> 당인리 문화장착발전소 조성 계획(안)	145
<표 4-25>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총사업비(안)	146
<표 4-26> 전국문화시설 현황(단위: 개소)	152
<표 4-27> 프랑스 국립무용센터의 주요 기능	155
<표 4-28> 지역기반 상주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활용 예시(안)	159
<표 4-29> 지역기반 예술활동 지원방식의 유형별 예시(안)	160
<표 4-30> 인구대비 대상별 적정지원규모 산출 및 연차별 목표계획 (예시)	175
<표 4-31> 대상별 특화방향(안) 예시	180
<표 4-32> 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센터 유형 및 주요역할(안) 예시	186
<표 4-33> 지역별 실행체계 구축 모델(안)	191
<표 4-3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역할 분담(안)	193
<표 4-35> 문화예술인에게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단위: 억원, 명)	195
<표 4-36> 국내 주요 패널조사 현황	215
<표 4-37> 예술관객 패널조사 개요(안)	217
<표 4-38> 「예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구성	221
<표 4-39> 예술창업 단계별 멘토링 프로그램 체계	232
<표 4-40> 예술창업 멘토단 상설 운영 프로그램 체계	233
<표 4-41> 연차별 사업추진 개요	269
<표 4-42> 주요 장르별 R&D 사업추진 개요	279
<표 4-43> 문화예술 플래그십 R&D 사업의 추진체계	280

그림 목차

[그림 1-1] 예술 정책 미래 비전과 전략 연구의 목적	4
[그림 1-2] 연구 내용 흐름도	6
[그림 2-1] 합계 출산율 및 첫 자녀 출산 연령	31
[그림 2-2] 1인 가구 비율과 평균 가구원수	32
[그림 2-3]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	37
[그림 2-4]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39
[그림 2-5]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 매커니즘	41
[그림 3-1] 예술정책 미래 비전 및 핵심가치	52
[그림 4-1] 문화예술 시민 옴부즈만의 적용범위	80
[그림 4-2] 연도별 예술인활동증명 인원수(단위: 명)	109
[그림 4-3] 현행 사회보험지원 제도 현황	131
[그림 4-4] 독일 예술인사회보험법 상 작품 실사용자의 구분	132
[그림 4-5] 창작공간 현황	134
[그림 4-6] 아카이브의 지향 가치와 운영전략 구분	140
[그림 4-7] 지역기반 상주예술단체 활성화 방안(예시)	159
[그림 4-8] 지역상주예술단체 공간 및 역할/기능 개념도(예시)	160
[그림 4-9] 생애주기별 지원방안 선순환 체계 (예시)	181
[그림 4-10] 기초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 및 지원협의회 협력/추진체계(예시)	181
[그림 4-11] 문화관련 동호회 참여경험	195
[그림 4-12] 예술적 개입을 통한 가치창출 유형	225
[그림 4-13] I자형, 1자형 이중경력경로 모델	240
[그림 4-14] 예술경영 전문인력 양성방안 모듈	240

01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예술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종합적 대안 마련 시급

- 지난 정부 말에 발생한 국정농단 사태와 예술인 블랙리스트 사태 등으로 인해 예술 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저하 및 새로운 예술지원 정책 요구 부상
 - 2016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 순위는 37개 국가 중 21위로 가나, 인도와 비슷한 자리를 차지했으며, ‘언론의 자유’ 순위는 180개 국가 중 70위로 지속 하락 중으로 나타남
 - 또한 블랙리스트 사태 이전 예술분야 공공지원에 대해 예술인의 70.7%가 ‘공정하지 않다’(12.7% 공정하다)고 대답하였는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붕괴로 언론과 여론의 집중포화 이후 인식 악화 및 근원적인 쇄신책 마련 요구가 높음
-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5월, 장미 대선으로 출범한 새로운 정부는 예술정책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예술계 및 일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비전과 함께 내실 있는 정책 방향과 사업 마련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예술정책의 방향 모색 필요

- 예술정책 신뢰하락이라는 위기와 더불어 인구오너스 시대의 본격화, 브렉시트와 트럼프 정부 출범 등으로 인한 신고립주의, 중국의 사드 반발로 인한 동아시아 정세의 불안정,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산업/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래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울러 커다란 변화가 도래하고 있음
 - 예술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급변하고 있는 PEST(Political, Economic, Socio-Cultural, Technological)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새 정부 예술정책의 핵심 아젠다를 모색하는 연구 필요

■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새로운 정책방향 모색이 요구되는 시점

- 촛불혁명이 거세게 불었던 2016년 후반부터 예술정책 추진 환경과 새로운 방향에 대한 다양한 세미나, 포럼 등이 다수 개최되었는바, 이러한 목소리들이 예술정책의 언어로 어떻게 수렴될 수 있는지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음
 -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새로운 예술정책의 비전과 목표 등을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직접적인 배경이 됨

2 연구의 목적

■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적절한 정책비전과 방향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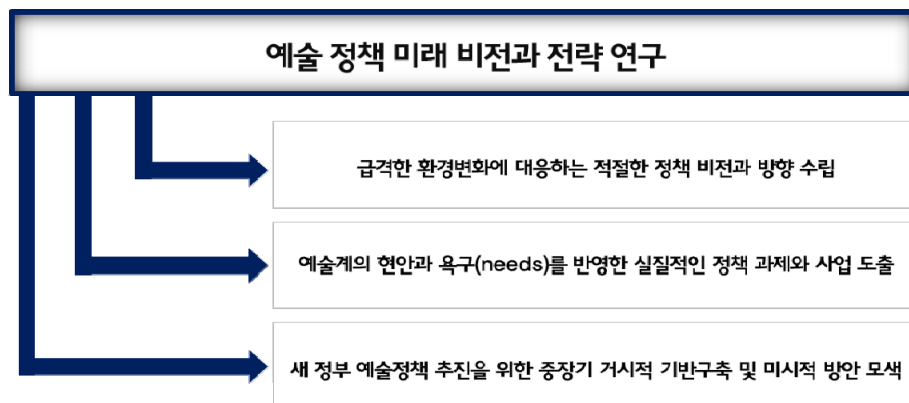
- 본 연구는 예술정책 추진 환경의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 외적인 요인(external forces)과 내적 역량(internal capabilities)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예술정책의 비전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방향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음

■ 예술계의 현안과 욕구(needs)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과제와 사업 도출

- 다양한 예술분야 및 예술정책 전문가들의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예술계의 현안을 파악하고 이에 조응하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임
 - 단순히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과거의 정책 사례를 탐구하고 정책의 변화 등을 참조하여 지속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담지한 정책 사업을 도출하고 추진 방안을 제시함

■ 새 정부 예술정책 추진을 위한 거시적 기반 및 미시적 방안 모색

-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직선제에 의한 보궐선거’로 수립된 새 정부는 ‘팔길 이원칙’의 재천명과 같은 거시적 담론에서부터 ‘예술인복지금고’와 같은 미시적인 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의 과제와 책무를 눈 앞에 두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술정책의 거시적 기반과 미시적 방안을 동시에 살피고 궁구하는 것 역시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임



[그림 1-1] 예술 정책 미래 비전과 전략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문재인 정부 임기(2017 ~ 2022년)
- 단 역대 정부의 예술정책 성과와 한계 분석은 <창의한국>과 <새예술정책>이 출간되었던 참여정부 시기부터 지난 정부까지를 분석 범위로 삼음(2003~2016년)

■ 공간적 범위

- 전국을 대상으로 정책 현황 분석 및 사업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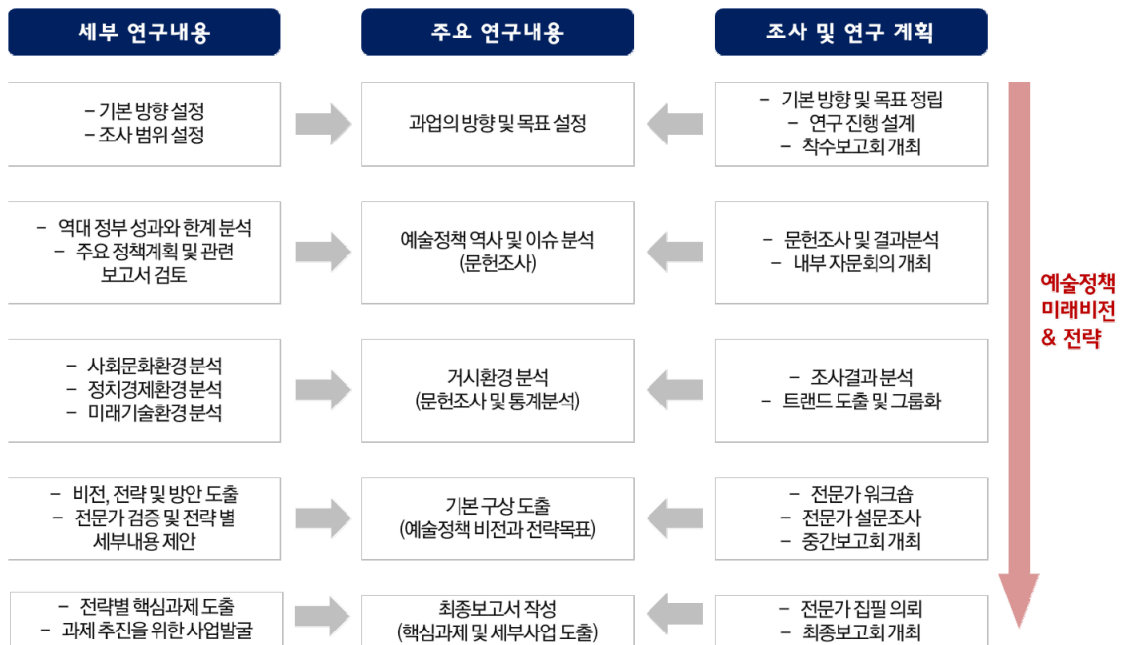
■ 대상적 범위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업무 담당범위
- 예술정책과, 공연전통예술과, 시각예술디자인과, 문화예술교육과의 네 개의 업무 영역 및 관련 예술장르 영역으로 제한
- 예술향유 영역을 포함하되, 문화정책관 및 지역문화정책관의 업무 범위와 겹치는 ‘문화복지 영역’은 수행범위에서 제외

■ 내용적 범위

- 역대 정부 예술정책의 흐름 및 주요 선행연구 분석
 - 참여정부 이후 현재까지 예술정책의 흐름을 거버넌스, 인프라, 주요 사업 등의 층위에서 검토하고, 정부별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여 국내 예술정책의 역사적 전개 파악
 - <미래환경 변화에 따른 예술정책 기본방향 연구>(양현미 외, 2012), <예술의 미래>(박영정 외, 2013) 등과 같이 예술정책 전반을 다루는 선행연구 및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 등 분야별 주요 연구 성과를 분석하여 예술정책의 주요 이슈 파악
- 예술정책을 둘러싼 거시환경 분석
 - 예술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적 환경을 주요 트렌드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

- 거시환경 분석을 통해 예술정책의 미래 이슈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추진 여건과 방향 등을 가늠하는 계기로 삼음
- 전문가 워크숍을 통한 비전과 전략목표 도출
 - 역사적 분석과 선행연구 분석, 거시환경 분석을 종합하여 비전과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검증 및 구체화
 - 전문가 워크숍은 기존에 예술정책 수립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 및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자들을 아울러 네 차례에 걸쳐 연인원 약 60인이 참여하여 진행
- 전문가 원고 집필 방식을 통한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 제안
 - 전문가 워크숍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예술정책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도출한 이후, 후속 워크숍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각 전략별로 핵심과제와 세부사업을 도출
 - 워크숍 참여 전문가들에게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추진 방향 및 내용', '추진 시 유의점' 등 세 가지 범주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집필 의뢰하고, 그 외의 사업은 연구진이 작성



[그림 1-2] 연구 내용 흐름도

2 연구의 방법

가. 다각적 문헌분석

- 역대 정부 예술정책 분석
 - 참여정부 이후 정부별 예술정책 성과와 한계에 초점을 맞추어 각종 백서와 정책 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예술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 및 맥락을 파악
- 선행계획 및 연구 분석
 - 〈창의한국〉과 〈예술의 힘〉 등 예술정책 전반을 다루는 정부 계획안은 물론 시각, 공연, 문학 분야 등에서 나온 정부 계획 및 최근의 대선 공약 등을 분석하여 주요 이슈 파악
 - 정부 계획만이 아니라 관련 계획 수립에 바탕이 된 정책연구 보고서 및 저서/논문 등을 고찰하여 분석의 너비와 깊이 제고
- 거시환경 분석
 - 일반적으로 정책 환경에 영향을 주는 최근의 거시 트렌드를 PEST 범주에 맞추어 집중 분석
 - 예술정책의 미래 전망에 조응하는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여 세밀하게 분석함

나. 예술분야 전문가 워크숍 및 분담 집필

- 전문가 워크숍 개최
 - 연구진행 단계별로 네 차례의 워크숍(6월 20일, 7월 26-27일, 8월 24일, 9월 8일)을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피드백을 주고 받는 환경을 조성하였음
 - 예상 집필진을 사전에 리스트업하여 전략목표와 과제 등을 점검하고,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집필진 매칭 및 리스트 보완과 수정 등이 이루어졌음
- 전문가 집필 의뢰
 -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 하에 총 32명의 집필진 명단을 확정
 - 도출된 예술정책의 세부 아젠다별로 연구진과 집필진을 매칭하여 전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원고 집필을 의뢰함
 - 9월 초 연구진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내·외부의 모든 집필진의 원고를 수령하고 검수한 후 최종보고서에 삽입

<표 1-1> 집필진 워크숍 개최 현황

	일시	장소	내용
1차	2017년 6월 20일	서울시 종로구 '스페이스 노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석자: 9명(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기반정책연구실) 연구원 내부 집필진 아젠다 공유 및 비전과 전략 모색
2차	2017년 7월 26일/27일	대학로 예술가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석자: 21명 내·외부 집필진 아젠다 공유 및 의견수렴 아젠다 세부사업의 업무 분담 및 집필 의뢰
3차	2017년 8월 24일	대학로 예술가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석자: 총28명 집필원고 1차 공유 및 라운드테이블 미래 예술정책을 위한 방향 수정(전체적인 맥락 확인)
4차	2017년 9월 8일	용산구 YEP LOF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석자: 5명 연구진 중심으로 집필의뢰 최종본 확인 및 검토 예술정책 미래 비전 최종 검토

다. 연구 추진 시 주요 고려사항

- 예술계의 목소리 수렴
 -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예술계는 다양한 장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러 포럼 및 세미나를 통해 격앙된 목소리를 내어왔는데, 이러한 목소리를 문헌분석 및 대면접촉을 통해 확인하고 이러한 요구 사항을 정책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연구 과정 전반에서 노력하였음
 - 예컨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6년 후반부터 2017년 중반까지 주최/주관했던 여러 포럼의 결과를 연구 내용에 반영하고자 하였음
-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 활용 극대화
 - 새 정부의 예술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비단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본 연구 결과가 현장에서 확산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음
 - 기존 예술정책 사업에 핵심적으로 참여한 인물들이나 새로운 예술정책의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인물들을 다양한 기관, 단체를 가로질러 발굴함으로써 향후 예술정책의 활력 제고를 위한 집필진 구성에 초점을 맞추었음
- 새정부 공약에 대한 분석 및 조응 필요
 - 탄핵 정국에서 치러진 대선에서 제시된 예술정책 관련 공약들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예술정책의 과제 발굴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공약 그 자체가 아니라 공약이 담고 있는 함의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통해 연구의 효용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이는 연구의 중반기에 발표된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단순히 공약이나 국정과제를 반영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보완 및 대안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다양한 문화정책 미래비전과의 일관성 담보
 - 현재 문화정책에 관한 다양한 분석과 미래 비전 도출을 위한 조사 및 연구들이 문체부의 여러 실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서로 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파편화된 내용들로 전락할 수 있음
 - 따라서 큰 틀에서 문화체육관광 정책의 새로운 기초를 반영하되, 예술정책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비전과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02

예술정책 이슈분석

제1절 역대 정부 예술정책 분석

1. 참여정부(노무현정부): 2003.02.~2008.02.
2. 이명박정부: 2008.02.~2013.02
3. 박근혜정부: 2013.02.~2017.03
4. 역대 정부별 예술정책의 성과와 한계

제2절 선행 정책 계획 및 주요 연구 분석

1. 중장기 예술정책
2. 예술정책 주요 연구

제3절 예술정책 미래환경 분석

1. 사회문화적 환경(Socio-Cultural Environment)
2. 정치·경제적 환경(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3. 미래기술 환경(Technological Environment)

제1절 역대 정부 예술정책 분석

1 참여정부(노무현정부): 2003.02.~2008.02.

가. 국정 방향 및 주요 정책

-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주요 정책적 이슈로 12대 과제중 하나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지방문화 육성’이 과제로 포함되어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인프라 구축, 특화 문화산업단지 조성 등을 제시함
 - 문화 분야 과제인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에서는 창조적 문화역량 강화, 문화적 창의성을 기반으로 문화산업 육성 등에 대한 세부 과제들이 제시
 - 문화적 가치 확산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영향평가 제도 도입 및 문화격차 해소 등이 제시된 바 있음
- 참여정부 예술정책은 기존 공급자 중심 창작지원 중심 정책기조에서 선회, 향유자 예술활동 지원을 강조하여 수요자 중심 예술지원 정책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한 것이 특징적이었으며, 예술의 본질적 가치 외에도 사회경제적 가치와 역할에 주목하였음
- 참여정부의 예술지원정책 중장기 비전서 「예술의 힘¹⁾ - 새로운 한국을 위한 예술정책」을 통해 ① 향유자 중심의 예술활동 강화, ② 실험 및 대안장르지원을 포용하는 예술의 창조성 증진, ③ 예술의 자생력 신장, ④ 열린 예술행정체계 구축을 4대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음
 - 이를 통해 예술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예술지원체계에서의 중앙정부 역할을 집행, 규제, 감독에서 조정 및 기획자로 선회하려는 노력을 시도함
 - 또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관심과 노력이 이전정부에 비해 적극적으로 선회됨
- 참여정부 시기에 대표적인 문화 계획으로는 「창의한국²⁾」이 대표적인 「창의한국」은 현장중심형 예술진흥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현장의 문화예술가 전문가들의 활발한 참여와 협업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음
 - 「창의한국」은 문화예술발전의 핵심동력이 바로 개인, 지역 국가의 ‘창의성’임을 강조하면서 문화예술이 사회, 정치, 경제발전의 토대임을 명확히 하였음

1) 문화관광부(2003), 「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 예술의 힘 미래를 창조합니다」

2) 문화관광부(2004), 「창의한국」

- 한류를 계기로 복합적이며, 다양하고, 창의적이고, 질 높은 콘텐츠제작의 필요성 강조하였으며 문화산업 경쟁력 기반 강화, 국내 수요기반과 해외진출 역량 강화, 문화콘텐츠 창작 및 유통구조개선, 지원기관 효율성 강화, 문화산업 환경 인프라 확대, 지역문화산업 활성화 등을 제시함
 - 세계문화산업 5대 강국 실현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문화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복지, 교육, 경제와의 관계에서 정책영역 재편
- 「창의한국」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새로운 중심축으로 ‘개인’, ‘지역’, ‘국가’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역동적인 문화국가’, ‘다원적인 문화사회’, ‘창의적인 문화시민’이라는 3대 목표로 설정하였음
- 당시 참여정부시기에 문화관광부에서는 3C(Creativity, Culture, Contents)를 활용하여 「문화강국(C-KOREA)³⁾」을 발표함으로 관광산업, 문화산업, 레저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적·경제적 접근을 분명히 제시하기도 하였음

나. 문화정책의 특징 및 주요 성과

-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특징을 보면, 김대중정부의 팔길이 원칙인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정책을 유지하고, ‘자율, 참여, 분권’이라는 세 가지 핵심가치를 정치의제로 추진됨에 따라 문화예술인의 자율성이 증대되면서 문화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

<표 2-1> 참여정부의 핵심가치 및 주요 정책

핵심가치	문화 정책
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예진흥원을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 및 독립적 운영 • 문화예술 지원방식을 소액다건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개선 • 문예진흥기금 민간자금회와 복권기금 유입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광부, 소비자 중심 정책을 위해 문화예술교육과 설치 • 문화행정혁신위원회 사업별 TFT 구성을 통해 민간전문가 참여 • 문화 소외지역 대상 생활문화 공간 조성
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광부 지역문화과 신설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 지역문화진흥 중장기 계획 • 지방문화원 지역문화 거점화

- 특히 문예진흥원이 문화예술위원회로서의 전환은 문화예술인 스스로 문화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
- 그러나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향유, 문화산업적 측면에서도 정책 간 갈등이 발생하여 역대정부와 마찬가지로 문화정책의 혼선을 피하지 못함

3) 문화관광부(2005), 「문화강국(C-KOREA) 2010」

- 문화예술단체의 경우 기존의 지원방식을 유지하려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와 진보적 성향의 문학가로 구성된 한국민족예술총연합(민예총)으로 나뉘는 현상이 발생함(류정아, 2015)
- 이 정부의 주요 성과로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문화예술위원회 체제로 개편 및 민간정책 결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 민간주도 자율적 예술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예산 1% 시대를 맞이함
- 또한 창의적 인재양성 및 미래 예술수요 개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탈장르 및 실험예술의 적극적 지원, 공공으로써의 문화예술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강화하면서 사회취약계층 대상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과 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향유권 확대 등 을 들 수 있음
- 예술소비 활성화를 위한 미술품 양도소득세 폐지('03), 미술은행 설립('05), 문화접대비 제도 시행('07) 및 기업과 예술의 만남(A&B) 사업 추진을 통해 예술계 자생력 강화를 모색하였음
 - 참여정부 이후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주민 참여형 문화예산이 쓰여졌으며 문화예술회관 등의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활성화되었음
- 참여정부 시기는 예술지원정책에서의 범주와 내용 및 지원체계 관련 제도 등과 관련한 큰 변화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질적 효과가 예술계 및 전 국민 차원에서 폭넓게 체감되는 수준으로 전개되지 못했던 점에서 한계가 있음
 - 특히, 민간주도 자율적 예술지원 전담기구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상 및 기능이 충분히 정립되지 못하고, 사회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접근성 확대 노력에도 여전히 계층 간 문화격차가 상존하며, 시설, 인력, 기반 등의 수도권 집중현상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현상 등이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서 지목되었음

2 이명박정부: 2008.02.~2013.02

가. 국정 방향 및 주요 정책

- 이명박정부는 ‘선진일류국가’라는 국가비전 아래 ‘섬기는 정부’, ‘능동적 복지’, ‘성숙한 세계국가’, ‘인재대국’, ‘활기찬 시장경제’를 국정 지표로 설정하고, 20대 국정 전략을 설정함⁴⁾
 - 국정 전략 중 문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으로는 ‘지방분권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으며 이는 이전 참여정부가 강조하였던 맥을 이어감
- 예술지원과 관련해서 ①선택과 집중, ②사후지원, ③간접지원, ④생활 속 예술 지원의 4대 원칙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함으로써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시도함
 - 참여정부 시기 강조되었던 예술의 사회적 역할 보다 본질적 가치를 강조하고 수월성 기반 예술지원 정책의 정체성 강화를 모색함
 - 예술행정에서의 실용성 및 효율성을 주요 가치로 강조한 것이 지원정책의 특징임

<표 2-2> 이명박정부의 예술지원 4대원칙

4대 원칙	문화 정책
선택과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활동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과 '직업' 으로 생각하는 프로페셔널 예술가와 전문예술단체 중심 지원 • 방만하고 일회적인 나눠주기식 지원의 반복에 따른 공공 의존도 심화에서 탈피하여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형성 • 철저한 평가 및 책임지원 체계 확립으로 지원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사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서' 나 '프레젠테이션' 만으로 예술단체를 사전에 선별하여 지원하는 제도에서 탈피하여 사후적 평가에 의한 지원체계 확립함으로써 단계적 성장 지원 • 예술단체의 자발적 창작 노력과 관객 개발 성과를 전제로 시장과 관객의 역할과 선택을 존중하는 풍토 형성 • 전문가 및 관객의 비평과 모니터링 활성화로 다면적인 예술역량 평가환경 조성
간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대관, 연습실 제공, 무대기술인력 지원 등에 의한 비용 절감으로 창작 활성화 도모 • 예술시장 규모의 확대에 따라 공연장, 미술관 등 매개역할을 하는 거점 공간의 프로듀서 및 기획자의 역할과 권한 확대 및 책임 강화 필요 • 공연전시 기획, 마케팅, 관객 개발 등 예술경영 역량 강화
생활 속 예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재단 중심 지원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현지밀착형 지원사업 확대 • 전통적인 유통경로인 공연전시 공간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들이 생활 하는 일터와 가정과 커뮤니티 속에서의 예술 향유기회 확대 • 전문 예술가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수요자가 직접 창작활동에 참여하는 생활 속 예술 활동 참여 여건 마련

4) 대한민국정부(2008), 「이명박 정부 10대 국정과제」

- 정부 출범 첫째 문화체육관광부(2008)는 국정 기조에 맞춰 「문화비전 2008~2012」를 발표하고 비전으로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을 내세우며, ‘창조적 예술의 나라’, ‘콘텐츠로 부유한 나라’, ‘브랜드가 있는 관광의 나라’, ‘어디서나 스포츠를 즐기는 나라’를 정책목표로 설정함
 - 추진전략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 ‘선택과 중심의 지원체계’, ‘실용과 효율의 문화정책’, ‘상생하는 문화와 산업’, ‘소통과 개방의 전략’, ‘문화를 통한 녹색성장’을 제시하고 32대 중점과제를 설정함
- 정권 후반기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세계와 함께 하는 대한민국 문화예술(K-Arts) 발전 전략」,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 전략」, 을 차례로 발표함
 - 전통문화, 예술, 콘텐츠 분야의 전략은 한류열풍의 지속성을 활용하여 문화 세계화를 추진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나. 문화정책의 특징 및 주요 성과

- 이명박정부의 문화정책은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을 목표로 국민들이 생활에서 문화적 삶을 누리고, 대외적으로 문화를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를 기조로 둬
 - 국격 제고와 국가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국가브랜드위원회 설치로 이어짐
- 문화 복지, 여가문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증가한 시기로 어르신여가활용 프로그램 개발처럼 생애주기별 접근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으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등 문화복지와 관련된 인프라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은 국정과제 37 ‘바람직한 국민 휴가 문화 정착’ 과 연관됨
 -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전성시, 농어촌 지역의 작은 도서관이나 유희시설의 문화공간화처럼 생활 속에서 문화향유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추진
- 예술정책의 주요성과로는 예술인복지법 제정을 통해 예술인 권익 및 사회권 신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나눔사업’ 및 ‘문화바우처’ 사업의 확대하는 한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 부족문제를 복권기금 외 경륜·경정기금이 추가적으로 늘리며 해결하고자 하였음
- 신규 사업으로 ‘방방곡곡 문화공감’ 도입을 통한 문화복지 정책 대상과 영역을 확장하였으며, 국립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시행 및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등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의 전 국민문화향유권 신장을 모색함

- 광역 시·도 중심 지역센터 지정을 통해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지역기반 활성화를 모색한 것을 들 수 있음
- 또한, 국립예술자료원('10), 국립현대무용단('10), 한국공연예술센터('10), 국립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10) 등을 신설하고, 국립극단 법인화, 국립예술기관의 공연장 대관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인하 및 국립예술단체 시·도 문예회관 순회공연 사업추진을 통해 국립문화예술기관의 예술성 제고와 공공성 확대를 모색함
-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기 예술정책은 예술진흥의 핵심재원인 문예진흥기금 고갈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구체적인 대체 재원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으나 광역 및 기초지자체별 문화재단의 연이은 설립으로 지역단위 문화 분권 기반이 마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지역 간 역할 분담 및 체계적인 전달체계 관련 제도적 정비와 구축이 미흡하여 한계점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사회소외계층 대상 문화향유권 확대노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핵심 정책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집중되는 가운데 중하위소득계층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 복지 수혜의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등 전 국민 차원에서의 일상적인 문화향유권 신장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 전체 기조와 연계되어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강조되었으나, 예술인들의 근본적인 고용환경 개선과 예술인의 경력개발 다변화 등이 함께 고민되기 보다는 문화시설 개관 시간 연장 등을 통한 간접적 고용 확대 혹은 예술강사 파견 확대 등 일자리 창출 자체가 핵심의제로서 다루지는 한계가 노정

3 박근혜정부: 2013.02.~2017.03

가. 국정 방향 및 주요 정책

- 박근혜 정부의 출범(2013)은 ‘희망의 세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설정하여 ‘문화융성’, ‘창조경제’, ‘국민행복’,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채택함
- 역대정부와 차별적으로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문화융성’을 국정 전면에 내세웠으며 ‘문화융성’의 실체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문화융성’을 ‘문화와 융성’, ‘문화를 통한 융성’으로 개념화 하여 문화가 중요하게 부각되어 문화계의 많은 기대를 모음
 - 정부 예술지원의 획기적 변화와 확장이 기대되었으나, 정권 시기 후반에 불거진 블랙리스트 사태 및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 문화 분야와 관련되며 국내 예술지원정책 역사상 가장 혼란과 부침이 많았던 시기로 볼 수 있음

<표 2-3> 박근혜정부 문화융성 정책

3대 전략	정책과제
문화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 문화 참여의 기회 확대와 문화 격차 해소 •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 • 생활문화공간 조성
문화 예술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의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 문화유산 보존 강화 및 활용확대 •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문화와 산업의 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스타일' 콘텐츠 산업 육성 • 고부가가치 융·복합 한국관광 실현 •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 ‘문화융성’ 기조의 10개 과제 중 ‘문화 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고부가가치 융·복합 한국관광 실현’이 집중관리과제로 선정되었으며 문화재정 2% 달성이 과제로 설정됨
- 이전 정부들과 달리,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에 의해 문화계획을 수립하여 국정 1기 「문화융성시대-문화가 있는 삶」이라는 지역 및 현장 의견 수렴으로 문화융성계획을 발표함
 - 2014년 11월 19일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선포(재25751조)하여 국민 개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우리 사회에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며, 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융성위원회를 설치함

<표 2-4> 박근혜정부 국정 1기 '문화융성시대-문화가 있는 삶'

8대 전략목표	27개 사업
1.문화융성을 이끄는 인문가치 정립 및 확산(전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문정신문화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인문정신문화의 가치정립과 연구기반 조성 인문정신문화 교육확산 인문정신문화의 대중화와 사회풍토 조성
2.전통문화의 생활화(전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문화 가치의 규명 및 문화적 정체성 확립 문화유산자원의 현대적 활용 확대 전통 의식주 생활양식의 보존과 육성
3.생활 속 문화 확산(전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 속 문화 공간 조성 등 지원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참여형 문화예술 활성화 문화복지 정책 개선
4.지역문화의 자생력 강화(전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 진흥 제도 정비 지역 간 문화의 균형적 발전 도모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확대
5.예술계 자율적 창작생태계 조성(전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복지 증진 예술창작지원 확대 및 지원제도 개선 문화예술 유통구조 선진화 및 관련 제도 개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예술향유계층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향유환경 조성
6.문화 융·복합 모델 발굴 및 육성 지원(전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융복합 창작공간 조성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창의융합산업 생태계 조성 장르간-부처간 융복합 사업 활성화
7.문화가치의 국내외 확산(전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정책 수립·집행에 문화적 관점 반영 문화가치 확산의 공감대 형성 및 인식 개선 문화가치 글로벌 확산과 한류 콘텐츠 다변화
8.아리랑의 재해석과 국민 축제화(전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리랑 공연의 지역 확산 국민 생활 속 아리랑 향유 여건 마련

- 국정 2기 문화융성계획에서는 3대 전략목표와 9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국정 1기 인문정신문화를 대신한 전통문화가 전면으로 부각되었으며 전통문화 부문에 대한 후속 계획으로 「전통문화의 세계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2015)이 그해 10월에 수립됨

나. 문화정책의 특징 및 주요 성과

- 박근혜정부의 문화정책은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국정 기조로 강조하며 주목받았지만, 인문정신문화나 전통문화가 부상하며 문화관련 계획들의 핵심에 위치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 박근혜정부 국정 1기 문화융성정책은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 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 「예술인복지법」,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의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전통문화 등의 향유 환경 조성 및 생활문화와 지역문화, 문화인력의 양성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의 성과가 있음

- 그러나 법적인 강제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조문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역대 정부에 비해 체계적인 계획 수립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 받음
- 한편으로 문화융성위원회의 ‘문화가 있는 삶’이라는 슬로건으로 상징되듯 사회소외 계층 중심으로 추진되던 선별적 문화복지 정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으로 확대 전환됨
 - 일상생활 속에서의 문화향유권 신장이 핵심 의제로 부상했던 바, 신규 설립된 생활문화진흥원 및 기초단위 생활문화센터 등을 통해 전 국민의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제고방안이 적극 모색되었음
-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수요개발 측면에서 강조되어 온 문화예술교육 지원 역시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일반시민, 근로자, 가족 및 어르신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생애주기 대상별 프로그램 다변화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가 추진되었으며 소외계층 대상 문화순회 사업 및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확대 등이 이뤄졌음
- 창작지원의 경우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단계부터, 기획, 창작, 유통 등 전반적 프로세스에 걸친 단계별 지원 등(창작산실사업) 단계별로 지원하는 방식을 시각예술분야까지 확대하고, 정기공모제를 수시접수/지원제도로 전환하여 예술현장 특성을 반영한 유연성을 강화하는 등 예술생태계 관점에서의 예술지원 방식의 변화를 모색한 것도 성과로 볼 수 있음
 - 또한, 예술의 산업화 의제 하에서 예술시장 활성화 및 예술계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이 적극 도입되고, 크라우드 펀딩 및 기업기부 활성화 등을 통한 예술지원을 위한 재원의 다변화가 모색됨
- 그러나 궁극적으로 블랙리스트 사태를 통해 명징하게 확인된 바와 같이 과거 예술의 정치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예술지원의 자율성, 독립성 및 공정성 훼손, 예술 존립의 본질인 예술인 표현의 자유 위축, 이로 인한 예술정책 및 전달 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 상실 등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함
 - 예술위의 위상 재정립 문제, 정책입안 기구인 문체부와 예술지원 실행기구 간의 역할 분담 방식 및 관계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는 상황

4 역대 정부별 예술정책의 성과와 한계

■ 역대 정부 예술정책 종합 및 개선과제

<표 2-5> 역대 정부 별 예술정책의 성과와 한계

	성과	한계
참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중심 자율적 예술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 문화예술교육 자원법 제정 및 정책 추진 • 소외계층 접근성 제고(문화바우처, 문화나눔사업) • 공공도서관/박물관/미술관 시설확충 • 생활친화형 문화공간 확충 • 미술품 양도소득세 폐지 • 문화접대비 제도 시행 • 기업과 예술의 만남(A&B)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지원전담기구로서 예술위 위상정립 미비 • 계층 및 지역 간 문화불균형 현상 상존 • 시설, 인력, 수요기반의 지역 간 불균형 • 산업적 관점에서의 예술시장 활성화 미비
이명박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지원 제도개선 모색 • 예술인복지법 등 예술인 창작안전망 제도 마련 • 사회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확대 • 국립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제도 시행 • 공공도서관 개관시장 연장 • 학교·사회문화예술교육 지역화 (지역센터 지정) • 국립예술기관 제도 정비 및 신설기관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진흥기금 대체재원 마련 미비 • 지역분권 차원에서 중앙-지역 체계적 전달체계 구축 미비 • 문화복지정책 수혜의 사각지대 잔존
박근혜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관련 법/제도적 기반 확충 • 문화복지정책 확대(선별적 복지 → 보편적 복지)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 생활문화진흥원 설립 및 생활문화센터 지정을 통한 문화의 일상화 모색 • 예술의 산업화로 자생력 및 가치창출 제고 모색 • 기업, 개인기부 등 지원주체 다변화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랙리스트사태로 인한 예술의 공공성 훼손 및 예술의 자율성, 독립성 침해 • 예술정책 및 주요기구(문체부, 예술위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 상실 • 문예진흥기금 대체재원 마련 시급 • 지역분권적 중앙-지역 간 전달체계 재정비 요청 • 예술강사 처우개선 및 고용문제 담보 • 사회보장체계로서의 예술인 복지정책 개선 미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15년간 예술정책은 전반적으로 그 범위와 영역이 확장되고 예술계를 하나의 생태계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창작, 향유, 유통 등의 단계적 선순환적 가치창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화되어 왔음
- 그러나 최근 발생한 일련의 불행한 사태로 인해 예술에 대한 정부지원의 근본적 철학이 재검토되고 지금까지의 예술지원 방식과 체계가 재정비되어야만 한다는 정책인식 및 사회적 여론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는 정치, 사회, 경제 및 기술적 차원에의 변화에도 예술계가 적절히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정책방향성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강조되고 있음

제2절 선행 정책계획 및 주요 연구 분석

1 중장기 예술정책

가. 중장기 예술 정책

- 예술정책을 중장기 비전으로 다룬 최초의 시도는 2004년 발표한 ‘창의한국’이라 할 수 있음. 2004년 5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된 ‘창의한국’은 정부연구소, 현장전문가, 공무원 간 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되었으며, 각종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200여명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였음
- ‘창의한국’에서는 국가의 미래가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달려있다고 보고, 발전의 동력인 개인, 지역, 국가의 창의성을 문화를 통해 인큐베이팅하기 위하여, 5대 기본방향과 27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음

<표 2-6> '창의한국' 5대 기본방향 및 27대 추진과제

5대 기본방향	27대 추진과제
1. 문화참여를 통한 창의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역량강화 •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심신의 조화 발달 • 문화활동 증진와 여가문화의 질 향상 •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 창의적인 청소년 문화의 육성 • 양성평등 문화 확립 • 문화적인 노후생활 보장 •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권 신장
2. 문화의 정체성과 창조적 다양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 언어문화의 형성 • 열린 민족문화로 다가서는 문화정체성 •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통의 현대적 계승 • 예술의 창조적 다양성 확대 • 스포츠시스템 개편과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
3. 문화를 국가발전의 신성장 동력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산업의 고도화 •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 • 스포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4. 국가균형발전의 문화적 토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문화역량 제고 •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환경 조성 • 문화시설의 균형적 확충과 문화활성화 • 국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정보체계 구축 • 지역문화의 역동적 특성화 • 농어촌의 문화환경 조성 • 신행정수도 문화기획
5.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교류협력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문화적 이미지 향상 •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문화다양성 증진 • 동북아 문화협력 강화 • 남북 문화교류 확대

- ‘창의한국’ 중 예술정책 의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것이 ‘새예술 정책’임. ‘새예술 정책’에서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 지역문화와 공통 부문에 대해 33개의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각 과제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 사업을 제안하고 있음
- 새예술 정책을 종합하여, 2004년 발간된 ‘예술의 힘’은 예술부문의 미래비전을 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4대 기본방향과 14대 역점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있음

<표 2-7> ‘예술의 힘’ 4대 기본방향 및 14대 역점추진과제

4대 기본방향	14대 역점추진과제
1. 향유자 중심의 예술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교육을 통한 문화향유능력 개발 • 생활속의 예술참여 활성화 • 예술의 공공성 제고
2. 예술의 창조성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르별 예술 창작활동 지원 확대 • 새롭고 실험적인 예술활동 지원 • 남북 및 국제예술교류를 통한 예술의 지평 확대 • 국립예술시설·단체의 기능 활성화 및 특화된 예술환경 조성
3. 예술의 자생력 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 • 예술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재교육 • 예술의 산업적 발전 지원 • 개성있는 지역문화 진흥
4. 열린 예술행정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지원시스템을 현장중심으로 전환 • 예술지원의 안정적 확충과 효과적 활용 • 예술진흥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 2012년 수립된 ‘문화예술정책 중장기 발전방안’⁵⁾ 연구에서는 주요 이슈별로 다음과 같이 중장기 문화예술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음

<표 2-8> ‘문화예술정책 중장기 발전방안’의 방향과 과제

4대 목표	8대 전략
미래창조사회에 대비, 창의성 배양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자원의 효율적 연계활용 • 문화체육관광부와 타부처간 협력 확대
글로벌 환경 및 남북한 분단 상황의 문화정체성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정책 강화 • 남북문화공동체 형성기반 조성
세계화 및 다문화환경의 문화다양성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 증진 • 국제문화교류 정책 추진체계 정립
국가차원에서의 보편적 향유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과 여가의 균형화 • 지역중심 문화예술지원정책 추진

5) 문화체육관광부(2012), 「문화예술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 이후 박근혜 정부의 예술정책 중기 비전으로, 2013년 ‘예술의 미래’가 발간되었으며, “예술로 만드는 창조사회, 국민의 일상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예술정책 비전 실현을 위하여 3대 목표와 13대 과제를 설정하였음

<표 2-9> '예술의 미래' 3대 목표 및 13대 과제

3대 목표	13대 과제
1.창작과 향유가 선순환하는 예술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지원 재원의 확대 및 안정화 • 예술인 사회 안전망 구축 • 예술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강화 • 예술창작 균형 지원 체계 구축 • 예술을 통한 문화시설·문화공간 활성화 • 예술의 접근성 강화와 생활예술 활성화
2.예술시장 활성화로 창조경제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 시장 성장 기반 조성 • 해외 예술시장 진출 체계적 지원 • 예술분야 연구·개발 지원 강화 • 기업과 예술의 새로운 만남 활성화
3.예술로 소통하는 사회통합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예술 활동 지원 강화 • 예술을 통한 소수자 문화 지원 강화 • 예술을 통한 문화간 소통 강화

- 중장기 예술정책마다 목표와 추진과제는 다르게 나타났으나, 공통적으로 장기적 비전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며, 현장과 학계, 행정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합목적적 정책 방향을 지향하였음. 따라서 정책수립 과정에서 수합된 각계의 의견을 재검토하고 현 시점에서 유의한 내용을 재수용할 필요가 있음

2 예술정책 주요 연구

- 창·의한국과 새예술 정책, 문화예술 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예술의 미래 등 중장기 비전을 제외한 예술 정책 관련 주요 연구는 각 장르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짐

<표 2-10> 예술정책 주요 연구 정리

분야	주요 연구
시각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예술중장기 발전방안연구(201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시각예술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연구(201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연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예술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 방안 연구(200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공연예술기관 초대관행 개선방안 연구 (201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물관/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미술관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200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선방안 연구(20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예/전통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예문화 중장기 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2012),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장애인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예술장르별 지원방안 연구(201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200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조성방안 연구 (200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방안 기초연구 (2004), 한국예술교육학회 · 문화예술교육정책 중장기 추진방안(201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생활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예술 지원정책방안 연구(2011)
예술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의 산업적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200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예술산업 미래전략 연구(2015),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법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2006), 이승엽 · 문화예술분야 세제지원 개선방안(200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예술인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200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주요 선진국의 문화예술지원제도 분석(2011), 한국정책학회 · 문화예술분야 세제개선 방안 연구(2013), 한미회계법인 ·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 세제혜택방안연구(2015), 한미회계법인
정책방향/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2005) 한국노동연구원 · 문화예술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2012),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미래환경변화에 따른 예술정책 방향 연구(2012),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201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예술분야 기술지원 인력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연구(2014), 청강문화산업대학 산학협력단 ·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향설계(201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예술의 국민경제적 위상과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2016), 산업연구원

- 시각예술의 경우, 중장기 발전계획과 함께, 시각예술분야 계약실태 조사를 근거로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가 이루어졌음

-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에서는 시각예술 창작환경변화와 기 진행되어 온 시각예술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시각예술 발전을 위한 생활 속 미술활동 환경조성과 미술시장 활성화, 해외 교류 및 홍보방안, 창작여건 조성 정책, 미술 인프라 확충 등의 중장기 정책을 제안 함
- 표준계약서 개발연구에서는 문화예술분야 계약제도 및 여건을 분석을 기초로 하여, 보조금 지원 기관 및 활용도가 높은 계약서를 중심으로, 시각예술 분야 계약 특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개발방안을 제시하였음
- 공연예술의 경우, 전문인력 양성과 초대관행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등이 주로 이루어짐
 - 전문인력 양성 연구에서는 공연예술경영 환경 변화와 공연예술경영의 인력양성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현장인력의 재교육, 인증제도 도입, 자격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무료 초대권 남발로 인한 유료관람객 감소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현황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초대 관행 개선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박물관·미술관에 대해서는 중장기 발전방안⁶⁾과 법 개정안이 연구되었으며, 공예문화의 중장기 진흥계획 수립, 장애인 예술 장르별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음
 - 박물관·미술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에서는 21세기 문화 대국 건설과 창의적인 문화시민 양성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7개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함

<표 2-11> 박물관·미술관 중장기 정책방향과 10대의 정책과제

박물관·미술관 중장기 정책목표	21세기문화대국 건설, 창의적문화시민양성
박물관·미술관 중장기 7대 정책방향	1.표준화에서 특성화로
	2.보존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
	3.국가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4.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5.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으로
	6.관료주의에수 경영합리화로
	7.학예연구원 중심에서 전문인력들의 네트워크중심으로
박물관·미술관 중장기 10대 정책과제	1.지역문화환경을 고려한 박물관 확충
	2.박물관의 특성화
	3.박물관 운영의 전문화
	4.박물관의 평생학습기능 강화
	5.박물관에 대한 접근성 제고
	6.박물관의 온라인 서비스 강화
	7.박물관 이용자의 만족도 극대화
	8.박물관을 통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9.박물관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10.박물관을 통한 문화외교 강화

6) 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2). 「박물관·미술관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제정된 지 20여년이 경과하면서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국립박물관 건립 시 사전평가제도 의무화, 평가인증제 도입, 기증유물에 대한 감정평가 제도 도입이 있으며, 그동안 질서 없고 부실한 운영을 바로잡고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역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 및 박물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기증유물에 대한 감정평가제도의 경우 개인 및 개인사업자 소유 유물의 박물관 및 미술관 기증을 활성화 시키고 이를 공공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음
- 또한 공예문화 중장기 정책 연구를 통해, 공예에 대한 인식개선과 우수공예품을 산업과 연계하는 진흥 방안이 제안 되었으며, 장애인 예술 정책으로, 장애인의 능동적인 향유와 예술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방안이 마련되었음
- 예술교육에 대해서는, 중장기발전계획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대한 연구가 다루어졌음
 - 예술교육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공교육과의 연계 강화, 평생 문화예술 학습체계 구축, 문화예술교육 전문성 강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강화, 지원환경 조성 등의 7개의 추진과제를 제시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전문가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의 지원체계 구축 방안,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안을 제안하였음
 -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지식중심으로 획일화되어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관련 프로그램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국외 사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교사, 재정, 교육환경프로그램, 전문강사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
 - 문화예술교육정책 중장기 추진방안 연구를 위해 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수요자 중심성, 지역화 및 네트워크화, 문화예술교육 내용 및 방법의 다원화 등의 정책 주요과제를 제시함
- 생활예술 지원정책과 예술산업의 발전 및 미래전략이 연구되었고, 예술진흥법 등 법제정 연구와 세제지원 등 제도 연구도 함께 이루어졌음
 - 문화의 민주화로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화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능동적 향유와 접근이 강조됨에 따라, 생활예술의 법적근거를 검토하고, 국내 현황과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생활예술의 지향점, 생활예술 활동, 생활예술 지원환경 등의 지원정책 방안을 제시함
 - 예술산업의 발전 및 미래전략 연구에서는, 미래 환경변화와 예술에 대해 고찰하고 예술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17개의 과제를 제시함

- 이와 함께,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을 예술진흥법으로 개정하여, 문화·예술관련 법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실효성 있는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범위확대, 예술기업의 취득세 중과세 배제, 문화예술기업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 개인의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법인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문화비 지출 특별공제 도입, 미술품구입 시 손비인정 범위 확대, 기업의 문화예술 교육훈련비 세액공제 도입 등의 세제 개선 방안 도입이 모색됨

<표 2-12> 미래환경변화에 따른 예술정책 방향 연구

과제	과제명
과제1	예술인 복지제고 "파편적 복지에 포괄적 복지로"
과제2	예술창작활동지원 "단선적 지원에서 입체적 지원으로"
과제3	예술공간의 지역편차해소 "편중에서 편재로"
과제4	'K-Arts' 국제교류 지원 "단선적 교류에서 종합무진 네트워크로"
과제5	예술의 접근성 향상 "소득수준에서 중층기준으로"
과제6	예술교육 강화 "선택적 교육에서 의무교육으로"
과제7	사회문제 해결형 예술창작 지원 "순수예술 지향에서 사회적 가치 제고로"
과제8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지원 "육성 단계에서 자생력 확보 단계로"
과제9	사회적 예술 유통 플랫폼 지원 "단발적 이벤트 중심에서 통합 생태계 조성으로"
과제10	공연예술 유통 UX확대 "전문공간 중심에서 탈 전문 공연장화로"
과제11	생활예술의 활성화 "보는 예술에서 하는 예술로"
과제12	예술을 통한 문화통합 "동화정책에서 상호이해 정책으로"
과제13	예술용품 산업육성 "영세 산업에서 세계 수준의 전문 산업으로"
과제14	예술시장 전문인력 양성 "부분적 양성에서 체계적 육성으로"
과제15	국내 유통 시스템 개선 "불투명한 시스템에서 신뢰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과제16	해외 유통 시스템 개선 "산발적 진출에서 전략적 진출로"
과제17	기업과 예술의 결합 증진 "후원 대상에서 가치 제공자로"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 그 외, 문화예술인력 양성 및 문화예술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등, 다양한 정책영역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짐
- 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영국, 미국, 프랑스의 등 국외 인력정책과 관련 기반 환경을 분석하여 단계적 인력구축 로드맵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문화예술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함

- 문화진흥 기본계획에서는 문화기본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서의 위상 및 문화진흥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내외 기본계획 사례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진흥을 위한 계획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

<표 2-13> 문화진흥 기본계획 정책 과제

구분	내용
국민행복을 키우는 문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가로 균형 있는 삶 추구 2.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3. 예술진흥을 통한 문화융성 토대 마련 4. 문화예술 지식자산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5.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진흥
문화유산과 정신문화의 창조적 활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자치로 뿌리내리는 지역문화 역량 강화 2. 삶의 가치를 공유하는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3. 문화의 다양성과 가치를 창출하는 개발과 활용 4. 전통문화의 창의적 발전과 산업화 5.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 6. 삶과 역사가 스며든 문화경관 조성
문화가치 창출과 사회적 확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상력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문화산업 진흥 2. 문화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 및 시장 활성화 3. 타 분야와의 협력을 통한 문화 가치의 확산 4. 국제문화교류·협력 활성화
문화융성을 여는 기반 조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 신뢰구축과 문화시민 의식 정립 2. 문화융성 싱크탱크 구축 3. 지역맞춤 문화시설 재배치 4. 문화재정 2% 확충 및 재정운용 효율화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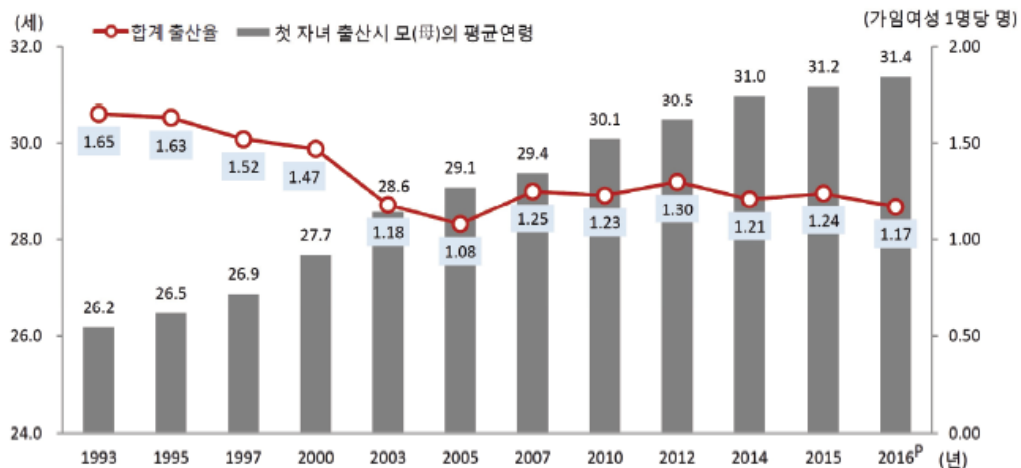
제3절 예술정책 미래환경 분석

1 사회문화적 환경(Socio-Cultural Environment)

가. 인구오너스 시대의 도래

■ 저출산, 초고령화 및 인구절벽의 현실화

- 1990년 이후 국내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16년 1.17명으로 나타나며, 첫째아이를 출산한 모(母)의 평균연령은 31.4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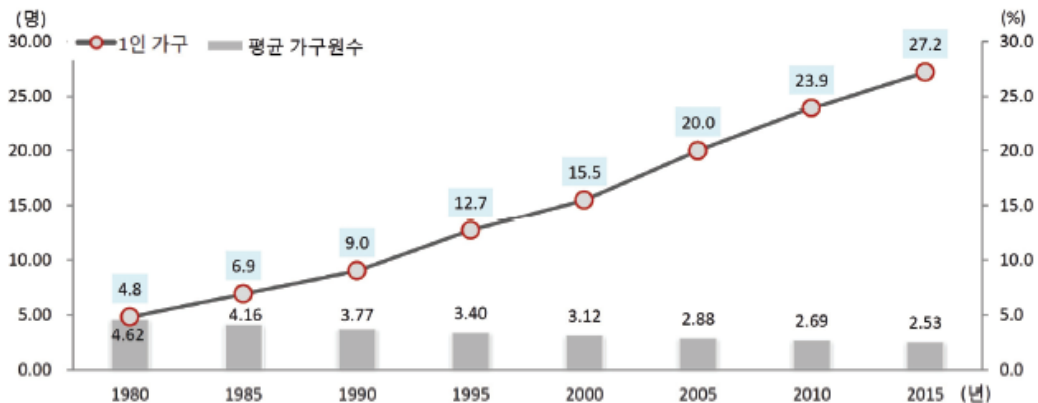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2016 한국의 사회지표 보도자료

[그림 2-1] 합계 출산율 및 첫 자녀 출산 연령

-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구조는 기존에 30~50대가 가장 넓은 형태에서 점차 윗부분이 확장되는 형태로 전환하고 있음
- 2016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3.2%로 65세 인구비율이 20%가 넘어서는 초고령사회가 2026년 이후 본격화되어 206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41.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이처럼 저출산과 초고령화 기조가 빠른 속도로 진행 되는 가운데, 생산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는 인구오너스 시대의 도래로 사회적인 부양부담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노년부양비는 2016년 18명에서 2030년에는 38.2명, 2060년에는 82.6명으로 증가

■ 1인 가구, 다문화 시대 등 가구유형의 변화 가속

- 우리나라의 혼인건수는 1990년 39만 9천 건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6년 28만 2천 건으로 나타난 반면, 이혼건수는 10만 7천 건으로 200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초혼연령은 남성의 경우 1990년 27.8세에서 2016년 32.8세로 초혼이 5년 늦춰졌으며, 여성의 경우 마찬가지로 24.8세에서 30.1세로 약 5년 정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남
- 초혼 연령 상승은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사회문화적 인식 변화에 따라 1인 가구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가 보임
 - 2010년 23.9%(422만 가구)의 비율로 나타났던 1인 가구는 2015년 27.2%(520만 가구)의 비율로 3.3%p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주된 가구형태였던 4인 가구가 2010년 2인 가구, 2015년 1인 가구로 변화함



*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2-2] 1인 가구 비율과 평균 가구원수

- 또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전 세계적인 외국인 유입의 증가로 인해 2015년 11월 기준 171만 1,013명의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총인구의 3.4%),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눈에 띄게 진행되고 있음
- 다문화사회는 한국사회의 인종, 민족, 문화 간 갈등이라는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의 새로운 하층계급을 형성하며 도시의 슬럼화를 야기할 수 있음
 - 다문화 가정 2세들의 불안정한 사회적응, 한국사회의 배타성으로 인한 다문화가족 차별,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제노포비아(xenophobia) 현상 등의 문제 발생

나. 불평등/양극화 심화로 인한 디스토피아 담론 확산

■ 부의 불평등과 포기하는 청년

- 불평등(inequality)과 격차(disparity)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바, 토마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미국의 전체소득의 50%는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상위 1%는 전체소득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지니계수 0.302로 부의 불평등 수준이 2000년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무계중심이라 할 수 있는 중산층의 규모 또한 1990년 75.4%에서 2010년 67.5%로 눈에 띄게 감소함
- 이러한 소득의 불평등은 교육, 주거, 문화, 건강, 여가 정도 등 다양한 차원에서 다음 세대로 전이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점차 불평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
 - 불평등은 사람의 행복감을 떨어뜨리며 자살, 우울증, 저출산, 과잉 경쟁, 일 중독 등 수많은 사회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책이 필요함
- 소득의 불평등, 한국사회의 부조리에 따라 최근 청년들은 N포 세대로 명명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를 ‘헬조선’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음
 - N포 세대는 사회·경제적 압박에 따라 연애, 결혼, 주택구입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신조어로 기존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 5포세대(3포 + 내집 마련, 인관관계) 등을 넘어서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위험사회, 피로사회, 무연사회, 갈등사회 등 다양한 디스토피아 사회에 관한 담론이 널리 확산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층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는바, 교육을 통해 계층이동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금수저’, ‘흙수저’ 등의 용어가 시사하듯 사회적 이동성은 극히 낮아지며 내일을 희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됨
 - 학령기 때부터 맹목적으로 좋은 성적과 좋은 대학이란 입시경쟁을 강요받고 대학에서는 등록금과 주거비용,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겸하며 대출의 늪에 빠지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졸업 후 취업경쟁의 심화로 취업 준비과정이 길어짐에 따라 취업준비에 대한 비용 가중, 대출상환능력이 떨어져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계층, 세대, 성별 간 갈등 가속화

- 한국사회의 긴장과 갈등은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소득계층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성별 간 갈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간 대립은 정체·경제·문화적 측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권력이양 시기 세대교체 공방과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바, 한국의 경우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갈등과 얽혀서 표출되는 양상을 보임
 - 2002년 대선 전·후, 박근혜 정부 탄핵, 2017년 대선 전·후 시기가 대표적인 세대 간 이념갈등의 표출기라 할 수 있는바, 광화문 등에서 벌어진 젊은 세대 중심의 ‘촛불 집회’와 기성세대 중심의 ‘태극기집회’의 충돌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음

<표 2-14> 사회갈등 유형별 인식

(단위 :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계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	16.0	46.2	32.0	4.4	1.4	100.0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33.6	45.9	17.6	1.4	1.5	100.0
지역간의 갈등	17.2	41.4	32.2	7.0	2.2	100.0
다문화 갈등	8.3	40.9	40.1	6.9	3.9	100.0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의식 조사 중 발췌

- 또한, 한국사회의 가족구조의 변화, 고령화, 장기간 지속된 경제 침체 등은 세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세대 간 자산과 소득의 불균형적 분포, 안정된 일자리 등 노동시장에서의 각 세대가 점유하는 기회의 차이가 경제영역에서의 세대갈등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기성세대의 경제적 영향력 강화되며, 지속적인 1인 가구의 증가 추세는 세대 간의 접촉 기회를 감소시켜 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약화시킴
- 마지막으로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여성, 외국인 노동자, 세월호 유족, 호남 지역 출신 등의 호칭 끝에 ‘충’을 붙이는 놀이가 확산되며 약자에 대한 조롱을 정치적 비판과 함께 엮어 혐오의 정치를 만들어낸 ‘일베(일간베스트)’의 출현으로 여혐, 남혐 등의 성별 갈등 역시 심화되고 있는 현실임

다. 지방소멸의 위기와 지역분권의 시급성

■ 도시쇠퇴/젠트리피케이션 등 지방의 위기 심화

- 2035년 전세계 도시인구의 비율은 20%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UN, 2014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천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메가시티(megacity)의 증가와 함께 모든 수준에서 도시 인구가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39.1%였던 도시화 비율은 산업화와 함께 1960년 중반대부터 급격히 상승하여 1990년대 75%로 달했으며, 2014년 말 전체인구의 91.7%에 달하는 인구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인구 감소에 따라 대도시를 제외한 여타 도시들의 쇠퇴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과거 도시 성장시대의 인구증가에 따라 만들어진 용도지역, 토지이용,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성장기반 도시계획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는 물론 여타의 주요도시들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즉 상권 활성화에 따라 임대료가 상승하여 기존에 머물던 소상공인이 떠나는 현상이 다수 확인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예술가가 이런 이주현상의 촉발자이자 피해자로 인식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예술-주도-젠트리피케이션(Art-led-Gentrification)은 문화정책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부분임
 - 대부분의 도시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지방정부차원의 정책적 대응 전략이 모색되고 있음

■ 지역의 자율, 분권, 협업 수준 확대 필요

- 성장시대의 도시 계획 패러다임을 무너뜨리는 도시쇠퇴 및 도시소멸 현상, 젠트리피케이션을 통해 발생하는 ‘문화백화 현상’ 등은 기존의 공간 및 지역의 쇠퇴를 초래하며, 장소성의 상실과 지역성의 파괴 등의 문제로 이어질 것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역분권’을 적극적인 정책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실질적인 의미에서 기존의 도시구조와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면서 중앙과 지역의 관계 재정립을 통해 지역의 자생력(자율)과 권한(분권) 제고 및 지역간 협력(협업) 확대가 시급함

2 정치·경제적 환경(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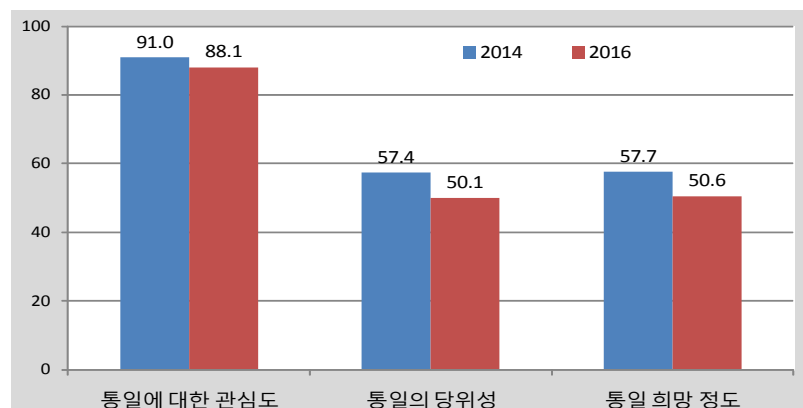
가. 신고립주의 체제의 부상

■ 권력의 다극화 및 네트워크 사회의 강화

- 오바마 행정부를 위해 2012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가 준비한 2030 미래보고서에는 이데올로기 분쟁의 증가, 세계적인 하드 파워의 한계에 따른 권력 분산을 메가트렌드로 제시함(NIC, 2012)
 - ‘America First’를 외치는 트럼프의 당선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을 핵심적인 계기로 삼고 있는 ‘신고립주의’ 확산 기조는 이와 같은 권력의 다극화 현상이 수면위로 올라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데올로기 분쟁은 국가 내부의 분쟁을 감소시키는 반면 국제적 분쟁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적으로 동아시아에 위치한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힘에 대한 불안감, 민주주의의 부상 등이 과거사와 얽히며 국가 간 긴장과 경쟁을 증폭할 것으로 전망하였음(NIC, 2012 & 2017)
 - 이와 같이 아시아의 규모와 힘이 성장함에 따라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으며, 박영숙·제론글램(2017)은 국제질서에서 아시아의 권력이 북미와 유럽을 능가하여 다국적 리더십으로 권력이 이양될 것으로 예측함
- 이렇듯 정치적인 환경이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대도시나 지역 그룹의 권한이 강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국가나 세계적인 기구보다 도시네트워크 혹은 지역네트워크의 권한이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NIC, 2012)
 - 또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주민입법제도, 예산의 주민 참여제도 등 국민이 정부에 개입하고, 정부와 국민의 소통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이 만들어져 신직접민주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됨
- 이와 같이 일종의 ‘네트워크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의 대면(face-to-face)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공동체의 구성은 약화될 것으로 보이며, 반면 디지털기술에 의해 네트워크화된 개인들의 직접적이고 자발적인 정치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북한 핵실험 사태를 통한 동아시아의 위기

- 2016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단행된 이후 2017년 9월에는 미국의 팜을 겨냥한 미사일 실험과 추가적인 핵실험이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적인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국들 사이의 긴장감 역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 2016년 설문조사 결과(최인수 외, 2016), 실제로 통일을 바라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88.1%)는 높게 나타났지만, 이는 2014년 기준 조사(91.0%)에 비해서는 낮아진 것으로, 이러한 인식 하락은 통일의 당위성이나 통일 희망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됨
 - 통일에 대한 관심도에 비해서 통일의 당위성이나 희망 정도의 약화가 상대적으로 더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우리 국민이 처한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 등이 녹록지 않다는 사실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해석됨



*자료: 최인수 외(2016) 및 마이크로밀엠브레인 컨텐츠사업부(2014).

[그림 2-3]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

- 이러한 가운데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남북 관계 단절의 지속,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로 인한 남북 긴장의 악화 등은 국내 정치 환경에서 중요 이슈가 되면서 통일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남북 간 이질화의 심화로 인해 불안을 증폭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임
- 국제정치 질서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구조적으로 대결해온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안보와 갈등을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바(김태현, 2017),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교류, 예술교류 등의 역할은 더욱 긴요해질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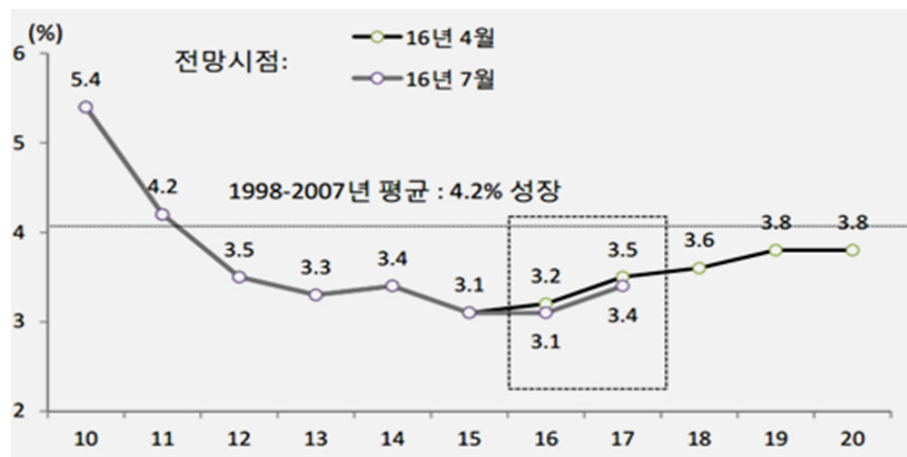
나. 뉴노멀시대의 등장

■ 저성장 시대의 일상화

- 국내 산업별 고용증감 추이(통계청, 2016)를 살펴보면, 일자리 중심의 고용시장이 정책운용에도 불구하고 여성·중 고령층, 일부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확대, 완만한 경기회복세 등의 한계로 취업자 수의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음
- 이는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이 주요 기관의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장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경기회복의 지연, 저성장의 지속 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과 관계가 있음
 - 저성장이 고착됨에 따라 전 세계적인 장기침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낮은 경제성장률로 인한 성장동력 약화, 불공정한 산업구조의 고착화 등이 거부할 수 없는 당연한 것으로서 새로운 일상적 기준으로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뉴노멀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
- 이러한 경기 회복 지연과 저성장의 지속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급과잉의 후유증과 원자재 가격의 약세 지속으로 투자심리 위축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과 과도한 가계 부채 부담 및 소득격차 확대로 소비의 둔화가 발생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하며,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상생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시점임
- 또한 요소투입형, 효율주도형 경제모형에서 벗어나서 혁신주도형 경제모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시점이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청년층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스타트업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함
 - 문화분야에서는 기존의 콘텐츠산업 중심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에만 국한하지 않고,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오픈갤러리, 모던한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예술시장 및 전후방연과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년(예술가)들의 새로운 도전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성장동력 약화로 제로섬 사회 우려

- 제로섬 사회는 사회 전체의 이익은 일정하여, 한쪽이 이득을 취하면 한쪽은 손해를 보게 되는 사회를 의미하는 말로 1980년 메사추세츠 공대의 레스터 서로 교수가 자신의 저서 『제로 섬 사회』 (Zero-Sum Society: Distribution and the Possibilities for Economic Change)에서 언급하며 확산되기 시작함
 - 그는 미국의 경제가 제로섬으로 갈수록 에너지 환경,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며, 이 때문에 이익을 보는 계층과 피해를 보는 계층이 충돌할 것이라고 전망함
- 2017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5%로 세계경제성장률(2.7%)보다 낮게 나타나는 데, 이는 기존 성장 동력의 고갈과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압축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작동해온 한국 경제시스템이 혼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July 2016

[그림 2-4]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 이러한 경제 침체 현상은 가계소득 둔화 및 부채 부담 증가로 인한 미래 불확실성으로 민간소비 부문에도 정체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2.0%)과 실업률(3.9%) 등과 함께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 2016년 청년실업률(9.8%) 역시 사상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이와 같은 청년실업률의 증가는 저성장을 고착화시키는 또 다른 주범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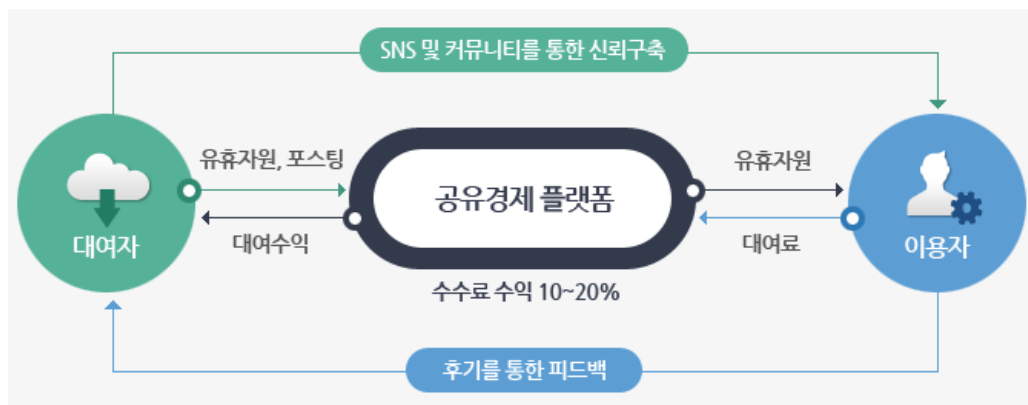
다. 다각적 대안경제의 모색

■ 사람 중심의 사회적 경제

- 이와 같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위기, 정치경제적 위기는 갑작스럽게 등장하거나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세계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초래 및 축적된 불평등과 갈등, 경쟁과 빈부격차, 환경 파괴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작지만 진지한 대안으로 대안경제 또는 사회적 경제가 등장하고 있는바, ‘사회적 경제’는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사람 중심의 경제활동’으로 여러 경제주체들을 존중하는 다양성의 경제로 이해할 수 있음
 - 사회적 경제는 1800년대 초 유럽과 미국에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상호부조조합, 커뮤니티비즈니스 등의 형태로 등장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대 농민협동조합과 도시 빈곤층들의 두레조합 형태로 처음 등장한 것으로 파악됨
- 사회적 경제의 주체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있으며 구조화된 실업문제, 고용불안, 심화되는 빈부격차, 쇠퇴하는 지역에 대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이 부각되고 있음
 - 사회적 기업: 이윤보다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협동조합: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 형태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이루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함.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며 저성장 시대의 대안경제 모델로 부상
 - 마을기업: 마을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며, 지역의 문제 해결 및 마을 경제 체계의 자립,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는 목적을 가진 기업체
 -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2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의 상호 협력을 통해 조합이나 공동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추구하는 기업체
- 사회적 경제는 최근 들어 전 세계적 동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장경제의 위기가 도래하면 사회적경제가 부상하고, 위기가 가라앉으면 사회적경제도 가라앉는 현상이 반복됨
 - 공식과 비공식, 영리와 비영리, 공과 사의 경계에 존재하는 형식적 특성이 주목됨

■ 공유경제 활성화

-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한번 생산된 제품(유·무형)을 여러 명이 공유해 쓰는, 협력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를 기반으로 한 경제방식을 의미하며, 다면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존의 가치사슬을 넘어선 가치네트워크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주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하며, 최근 공유경제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기술적 요인이 융합되어 대두
 -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차량공유서비스 ‘우버’, 숙박공유사이트 ‘에어비엔비’ 등이 존재하며 국내에서는 최근 카카오택시, 소카 등이 주목됨



*자료: 부산경제진흥원

[그림 2-5]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 매커니즘

- 2010년 이후 세계적으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공유경제가 본격 상용화 되는 티핑 포인트를 2025년으로 전망하고 PwC는 2025년 공유 경제 시장 규모를 3,350억 달러로 예상함
- 젊은 소비세대를 중심으로 온디맨드형 서비스, 비용 절감, 협력소비, 온라인 거래 등 우수한 ICT, 모바일 인프라를 기반으로 공유경제 문화가 빠르게 확산 중이며, 정부차원에서도 공유경제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 공유분야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인증 및 투자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
 - 서울시는 2012년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한 이후 조례 제정, 온라인 플랫폼 ‘공유허브’ 구축에 나섰고, 부산시도 2014년 ‘공유경제 사업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

3 미래기술 환경(Technological Environment)

가. 새로운 범용기술의 등장

■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동화/지능화의 진화

- 2016년 다보스 포럼의 핵심의제로 선정된 ‘제 4차 산업혁명’이 최근 정책 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불과 1년 사이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정부 및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의 도래를 상수로 받아들이면서 각양각색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
- 2000년대 들어 빅데이터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함에 따라 인공지능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으며,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머신러닝 기술 등의 발달로 기계의 자동화, 지능화는 기존의 단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로 진화하고 있음
 - 현재 감독된 학습(supervised learning)을 통해 작동하는 인공지능은 일종의 가능한 모든 데이터(빅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기계가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한 것으로 빅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어려운 분야 즉, 감독되지 않은 학습(unsupervised learning)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적용이 제한적인 실정임
- 하지만 빅데이터 기술의 상용화로 인해 딥러닝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인공지능이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신경망분석방법이 정교화 된다면 기술적 특이점(technological singularity) 도래가 조기화 될 것으로 예상됨
 - 기술적 특이점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시점을 의미하며, 이 시점과 관련하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자이트가이스트 2015 런던’ 컨퍼런스에서 100년 안에 기술적 특이점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특이점이 온다’의 저자 레이 커즈와일(2007)은 2045년 경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함
- 이와 같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과거 증기기관, 전기와 내연기관, 컴퓨터와 인터넷이 각각 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 관하여 담당했던 역할을 맡으면서, 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 작동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기술발전에 대하여, 과거 네드 러드가 이끌었던 러다이트 운동의 역할을 상기하면서, 인공지능의 발전은 점차적으로 가속화 되어 인류의 생활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인류를 위협하는 기술이 될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 설계를 통제해야 된다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음

■ 새로운 기술군이 이끄는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

- 4차 산업혁명은 과거 산업혁명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산업혁명’으로서, 인공지능/빅데이터라는 범용기술과 함께 IOT, 로봇틱스, 합성생물학, 블록체인, VR/AR/MR 등의 핵심기술을 통해서 모든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음
 - 이러한 핵심기술들은 IC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기술 분석 리포트인 가트너 10대 전략기술(2016), 미래준비위원회에서 도출한 ‘향후 10년을 이끌 15대 핵심기술’, 그 밖에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저서 및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음
- 이러한 기술들은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들 외에도 다른 분야에 쉽게 적용될 수 있으며, 서로간의 융합과 연계 역시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연쇄적인 기술변화를 초래하면서 향후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촉진할 것임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무인주행차나 드론 택시, 알파고나 딥드림 등의 사례는 빅데이터 기술의 상용화로 인공지능 기술이 정교해지면서 가능해진 것들로,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에 비추어보면 향후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IOT와 스마트 시티: IOT의 필수적인 네트워크 센서의 가격 하락과 IP 주소의 증가로 인해 사람과 사물, 기계가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만물인터넷 시대가 도래하여 스마트 홈,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등 물리적인 공간의 변화를 초래함
 - 로봇과 합성생물학: 휴머노이드 로봇,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 등의 투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윤리적인 문제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합성생물학의 유전자 에디팅 기술이 인류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3D 프린터와 스마트 앱: 온디맨드 경제와 공유경제 등 새로운 생산과 소비 방식이 인터넷과 모바일 등의 스마트앱을 활용한 O2O 서비스로 만개함. 3D 프린터의 적층가공 방식의 발전으로 3D프린터로 제작한 상품 등의 DIY 제조업 실현을 앞당기고 있음
 - VR, AR, MR: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결합은 가상현실(Virtual Reality)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간의 시각적 체험, 경험의 패러다임을 바꿈
 - SNS와 블록체인: 현대 사회에 특징 중 하나로 꼽히는 SNS를 통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네트워크 효과가 확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데이터마이닝 기술이 함께 발전하였으며, 블록체인 기술까지 결합함에 따라 정치적 측면에서 직접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해짐

나. 초연결사회의 초개인화된 시민-소비자의 탄생

■ 만물인터넷(IEO) 도입을 통한 스마트 장소성 확산

- 자동화 및 초지능화를 기반으로 초연결시대(hyper-connected society)가 도래하는 가운데, 유비쿼터스 컴퓨팅, 웨어러블 인터넷 등의 기술발전으로 IOT를 넘어 IOE(Internet If Everything)의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음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작동하지 않는 영역은 점차적으로 좁아지며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홈 등 이미 만물인터넷은 상당부분 현실화되고 있는바, 이러한 기술들은 초연결사회에 대한 전망을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사람과 사물, 기계 사이의 연결/융합/공진화를 통해 과거의 인식을 뒤흔들고 있음
- IOT에 기반한 스마트홈,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는 실시간으로 집, 공장, 도시의 상황을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으며, 안전·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표준이 마련된 이후에는 모든 장소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 초연결사회를 특징짓는 스마트 장소성은 결국 초개인화된 향유 방식의 확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며, 사람들은 자신에게 최적화된 상황을 조성하는 것을 쉽게 이룩하는 동시에 당연하게 생각함으로 개인취향이 고도화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임

■ 초개인화, 혼합현실이 이끄는 새로운 인식론

- 이처럼 만물인터넷에 따라 도래된 초연결사회에서는 더 이상 다수를 위한 소품종 대량생산은 주목을 받기 어려우며, 초개인화된 소비자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경쟁하는 새로운 수요/공급의 법칙이 작동하게 될 것임
 - 기술발달을 통한 온디맨드 경제, 공유경제, DIY 경제 등은 초개인화된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춰 급속하게 발달될 것이며, 과거의 수동적이고 일방적인 push-pull 패러다임 또한 pull-push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면서 협업창작이 일반화될 것임
- 한편 VR/AR 기술은 게임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적인 문제(그래픽의 완성도, 어지럼증 등)를 상당 부분 해결하였으며, 이러한 기술은 현실과 가상현실, 증강현실의 구분과 간섭, 혼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새로운 세대와 함께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예측됨
 - VR/AR 기술은 최근 체험을 통한 교육, 훈련 등 적용 분야가 늘어나고 있으며, 나아가 관광이나 광고, 개인화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에도 적용이 모색되고 있음

다. 포스트 휴먼시대의 도래

■ '사이보그'로서 인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

- 현재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정부와 언론 그리고 기업의 관심은 주로 기술변화와 관련한 일자리 감소(단순 업무의 기계화 등)에 치중해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의 범용기술과 핵심기술군의 부상은 단순히 기술과 산업 부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론과 인식론, 그리고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혁명 등을 통해, 그리고 이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해 '자신의 신체 및 정신의 일부를 기계화한 사이보그'로서, 인류는 과거 짐승과 구별되는 정체성만이 아니라 이제는 기계와 구분되는 정체성을 모색해야한다는 과제를 갖게 되었음
- 로봇틱스 기술, 합성생물학 기술 등이 급격히 발달하여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된다면, 말 그대로 '포스트 휴먼' 시대는 즉자적으로 도래하게 될 것임
 - 기술적 특이점(Technological singularity)이 가까워오면서, 인류가 경험하는 초연결 사회, 초개인화 시대, 협업창작과 혼합현실의 문법 등은 기술과 산업부문을 포함한 문화, 복지, 주거, 가족 정책 등 모든 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임
- 새로운 시대와 인류,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위해 미래 환경에 대한 세밀하고 다각적인 분석과 함께, 과감하고 용감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로봇 및 합성생물학 등의 윤리적 문제 초래

- 로봇과 합성생물학은 미래 환경을 이끌 핵심 기술로 손꼽히고 있지만, 두 기술 모두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대한 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함
 -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단순 로봇과 다르게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의 경우 적은 비용으로 현존하는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인간의 지능과 감정처리 방식을 거의 완벽하게 되는 경우 인간과 구분되는 로봇의 고유한 윤리학 또는 인간 존재에 대한 윤리학에 대한 복잡하고 미묘한 논의가 부상할 것으로 예측됨
- 기계와 인간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포스트 휴먼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수밖에 없으며, 인간이 기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 국한되지 않고 인간과 기계의 공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부상할 것임

03

예술정책 미래 비전과 추진전략

제1절 예술정책 미래 비전과 방향

1. 새 정부 문화정책의 주요 이슈
2. 예술정책 미래 비전 및 핵심 가치

제2절 미래비전 추진 전략과 과제

- 전략 1. 예술지원 패러다임 재정립
- 전략 2. 예술 창작 환경 강화
- 전략 3. 예술 향유 저변 확대
- 전략 4. 예술시장 합리화 및 내실화
- 전략 5. 미래기술 수용 기반 조성

제1절 예술정책 미래 비전과 방향

1 새 정부 문화정책의 주요 이슈

- 앞 장에서는 역대정부 예술정책의 흐름을 분석하고, 예술정책과 관련한 주요 정책 계획들을 검토하였으며,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환경변화는 무엇이며 그것들이 어떻게 예술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고찰하였음
-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예술정책의 미래 비전과 방향을 도출한다고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2017년 5월 출범한 새 정부의 정책 지향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번 절에서는 대선 공약, 100대 국정과제 등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문화정책 주요 이슈를 점검함

■ 대선 공약 및 100대 국정과제

-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2017년 5월 ‘장미대선’이 최초의 ‘대통령 직선제에 의한 보궐선거’로 치러졌음
 - 국정농단, 적폐청산 등 특수한 위기 상황에 대한 입장이 대선의 화두로 제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예술인 블랙리스트’를 매개로 예술가의 기본 권리,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정책의 거버넌스 원리(팔길이 원칙) 등이 전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되었음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문화부문 공약으로써 ① 예술인의 문화복지 사각지대 해소, ②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③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④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⑤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으로 문화유산의 가치 높임, ⑥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문화균형 발전, ⑦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 ⑧ 쉽표가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실현을 제시하였음
- 또한 대통령 취임 이후 2017년 7월 19일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표하였는 바, 동 계획은 새 정부의 국가비전, 국정목표와 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담고 있음
 -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임
 - 문화정책은 위의 국정 목표 모두와 연관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국정 목표 실현을 위한 20대 국정 전략에서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라는 전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 한편 이러한 틀거지 아래 제시된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는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문체부),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문체부),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문체부)이 직접적으로 문화정책과 연관되는 과제임

■ 주요 발언 및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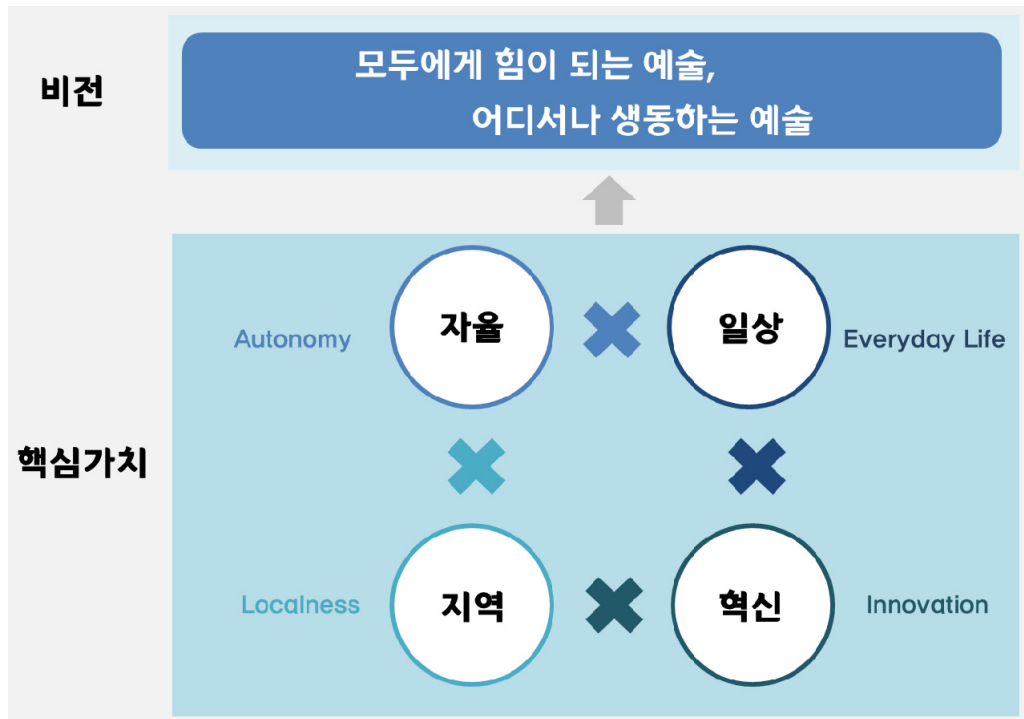
- 이와 같은 공약과 국정 과제는 새 정부 문화정책 추진의 중장기적 기반으로 작동하는 바, 같은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종환 문화부 장관의 주요 발언과 인터뷰 역시 검토가 필요함
- 문재인 대통령은 ‘팔길이 원칙’을 문화예술 정책의 제1 원칙으로 다시금 천명하였으며, 예술인의 기본권과 창작권에 대해 후보 시절부터 취임 이후까지 여러 차례 강조해왔음
 - 2017년 4월, 대선 이전에 진행된 인터뷰에서는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선언하였음
 - 2017년 8월 30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핵심정책 토의’ 중에는 “예술인의 창작권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며 “어떤 정부도 어떤 권력도 이 기본권을 제약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가장 많이 고통을 받았고, 업무적으로 힘들었던 부처가 문체부가 아닐까 생각된다”며 “정부의 부당한 개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히 제도를 정비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함
 - 같은 토론회에서 문체부 관계자들에게는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불공정”을 시정하는 것과 “젊은 창작인들의 열정페이”를 극복하는 것, “예술인들에게 창작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에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특별히 요청하였음
- 문재인 정부의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된 도종환 장관 역시 적폐청산과 기본권리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방향과 함께 보다 구체적으로 새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여러 자리에서 천명한 바 있음
 - “먼저 국민이 행복실현을 목표로 하여 문화활동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도서관과 미술관, 문화, 예술, 교육 스포츠 활동을 접하게 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이웃과 함께 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로 공정한 문화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술인 복지를 튼튼히 하고 문화예술을

위해 자생력을 키워 정부 사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문화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창작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시스템 위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 셋째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물론 사회 안전과 경제 발전에도 문화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 속의 문화가 다채롭고 풍요로워질 때 건강한 공동체의 회복도 가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도 전인할 수 있습니다.” (20170630_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 “다시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 “예술인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20170619_제50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취임사 중)
-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정책을 수립할 때,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문화예술·체육·관광·콘텐츠 등 문체부 전 영역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겠다”고 선언함(20170809_모두와 함께하는 문화정책 포럼 중)

2 예술정책 미래 비전 및 핵심 가치

- 역대정부 예술정책, 예술정책 관련 주요 계획, 환경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고, 새 정부의 주요 공약과 국정 과제를 검토하여 본 연구진은 예술정책 미래 비전과 핵심 가치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음



[그림 3-1] 예술정책 미래 비전 및 핵심가치

■ '자율', '일상', '지역', '혁신' 이라는 핵심 가치

- ‘자율’(autonomy)이란 가치는 팔길이 원칙과 같이 문화부문 공공기관 운영 및 예술 지원 정책의 대원칙을 반영하는 것이자, 블랙리스트를 통해 억압된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회복하는 동시에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예술 향유와 자율적인 예술 활동 참여 등을 포괄함
- ‘일상’(everyday life)이란 가치는 예술이 우리의 삶과 유리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가까이 존재하는 것이며,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치 역시 특정한 예술 공간에서만 아니라 온 국민의 일반적인 생활 터전이나 과정에서 발휘되는 것임을 명징하게 제시하는 것임

- ‘지역’(Localness)이란 가치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역분권의 시대가 단순히 새 정부의 중점 정책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장이 정체되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운위되고 있는 ‘지방소멸의 시대’에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특화발전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예술정책 역시 창작과 향유 활성화가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임
- 마지막으로 ‘혁신’(innovation)이란 가치는 예술이 그 자체로 가장 혁신적인 사유와 실천을 거듭하며 발전해온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라는 사실과 함께, 일상과 여가 등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다른 영역의 혁신에 영감을 주면서 새로운 가치를 광범위하게 또 융합적으로 파생할 수 있는 것임을 주목하는 것임

■ 비전: ‘모두에게 힘이 되는 예술, 어디서나 생동하는 예술’

- ‘자율’, ‘일상’, ‘지역’, ‘혁신’이라는 핵심가치가 반영된 미래 비전을 도출함
- ‘모두에게 힘이 되는 예술’이란 창작에 전념하는 전문 예술가를 비롯하여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술적 내용과 형식을 소중히 여기며 즐기고 향유하고 또 창작하는 생활 예술가를 포괄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예술적 활동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가꾸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모든 이들에게 힘이 되고, 활력이 되는 예술의 가치를 표상하는 것임
- ‘어디서나 생동하는 예술’이란 수도권 등 문화 소비의 규모가 큰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향유의 권리가 제한 없이 번성하는 것, 그리고 여가와 휴식을 위한 시·공간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이나 일터 등 우리 삶의 모든 터전에서 예술의 심미적, 인지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드러나고 꽃 피게 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임

제2절 미래비전 추진 전략과 과제

- 이상의 미래비전과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연 인원 약 100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네 차례 워크숍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5대 전략, 13대 과제와 함께 48개의 세부과제를 도출하였음

<표 3-1> 미래비전 추진 전략과 과제

전략	과제	세부과제
1. 예술지원 패러다임 재정립	1-1. 한국형 팔길이 원칙 정립	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제화 추진
		나 문화행정의 공정성 및 책임성 확보
		다 문화예술 시민옴부즈맨 제도 운영방안
	1-2. 예술지원 제도 재정비	가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확보
		나 민간지원기구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할 재정립
		다 예술지원심사제도의 공정성, 투명성제고
		라 지역분권형 예술지원 추진체계 구축
2. 예술 창작환경 강화	2-2. 예술인 창작권 강화	가 예술인 경력증명 제도 재편 및 확대
		나 예술창작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및 합리화
		다 경력단계별 창작 지원방식 다각화
	2-2. 예술인 사회안전망 확충	가 예술인 복지금고 설치 및 소액대출제도 운영
		나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지원
		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2-3. 예술공간 인프라 및 맞춤형 지원 확대	가 예술 창작 인프라 조성
		나 문화·예술 아카이브 조성 및 운영
		다 문화예술 허브공간 조성
		라 예술공간 문화재생 확대
3. 예술향유 저변확대	3-1. 예술의 접근성 향상	마 장르 집중형 문화공간 조성
		가 지역기반 상주예술단체 활성화
		나 능동적 예술향유 지원기반 마련
		다 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 확대
	3-2.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라 탈북자/이주민 예술활동 기회 제고
		가 유/아동 및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다각화
		나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청, 장년, 노인)
		다 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
	3-3. 예술의 지역공헌 활성화	라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운영체계 강화
		가 생활예술 동아리 활성화
		나 지역특화 공공예술 및 사회예술 프로젝트 추진
		다 지역별 대표 예술 축제 내실화
4. 예술시장 합리화 및 내실화	4-1. 예술시장 선순환 기반 조성	라 지역문화관 운영 활성화
		가 예술시장 투명성 제고
		나 예술 관객 패널 조사 정례화
		다 예술시장관련법/제도개선
	4-2. 예술계 자생력강화	라 예술과 기업의 시너지 강화
		가 예술가/단체 기업가정신 역량 강화
		나 예술분야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다 예술분야 전후방 연관산업 육성
	4-3. 해외예술시장 진출 고도화	라 예술계 인력양성 제도 내실화
		가 공공부문 국제예술교류 사업 체계화
		나 해외 예술유통 전문 에이전시 교육 및 지원 확대
		다 예술기관/단체의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미래기술 수용기반 조성	5-1. 기술친화 참여기반 조성	가 예술인을 위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워크숍' 운영
		나 IOT 기반 스마트 씨어터/갤러리 건립
		다 국공립 시설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5-2. 범용기술 예술융합 R&D 촉진	라 문예회관 혼합현실(MR)거점화 사업지원
		가 예술분야 인공지능·증강현실 육성 사업
		나 예술관객 빅데이터 분석 연구
		다 R&D 사업 지원 및 모델 프로젝트 발굴, 시연 지원

전략 1 예술지원 패러다임 재정립

-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블랙리스트 사태는 헌법이 보장한 예술의 자유를 거국적인 차원에서 침해한 초유의 사태로서 예술계, 학계, 시민사회로부터 국내 예술지원정책의 근간이 와해되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음
- 이런 배경에서 저간의 예술정책 파행을 둘러싼 문제점과 근본적 원인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공공 예술지원 정책의 철학 및 기본원칙을 재정립하는 한편, 이를 반영한 지원제도 재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됨

■ 과제 1-1: 한국형 팔길이 원칙 정립

- 국민의정부가 문화정책의 제 1원리로 천명했던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출발선으로 삼되, 향후 예술정책의 정치적 도구화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한국형 팔길이 원칙 정립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 예술지원 근본이념으로서의 ‘표현의 자유’ 가치를 사회적 차원에서 공유하는 법제와 함께 지원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예술정책의 철학과 기본원칙을 대국민적 관점에서 공유하고 예술지원기구의 책임성을 견제·감시하기 위해 시민 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이 요구됨

〈세부과제〉

- » 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제화 추진
- » 나. 문화행정의 공정성(Fairness) 및 책임성(Accountability) 확보
- » 다. 문화예술 시민옴부즈맨 제도 운영방안

■ 과제 1-2: 예술지원 제도 재정비

- 같은 맥락에서 예술지원정책의 근본철학과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예술지원제도의 구조적 재정비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정부로부터 예산, 조직, 인사권 등에 관한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받는 민간지원기구로서 위상 재정립이 필수적이며, 이외에도

공공의 예술지원 심사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수년간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어온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재정확충 방안 마련 및 예술지원정책의 분권적 자치모델 확립을 위해 중앙과 지역간 전달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함

〈세부과제〉

- » 가.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확보
- » 나. 민간지원기구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할 재정립
- » 다. 예술지원심사제도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 » 라. 지역분권형 예술지원 추진체계 구축

전략 2 예술 창작 환경 강화

- 지금까지의 예술창작 정책지원은 대부분 문화예술지원 예산을 예술창작 활동 자체에 투입하는 단선적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단순히 창작활동 자체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서, 예술 창작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예술창작 노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적 지원이 입체적으로 함께 모색될 필요성이 제기됨

■ 과제 2-1: 예술인 창작권 강화

- 현재 예술인 인증제도는 높은 기준설정으로 인해 예술 창작활동을 영위하는 많은 예술가들을 폭넓게 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시각예술 분야에서 아티스트 피 도입 등이 시도된 바는 있으나 예술창작 보상체계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는바, 창작활동에 대한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은 또 다른 창작이 발현될 수 있는 선순환적 창작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임
- 아울러 청년(예비)/신진/원로 등 경력단계별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특화형 지원프로그램을 다원화하는 등 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기존 방식에서 예비/신진작가 군에 대한 보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며, 원로예술인의 경우 단순 창작활동 중심 지원보다는 원로예술인의 삶과 예술적 업적을 조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세부과제〉

- » 가. 예술인 경력증명 제도 재편 및 확대
- » 나. 예술창작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및 합리화
- » 다. 경력단계별 창작 지원방식 다각화

■ 과제 2-2: 예술인 사회안전망 확충

- 예술인들이 수행하는 창작노동은 프리랜서·단기임시고용의 비중이 높고 수입이 불규칙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회안전망(4대보험 등)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현재 예술인복지법을 통해 제공되는 부분적이고 산발적인 복지지원방식을 재검토하여, 복지기금 조성 및 예술인 지원 대출제도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예술인 고용보험 법제화, 예술인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마련 방안 등 예술노동 특수성이 반영된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세부과제〉

- » 가. 예술인 복지금고 설치 및 소액대출제도 운영
- » 나.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지원
- » 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 과제 2-3: 예술공간 인프라 및 맞춤형 지원 확대

-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기존 시설의 변용을 통한 창작공간 확충은 예술창작활성화를 위한 핵심의제로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내 예술계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된 요구이기도 함
- 영국 런던 시의 사례와 같이 (청년)예술인에 대한 창작공간(작업실) 지원 등 신규 예술공간의 확대가 필요하며,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재생 관점에서의 인프라 확대지원 및 국공립 예술시설에서의 창작지원 프로그램 확충 등 공간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또한 물리적 공간을 초월한 온라인 예술창작 종합아카이브 조성이나 문화예술 허브 공간(서계동, 당인리 등)에서의 창작공간 확보가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국립 문학관 및 국립무용센터 등 장르별 전문화된 예술전용공간 조성 역시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함(예: 무용계에서는 창작, 연습, 공연 등 창작-유통-향유를 아우를 수 있는 무용 장르 전문화, 특화된 국립무용센터 공간 조성 등을 지속 요구함에 따라 프랑스 국립샤이오극장과 같은 전용 공간 조성 검토 필요)

〈세부과제〉

- » 가. 예술 창작 인프라 조성
- » 나. 문화·예술 아카이브 조성 및 운영
- » 다. 문화예술 허브공간 조성
- » 라. 예술공간 문화재생 확대
- » 마. 장르 집중형 문화공간 조성

전략 3 예술 향유 저변 확대

- 예술창작의 과정과 결과는 사회적 차원에서 보다 많은 이들이 누릴 수 있을 때 가치적 확산의 파급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술생태계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한 핵심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음
- 이런 배경에서 예술의 접근성 제약요소 해소를 위한 다각적 접근 및 전 국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가 필수적이며, 예술활동 즐거움이 사회적 차원에서 보다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생활예술동아리 활성화 및 지역공헌형 공공예술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예술의 가치에 대한 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과제 3-1: 예술의 접근성 향상

- 기존 예술향유 정책은 시혜적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어 실질적 차원에서 국민 예술향유의 제고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또한 지역별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 편차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예술참여기회 역시 연령별, 계층별 편차가 여전히 예술향유 확대의 장애로 잔존하고 있음

- 이에 지역기반 예술상주단체 활성화를 통해 기존 상주단체제도가 지역내에서 예술 자원이 축적되고 지역내 예술접근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예술향유정책 방안이 마련되고 연령별로 특화된 문화예술 패스 도입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기존의 시혜적/소극적 관점을 벗어나 보다 적극적 관점에서 장애인, 탈북자/이주민 등 여전히 예술활동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들의 예술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됨

〈세부과제〉

- » 가. 지역기반 상주예술단체 활성화
- » 나. 능동적 예술향유 지원기반 마련
- » 다. 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 확대
- » 라. 탈북자/이주민 예술 활동 기회 제고

■ 과제 3-2: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은 수요자 중심에서의 전 국민 교육기회 확대보다는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용에 집중되어 성장해왔는바, 그 과정에서 국민의 향유역량 제고가 명시적으로 선언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 차원에서 전 국민의 예술적 감수성 제고 및 향유 함양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는 못한 것이 사실임
- 이에 유아기에서부터 청소년, 청년, 어르신(생애전환기 50+ 세대 포함)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 접근기회가 자신의 기본적 권리(문화기본권)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기존의 학교 vs 사회로 분절되어 접근된 예술교육 지원이 수요자 관점에서 연계 기회로 인식되고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음

〈세부과제〉

- » 가. 유/아동 및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다각화
- » 나.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청·장년, 노인)
- » 다. 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
- » 라.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운영체계 강화

■ 과제 3-3: 예술의 지역공헌 활성화

- ‘문화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지역별로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되면서 예술활동의 즐거움이 단순히 개인적 만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공동체적 가치의 확산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정책적 인식이 제고되고 있음
- 이런 배경에서 일반인들이 예술활동을 자신의 커뮤니티 속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함께 작업하는 예술가들의 지역화를 촉진하는 사업이 적극 모색될 필요가 있으며, 생활예술기반 공공예술프로젝트 지원 등을 통해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 확산 기회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마다 개최되고 있는 비엔날레 등 대표적인 예술축제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마다 건립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재 분명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문화관 등의 문화시설들이 지역예술진흥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함

〈세부과제〉

- » 가. 생활예술 동아리 활성화
- » 나. 지역특화 공공예술 및 사회예술 프로젝트 추진
- » 다. 지역별 대표 예술 축제 내실화
- » 라. 지역문화관 운영 활성화

전략 4 예술시장 합리화 및 내실화

- 예술 향유 활성화를 통해 종국적으로 예술시장 확대를 견인하고자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왔으나, 예술대학 졸업생 등 배출인력 숫자에 비하여 시장의 성장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창작과 향유 지원 정책이 예술계의 자생성을 담보하는 선순환 구조의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하고 새로운 시장 촉진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예술시장 진출을 고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음

■ 과제 4-1: 예술시장 선순환 기반 조성

- 예술시장 및 예술산업의 자율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관련 시장에 관한 정확한 정보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복지적 관점을 넘어서) 관객개발과 직결될 수 있도록 능동적 예술향유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마련이 필수적임
- 또한 예술시장의 내실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의 생산 및 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환경 인프라를 조성하고,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이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 연계 등 기존 사업을 보다 공세적인 관점에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음

〈세부과제〉

- » 가. 예술시장 투명성 제고
- » 나. 예술 관객 패널 조사 정례화
- » 다. 예술시장 관련 법/제도 개선
- » 라. 예술과 기업의 시너지 강화

■ 과제 4-2: 예술계 자생력 강화

- 시장을 둘러싼 생태계가 환경변화에 조응하며 긍정적인 공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재료-창작/제작-유통/배급-소비로 이루어지는 가치사슬의 제 단계를 책임지는 주체들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인바, 예술가와 예술단체들의 경우 자신들의 창작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객과 만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실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한 상황임
- 또한 예술분야의 후방연관산업(예술용품)에서 시작하여 예술가들의 관객개발 역량 강화, 예술협동조합이나 예술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예술유통 및 매개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육성은 물론 전방연관산업(파생상품)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행위자들의 활동을 적극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진흥정책 프레임이 요구되는 시점임

〈세부과제〉

- » 가. 예술가/단체 기업가정신 역량 강화
- » 나. 예술분야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 » 다. 예술분야 전후방 연관산업 육성
- » 라. 예술계 인력양성 제도 내실화

■ 과제 4-3: 해외 예술시장 진출 고도화

- 멀게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산업화가 작은 내수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주도형(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가깝게는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된 문화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이 한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예술시장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큼
- 문화산업 주도의 한류를 넘어서 문화예술과 전통문화가 함께 견인하는 새로운 한류 시대를 개시하기 위해서도 해외 예술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전략도입이 필요한 바, 공공부문의 국제교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간접적’ 해외시장 진출을 체계화하고, 다음 단계로서 전문 에이전시를 통한 ‘매개적’ 시장 진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성숙단계에 있는 장르들에 대해서는 현지법인 설립이나 합작 등 ‘직접적’ 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함

〈세부과제〉

- » 가. 공공부문 국제예술교류 사업 체계화
- » 나. 해외 예술유통 전문 에이전시 교육 및 지원확대
- » 다. 예술기관/단체의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전략 5 미래기술 수용 기반 조성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IOT와 로봇틱스 기술 등 새로운 범용기술에 기반한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게 몰려오면서, 공공과 민간의 구분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지능화와 자동화에 기반한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의 도래는 예술 분야에도 거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래기술에 친화적인 참여기반 마련을 통한 ‘리터러시’ 제고와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기술을 적용한 기술-예술 융합 프로젝트의 실험 및 확산 등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함

■ 과제 5-1: 기술친화 참여기반 조성

- 인공지능이 인류를 능가하게 될 시점으로 2045년경 기술적 특이점(technological singularity)이 도래할 것이라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예술 인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을 예술적 형식과 내용을 통해서 극적으로 체험하고 실험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대표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미래기술 리터러시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가시화해야함
- 예술인 재교육을 위한 워크숍 운영과 함께 스마트 팜이나 스마트 팩토리 등 이미 상용화된 사례들을 참조하여 IOT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시어터와 갤러리를 중앙에 건립하는 한편, 국공립 시설에 메이커스페이스를 조성하고, 지역단위 문예회관에는 VR과 AR 등 혼합현실(MR)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등 미래기술 참여기반을 전국적으로 마련하여 대사회적인 역할 감당 필요

〈세부과제〉

- » 가. 예술인을 위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워크숍’ 운영
- » 나. IOT기반 스마트 씨어터/갤러리 건립
- » 다. 국공립 시설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 라. 문예회관 혼합현실(MR) 거점화 사업지원

■ 과제 5-2: 범용기술-예술 융합 R&D 촉진

- 기술적 특이점의 도래가 언제 이루어질 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상용화와 고도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계와의 공존/공생/공진화에 실패하는 직종은 노동과 일자리의 위기의 최전선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함
- 마이크로소프트의 넥스트 램브란트 프로젝트나 구글의 딥드림 프로젝트 등 미술 분야를 필두로 작곡 인공지능 쿨리타와 작곡 앱 험온 등이 화제를 모은 음악 분야, 구글에서 개발 중인 로맨스 소설 인공지능 작가 등 문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예술활동에서도 인공지능 상용화가 거세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술과 과학기술 융합 플랫폼의 구축을 기반으로 한 R&D 사업 및 모델 프로젝트 발굴 지원과 함께 관객 관련 빅데이터 연구를 첨단화하는 등의 정책 지원이 요구됨

〈세부과제〉

- » 가. 예술분야 인공지능·증강현실 육성 사업
- » 나. 예술관객 빅데이터 분석 연구
- » 다. R&D 사업 지원 및 모델 프로젝트 발굴, 시연 지원

04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세부 사업

제1절 예술지원 패러다임 재정립

1. 한국형 팔길이 원칙정립
2. 예술지원 제도 재정비

제2절 예술 창작환경 강화

1. 예술인 창작권 강화
2. 예술인 사회안전망 확충
3. 예술공간 인프라 및 맞춤형 지원 확대

제3절 예술향유 저변 확대

1. 예술의 접근성 향상
2.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3. 예술의 지역공헌 활성화

제4절 예술시장 합리화 및 내실화

1. 예술시장 선순환 기반조성
2. 예술계 자생력 강화
3. 해외 예술시장 진출 고도화

제5절 미래기술 수용 기반 조성

1. 기술친화 참여기반 조성
2. 범용기술 예술융합 R&D촉진

제1절 예술지원 패러다임 재정립

1 한국형 팔길이 원칙정립

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제화 추진

1) 배경 및 목적

-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불거진 사상 초유의 블랙리스트 사태는 단순히 일회적인 사건이 아닌 정부와 공권력에 의해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던 위헌적 범죄일 뿐 아니라 국내 예술정책의 공공성과 정당성을 훼손한 위중한 사안임
 - 최근에는 이명박정부에서도 국정원 등을 중심으로 특정 정치적 성향 혹은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예술활동을 조직적으로 침해해 왔음이 밝혀졌음
 - 이는 그동안 정부가 대외적으로 강조해온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예술지원정책의 근간으로서 팔길이 원칙’이 특히 보수정권 하에서 심각히 왜곡되고 기형화되어 왔음을 방증하는 것임
- 그간 문화예술계에서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으며, 이런 배경에서 새로 출범한 새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첫 과제를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으로 제시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청산’을 구체적 세부과제로 지목하였음
 - 같은 맥락에서 지난 3월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후속 대책 차원에서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예술가의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 등을 추진한 바 있음⁷⁾
 - 이어 지난 7월에는 문체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가 공식 출범함
- 지난 7월 진행된 ‘새 정부 예술정책 토론회’에 따르면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안)’에는 헌법 제22조에 명시된 ‘예술가의 권리’를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는 차원에서 ‘예술의 자유 침해 금지’, ‘예술지원의 차별금지’, ‘예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원칙 명시, 아울러 표현의 자유 침해, 예술지원 차별 및 심사 방해 등 위반사항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담길 예정이며, 아울러 예술가의

7) 안동환(2017.03.10) “‘예술가 권익보장법’ 추진, 표현의 자유 침해 땀 처벌”,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310025012&wlog_tag3=daum (2017.09.01. 최종접근)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규정도 함께 포함될 예정임⁸⁾

- 이런 배경에서 ‘표현의 자유’ 법제화 관련 논의는 블랙리스트 후속조치라는 당초 취지를 고려하고, 동시에 ‘예술가의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안)’ 과 관련된 의제들의 의의와 실효성을 다각적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방향

- ‘표현의 자유 법제화’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정책적 이슈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국내 예술정책의 정책적 정당성 및 한국형 팔길이 원칙이라는 근본철학의 토대를 견고하게 확립한다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함
 - 현재 공개된 ‘예술가 권익 보장을 위한 법률(안)’은 성격이 상이한 내용들을 하나의 법률안에 포괄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방지대책’이라는 당초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시된 바 있기 때문에 신속한 제정보다는 신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표현의 자유’ 의제는 예술정책 범주 내에서 예술가들의 예술(창작)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접근하되, 보다 포괄적 관점에서 헌법 상 보장되는 기본권이자, 문화정책과의 연계선상에서 국민의 ‘문화적 권리’라는 측면을 포용하는 접근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예술정책 분야에서의 한국형 팔길이 원칙 재정립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표현의 자유’ 의제는 예술표현의 자유(예술창작의 자유) 및 예술지원에서의 차별 및 검열금지라는 관점에서 포섭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수 있음
 - 그러나 ‘표현의 자유’ 그 자체는 예술계에만 귀속, 적용될 수 있는 배타적 개념이 아니며 모든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이 우선적임
 - 새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가 공영방송 및 인터넷에 한정되는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⁹⁾ 헌법상 모든 국민의 자유로 규정된 언론·출판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특정 영역, 즉 언론계의 문제로만 제약한다면 이는 지나치게 좁은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음

8) ‘새정부 예술정책 토론회 - 제2차 예술가의 권익보장을 위한 법 제정방안’ (2017.07.24.)

9)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네번째 국정과제로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이 제시되고 관련 세부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관할의 인터넷 및 공영방송에 한정된 것으로 나타남(p.31). 반면 첫번째 과제인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의 세부과제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은 ‘사실관계 파악, 재발방지 및 문화행정체계 혁신’으로 요약·제시되나(p.24) ‘표현의 자유’ 혹은 예술표현의 자유라는 인식은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예술계와 새정부 간 인식의 온도 차이가 있음이 확인됨.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0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050042 (2017.09.01, 최종접근)

(2) 주요 사업내용

-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독립법안 검토 및 추진
 - 현재 ‘예술가 권익 보장을 위한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술표현의 자유보장’ 및 ‘예술지원의 차별금지’ 조항 및 관련 처벌규정을 중심으로 예술정책의 근간으로서 ‘표현의 자유’ 독립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이때 법안 명은 예술가 권익이라는 표현보다는 공권력에 의한 검열과 지원 상의 차별 금지를 포함한 예술창작 및 활동의 자유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블랙리스트 방지법’으로서의 목적성과 정체성을 명확화는 제목으로 변경(예: 예술표현 및 활동의 자유 보호를 위한 법률)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음
 - 정치인 및 공무원, 정부기관 등에 의한 국민의 권리 침해, 권력남용 등에 관한 강력한 제재 및 처벌조항이 포함되는 것이 필수적인 바, 문제가 되었던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에 대해서도 확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동시에 개인 예술가 뿐 아니라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단체 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함께 보장하는 관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가령 기관장의 임명권, 인사 및 예산권 등의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까지를 포괄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함¹⁰⁾
-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보장하는 방안 추진
 - 현행 대한민국헌법의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제19조(양심의 자유), 제21조(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22조(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의 내용적 범위를 해석할 수 있으며, 제37조에 의해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경시되지 않으며’,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제한할 수는 있으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통해 보호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명시적으로 규정 및 제시되지 않은 현 상황은 표현의 자유를 특정영역(예시, 언론출판)으로 국한되는 정책적·실행적 해석이 발생되기도 하는데,¹¹⁾ 이로 인해 헌법에 명시된 ‘예술의 자유’¹²⁾, 예술가의 권리¹³⁾, 표현의 자유 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여전히 모호하게 남아 있음

10)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직접적으로 지원사업의 배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정되나, 정부에 의한 검열이나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문체부 산하기관(예술위, 영진위 등)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임

11) 앞서 제시한 새 정부 표현의 자유 의제가 ‘언론’으로 국한되어 있음을 참조

12) 헌법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13) 헌법 제22조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 헌법상 모든 국민의 자유로 규정된 언론·출판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특정 영역의 자유로 해석하지 않아야만, 헌법 제21조제2항의 허가 및 검열을 금지하는 원칙¹⁴⁾이 예술의 자유 및 예술가의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음
- 따라서 헌법상의 평등 원칙을 토대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표현의 자유를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를 상기 조항들과의 관계설정을 통해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예술의 자유’, ‘예술가의 권리’, ‘표현의 자유’ 역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유를 포괄하는지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임

- 예술의 자유는 ‘예술창작의 자유’와 ‘예술표현의 자유’, 그리고 ‘예술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내용으로 함
- 예술표현의 자유는 예술작품을 연주, 전시, 공연, 발표하는 자유를 말하고, 예술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예술활동(예술창작 및 예술표현)을 위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말함
-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일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더 두터운 보장을 받는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예술에 관한 집회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 **예술의 자유는 예술가의 권리로 한정되지 않고 모든 인간의 권리**로서, 음반제작자 등 예술품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출판자도 예술의 자유를 향유한다는 판례가 있음(헌재 1993.5.13 91헌바17)
- 또한 **예술창작은 그 자체로 표현행위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술창작의 자유도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나, 예술의 자유에 관한 위헌심사에는 ‘과잉금지원칙’이 엄격히 적용됨**(헌재 1993.5.13. 91헌바17)

* 자료: 박영정 외(2013) 예술의 미래-예술정책 중기비전과 전략 연구, p. 32.

- 문화기본법 등 문화관련 법에서의 ‘표현의 자유’ 관련 법제적 연계성 및 실효성 제고
 - 문화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의 ‘문화적 권리’(제4조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¹⁵⁾ ‘차별받지 않을 권리’ 및 ‘문화창조·참여·향유에서의 자유’로 구성되어 있는 이 조항은, ‘자유’가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언급되는 수준에 한정되며, 침해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조항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선언적 수준에 그칠 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문화기본법의 법률적 위상이 여타의 문화예술 관련 법률 간 관계 속에서 모호한 한계점을 안고 있어 문화적 권리가 타 법률을 통해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가 실질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임
 - 「문화예술진흥법」의 경우, 예술진흥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예술진흥의 기본 전제인 표현의 자유 보장에 관한 내용은 적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입법 과정을 통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구체적 보장방안 및 처벌규정을 담은 새로운 조항 마련이 필요함

14) 헌법 제21조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5)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로 제시되어 있음

- 한편 ‘예술가 권익’의 개념 하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의제들은 예술인복지법, 공정거래법, 국가권익위원회 등 타 법률 및 유사 기능과의 연계성 혹은 차별성 차원에서 입체적·복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3) 추진 시 유의점

- ‘표현의 자유’ 법제화 이전, 해당 의제가 부상하게 된 근본적 원인에 대한 성찰 필요
 - 표현의 자유 법제화는 명확하게 블랙리스트 사태의 후속조치라는 관점에서 추진되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함
 - ‘표현의 자유’ 개념을 중심으로 예술가의 권익을 이해할 때, 이는 예술가들의 사회문화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포괄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음
- 블랙리스트 후속조치로서 ‘표현의 자유’ 법제화 추진 시, 다양한 의제를 단일 법안에 포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복수의 대안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각각의 실효성 및 의의를 충분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이를 위해 예술계, 학계 및 대국민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관련 의제의 필요성 및 접근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음

나. 문화행정의 공정성 및 책임성 확보

1) 배경 및 목적

- 문화예술인에 대한 조직적인 검열과 표현의 자유 제약 사태
 - 블랙리스트 사태의 발생은 국가주도적인 문화행정 시스템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으며, 더불어 관료제의 경직성과 내부고발에 대한 부정적 문화가 함께 작동한 사안이라고 분석할 수 있음
 - 국가에 대한 자원의존성이 높은 우리 문화예술계 취약성을 감안할 때 문화행정의 공공성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논의는 가 미흡한 상황임
- 문화행정 혁신체계의 중요 가치설정 및 실행수단 마련
 - 그간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화행정 관련 각 주체들이 공공 예술지원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또한 문화행정조직이 예술계로부터 지목받는 권위적, 우월적 태도가 아닌 상생의 관점에서 협력자로서 함께 예술진흥을 모색할 수 있는 관점의 개선은 물론, 예술의 공공성이라는 포괄적 가치 하에 공공예술지원의 가치와 원칙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 방향

- 문화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문화행정에 적용되는 공정성과 책임성에 대한 인식: 영국의 잉글랜드예술위원회가 실시했던 예술지원의 공적 가치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The Arts Debate(2007)’에 따르면 공정성은 내용적 차원의 공정성과 형식적 차원의 공정성 등 2개 관점에서 이해되는 경향이 나타났음. 한국의 경우 역시, 이와 유사하게 예술지원의 내용적, 형식적 관점에서 ‘공정성’이 이해되고 있음이 확인되나 영국과 한국 모두 이러한 공정성을 이해하는 방식이 예술가 입장과 시민 입장에서 각각 상대적으로 차별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주목됨¹⁶⁾
 - 예술가 입장에서 공정성을 정치적 권력이나 간섭에서부터 자유로운 측면(내용적 공정성)을 강조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공공재원의 분배적 측면이나 절차적 측면에서의 공정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음¹⁷⁾

16) 양현미·김세훈·최보연(2010) 「문화예술지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기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그러나 국내의 경우 공공예술지원이나 문화행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명확히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최근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정부 예술지원 신뢰도가 하락한 상황에서 문화행정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
- 정부-지원기관-예술인 각각에 해당되는 문화행정 가치 재조명 및 공정성과 책임성 적용주체의 명료화
 - 공정성은 서비스(및 자원)를 제공하는 주체, 즉 정부나 지원기관(즉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과 관계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이에 비하여 책임성은 정부나 지원기관뿐만 아니라 지원을 받는 예술인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들 세 주체는 모두 상위기관인 국민에 대하여 활동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공정성(fairness): 행정에 있어서 공정성은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에 상응하는 것으로 공공조직 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됨(Frederickson)
- 책임성(accountability): 공공적 행위를 함에 있어 상위조직에게 그 정당성을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Cendon, 2014)

- 자율적 관리와 제도적 준수의 병행 필요
 - 예술 및 사상의 자유를 헌법적 규정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조차 지켜지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정성이나 책임성은 궁극적으로 그 행위주체가 해당 가치를 내재화시키지 않고는 실현이 어렵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율적 관리체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자율적 관리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제도 보완 및 신설을 통해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장치를 마련

(2) 주요 사업 내용

- 문화행정의 공정성 및 책임성에 대한 정기적 인식 조사 시행
 - 예술계 및 일반시민들이 인식하는 예술지원 및 문화행정의 공정성 및 책임성에 관한 인식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및 문화향수실태조사에 일부 포함하여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이를 예술인, 일반시민, 예술지원담당자 간 인식비교를 통해서 문화행정 공정성과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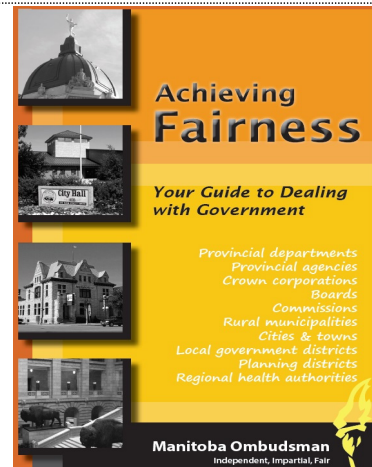
17) 양현미 외(2010), pp.87-97 참조

- 정부 및 지원단체와 지원수혜대상 간 공정성 규약 체결
- 권위주의 문화가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국가지원금 정책을 결정하는 조직(문화체육관광부)이나 이를 배분하는 지원조직(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의 권력행사 가능성 존재
- 예술지원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문화행정의 공정성 개념과 기준을 명문화하는 규약 제정
- 이 경우 영국 Arts Debate에서 제시되었던 공정성 기준 및 캐나다 마니토바 주정부의 사례를 일부 참고할 수 있음¹⁸⁾

1. Fair distribution among art-forms (예술장르별 공정한 지원금 분배)
2. Fair distribution by type of organizations or projects (다양한 기관 및 프로젝트 지원)
3. Fair distribution among artists(예술가의 경력단계별 연륜, 나이의 차별성이 없는 지원)
4. Fair geographical distribution(대도시, 지방 간 공정한 분배)
5. Fair distribution among different communities/groups(사회경제적 취약 대상 고려)
6. A Fair process (지원결정과정의 공정성)

- 캐나다 마니토바(Manitoba) 주정부의 경우 공공서비스 수혜자로서 시민의 정부에 대한 공정성 요구를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fairness), 실질적 공정성(substantial fairness), 관계적 공정성(relational fairness)으로 구분하고 있음

Manitoba Ombudsman(2012) Achieving Fairness:
Your Guide to Dealing with Government



- 공정성 규약 내용은 절차적 공정성, 실질적 공정성, 관계적 공정성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지원단체-지원수혜 대상이 제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마련
- 공정성규약의 내용 및 활용
 - ✓ 정책(사업)수혜대상의 다양성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 ✓ 정책(사업)실행의 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 정책(사업)에 대한 이의제기 과정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18) 양현미 외(2010)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p.79

- 공정성규약의 활용
 - ✓ 공정성규약의 이행에 대한 정책(사업) 수혜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평가 실시
 - ✓ 평가결과를 기관(정부 및 지원기관)의 운영·경영평가 지표(리더십 혹은 윤리항목)로 관리
- 기관별 윤리강령 제정과 준수·이행의 평가
 - 공공부문에서 적용 대상 범위가 포괄적인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의 재산상 청렴에 대한 조항이 대부분으로 부처의 경우에도 공정성 실천에 대한 점검이 제한적
 - 부처에 최적화된 공무원 윤리강령의 내용 구성 및 관련기관 윤리강령에 대해서도 필요시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하고 이해당사자가 기관의 실행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함
 - 부처 및 기관평가지표로 산입하여 관리
 - 공정성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에 혁신적인 보상체계 마련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규칙),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등 다양한 수준에서의 제도 도입

- 책임성 확보를 위한 연차보고서 정례화 등 관련 기관, 조직의 역할 충실화
 - 정보공개와 범위 확대와 절차의 간소화 필요
 - 지원주체기관 뿐 아니라 수혜기관을 포함하여 충실한 연차보고서 작성과 관리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공공재원 활용의 책임성 강화하고, 지원주체기관-수혜기관 간 상호 크로스체크 등을 가능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정성 강화 관련 시너지 창출 가능
 - 현재 (재)한국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연차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참여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장르별 지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조직의 정보관리 능력제고
 - ✓ 공공서비스 공급자와 이익집단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연합회(장르별 연합회 등)의 경우 회원을 바탕으로 한 기초 정책자료의 관리를 통해 스스로가 공공성 확보의 정당성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역량을 강화하여 이를 지원의 공정성 항목에 반영

- 미국의 경우 National Performance Network 등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민간비영리기관에서 적극적인 회원확보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통계자 생성 등을 통해 자기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에 대한 근거로 삼음

- 성과제고를 위한 기관에 적합한 관리목표 설정과 결과 평가(기존의 경영평가에서 대부분 포함되어 있음)

3) 추진 시 유의점

- 공정성 확보 방안과 문화예술 시민옴부즈맨 제도의 연계성 확보
 - 문화예술 시민옴부즈맨 제도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함께 기능하지 않을 경우 향소 기능의 기관이므로 공정성의 내용에 따라 사업의 범위가 정해짐
- 전체 정부의 제도적 개선과 관련 있는 경우 보편적 체계 내에서 특수성이 함께 반영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다. 문화예술 시민옴부즈맨 제도 운영방안

1) 배경 및 목적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100대 과제 중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를 위해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강화를 통한 예술인 창작권 보장을 강조한 바 있음
 - 2017년 현재 문체부는 예술인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예술지원 공정성 확보 및 예술인 권리를 강화하고, 현장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를 모색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임
 - 예술가권익보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이 될 경우 예술지원의 차별, 예술사업자 불공정행위 등 예술의 자유 침해 사례를 조사해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형사처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예술가권익위원회 설립을 고려 중에 있음
 - 예술가권익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예술정책의 철학과 운영방향을 대국민 관점에서 공유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시민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예술지원기구의 책임성을 견제, 감시하는 제도적 기반을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오늘날 옴부즈맨 제도는 중앙정부 차원의 일반 옴부즈만 뿐만 아니라 인권·군사·복지·경찰·아동 등 특수한 분야의 전문 옴부즈맨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옴부즈맨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그 중에서 ‘시민’ 옴부즈맨은 민주주의와 정책전반에 대한 시민 관심 확산, 행정서비스 욕구 증대, 정책결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요구 등의 정치·사회적 변화에 대한 부응으로 주체로서의 시민의 위상과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 따라서 ‘문화예술 시민옴부즈맨 제도’는 정부의 권리 침해 및 남용, 불공정한 정책결정으로부터 예술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예술인 및 국민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정될 수 있음
- 문화예술 시민옴부즈맨 제도 도입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계약체결을 감시하는 “청렴 옴부즈맨”이 아닌 예술가 권익침해에 대한 적극적 구제수단 마련임과 동시에 정책의사결정의 참여성을 제고하는데 방점을 두어야 할 것임
 - 향후 법 제정을 통해 (가칭)예술가권익위원회가 구성되면 옴부즈맨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서 현재 운영되거나 새롭게 추진 중인 유사제도와의 연계성 또는 차별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음. 대표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지원심의 옴부즈맨 제도’,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운영중인 ‘예술가 신문고’, 현재 국회 계류중인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 옴부즈맨’ 등으로 제도 간 역할 정립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필요함

- 2017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는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예술가 권익보호 및 지원사업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예술위원회 지원사업 공모과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점에서 신청자격과 내용 등 예술가 권익보호에 한계가 있음
-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중인 ‘예술가 신문고’는 불공정행위로부터 예술가들의 권익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예술인복지법 제6조의 2), 사법관계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지원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예술가 권익 전반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음
- 2016년 11월, 의원입법(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발의로 국회 계류 중인 ‘문화예술 옴부즈맨’ 제도는 내용적 범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예술가권익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그 역할과 상당부분 중복될 여지가 있음. 이하에서는 예술가권익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문화예술 옴부즈맨’제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검토함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 방향

- 정책과정의 시민의 참여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시민옴부즈맨 제도 운영
 - 예술인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가칭)을 통해 예술가권익위원회가 설치되고, 동 위원회를 통해 ‘문화예술 시민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할 경우 추진방향의 핵심은 신청자격과 그 내용에 관한 범위의 확대에 있음
 - 동 제도의 취지가 시민 옴부즈맨인만큼 신청 적격은 예술가 등 특정 법률관계의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아닌 일반 시민까지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예술의 창작권 보장과 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건의를 할 수 있는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청내용은 공공지원 관련 문화예술 관련 권리 침해로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 사인 간의 불공정 거래행위, 창작활동의 부당한 간섭 뿐만 아니라 예술활동의 애로사항, 예술인 권익보장 관련 정책건의가 모두 포함될 수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으로 추진 중인 ‘문화예술 옴부즈맨’ 제도 내용 및 쟁점
 - 예술가권익위원회 설립 시 운영될 문화예술 시민옴부즈맨 제도는 현재 문화예술진흥

법 개정안으로 추진중인 ‘문화예술 옴부즈맨’ 제도와의 상당부분 영역이 중복되어 관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조승래 의원이 발의('16. 11))

- ‘문화예술 옴부즈맨’은 문화예술인의 자유로운 문화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권리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문체부장관에게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동법 개정안 제15조의 5).
- 개정안에서는 명확하게 권리침해 등의 주체에 관해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 영역이나 민간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매우 넓은 개념에 해당되고 이런 측면에서 양자를 보호법익에 중점을 두고 현재 논의 중인 예술가 권익위원회 내용과 유사함

<조승래 의원 발의안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5의 주요 내용>

제15조의5(문화예술옴부즈만의 설치) ①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예술옴부즈만을 둔다.

② 문화예술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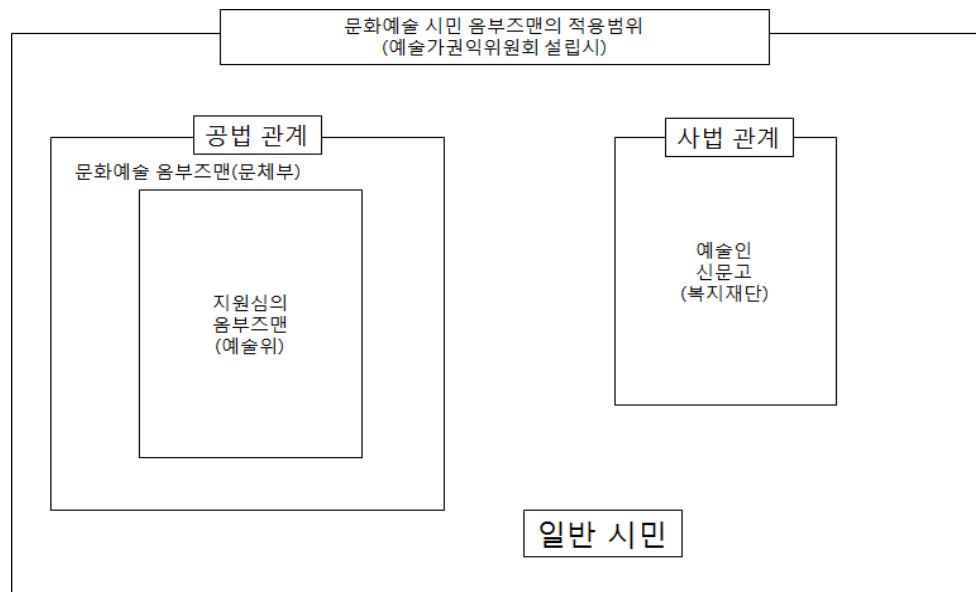
1.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의 조사 및 처리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문화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문화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활동과 관련한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문화예술옴부즈만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단서 생략>

- 그러나 현재 국회 계류 중에 논의되는 동법에 관한 몇 가지 쟁점¹⁹⁾은 첫째, 소속 행정기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임. 옴부즈만은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행정기관에 대하여도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지만 시정요구나 감사요구는 그 시정 또는 감사 권한을 가진 소속 행정기관에 대하여만 할 수 있기 때문임
- 둘째, 옴부즈만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업무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 등 사인 간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음
- 셋째, 행정주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행정주체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수탁사인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기관만 해당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함
- 넷째,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문화예술 옴부즈만은 조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의 문제가 있음

19)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검토보고서 내용 요약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으로 추진 중인 ‘문화예술 옴부즈맨’ 등과의 관계 조정
 - ‘예술인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가칭)’을 통해 ‘예술가권익위원회’가 설치되고 동 위원회를 통해 ‘문화예술 시민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할 경우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으로 추진 중인 문화예술 옴부즈맨 제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나의 제도로 병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인 ‘문화예술 옴부즈맨’ 제도는 법체계상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정의된 문화예술 정의(범위)에 한정되어 적용되어야 하며, 당초의 발의안과 달리 예술인의 권익 보장이나 개선을 위한 일반 사항(당초 동조 1호는 ‘문화예술인의 애로사항 조사 및 처리’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안심사과정에서 제외)이나 일반 시민의 정책건의 등은 포함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음
 - 예술인 권익보장을 법률을 마련할 때에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검토과정에서 나타난 법률상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총괄적인 예술인 권익보장을 위한 별도의 기본법으로서 위상을 갖을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한 준비과정이 필요함
 - 예술가권익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① 본래 옴부즈맨의 기능으로서 부당한 공공지원 과정에 대한 권익 보호(지원심의 옴부즈맨, 문화예술 옴부즈맨 제도), ② 문화예술계 공정거래 보호를 위한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서의 권익 보호(예술인 복지법상 4가지 불공정 행위 유형에 대한 보호, 예술인 신문고), 그리고 ③ 일반사항으로서 법적 이해관계자가 아닌 일반 시민으로 신청자격을 확대함으로써 창작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문제제기, 조사요청 및 다양한 정책건의의 기회제공을 확대하는데 핵심이 있음



[그림 4-1] 문화예술 시민 옴부즈맨의 적용범위

- 실용적 권리구제가 가능한 절차 운영
 - 통상 옴부즈맨 기능은 소송 등 사법적 권리구제절차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약하며, 절차도 엄격하지 않음. 엄격한 법적 과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을 옴부즈맨 기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비용부담이 없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예술가의 고충처리 및 권익구제를 위한 접근성을 높여야 함
 - 국민 또는 특정 예술가 개인의 권리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보호라는 의미를 가질 경우 의견개진과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
 - 기존의 옴부즈맨 운영이 국민의 고충처리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의사결정의 공론화를 유도하는 참여적 거버넌스로의 방향설정이 필요
- 옴부즈맨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사업에 반영되는 실질적 권한과 기능부여
 - 옴부즈맨의 의견들이 형식적 권고가 아닌 수행된 사업의 개선을 통한 권익구제 및 향후 제도적 개선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최대한 부여해야 함

(2) 주요 사업 내용

- 예술가권익위원회(가칭) 기능과 역할
 - 문화예술이라는 분야별 관할을 달리할 뿐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 보다 구체적으로는 예술가신문고에 의해 접수된 사건 처리 또는 예술의 자유 침해 사례 직접 조사(자료 제출요구 포함) 및 시정명령, 형사처벌 요청 가능토록 함

<표 4-1> 예술가권익위원회(가칭) 역할 및 기능 예시

역할	기능
예술가 권익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체부 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권고방식으로 이루어져 유효적일 수 있지만, 언론 등을 통해 사실상 강제력을 가질 수 있음. 협상, 화해 유도 등 융통성 있는 접근을 통해 다양한 수단으로 예술가 권익을 구제할 수 있음
사인 간의 분쟁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쟁해결 : 당사자 합의 권고 및 문제해결방향 제시 등의 역할이 필요함. 조정권 부여 여부(민법상 화해와 같은)는 별도의 입법이 없는 한 힘들 것으로 보임. 법적 효력 부여여부와 관계없이 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
행정통제를 통한 서비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가의 권익구제 등 고충을 처리해주는 것 자체가 문체부 감사관의 역할로서 행정통제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이후의 행정서비스 개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 노동분야(노동부), 공정거래 분야(공정거래위원회),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여성부) 등 문체부 영역 외의 예술가 권익보호와 관련된 경우 행정기관에 대한 권고방식 등으로 실효적일 수 있음
현장예술계와 소통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행정과 시민 간의 양방향 소통의 과정으로 정보공개, 시민참여, 문화예술 행정 홍보, 정책적 이해 촉진 등의 긍정적 기능 발생

- 예술가권익위원회의 주된 역할과 의의는 공공 영역과 민간영역을 아우르는 예술가 권익구제, 분쟁 해결, 행정통제를 통한 서비스 개선, 현장예술계와 소통강화 등 기관 별로 분산되어 있는 예술가 권익보호 기능을 통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예술가권익위원회(가칭) 설립 시 고려사항
 - 위원회 자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조직구성상의 독립성과 운영상의 독립성을 고려해야 함. 이를 위해 문체부로부터 독자적 법적 근거를 가진 기관이 되어야 함
 - 예술위원회, 예술인복지재단, 관련 협회 등 개별 문화예술지원기관의 옴부즈맨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와 연계하여 문화예술지원체계 전반에 나타나는 예술가 권익보호 관련 이슈 등의 정보를 공유해야 함
 - 시민옴부즈맨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민평가, 시민제안 등의 통로가 열려있어야 하며, 업무처리를 발견한 경우 유관기관에 조사 및 감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기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 12조에 제시한 21개 업무를 참조하여 문화예술인 권익보호에 활용할 수 있음

3) 추진 시 유의점 및 고려사항

- 공공영역의 유사기능 간 역할 분담 문제
 -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국회 국정감사, 지역의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심판 기능, 중앙부처의 옴부즈맨 등 공공영역에 존재하는 권익구제기관이 있음.²⁰⁾ 이들 기관들과의 업무 및 역할분담 관계는 예술가권익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²¹⁾
 - 국가행정영역 전반을 관할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달리, 문화예술분야를 관할하는 예술가권익위원회가 일반-특별법 관계에 의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필요²²⁾
 - 이를 위해서는 예술가권익위원회의 법적 위상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걸맞게 제도적 정비를 갖추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중 예술가권익위원회에서 전담해야 하는 업무를 선별하여 이양 또는 이관토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문화분권 시대에 맞게 지속적으로 지역문화재단 등을 통한 지역문화진흥 정책이나 행정서비스가 수행될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권익구제 요청이 발생할 수 있음.

20) 그러나, 기타 감사원, 국회 국정감사, 지역의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공공기관 내 감사기능은 대부분 권익구제나 고충처리보다는 행정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 중복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됨

21) 예를 들어 국민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의견제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제기할 경우 양자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음

22) 우선적으로 예술가권익위원회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그 외의 업무영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역할을 담당하는 보충적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임의적 설치기구인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달리 법률에 의해 예술가권익위원회에 옴부즈맨 기능이 부여될 경우에도 양자의 협력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 민간영역의 유사기능 간 협력체계 강화
 - 또한 시민옴부즈맨으로서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을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예술가권익위원회의 옴부즈맨 기능은 시민의 참여를 전제로 함을 감안하여 이들의 다양한 의견과 연계하고 정책방향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각종 시민단체들의 옴부즈맨 기능을 지원하고 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예술가권익위원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2 예술지원 제도 재정비

가.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확보

1) 배경 및 목적

-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은 1973년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기초예술의 진흥’을 위해 마련된 유일한 재원임.²³⁾ 그러나 2003년도 말 문예기금의 주요 재원이었던 모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연간 400억 원 규모의 모금 수입이 중단되었고 2004년 기준 5,272억 원에 달하던 적립금은 2016년 말 기준 813억 원으로 감소됨. 2017년 말 추정 적립금 잔액은 422억 원에 불과한 상황임

<표 4-2> 문예기금 적립금 현황 및 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12년 말	'13년 말	'14년 말	'15년 말	'16년 말	'17년 말 (전망)
수입(A)	1,167	1,381	1,195	1,685	2,153	1,916
지출(B)	1,359	1,409	2,012	2,091	2,285	2,307
평가손익(C) ²⁴⁾ *	84	△100	△31	△31	△166	-
수지차(D=A-B+C)	△108	△128	△848	△437	△297	△391
기말 적립금	2,523	2,395	1,547	1,110	813	422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

- 2016년과 2017년 예산편성 시 관광기금(500억 원), 체육기금(500억 원) 전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최근 도종환 장관 취임 이후 2018년 예산편성을 위해 국고 500억원, 관광·체육기금 각각 500억원, 복권기금 821억 전입이 계획, 제시되었음. 그러나 별도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안정적인 기금 예산 편성 불가한 상황임
 - 관광·체육기금의 전입은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규정에 의한 것으로 임시적 재원 형태라 볼 수 있음. 또한 기금전입이 기존 사업을 이관하는 방식과 결합되어 진행되는 바 문예기금의 고유한 목적성에 오롯이 부합할 수 있는 유연한 재원이라 보기는 어려운 상황임
 -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정부의 출연금’을 기금의 주요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고로부터의 전입은 2001년부터 중단되었음. 2018년 국고

23) 문예기금을 통해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문화복지, 국제교류,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등 문화예술 분야 전 분야에 걸쳐 약 1조 9천 8백억 원 지원(1974~2015)하였음

24) 평가손익: 기말 적립금 잔액과 당년도 문예기금 수입, 지출간 순 수지차와의 결산 상 차액으로 복권기금, 조건부기금 등 문예기금 적립금에 포함되지 않는 재원과 적립금의 운용손실(이익금은 수입에 포함)로 발생

출연은 정부 국정과제 및 장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기금 재원확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라 보기는 어려움

-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4호를 근거로 ‘공익사업’목적²⁵⁾으로 전입되고 있으나, 배분비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전입규모가 매년 변화해왔음. 2018년 예산편성에 복권기금으로 부터 전입되는 821억 원은 소외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투입될 예정으로 창작진흥 차원의 전입금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²⁶⁾

<표 4-3> 연도별 복권기금 전입금 규모

(단위: 억 원)

연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전입금	446	504	538	485	198	218	237	480	574	581	613	631	372	372	821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

- 이런 배경에서 문예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정부부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유 기능 중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 ‘문화예술진흥’임을 고려할 때, 이를 위한 문예기금 재원 확보방안은 보다 적극적이고도, 근본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함
 - 특히, 문화예술 생태계의 성격 상 기초예술에 대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확충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지난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문화예술 분야 공약으로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 확보,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 문화+기본권 보장 등’을 제시하면서 ‘문예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명시한 바 있음²⁷⁾
 - 블랙리스트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예술지원 정책의 미래지향적이고도 새로운 방향성 설정이 새 정부의 핵심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문예기금 재원확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차원의 결단과 선제적인 대안제시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25) 복권의 역진성에 따라 복권기금의 사회공헌, 소외계층 대상 사업으로 용도가 제한되어왔음(창작 지원에 사용하지 못함)

26)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통합문화이용권 6만원 →10만원으로 지원규모 확대)에 따라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임

27) 지난 7월 발표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68번째 과제로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이 제시되었고, 주요 세부과제로 ‘문예기금 재원대책 마련’이 포함되었음

<표 4-4>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서 및 문화예술비전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서>	<대학로 동양예술극장 문화예술 비전 발표(2017.4.3.)>
<p>19 표현의 자유도, 문화의 자유도 더 크게 문화는 특권이 아니라 기본권입니다</p> <p>생애주기별 문화예술 향유권 및 교육 확대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맞춤형 스포츠 참여 확대</p> <p>문화예술·체육인의 문화기본권 보장 창작주거 인프라 조성, 일자리 창출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 체육단체 자율성 보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안정적 재원 확보</p> <p>생애주기별 맞춤형 국민관광 확대 문화유산 가치 향상을 위한 보존과 활용 강화</p> <p>목표 및 우선순위 → 자유와 문화가 흐르는 사회 / 최우선 과제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관계법령 개정 및 즉시 추진 / 임기 내 재원 조달 방안 → 일반회계 및 기금 예산 편성 확대 / 세입 확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기본권의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 문화예술인들의 정신적경제적·사회적 권리 보장 장치 마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주요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투명성 보장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문화예술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가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시스템 마련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 방향

- 문예기금의 재원확보 의제는 단순히 기금고갈이라는 현상적 문제해결이라는 근시안적 관점 보다는, 문예기금 고갈로 인한 영향이 궁극적으로 기초예술활동 위축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문화콘텐츠(한류) 및 관광사업 축소로 연계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보다 포괄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임
- (기초예술지원을 위한 핵심재원으로서 문예기금은 자율성·독립성 확보가 가능하고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한 ‘기금 형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²⁸⁾)

(2) 주요 사업 내용

- 예술진흥을 위한 핵심재원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재원확보 방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문예기금 전입(1안) 및 기존 재원조성 방안의 안정화를 모색하는 (2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 우선 법 개정 없이 정책결정으로 추진 가능한 일반회계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보다 안정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기금출연’ 관련 조항을 명시하여 적립금 확충이 가능할 수 있는 장기적 방안모색을 함께 마련 ²⁹⁾

28) 정치적 가치가 예술지원 정책과정에 개입하지 않도록 정부 예산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음. 기금의 운용상 장점은 정부예산의 절차적 비탄력성과 시간적 제한성을 극복할 수 있는 효율적 자원 배분 기능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에 있음(김진, 2014: 64-65).

29)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제1항제1호에 의해 정부의 출연금을 통해 조성 가능. 문예기금의 최초 조성 시 일반회계에 의해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문민정부 시절 기금 적립금 5,000억 원 확보의 목적으로 일반회계를 전입한 사례(2000년대 초반 전입 중단)가 있음(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29).

- 그 외에도 기존 재원조성방안의 안정화 및 자체 재원 발굴, 문화예술 발전혜택을 받는 타 분야의 재원에서 문예기금으로의 전입가능성 타진, 세제 개편 등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기금 재원조성 방식의 안정화 모색

① 일반회계로부터의 문예기금 전입

- 일반회계(국고)³⁰⁾ 전입을 통해 '17년 현재 422억에 불과한 적립금을 최소 향후 '22년까지 3000억으로 확충. 이자율 하락으로 적립금 이자수입의 재원활용도가 낮아진 상황임을 고려하여, 향후 '22년 까지 최소 적립금 총액을 3000억으로 확보. 동시에 한편, 매년 사업운용에 필요한 예산은 타 재원으로 부터의 안정적인 전입금 확보와 유연한 운용을 통해 보완
- (법적근거) 국가재정법 제12조,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표 4-5> 국가재정법 출연금 조항 및 문화예술진흥법 기금조성 관련 현행 조항

국가재정법	문화예술진흥법
<p>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p> <p>※ 출연금은 행정주체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연구기관 기금, 공단 등 출연 대상 주체에 대하여 특정 목적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전급부를 말하며 국가재정법 제12조에 의해 해당 법률에 출연 근거가 있어야 함</p>	<p>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p>②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p> <p>③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p> <p>④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 '18년도 일반회계(국고) 500억 전입의 경우 법 개정이 아닌 정치적 결정에 따른 것이었던 것만큼, 근본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정부 출연 안을 명시하는 방식을 추진
- 출연금의 경우 권한부여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임.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제1항제1호가 이에 해당함
- 석면피해구제기금, 공적자상환기금 등과 같이 정부출연금의 의무부과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30) 국고의 경우 1973년 총 99,572백만원이 출연된 바 있음

<표 4-6> 일반회계 전입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④ 생략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④ 생략 <신설>⑤정부는 이 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시행령 제25조(기금의 조성 등) ①~② 생략	시행령 제25조(기금의 조성 등) ①~② <신설>③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정부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할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기존 재원조성 방안의 안정화

- 복권기금의 법정배분화 명시를 통한 문예기금 확충
 - 2004년 설치된 복권기금은 복권 수익금 중 복권사업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의 35%는 법정 배분사업에 사용되며, 65%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3항4호에 ‘문화·예술·진흥사업’이 명시되어 있으나, 전입금 용도가 저소득층을 포함한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에 한정되어 있어 창작지원사업에 활용되지 못함
 - 문예기금으로의 전입이 법정배분이 아닌 공익사업 중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바, 전입규모 예측이 어려움과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복권기금의 공익사업 중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전입되는 기금 일부를 법정배분사업화
 - 현행 35%인 법정배분사업에 대한 배분비율을 40%로 확대하면서 증가된 부분에 대한 문예기금 전입을 추가하는 방안 추진³¹⁾

<표 4-7> 연도별 복권기금 총사업비 대비 문화예술지원 사업비 지원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총사업비	934,631	1,202,225	1,272,356	1,462,000	1,549,937	1,625,726	1,341,146
문화예술 지원사업비	23,700	48,000	57,400	58,121	61,300	63,121	51,940
지원비율	2.5%	4.0%	4.5%	4.0%	3.9%	3.9%	3.9%

* 자료: 박석희 외(2016)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확충을 위한 타 기금 전입방안 연구, p. 34, <표 3-4>

31)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공익사업 중 ‘문화·예술·진흥사업’에 지원된 예산규모는 법정배분사업과 공익사업을 통합한 총사업비 대비 평균 3.9%수준임. 이에 근거하여 법정배분사업 배분비율 확대를 고려할 수 있음

<표 4-8> 복권기금 법정배분비율 관련 법 개정(안)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④ 생략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4의 2 <신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이하 생략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11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은 이를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범위로 한다. 1. 임대주택의 건설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문화예술진흥사업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⑥ 생략	제23조 (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11 생략 12.<신설>「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② 제1항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은 이를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범위로 한다. 1. 임대주택의 건설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문화예술진흥사업(삭제)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⑥ 생략

- 문예진흥법 제17조1항4의2호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명시’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1항에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명시
- 복권수익금의 총액의 약 5%출연
- 복권기금 용도를 소외계층 → 일반국민을 대상을 넓혀 시행

<표 4-9> 복권기금 전입 시 문예기금 예산추계(안)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복권수익금	14,620	15,449	16,257	17,069	17,922	18,818	19,758
->문예기금전입	581	613	631	371	896	941	988

* 자료: 박석희 외(2016)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확충을 위한 타 기금 전입방안 연구, p. 34, <표 3-5>

* 상기 추계(안)은 '17년도 하반기에 결정된 '18년도 복권수익금 예산편성액(821억)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나, 통합이용권 사업확대 및 이관에 따른 복권기금 전입금 확대 액수에 비해 더 큰 비중임

③ 기타 검토사항³²⁾

- 카지노업, 출국납부금 등에 의해 조성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일부를 문예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구조를 볼 때 카지노 수익금을 재원 중 하나로 하는 관광기금을 통해 문화예술분야를 지원토록 하는 것은 사행산업의 부작용과 사회적 폐해를 치유하고 복원하는데 있어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가능할 수 있음. 카지노산업이 도박산업으로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관광산업의 주요한 일부를 구성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관광산업 발전이 우리 고유의 문화예술발전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관광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카지노 및 관광산업 전체를 선순환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출국납부금은 국내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외화수입 증대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국내 관광여건과 관광외화수입 증대에는 문화예술의 역할과 기여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출국납부금을 통해 조성된 관광기부금의 일부를 문화예술분야에 지원, 발전을 모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국가브랜드 위상 강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출국납부금을 문화예술에 지원하는 것은 부담금 납부자에게도 직간접적 이익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의 병행발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5 신설을 통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 총액의 약 4% 출연³³⁾
- 방송통신발전기금 출연
 - 방송통신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있어 문화예술은 매우 중요한 분야임. 문화경제학자 데이비드 트로스비(2008)가 일찍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은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 등을 포함한 문화산업이 발전하는데 핵심적이고 중추적 기반을 담당하고 있음³⁴⁾

32) 박석희 외(2016) 2016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확충을 위한 타 기금 전입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참조.

33) '21년 (783억원), '22년 (853억원) 전입가능

34) Throsby, D.(2008) The Concentric Circles Model of the Cultural Industries, *Cultural Trends*, Vol.17.

- 일례로 한류열풍을 가져 온 드라마의 경우 원작소설을 기반으로 제작된 선례가 많으며, 포켓몬 GO의 경우도 만화에서 시작되었으나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게임까지 다양한 부가 콘텐츠를 파생하였음. 이는 만화라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있었기 때문임
 - 문화예술과 방송통신콘텐츠의 관계를 분리해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의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출하여, 문화예술과 방송통신콘텐츠 분야간 선순환적 발전과 상생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 법정분담금의 일부를 문예기금으로 전입하는 방안 고려
-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체육기금)출연
-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사업은 사행산업으로서 복권의 일반적 특성상 역진성 측면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사행산업 부작용 및 사회적 피해를 치유하고 복원하는데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할 때 체육진흥투표권 수입금을 활용하여 문화예술분야에 지원 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음. 체육활동에서도 음악, 무용과 같은 예술분야와의 연계성이 있고, 대형 국제, 국내 체육행사의 경우도 공연 등 문화예술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통한 문화예술분야 지원은 충분한 고려가치가 있음
 -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문예기금 출연비율 신설
 - 체육진흥투표권 수입금 총액의 약 3% 출연³⁵⁾
- 담배세 재원의 문예기금 전입
- 담배는 흡연자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외부성을 갖고 있어 국가적인 금연정책 및 적절한 조세제도를 통한 소비억제가 요구됨
 - 2015년 1월부터 담배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대폭 인상³⁶⁾되었으나, 실제 담배가격 인상 효과(담배 소비 억제)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담배가격 인상 1년차 월별 담배 판매량 분석결과(한국납세자연맹, 2016) 세수입은 4조 3,64억 원, 판매량 33억 3,000만 갑으로 나타남. 그러나, 담배가격 인상 시 예측치보다 세수증가분은 1.6배 늘었고, 판매량 감소는 23%에 그침
 - 금연 및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당초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격 규제 정책 이외에 비가격정책을 동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예방 및 완화를 위해 문화예술을 활용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국민 삶의 질 제고 관점으로 금연 관련 정책의 외연 확장 필요성이 있음

No.3 p.150

35) '21년 (730억원), '22년(830억 전입가능

36) 담배가격 인상을 통해 2020년까지 남성흡연을 29%('14년 기준 42.1%) 수준까지 낮추고 늘어난 세수를 청소년 흡연 예방, 금연정책 기반 확충 등에 활용(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4.12.3)

- 건강에 유해한 담배 시장과 사회적으로 높은 비용을 초래하는 사행산업의 공급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중독적 습관이나 행위를 치료하는데 자신의 수익 일부를 투자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받고 있음. 그러나 최근 WHO 권고안에 따르면 담배회사의 예술 및 다양한 문화, 스포츠 등의 지원을 규제하는 방안³⁷⁾이 제시되고 있음. 그러나 정부규제로 인해 담배회사에서 지원하던 문화예술분야 등의 위축을 막기 위해 담배세를 통한 지원의 지속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음

<해외사례 - 호주 'Healthway' 정책>

- WHO의 권고안에 따라 건강증진 및 문화예술 증진 정책 실시
- 호주정부는 1982년부터 담배회사의 판촉 및 기부지원 행위 금지를 추진
 - 이와 같은 정책을 당장 시행할 수는 없었음. 담배회사의 지원이 금지되었을 경우 문화예술 및 스포츠 단체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관련 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역효과 우려 때문
 - 이에 따라 담배세를 통해 문화예술, 스포츠, 레이스 등의 기관에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음
- 담배 규제로 인한 역효과 예방과 국민 건강증진 및 다양한 삶의 질과 관련된 정책 및 공공사업의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대표적 사례

-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기금의 사용 등)에 문화예술진흥 및 증진사업 규정 신설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에 국민건강증진기금 출연금 규정 신설 등을 통해 담배세 재원의 문예기금 전입방안 고려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3%(또는 5%) 출연 (3% 적용시 : '21년(1,119억원), '22년(1,164억원) 전입 가능, 5% 적용시 : '21년(1,866억원), '22년(1,940억원) 전입 가능)

3) 추진 시 유의점

- 문예기금 재원확충 방안 마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국민 부담의 가중을 막아야 한다는 것임
 - 2003년 말 문예기금 모금제도 폐지는 국민경제 부담 방지라는 명분에서 추진되던 각종 모금 폐지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29)
 - 모금제도의 부활이나 신규 부담금의 도입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이는 국민경제에 대한 부담 가중 우려로 실현 가능성이 낮아 대안에서 제외하였음
- 타 기금의 문예기금 출연과 관련, 타 기금의 주요 재원인 부담금(카지노부담금, 출국납부금,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부담금 사용으로서의 문예기금 출연 당위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타 기금 주체, 관련 이해관계자, 국민, 예술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정책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

37) 담배회사의 다양한 기부활동이 해당회사 이미지 개선활동에 기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임.

- 문예기금의 재원 구성의 특징은 40여 년 간 변화가 심했다는 것임
 - 국고수입, 모금제도, 방송발전기금, 올림픽잉여금 등의 재원이 정치적 결정에 의해 재원으로 편입되었다가 재정논리로 재원에서 제외되는 등의 변화를 겪어왔음
 - 이는 기금 재원의 확보가 정치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의 방증이며, 2003년 모금제도 폐지 이후 고갈 위기를 맞이한 현재 시점에서 기금 재원 조성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과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정치권의 관심과 결단에 의해 기금 재원이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환경의 변화에 의해 재원 구조의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탄탄한 논리구조와 자체 수입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나. 민간지원기구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할 재정립

1) 배경 및 목적

(1) 추진배경

- 박근혜 정부 하에 있어났던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한국의 대표적인 예술지원 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의 존립 근거를 재정립해야한다는 예술계 현장의 비판적 요구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 블랙리스트에 따른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지원 배제를 구체적으로 실행한 예술위원회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블랙리스트 실행기관으로서의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해 예술위원회의 근본적인 위상 및 역할에 대한 재정립과 새로운 조직 혁신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2004년 민간 자율위원회로 전환한 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혁신을 위해서는 지난 13년간 예술위원회의 조직운영과 사업 확장, 그리고 지원체계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분석 및 평가가 나와야 함
- 블랙리스트 사태를 계기로 예술위원회가 실질적인 예술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 객관성의 원칙과 철학을 가질 수 있도록 조직 및 운영 혁신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2) 원인분석

- 예술위원회가 블랙리스트의 실행기관으로 전락하게 된 원인은 첫째, 예술위원회가 통치 권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
 - 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정치적, 이념적 이유로 지원에서 사전에 배제되거나, 선정 후 배제되는 사태로부터 예술인을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문체부 본부와 같은 상급기간에서의 지시를 부당함을 알면서도 검열과 지원배제를 실행한 것은 위원회와 위원장이 통치 권력에 종속되었기 때문. 따라서 위원회와 위원장의 기관운영의 독립성 보장과 유지가 관건임
- 둘째, 블랙리스트 실행이 내부조직에 의해 은밀하게 이루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임
 - 지원사업의 심의와 결정에 대한 프로세스에 정치적 부당지시가 개입하지 않도록 지원 심사 과정을 자동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이 필요. 또한 지원의 심의와 결정에 정치적, 이념적,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부당한 압력과 비리가 발견되었을 시에

해당 담당자를 경고 없이 퇴출시키는 징벌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더불어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행정적 프로세스에 의해 곧바로 접수되고 실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보수정부 9년 동안 예술위원회가 지원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위축되고, 수행해야 할 사업만 증가하면서 피로감이 높아지고, 긴장감, 사명감이 약화되었으며, 기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정치적 압력을 방어할만한 제도적, 경험적, 심리적, 집단적 기제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조직 내부의 결속력도 약화되어 이러한 사태를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반발할 수 있는 방어체계가 부재했다고 볼 수 있음.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정치적, 이념적 편향과 통치 권력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붕괴된 예술위원회의 근본 원인은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판단의 부재가 야기한 무기력증 때문이라 볼 수 있음

(3) 목적

- 근본적인 위상정립: 예술위원회의 위상 재정립은 단지 블랙리스트 사태 때문만은 아님. 블랙리스트 사태는 예술위원회의 위기를 촉진시킨 계기가 되었고, 그만큼 혁신의 불가피성에 대한 정당성을 주었을 뿐, 예술위원회의 위상 재정립은 블랙리스트와 관계없이 필수불가결한 사안임
- 예술지원 기관으로서 완전 독립 실현: 따라서 예술위원회의 위상정립의 목적은 예술위원회를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하게 독립시켜 예술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지원기구로 근본적인 혁신안을 만드는 것이어야 함
- 활동평가, 현실진단, 해결과제 제시의 연계: 또한 민간위원회로서 활동했던 역사들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분석하여 예술위원회의 현실 진단과 파생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
- 예술위원회의 미래비전 수립, 제시: 예술위원회 위상정립은 블랙리스트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에만 있지 않음. 블랙리스트 사태를 계기로 위상제고, 지원의 객관성, 조직혁신, 미래 발전방향까지 제시되는 비전수립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2) 추진방향 및 내용

(1) 추진방향-4대 방향

- 예술위원회의 운영 독립성 보장
 - 예술위원회의 새로운 위상정립과 조직혁신을 위해서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 예술위원회의 독립성은 상부기관(청와대, 문체부)으로부터 예술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인데, 위를 위해 위원장 선임, 위원선임, 소위원회 위원선임이 예술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사업 내용과 운영에 대한 결정권한 역시 독립적이어야 함
- 예술위원회의 조직 운영 혁신
 - 예술위원회의 현재 운영조직과 사업영역에 대한 객관적 점검과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조직과 사업을 정리. 예술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미래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을 신설. 조직운영에 있어 자율과 책임을 상호 강화하고, 예술인들과 협치와 실무인력들의 기획력을 높여 사업별 운영 자율성을 강화
- 예술위원회의 미래 비전 수립
 - 예술위원회는 새로운 사회문화 환경에 대응하고 그러한 환경에 대응하는 예술지원의 패러다임과 비전 전략을 제시해야 함
 - 예술위원회의 미래 비전은 1) 위원회의 정체성 제고, 2) 창작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원 체계 전환, 3) 미래예술의 방향 정립에 따른 새로운 사업 제시, 4) 예술생태계의 종다양성을 유지를 위한 지원방향 수립, 5) 위원회의 조직인력 및 공간인프라의 생산적 활용, 6) 재원의 확대와 분배, 활용에 대한 혁신안 제출 등의 과제를 안고 있음
- 예술위원회의 협치와 협력 확대
 - 블랙리스트 사태는 역설적으로 예술인들의 협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줌. 예술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 기구로 정체성이 정립되어야 함. 현장 예술인, 예술계 현장과의 협치 없이는 예술위원회의 위상은 정립되기 어려움.
 - 또한 예술위원회가 지역의 문화재단과의 협력 없이는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위원회가 될 수 없음. 광역별, 기초자체별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으로 인해 예술위원회가 지역의 문화예술지원의 실질적 지원기관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지역재단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

(2) 주요 사업 내용

- 예술위원회 운영독립과 미래전략을 위한 혁신 TF 구성
 - 예술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선임 이후 위원회의 실질적인 혁신을 위한 TF팀 구성
 - 위원장 포함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을 선임하고,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예술위원회의 운영혁신에 대한 실질적인 개혁안을 2017년 말이나 2018년도 상반기 안에 도출
 - 혁신 TF안에 <위원회 독립>, <지원제도 혁신>, <조직혁신>, <미래전략> 소위를 구성하여 운영
- 예술위원회 위원장 선임 “위원호선제”로 전환
 - 2004년에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할 때 도입했던 위원장 호선제도를 부활. 장관임명에 따른 위원장의 정치적 종속을 피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차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법개정 추진”
 - 관련 내용은 혁신 TF에서 다루고, 2018년 내 법개정을 통해 추진
 - “위원장 호선제”에 대한 예술인들의 여론수렴과 논리적 근거를 마련
- 소위원회의 자율적 활동 및 운영 책임성 강화
 - 예술위원회 안에 있는 장르별, 분야별 소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의 권한을 지금보다 강화하고, 소위원에서 제안한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원칙을 정함
 - 소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해 소위원회 위원 선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고려
 - 소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회 내 담합과 비리를 제어할 수 있는 모니터링 제도 도입
- 지원의 투명성, 객관성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혁신
 - 예술인 친화형 지원프로세스 도입: 예술인들이 지원하고 정산할 때, 불편함이 가급적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평가-정산 시스템을 혁신. 정부 온라인 시스템 ‘e-나라도움’ 입력 시스템 개선
 - 지원 심사 과정의 투명한 공개: 지원심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과정의 결과(예심, 본심)를 공개. 공개의 내용과 범위는 혁신 TF에서 정함
-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에 걸 맞는 조직혁신
 - 예술위원회 본부조직, 팀별 조직, 위원회가 보유한 인프라 공간의 운영혁신에 대한 대안제시
 - 예술의 융합, 장르의 해체, 기술문화 환경의 변화,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 지역문화

- 분권의 실현 등 예술지원정책의 중요한 이슈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정비
- 나주-서울-기타 지역으로 분산된 예술위원회의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간의 운영과 배치 계획을 수립

- 예술위원회 협치-협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현장 예술인과 상시적으로 만나 예술계 현안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정기적인 〈예술인현장과의 대화〉 포럼을 개최
- 지역 문화재단과 협력할 수 있는 재단협의체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토론과 제안
- 예술인과 지역문화재단 협치와 협력 강화를 위해 참여 형 사업 예산제 도입. 현장 예술가와 지역문화재단이 요청하는 사업을 상향식(Bottom-up)으로 수렴해서 반영

3) 추진 시 유의점

- 예술위원회의 위상 정립을 위해 ‘혁신 TF’ 중심으로 안을 마련하되 현장 예술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할 것임
 - 예술위원회의 혁신을 위한 준비와 모임 발표 과정까지 예술인들과 함께 만든다는 원칙을 고수
- 예술위원회 위상 재정립 및 혁신은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한 예술계 및 국민적 불신과 분노가 회복되어야 하는 중차대한 미션을 담고 있기 때문에, 향후 혁신 플랜을 만드는 데 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와 내용을 공유하고 조율해서 유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임

다. 예술지원심사제도의 공정성, 투명성제고

1) 배경 및 목적

(1) 추진배경

- 예술지원의 심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예술지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사안임. 따라서 예술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예술인들과 예술지원 기관 사이의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음
- 대표적인 예술지원기관이라 할 수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인복지재단, 전통예술진흥재단 등 국가 예술지원기관들은 예술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심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지원 예술인들 및 단체가 충분하게 공감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예술인들에게 선정과 탈락의 결과를 알려주어야 하는 과정에서 지원예술인들은 심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
- 예술지원에 대한 현장 예술인들은 지원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 심사과정의 객관적 절차와 공정한 심사, 심사채점 방식, 선정결과 발표 등에 있어 지금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특히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예술지원 사업이 정치적, 이념적 이유로 인해 특정 예술인이나 단체들, 예술 작품들이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선정되었음에도 추후에 배제되는 사례들이 특검의 수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지면서 지원 심사 제도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뿐 아니라 독립성까지 요구되고 있음
- 예술지원 심사 제도의 공정성, 투명성,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원심사의 불이익과 차별 배제의 사례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인 개선안이 도출되어야 함

(2) 원인분석

- 예술지원 심사의 기본 원칙은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독립성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음. 예술지원심사에 예술인들이 많은 불만을 갖는 이유가 지원심사가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고, 독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 이러한 네 가지 이유는 각기 서로 다른 원인이 내재하고 있음

① 지원심사의 공정성

- 예술인들이 예술 지원 심사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심사위원의 구성과 심사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
- 심사위원 구성이 특정한 전공 장르에 치우치거나 특정 전문 분야를 심사할 수 있는 위원들이 포함되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원 사업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사하기가 어려워 다면심사, 심층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상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공정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음

② 지원심사의 투명성

- 예술지원 사업 심사가 이루어 질 경우 지원에 참여한 예술인들과 단체들은 심사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 심사내용과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심사위원들의 개인 프라이버시에 해당되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나, 심사결과들을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것은 지원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안임
- 심사위원들 간의 담합이나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사업의 배제와 제척 사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③ 지원심사의 객관성

- 예술인들이 지원 사업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음. 하나는 지원심사의 방향이나 심사방식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의견. 심사의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져야 심사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음. 그리고 심사의 세부항목과 배점이 형식적으로 분류되지 않고 실질적인 심사 세부항목이 되지 않으면 심사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음
- 두 번째는 심사에 대한 공지와 심사방법과 방식, 심사결과에 대한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원자가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객관적이지 않은 심사로 인지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원심사가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해야 하며, 심사의 세부항목평가들이 실질적으로 심사 기준이 되어야 함

④ 지원심사의 독립성

- 지원사업 심사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이유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예술지원의 팔길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원사

업과 심사가 ‘정치’, ‘이념’,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함.

- 심사의 독립성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심사가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심사위원의 독립적인 전문역량을 신뢰해야 함
-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 역시 자신의 심사의 원칙이 특정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공명正大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독립성을 지켜야 함
- 또한 심사위원들 간의 심사에 대한 방향과 원칙 등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지만 선정사업을 미리 정해놓고 추후에 형식적으로 채점하는 방식들은 개별 심사위원의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음

(3) 추진 목적

-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예술지원 사업이 정치권력의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자율적인 원칙을 확보
- 지원사업의 심사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
- 지원사업의 심사 방향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독립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사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
- 심사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진행되고, 지원 예술인들에게 심사의 결과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서비스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방향

- 심사의 공정성 확보
 - 심사위원 풀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사업의 내용을 고려한 심사위원 풀 적용
 - 심사위원의 제척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 심사위원의 심사 채점의 사전 합의 금지
- 심사의 투명성 제고
 - 심사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최대한 공개하는 원칙
 - 심사의 과정에 대한 비밀유지 원칙을 지키되 이의 신청에 대비해서 증거자료 확보 차원에서 녹음과 녹화 추진

- 심사의 객관성 기준 마련
 - 심사의 시간을 최대한 확보, 심사 자료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기회 보장
 - 심사의 세부항목에 대한 객관적 설정과 세부항목에 따른 채점 방식 제도를 엄격하게 도입
 - 심사위원의 수를 확대하여 심사의 정량적 객관성을 높임
- 심사의 독립성 보장
 - 심사위원들의 독립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
 - 심사위원들의 심사 채점결과 및 의견에 대한 지원기관의 개입배제
 -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대한 지원기관의 조정 금지를 엄격하게 적용

(2) 주요 사업 내용

- 심사위원 풀 데이터베이스화(DB)를 확대
 - 장르별, 영역별, 분야별 심사위원 풀을 입체적으로 확대하여 DB화
 -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적합한 전문 심사위원을 확보
 - 심사위원 제적사유에 대한 기준을 확대 및 엄격하게 적용
- 예술지원 심사 제도개선위원회 구성
 - 문체부 예술정책과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 한시적으로 심사 제도개선 위원회 구성
 - 지원체계, 지원심사 위원구성 방식, 심사방법, 채점방법, 최종 선정 결과에 대한 매뉴얼 작성
 - 다면심사와 클린심사를 위한 기본 원칙 마련
- 지원심사 옴부즈맨 장치의 실질적인 적용
 - 심사의 부절절한 결과에 대한 제보 및 이의신청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지원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내부 검토를 통해서 리뷰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재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 중 부적절한 심사가 있었다고 확인될 경우 심사위원 풀에서 제외하는 장치 마련
 - 부당하게 탈락한 심사에 대한 구제장치 마련
- 심사 결과 및 평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 평가의 환류를 강화하기 위한 DB 구축 및 심의-평가 연계 시스템 강화
 - 심사의 내용들에 대한 근거 자료 확보
 - 심사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 결과에 대한 내실 있는 리뷰 체계
 - 일괄적인 모니터링 중심의 평가제도에서 우수 사업에 대한 리뷰와 비평 기능의 평가 강화

3) 추진 시 유의점

- 심사의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되 심사위원의 심사 권한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심사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할 때, 예술계 현장과 충분한 토론과 공감을 통해서 개선안을 도출
- 심사제도 자체의 개선도 필요하나, 심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완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제도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가령 정기적으로 지원주체기관의 의결 과정 및 내용을 일반시민에게 동시 공개하거나 시민참관이 가능한 방식의 병행적 도입을 적극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라. 지역분권형 예술지원 추진체계 구축

1) 배경 및 목적

- 문화예술지원정책은 크게 예술창작과 관련된 지원 영역과 문화향유와 관련된 지원 영역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어 왔음. 2000년대 이전까지 중앙정부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문화예술지원정책은 2000년대 이후 지역문화재단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활동들도 크게 증가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차원 지원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유사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주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와 관련된 예산 비중이 높으며, 예술가, 예술단체의 창작 지원 측면의 예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임
 - 부족한 자치단체 예산에 따라 중앙 차원의 지원사업과 매칭하여 지역의 문화예술분야 지원예산을 확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중앙차원의 지원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지역으로 유입되는데, 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예회관연합회, 한국문화원연합회 등이 지역에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는 중앙 차원의 기관들임. 이와 같이 다양한 통로를 통한 지원은 지역 차원에서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각 기관, 단체들 간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케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프로그램 운영에만 치우치게 하는 모습을 보임
- 나아가 이러한 지원체계는 지역문화예술진흥기관의 자치적 역량이나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시키기보다, 중앙기획형 사업의 ‘실행적 차원’에만 집중한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에 주로 초점을 두게 되는 경향을 강화시켜 왔음
- 이런 맥락에서 지역분권 관점에서 문화예술정책의 추진체계를 재조정하고, 그 기능과 위상,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 문화예술지원정책의 효율성과 더불어, 지역 문화예술정책의 자생력 및 기획/운영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 방향

- 문화예술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각 공공지원기관의 역할과 기능 조정
 - 중앙 차원의 지원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기타 기관들, 곧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예회관연합회, 한국문화원 연합회 등간의 역할 및 기능 조정

- 중앙 차원 지원기관과 지방 차원 기관들, 곧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지역문화예회관 등간의 역할 및 기능 조정
- 지역 내 문화예술기관, 단체들간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지역문화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지역문화기관, 단체들간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협력 시스템 구축
- 공공지원기관의 역할 수행을 지원할 법,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 중앙 차원의 공공지원기관과 지역 차원의 기관들이 각 위상과 역할에 맞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2) 주요 사업 내용

- 국고보조금 사업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의 대폭 이관 및 문화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예술지원체계 확립
 - 현재 문화예술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직접 사업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한 기금 사업의 이원화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국고 사업의 경우, 각 부서별로 관련 공공기관을 운용하면서 지원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전달체계상의 혼선 및 비효율성 초래하고 있음
 - 현행 국고보조금 사업 가운데 예술진흥과 관련하여 상시적,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문화예술위원회로 이관하고, 정책 목적상 운영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통한 직접 사업 수행
 - 예술지원과 관련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들(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은 중장기적으로 문화예술위원회로 확대 개편 검토
- 문화향유 지원 관리의 체계화
 - 문화향유와 관련된 영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일부 역할을 담당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생활문화재단 등이 중앙 차원에서 지원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한국문화예회관 연합회, 지방문화원 등이 이러한 지원을 받아 전국 단위 향유지원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문화향유 지원 영역에서 다양한 매개 기관들의 독립적 운영은 서비스전달 과정에서 중복 및 혼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을 초래함
 - 보다 효과적으로 문화향유 지원활동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1)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문화향유지원 기능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예술창작과 문화향유 지원을 두 축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확대 개편하고, 여기에서 문화향유와 관련된 지원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2) 문화예술교육진흥

원이나 (가칭) 생활문화진흥원(생활문화재단 확대 개편)을 중심으로 문화향유 영역 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광역문화재단 지원 확대를 통한 역할 강화

- 현재 광역문화재단은 광역내 기초문화재단 또는 예술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나 자체사업 진행
- 광역자치단체는 필요에 따라 특정 사업을 직접 수행하되, 동시에 기초 자치단체 내 문화예술창작, 향유활동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역할 수행에도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역할을 부여
- 기존에 기초문화재단이나 예술단체 등을 대상으로 중앙 차원에서 직접 지원하였던 지원사업 관련 예산들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역문화재단을 통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재조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적 차원의 수월성(excellence)을 강조하거나 예술인 복지, 국제교류 진흥 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직접 사업을 운영하고, 그 외에는 광역문화재단에서 지역 예술가/예술단체 지원, 문화향유 활동 지원 등의 활동을 계획, 운영하도록 역할 재조정

●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지역문화 활성화 공공기관 협력체계 구축

-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다양한 기관들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활동이나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교육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궁극적으로는 기초문화재단 중심으로 그 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하되, 현 단계는 아직까지 기초문화재단의 위상과 역할이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협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 문화서비스 전달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 현행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재단 등이 서비스 전달체계상 일정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없음
- 이런 상황에서 지역문화재단은 중앙 차원의 사업을 단순 ‘매개’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정규직 업무가 아닌 계기성, 사업별 업무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계약직으로 채용, 업무의 전문성 및 안정성, 기관에의 소속감 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 지역문화재단이 중앙 서비스의 중요한 전달자로서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달서비스 기능 수행과 관련한 지원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추진 시 유의점

- 지역분권형 문화예술지원체계는 지역의 운영역량에 따라 구축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속도에 완급을 주어 추진하되, 1차적으로 국고직접사업 축소를 통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할 강화, 문화향유 지원체계 정비, 지역 문화예술 역량 강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기관으로서의 광역문화재단 위상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역문화재단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되, 지역 간 혹은 해당 지역 내 문화예술기관, 단체들의 역량에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문화활동 활성화, 향유 증진을 위한 협의, 협력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중앙 차원의 집중을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해서는 중앙단위의 지원기관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문화예술기관/단체 협의회들을 통한 직접 지원은, 광역이나 기초문화재단을 통한 지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협의회들은 소속기관, 단체들의 상급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소속기관 및 단체 간 협의, 협력,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등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규모와 구조로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법, 제도를 통해 인력, 예산,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규정 및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제2절 예술 창작환경 강화

1 예술인 창작권 강화

가. 예술인의 경력증명 제도 재편 및 확대

1) 배경 및 목적

- 현행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 자격인증 제도를 명시하고 있으며(제6조³⁸⁾) 최초 자격인증에서 활동증명으로 인증의 대상이 바뀌었음
 - 정책 대상 식별이 필요한 이유는 예술인복지정책의 수립과 협의 과정에서 적절한 예산규모와 정책범위를 설정한다는 행정적 필요와 동시에 ‘구본주 작가 사건’³⁹⁾ 이후 예술인에 대한 활동증명이 주요한 예술인복지의 내용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필요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예술인 활동증명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2016년 말 기준으로 3,4744명으로 이는 당초 현행 「예술인복지법」 도입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산했던 예술인들의 6.4%에 불과한 규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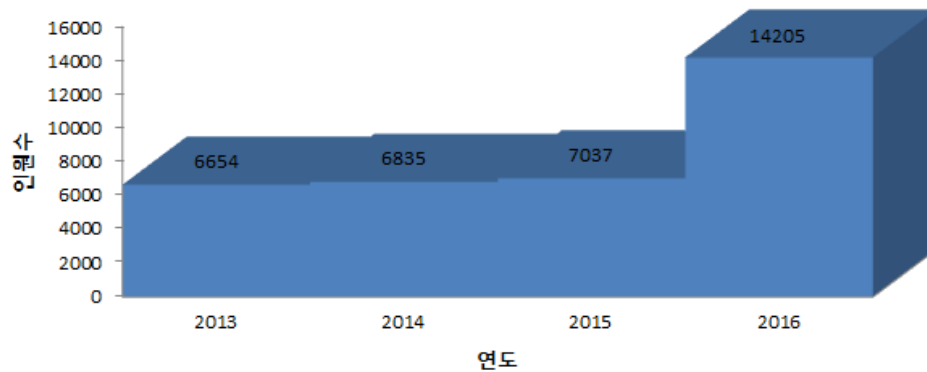
<표 4-10> 연도별 예술인활동증명 인원수(단위: 명)

구 분	인 원
창작예술가	297,580
실연예술가	69,969
예술스태프	25,130
예술교육가 ²⁾	144,696
합 계	537,375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11월 18일’, 예술인 복지법 시행, 2012. 11. 6.

38)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 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9) 구본주 작가 사건: 2003년 당시 37세였던 조각가 구본주씨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자 소송과정에서 가해자 측 보험사가 작가에 대해 ‘주로 건물의 대형 상징물 제작 등 육체노동에 종사했으므로 도시 일용 노임이 기준으로 되어야 하며 정년 역시 60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해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었던 사건



*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6 연차보고서

[그림 4-2] 연도별 예술인활동증명 인원수(단위: 명)

- 이후 예술인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면서 정책범위로 예술인 인증제도에 따른 대상을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유인이 발생함에 따라 예술인 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의 창작환경 변화와 장르별 인증제도 간의 불일치가 커지고 있음
- 예술인자격인증과 연관된 지원정책은 총 5가지로, 사실상 예술인복지 정책의 자격제도처럼 운용

<표 4-11> 예술인자격인증 연관 지원정책

구분	내용
예술인패스	• 예술인활동증명대상자, 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미술과 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
창작준비금지원	• 예술활동증명이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으로 참여가 제한
예술인파견지원	• 예술인활동증명 대상(퍼실리테이터, 일반참가자)
예술인 산재보험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계약이 체결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 예술활동증명을 한 예술인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에 대한 지원

- 탈장르, 복합, 다양성 문화의 확산으로 현행 장르별 증명 제도에 포괄되지 않는 창작 활동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2016년 기준 복수 장르 대상자 5.1%), 이를 포괄하기 위해 심사위원회⁴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음
- 실제로 <표 4-12>를 살펴보면, 2015년 설치된 심사위원회는 1회 심사에서 최소 300명에서 700명을 심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기존의 서류심의 방식을 개선했다고 보기 어려움

40) 기존의 증명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예술인복지법 시행령(14.12.3.)과 시행규칙(14.12.26.)을 개정해 2015년 1월부터 각 분과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표 4-12> 심사위원회 심의실적

심의 차수	심의일	심의실적(명)
1차	2015년 1월 20일	566
2차	2015년 2월 17일	696
3차	2015년 3월 15일	698
4차	2015년 4월 3일	397
5차	2015년 4월 26일	479
6차	2015년 5월 25일	311
7차	2015년 6월 17일	287
8차	2015년 7월 2일	516
9차	2015년 7월 14일	758

출처 : 도종환국회의원실, 예술인복지 지원사업의 현황과 개선방향, 2015. 8.

- 예술인 증명제도가 예술인복지 정책은 물론, 이후 예술인 당사자의 자율 활동과 단체 설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공적 체계를 구축할 때에도 중요한 최소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증명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공적지원에 따른 최소한의 문턱으로 대표성을 비롯한 자격 기준과 독립적 활동 등의 자율성, 활동의 내용이 지원의 대상으로 충분히 타당한지에 대한 공공성과 구체성이라는 기준이 적용된다면, 예술인 증명제도는 자격 기준을 설정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될 것임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 방향

- 예술인 증명제도의 등록제도로의 전환
 - 현행 활동증명 제도는 통상적인 복지체계에서의 자격인증과 다르게 반드시 복지서비스가 수반되는 제도가 아니며, 특히 예술인으로서 사회적 지위의 보장이라는 구체적인 복지 외의 의의가 존재함
 - 따라서 현행 신청에 의한 증명제도를 중·장기적으로 등록제도로 전환 추진
- 예술인복지정책 전달체계 구축: 지방정부 및 지역문화재단, 등록 예술인 지원 단체의 육성
 -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서 일원화되어 있던 활동증명이 관련 협·단체의 일괄 신청방식으로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미미한 상태이며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활동 증명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이에 따라 지방정부 및 지역문화재단을 매개로 하는 예술인등록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역코드’를 발행함으로써 지역에 맞는 특성화 사업이 가능하도록 함

(2) 주요 사업 내용

- 각종 공모, 지원사업과 연계해 자동등록 시스템의 도입
 - 현행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강화하여, 정부 및 지방정부, 문화재단의 공모, 지원사업의 정보를 연동하여 자동으로 등록하고 이를 통보하는 방식의 제도로 변경함
 - 단, 등록 대상자가 등록을 거절할 경우 별다른 불이익 없이 등록에서 배제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방식의 대상 식별, 즉 등록 거부와 관련된 절차 도입
 - 한국문화재단의 심의위원회는 복합장르, 다양성 분야에 대한 대상자, 신진예술가 등에 대한 심의 과정으로 특성화하여 운영함
- 예술인 지원 단체 지원 사업 진행
 - 지역별, 장르별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지역은 지방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설립한 문화재단을 통해서 운영하고 장르별로는 문화예술단체를 매개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원화

3) 추진 시 유의점

- 예술인 등록제의 도입과정에서 미등록 예술인 지원정책과 병행이 필요함
 - 자칫 예술인 등록제도가 예술인 내의 배제 기준으로 작동하면 안 된다는 기준이 되어서는 곤란함으로 기존의 예술인활동증명을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지위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또한 예술인 인증제도는 문화예술의 자율성을 위한 공적 지원이지 공적 지원을 대가로 예술인들의 공적 기여를 요구하는 제도가 아님
- 「문화예술진흥법」 상의 장르구분에 따른 문화예술인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내 문화예술인들을 포괄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현행 문화예술 생태계가 복합장르로 발전함에 따라 방송 등 문화산업 내에 속한 예술인 군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음. 이에 대한 새로운 포괄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개별방식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매개로 한 접근이 일차적으로 유효할 것이라 판단함
- 예술계 특성상 단기, 프리랜서 활동 등이 많으므로, 체계적인 활동 또는 경력 증명을 위해서는 향후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국가(또는 공공기관) 등 공적 분야에서의 활동·경력 증명서 발급을 직접 하는 방법 이외에도 민간 장르 또는 업무별 협·단체를 육성하여 회원(사)의 경력을 등록, 수정, 관리, 발급 등을 해주는 방안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방안 모색도 필요
- 가령, 건설 등 타 분야 경력관리 체계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체계적 경력관리-경력 조회/발급-경력에 기초한 보수책정 기준 제시 등 선순환 구조 확립을 고려할 수 있음
- 자격증 검정, 경력/활동 이력 관리, 증빙 발급, 재교육 등을 공신력 있는 민간 협단체에서 위탁 수행함으로써, 수익 창출은 물론, 자율과 장르별/특성별 예술 현장에 기반한 활동/경력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예술 분야 대표성 있는 협단체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효과가 기대됨

나. 예술창작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및 합리화

1) 배경 및 목적

- 예술정책과 문화산업은 여타 산업체계와는 다르게 복합적인 생태계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쟁점이 드러남
 - 특히 예술창작은 직접적으로 문화산업의 수단이 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문화관점의 출현과 문화수요자의 계발로 이어지고 있음.
 -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 ‘최고은 작가’, ‘공장미술제 논란’ 등 문화예술계의 주요 사건들은 문화예술생태계 내에서의 적절한 보상체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음
- 문화예술생태계의 관계망이 여타 사회 영역과 차이가 남에 따라 일률적인 관련법과 제도를 적용할 때 새로운 갈등이 야기됨
 - 실제로 정부 주도의 표준계약서 마련과 이에 대한 강행규정이 기존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나 실질적인 공정 환경 마련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어왔음.
 - 따라서 문화예술생태계 내의 공정 환경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고, 각 장르별 산업군별 차별적인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이 필요

<표 4-13> 분야별 표준계약서 종류

분야	종수	종류
영화분야	4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상영계약서 • 시나리오 표준계약서(4종) • 표준근로계약서 • 영화투자표준계약서
대중예술분야	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
공연예술분야	3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계약서 • 출연계약서 • 기술지원계약서, 각각 시안
만화분야	6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계약서 • 전자책 발행계약서 • 웹툰 연재계약서 • 매니지먼트위임 계약서 • 공동저작계약서 • 기획만화계약서
출판분야	7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출판허락 계약서 • 독점 출판허락 계약서 • 출판권 설정계약서 •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

분야	종수	종류
저작권계약	1종	• 저작권 양도,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3종	• 표준근로계약서 • 표준하도급계약서 • 표준업무위탁계약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5종	• 표준근로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	2종	•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 특히 정부 주도의 표준계약서 제작이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은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부담감이 있기 때문임
 - 따라서 관행이라는 형태의 불문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역내의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며 정부는 민간 자율의 결정 사항을 사후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자율결정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상대적으로 취약한 예술인 당사자 단체에 대한 육성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현장에서의 공정 계약 및 보상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다양한 형태의 용역을 제공하는 문화예술산업 내에서의 공정비용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아 산업 내 저가 경쟁은 물론 이에 따른 창작자들의 빈곤이 연쇄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이를 테면 「공연예술법」에 따라 법정 무대예술전문인의 경우에도 매년 200~300명 씩 배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정 노임 기준이 정비가 되지 않아 상이한 대우를 받고 있는 형편임

<표 4-14> (사)한국물가정보의 표준노임가

(단위 : 원)

직종명	해당자격	단위	기준년도별 단가			
			기준	단가	기준	단가
무대1급	(무대, 무대기계, 무대음향, 무대조명) 1급	일	2015	234,310	2012	203,280
무대2급	(무대, 무대기계, 무대음향, 무대조명) 2급	일	2015	185,720	2012	156,130
무대3급	(무대, 무대기계, 무대음향, 무대조명) 3급	일	2015	134,730	2012	105,450

<표 4-15> 서울문화재단의 단기기준공지(2016)

세부 내용	수 당(기준)	비 고
1) 무대크루	75,000원(1일)	무대예술전문인 노임단가 기준 참조
2) 조명(음향) 크루	100,000원(1일)	

- 기본적으로 용역을 대가로 제공하는 금액은 사업자의 관점에서는 비용이지만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생활의 기초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논의는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적정 보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그에 따라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조차도 일관된 기준이 없이 문화예술 노동에 대한 임금 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음
-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지역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에 있어서도 정확한 임금체계나 단가 기준 없이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사업비 중 인건비 항목이 자의적으로 조정되는 일이 발생함
- 일례로 2017년 상반기 모 지역에서 진행한 사업의 경우에는 애초 ‘제안공모’ 방식으로 진행하여 선정된 사업에 대해 일방적으로 인건비를 줄이도록 요구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일반 공공계약에서 지켜지는 계약 기준들이 느슨하거나 혹은 아예 무시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음

<표 4-16> 00문화재단: 2017년 조선통신사 예산 변경사례

구분	내용	비용
(공모시) 기획 및 인력	총감독1인 * 2개월 * 2백만원	4백만원
	연출팀장1인 * 2개월 * 150만원	3백만원
	운영팀장1인 * 2개월 * 150만원	3백만원
	회계팀장 * 2개월 * 150만원	3백만원
(계약시) 기획 및 인력	총감독 1인	54만원
	연출팀장 1인	50만원
	운영팀장 1인	50만원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 방향

- 문화예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구축: (가칭) 문화예술생태계 공정 가치사슬에 대한 규정 마련
 - 다소 선언적 내용이라 하더라도 공정 환경에 대한 생태계 내의 합의가 우선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필요하다면 전체 산업 군내의 이익구조가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한 사항을 조사 발표하는 것을 의무화함⁴¹⁾

- 문화예술 영역의 적정한 비용지불 기준에 대한 공표: 공정보수기준 공시 제도 도입
 - 관행과 하도급 구조에 의해 사실상 개별 예술인은 산업 내에서 비용에 대한 ‘교섭력’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임
 - 따라서 통상적인 비고용관계 혹은 실질적인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유형의 보상체계에 대해서는 개별 합의 혹은 계약을 넘어서는 강제적인 기준으로 기능해야 하고 이에 대한 예외로서 일부 영역에 대한 유예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 주요 사업 내용

- 예술인 신문고 채널 확대 및 운영단체 지정제도 마련
 - 현재 영화인신문고를 제외하고는 예술인단체가 신문고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바, 현행의 신문고 제도는 예술인복지법에 규정된 법정기구이므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또는 협·단체로의 위임이 어려운 여건임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행의 신문고 채널의 확대를 도모하되, 장기적으로 예술인 신문고 기능을 분권, 확대하여 신문고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장르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민간단체 중에서 신문고 운영을 공동으로 하거나 혹은 특정 단체가 전담하는 방식으로 지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대로 마련해나가야 함

<표 4-17> 2016년 예술인신문고 운영실적

종결	접수				
	계	불공정계약 강요	수익배분 거부, 지연 제한	창작활동 방해, 지시 간섭	정보의 부당이용 및 제공
100	150	8	134	6	2

* 자료: 예술인복지재단, 2016 연차보고서, 재구성

- 2014년부터 현재까지 300여건의 불공정 사례가 접수되었지만 이중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조치인 시정명령이 나온 것은 2016년 9월에 이르렀을 정도로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제도적 실효가 낮은 부분 역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신문고 접수 내용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비용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해결 과정을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실효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음

41) 문화장르별 수직계열화 지수 개발, 창작(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의 가치 분배 현황에 대한 조사, 총매출액 기준의 산업 평가 지표 외에 창작자 지위 및 경제적 분배 정도를 고려한 생산환경 지수 도입 등

- 지역 예술인 신문고의 신설과 2심제도 도입
 -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인에 대한 권리구제가 지역마다 차이가 날 수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지역문화재단을 권역별 예술인 신문고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2심제를 도입해 1차 신문고 운영 단체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설치된 ‘문화예술공정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절차로 다층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공정보수기준 공시 제도 도입
 - 보수기준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매년 초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부터 사업예산이 편성되는 8월까지 공정보수기준 설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 진행

<진행 시뮬레이션(안)>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부에서 당해 연도 공정보수기준 결정에 대한 고시를 실시하고, 고시의 내용에는 9월에 차년도 공정보수기준이 공표된다는 사항이 들어감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보수기준 협상이 필요한 사용자 혹은 예술인(노동자) 측이 협상 당사자를 지목하여 협의 게시 신청을 접수함. 기본적으로는 개별 사업장별 협상은 배제하고 장르별 혹은 산업 소분류별 협상대상만 진행함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상 대상을 공표하는데, 민간 사용자 단체 등이 지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정부 내 혹은 지방문화재단 내에서 선임한 협상단, 중앙정부(문화부, 문예위 등)가 협상 당사자로 지정되어 진행함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월 말 최저임금 결정 시기 전후로 월 최소 2회 이상의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7월 말에 잠정 합의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함. 이 결과에 대해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예술가, 산업 내 이해관계자 혹은 정부 등이 의견을 청취함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 확정. 협상 당사자가 간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부가 7월 잠정합의안과 기존 단가에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고려하여 공고함

- 최근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아티스트 피’와 같은 기준 역시 공정환경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위의 예시대로 시행하기가 힘들다면, 최소 문화예술 직종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표와 직종해설⁴²⁾에 대한 자료를 문화부 혹은 문화예술위원회가 매년 공표하는 절차 필요

42) 직종해설은 세분화된 문화예술분야 창작활동에 대한 적절한 노임 기준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기존의 법령체계에 서는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없었던 예술인의 세부 직종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됨

- 문화예술 지원사업 시 표준계약서 사용 강화 및 확대
 - 2016년 5월부터 문화부는 불공정 행위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영화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투자조합의 투자,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에서 일체 배제하도록 하였음
 - 하지만 이는 사후적인 문제해결이고 애초부터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면 불공정 환경의 상당부분이 해결될 수 있음. 따라서 상기한 공공기금 지원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 혹은 이에 준하는 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가점 방식으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공공 기금 지원에 유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문화산업 내에 만연한 하도급과 책임제작 관행 내에서의 불공정 문제가 개별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으로 이어지는 구조에 주목해서, 위탁 등 하도급 및 책임제작 계약 등 지원대상자가 직접 수행하지 않는 공정에 대해서도 표준계약서 준용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3) 추진 시 유의점

- 생태계 내 산업군이 미성숙 되어 대표적 파트너의 부재
 - 현재 산업 내 사용자 단체 등도 취약한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상 과점화 되어 있거나(방송 등) 시장 내 사용자가 분명한 경우(정부 및 지방정부 등)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면서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함
- 공정환경 기준의 ‘구조적 담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생태계에서는 사용자성을 가진 창작자들이 다양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일반 노사관계에서와 같이 단일 대표성을 부여하기 보다는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 영역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음
- 방송, 영화 등의 생태계와 달리 노사측 대표적 협단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예술계의 경우, “공정보수기준 공시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진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예술계 산업군 내 직종별 대표단체 부재 등으로 보수기준 제시의 실현 가능성도 쉽지 않을 수 있음
 - 외국의 경우 유니온을 통해 협상력을 키우고 직종별 보수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노사 협상을 통해 책정, 제시하는 형태로 운용하고 있는바, 유사 제도의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준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다. 경력 단계별 창작 지원방식 다각화

1) 배경 및 목적

- 예술가의 창작역량은 보편적 방식이 아닌 다양한 경로를 거쳐 양성됨. 주로 개인주도형 창작활동이나 현장업무 수행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원사업 등에 일부 참여함으로써 전문성과 경력을 개발할 기회를 가짐
 - 문화예술 창작 및 실연 등의 예술가들은 대부분 고등교육과정에서 전공교육을 이수한 비율이 높으나, 역량강화는 창작활동 기회를 통해 개인적 능력에 의해 해나가는 경향이 강함(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
- 그 간의 공공영역의 지원사업이 예술가 지원대상을 예비, 신진, 중견, 원로 등으로 경력 수준을 명시한 사업보다는 포괄적으로 대상을 설정한 사업이 많음에 따라 정책대상 집단의 계층별 지원 공백 발생
 - 중앙정부 및 소속/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 등의 사업은 경력단계에 따른 계층별 특성화 지원보다는 주로 경력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5년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예술인의 연령별 모집단 분포에서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에 해당됨

<표 4-18> 우리나라 연령별 예술인 분포

구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미상	계
명	32,464	23,731	26,473	28,568	20,096	131,332
비율	24.7%	18.1%	20.2%	21.8%	15.3%	100.0%

* 30대 이하 : 10대(299명), 20대(10,195명), 30대(21,970명) 포함

- 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젊고 유망한 예비 또는 신진예술가의 공공영역 창작활동 지원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 향후 정책대상으로 적극적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단체 및 개인의 역량이나 해당분야 발전의 기여도 등을 중요 심사기준으로 보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 몇 년간의 공연 및 수상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진 예술가들은 지원 신청을 하기가 어려움
 - 예비 또는 신진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은 창작활동 그 자체 보다는 교육, 세미나, 연구 등 창작활동 전 준비단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정책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층별 집단의 니즈와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방식의 다각화 및 사업 간 연계화가 필요

- 예비 또는 신진예술가부터 저명 예술가들에 이르기까지 계층별 창작활동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일회성 창작활동 지원이 아닌 사후 관리 등을 통해 사업 간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연계 강화로 최적화된 창작지원 체계 마련 및 예술지원의 효과성 증대
- 청년/신진/중견/저명 등 경력 단계별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 방향

- 예비, 신진, 중견, 저명 등 경력단계별 특성화된 창작활동 지원방향 수립

<표 4-19> 경력단계별 창작활동 지원방향 수립

대상	지원방향
예비예술가	창작활동 기회 최대 부여
신진(차세대)예술가	인큐베이팅을 통한 창작활동지원
중견예술가	우수 작품별 지원
저명예술가	국가대표급 예술가(단체) 육성 지원

- 예비·신진 등 청년예술가의 데뷔나 작품제작기회 제공 등 창작지원 강화로 예술시장 진입장벽 완화
- 일회성 경제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으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
- 중견예술가가 왕성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우수 작품 지원 확대
- 저명예술가가 대한민국 대표예술가로 위상을 갖추 수 있도록 예술 성과확산 지원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확립으로 사업간 연계 및 창작여건 개선
 - 예술활동의 단절 없이 최초예술지원 등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
 - 계층별 지원프로그램을 특화하고 각 단계별로 두각을 나타내는 대상자에 대해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집중지원 연계형 프로그램 운영
 - 진입단계로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예술영재 발굴, 차세대 성장동력을 위한 다년간 집중지원, 안정적 재정지원을 통한 창작역량 강화, 대한민국 대표예술가로서의 예술적 성과 확산 등, 예술가의 성장주기에 따른 최적화된 창작지원체계 운영

(2) 주요 사업 내용

- 예비예술가 : 창작활동 기회 최대 부여
 - 대상 : 등단 전 문학인, 작품발표 전 미술가, 개인작품 발표 전 공연예술가 등
 - 대학생 및 졸업 후 입직 전 청년예술가의 새로운 형식과 생각, 융합 등 예술적 실험을 시도하는 작품 지원으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
 - 작품 발표를 목표로 그 전에 공공지원의 수혜경험이 없는 예비 청년예술가에게 사전 연구 및 발표기회를 제공하는 최초지원사업(사전지원)
 - 지원신청시 일정부분 자격요건이 주어질 경우 가능한 지원기회를 부여하는 등 선정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소액다건 지원을 통한 창작활동 기회 최대 부여)
 - 향후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을 통해 잠재력 있는 예비예술가의 창작활동 연계
- 신진예술가 : 인큐베이팅을 통한 창작활동 지원 및 전도유망한 차세대 예술가 육성
 - 대상 : ① 최소 2개 이상의 작품 참여경험이 있는 예술가로서 ② 30대 이하(만 39세 이하) 또는 데뷔 10년 이하 예술가(단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가 해당되어야 함)
 - 신진예술가들의 지속적 활동기반 확보 및 발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년간 집중 지원으로 인큐베이팅을 통한 창작활동 지원
 -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을 위해 최대 3년간 연속지원을 통한 활동기반 마련 지원
 - 작품활동 공간(연습공간), 전시(공연)장 지원 또는 예술적 성숙을 위한 저명 예술가의 멘토링을 통한 창작 활동·발표 지원
 - 지원과정에서 부각된 유망주는 해외진출(아트마켓, 순회공연 등) 지원을 병행하여 창작역량 강화 및 신진 예술가 네트워킹 확대 계기 마련
 - 지원컨설팅 등을 통해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 지원 등
 - 사전지원 및 사후지원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으며 매년 일정기준의 성과달성 여부에 따라 지원여부 및 정도를 결정
- 중견예술가 : 우수작품별 지원
 - 대상 : 활동 연한 및 경력이 성숙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되는 예술가
 - 중견예술가는 전문예술인으로서 왕성한 창작활동이 필요한 집단임. 안정적 재정지원을 통한 창작역량 강화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신진예술가 지원을 통해 발굴된 우수중견 예술가도 지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작지원 사업 간 연계를 제고함
 - 분야별 창작활동 지원, 전국규모의 대형 행사참가 지원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한 재정지원 프로그램 제공

- 주요 국가 창작 레지던스에 대한 국제교류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해외교류활동 기반 제공
- 기존의 작품별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예술적 성장을 지원하되, 안정적 창작 활동을 위해 문예회관 중심의 기존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 사업 등을 문학집필공간, 시각예술 레지던스 프로그램 공간 등 타 분야로 확대하여 예술인 창작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고려
- 창작지원금, 우수 작품 재공연, 해외 진출 지원 연계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단체(예술가) 역량을 강화함
- 저명예술가 : 세계적 수준의 민간예술단체(예술가) 육성
 - 50대 중반 이상의 저명한 예술가를 대상으로 그 간의 작품 활동을 집대성하여 국내에 홍보하고 해외 진출을 통해 한국의 문화예술을 세계에 확산시킴
 - 세계적 수준의 민간예술단체 육성을 위해 ‘국가대표 예술단체(예술인)’을 선정, 집중 지원하고(문학, 시각예술의 경우 예술가), 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 세계적 수준의 민간예술단체 육성을 위한 집중지원체계를 통해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창출과 연계가능
 - 예술단체가 제출한 연간 사업계획서(발표, 해외진출 등)를 협의하여 ‘협약계약서’작성 후 일정비율 협의 지원
 - 작품활동 집대성 지원을 위해 원로예술가들이 평생 수집한 활동기록 등의 안정적 보존을 위한 인프라 마련도 필요

3) 추진 시 유의점

- 경력단계별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 노력
 - 경력단계별 다각적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액다건과 선택집중의 혼합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창작지원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함
- 중앙정부 및 소속/산하기관과 지역문화재단의 예술지원사업 간 기능분담 및 역할정립
 - 기관별 예술활동 수혜비율을 보면 공공기관(61.3%), 중앙정부/지자체(36.2%)로 공공기관 수혜비율이 매우 높음(문화체육관광부, 2015)
 - 예비, 신진 예술가 등의 창작지원사업에 대해 지역의 역할 범위와 중앙기관의 역할 등 경력단계별 예술가 활동지원에 관한 중앙기관과 광역·기초 지역문화재단 간 기능분담과 역할정립이 필요

2 예술인 사회안전망 확충

가. 예술인 복지금고 설치 및 소액대출제도 운영

1) 배경 및 목적

- 예술인 복지금고는 예술인 복지를 위한 숙원 사업
 - 예술인 복지금고의 필요성은 1980년대부터 정책 방안으로 제시되어 왔으며, 예술인복지법 시행 이후 예술인복지재단에 의해서 관련 연구 용역이 수행되어 시행안이 구체화되었고, 최근 예술인소셜유니온 등 예술인 단체로부터 전향적인 설치 필요성 제기됨
 - 예술인복지재단 의뢰로 한국금융연구원이 2013년 수행한 「예술인복지금고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언론인금고와 한국출판금고를 유사 금고 사례로 연구하여 예술인복지금고의 대출상품 설계, 운영방식, 운용방안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 두 금고가 예술인복지금고의 모델로서 간주될 성공 사례인지에 대해서 의문 제기
- 예술인의 특성과 사회적 기여 인정에 바탕을 둔 안정적인 예술인 복지금고 설립 운영
 - 예술인 다수가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 부족으로 생활 곤란을 겪고 있으며, 서민금융이용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한 금융제도 운영이 필요함
 - 예술인 생활의 어려움을 줄임으로써 예술인복지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술창작활동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 방향

- 예술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집합적 보상
 - 예술인 활동의 성과는 국가 위신 제고, 장소 이미지 창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창출, 사회 통합 공헌,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공공재(public good) 성격이 강하여 이에 대한 집합적 보상의 필요성 존재
 - 예술인 복지금고에 대한 공적 지원 및 민간 기여는 예술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공공 제도화로서 의의를 가짐

- 예술인 연대의식 기반 추진
 - 특정 직종 금고로서 특정 직종 금고로서 예술인 복지금고의 설립 및 운영은 예술인의 연대의식에 기반을 두어야 함
 - 특히 승자독식 성향이 구조화되어있는 예술계에서 성공 예술인의 적극 참여와 희생 의지에 바탕을 둔 자구·자정 노력이 예술인복지금고의 기본 출발점이 되어야 함
- 국민적 공감대 확보
 - 서민 금융과의 형평성 이슈 제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적 지원의 정당성 논리 및 국민적 공감대 확보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지속적 운영 가능
- 예술인의 상징자본과 사회자본에 기반을 둔 대출 관리 운영
 - 예술인들의 경제적 담보 능력이 약한 반면, 예술 활동이 상징자본과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특성이 강하므로 이에 바탕을 둔 대출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예술인의 경제활동 역량 향상에 기여
 - 예술인들은 활동의 특성상 금융 정보에 어둡고 합리적 금융 활동에 취약한 경우가 많음.
 - 마이크로파이낸스가 컨설팅 기능을 병행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한 바와 같이 예술인 복지금고에서 컨설팅 기능 병행으로 예술인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
- 안정적이고 공정한 운영과 확장적 운영 추진
 - 부실률 관리 등을 통해 모럴 해저드 방지와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 확보
 - 수혜자 선정의 제도화를 통해 공정성 확보
 - 예술인 특화 금융지원제도로서의 금고 운영은 실험적 성격이 강한 제도로서 일정 기간 후 성과를 평가하여 확장적 운영 여부를 결정

(2) 주요 사업 내용

- 복합적 원천에 바탕을 둔 기금 확보
 - 예술인복지금고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종자 기금이 확보되어야 하며, 예술인복지금고가 가지는 복합적 성격과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예술인 자구 노력, 예술 가치 활용 보상, 공적 지원 등을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
 - 예술가의 연대 의식에 바탕을 둔 예술인의 출자와 구좌 갖기 운동 등을 통한 자구 노력 수행

- 예술가에게 개별 계약을 통해서 지불되지 않는 공공재(public good)로서의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서 문화산업 및 플랫폼 사업자, 미디어 기기 제조업자 등을 중심으로 기금 출연 유도
 - 문화예술 활동의 직접 수혜자를 대상으로 문화복권 사업 시행 및 정부의 기금 출연
 - 각 부문 간의 비율 배분은 독일의 예술인 사회보험의 경우 등을 참고하여 조정
 - 종자 기금 확보 이후에도 지속적인 기금 충당 수행
- 예술인 생활 대출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의 용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생활 대출의 대출상품으로는 신용대출 형태의 소액생활자금대출과 담보대출 형태의 주택자금대출이 적합하며, 대출상품 설계, 운영 방식 및 운용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용역 안을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 대출대상은 예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예술인으로서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은 예술인으로 설정하되, 예술가 경력과 활동의 다양성을 포괄하기 위한 보완적 노력으로서 협회 및 단체의 구성원을 예술가로 인정하는 방안 추진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협회 및 단체의 운영 실적, 회비 납부 실적에 대한 확인 절차 마련 필요
 - 예술인복지금고의 거버넌스로서 예술인복지금고의 운영을 총괄 감독할 금고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산하에 위험관리소위원회, 자산운용소위원회, 성과평가소위원회를 두며, 실무를 담당할 예술인복지금고 사무국을 예술인복지재단 산하에 설치하는 용역안이 기본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무국 내에 있는 융자심의 업무를 감독하여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담당할 소위원회 기능의 추가 확보 필요
- 사업 대출
- 생활 대출을 위주로 하되 사업 대출도 일부 포함하며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예술산업의 성장 기반으로 활용
- 신용대출과 신용 보증 사업의 점진적 확대
- 기존의 유사 금고 사업들은 신용 대출 없이 담보 대출만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예술인복지금고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용대출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 예술가의 창작 역량 평가에 기반을 둔 신용 대출의 도입 필요
 - 신용 대출의 방식은 예술계에서의 평판과 동료 평가에 기반을 두도록 설계하고 대출 심의에서 동료의 추천에 의한 신용 보증에 기반을 두도록 하며, 신용 보증은 물적 담보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추천인 본인의 신용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

- 예술인의 창작 역량에 대한 신용 평가를 바탕으로 신용 보증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기존의 서민금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금융상담 업무 수행
 - 예술인 대상 홍보 및 컨설팅 활동을 통해 예술인복지금고의 대출상품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을 소개하여 활용하도록 지원함.
 - 돈의 용도와 상환 계획에 대한 개별적 조언 수행을 통해 예술인의 금융 문해(financial literacy) 향상에 기여하고 예술인의 경제적 자립과 예술산업 성장에 기여

3) 추진 시 유의점

- 부실대출의 관리 필요
 - 유형의 담보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대출에 대한 상황이 부실화되었을 때 실제로 채권 추심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함
 -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에서는 초기기금 200억 원, 연간 대출 20억 원, 3년 만기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대출이자율 3%, 무담보 대출, 추심불가의 조건에서 부실률 15%인 경우 20년차에 기금 수준이 회복된다고 예측하며, 부실률 관리 기준으로 15%를 제시하였음
 - 부실률 관리를 위해서는 금융공학적 노력 이외에 예술계 전반의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이해서는 금고 운용 실적의 투명한 적시 공개와 예술계와의 지속적인 소통 노력 필요
- 민관의 협업 노력 중요
 - 불공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의 성공은 어느 한쪽의 노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술계 내의 자정노력과 정부 차원의 제재 강화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문제임을 인식하여, 협업 수준 확대 노력이 요구됨

나.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지원

1) 배경 및 목적

- 도시재생,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자치와 공동체 등 사회적 의제에 문화예술이 차지하는 총량이 증대되고 있음
 - 도시재생은 물리적 환경정비의 한계를 넘어 도시 기능의 회복, 커뮤니티의 재생, 도시 활력과 매력 창출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확장
 -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와 주민참여, 지역과 공동체의 공속감을 이끌어내는 방편으로서 문화예술 전략이 부상
 - 예술가들이 단기 사업 후 빠지거나, 예술가들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현안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와 근본적인 관계를 만드는 ‘마을살이’의 토대를 마련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예술인들이 신청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기 진행 중
 - 지금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것이었음. 보금자리주택 정책에서부터 그 대상이 신혼부부와 청년층으로 다양화 되면서 수요자 맞춤형 공급이 시작되었으며,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시작 단계임
 - 2016년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 창업인, 프리랜서 등의 지원제도 통해 예술인도 <행복주택> 신청과 입주가 가능해졌음
 - 서울시는 2020년까지 예술인 임대주택을 1000호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미 <만리동 예술인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삼선동 배우의 집>, <정릉 예술인 공공주택> 등 예술인 임대주택 사업을 지속해오고 있음
-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통합솔루션으로서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 예술인이라는 특정 계층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사회적 역할로서 전환, 촉진하고 현 정부 국정과제의 중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추진> 6개 과제의 통합 솔루션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음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 방향

- 지역문화진흥과 일자리, 주거혁신의 통합 정책으로서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확대
 - 예술인 공공임대주택은 지역과 괴리된 예술 강사 일자리와 처우, 공급 일변의 지역문

화콘텐츠와 축제, 문화 없는 도시재생과 공동체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편이자 국토부와 문체부 간 융합 및 협치 정책 대표사례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참여와 공동체 문화를 촉진

- 서울시 예술인 공공임대주택은 예술인들의 정주를 지원함과 동시에 사회적 이슈에 참여하는 예술가 공동체 사례로 작동하고 있으나, 예술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단위에 입주 예술가들이 결합하는 정도의 산발적 참여로만 지역사회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술가 공동체 차원에 머물러 있음
- 이를 발전시켜 예술가들을 도시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지역예술가이자 주민활동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일거리를 함께 설계하고 정보를 나누며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참여를 요구하고 견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 2012년 시카고 문화계획(2012 Chicago Cultural Plan)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예술가의 유인 및 유지”였으며, 예술가들의 주거와 작업 공간을 시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Acme Artists Condominium Community〉 및 〈Switching Station Artist Lofts〉 같은 공간지원 프로젝트와 예술가들을 위한 취업과 일자리, 네트워크 등 정보를 제공하고 후원과 연결하는 〈시카고 예술가 지원 웹사이트, chicagoartistsresource.org〉를 운영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음

● 예술인 공공임대주택의 혁신 사례를 넘어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

- 공공임대주택을 예술인 사회안전망 확충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문화예술이라는 분야의 요구 이상으로 비춰지지 않음
- 예술인 공공임대주택은 단순 주거복지에 이은 시대 변화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공급이라는 확장된 제도를 넘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저소득 청년 예술가들의 정주 공동체와 일자리를 연동시키는 주거복지정책 내의 진보된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자리매김 해야 함

● 기초자치단체 주도의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시행

- 위 복합 정책의 통합 사업과 사례는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실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술인공공임대 주택의 건립과 시행을 기초에서 할 수 있는 예산과 권한의 이양 또는 중앙과 광역 단위의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2) 주요 사업 내용

- 마을단위 직주일체형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마곡지구에 창업생태계와 주거를 합하여 1만평 규모를 조성하는 새로운 모델을 추진 중에 있으나, 대규모 개발과 산업을 엮어 조성하는 것이 아닌 마을단위에서 관계를 만들고 정주하는 직주일체형 예술인 공공주택 모델이 필요함
 - 지역 내 작업장+카페테리아+주거 또는 문화시설+레스토랑+주거와 같은 혁신적 모형의 공공임대주택 개발이 필요함
 - 특히 매입형 임대주택의 경우 작업 공간, 사업장 등이 매입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는 현 제도상의 한계로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추진해야 함
- 다양한 유휴 공간을 예술인 공공임대주택으로 조성하는 도시재생 모델
 - 도시 유휴지인 폐교, 가압장 등 재생이 필요한 공간을 전환하는 모델을 개발
 - 도시재생과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시민체감도를 높이고 지역의 구체적 삶과 연결되는 창조공간의 거점으로 조성
 - 입주가 결정되었거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 해당 지역 예술전공자 등이 공공임대주택 재생 과정에 참여
- 물적공간 조성을 넘어 지역 거버넌스와 사업을 연결
 - 공공임대 주택의 물리적 조성과는 별개로 이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가들을 선발하거나, 지역활동을 전제로 입주하는 방식을 적용
 - 입주자 공동체의 미션으로 생활권의 생산과 창업, 교육을 연계하는 다양한 지역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장치 등을 마련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한명의 예술가가 해당 지역의 축제에 참여하고 인근 학교의 예술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거주지 내 작업장에서 예술작업 및 판매를 하고, 생활예술 동아리 리더로 많은 주민들을 만나 공동체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삶을 만들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소프트파워 정책’의 시발점으로 조성할 수 있음

3) 추진 시 유의점

- 주거, 문화, 일자리 등 칸막이를 넘는 협치행정, 문화행정이 전제되어야 함
- 지역기반의 활동이 전제된 예술가들을 선발하고 견인해야 함
- 예술가 및 주민들의 모임, 동아리, 협동조합 등을 결성하고 이끄는 리더(그룹) 필요

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1) 배경 및 목적

- 현재의 사회보장체계는 기존 개별 체계에서 통합체계⁴³⁾로 전환되면서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확대되고 있음
 - 통상적으로 사회보험 체계는 사회통합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정도로,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통합적인 공공사회보장 체계를 발전시켜 왔음
- 현행 「예술인복지법」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를 비롯, 해외의 주요한 예술인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존 사회보장체계로 예술인들을 통합하는 것을 토대로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임
 - 사회보장 체계는 통상 기여에 의한 보장이라는 구조와 함께 계층 간 재분배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보장과 보충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현행 사회보험 지원제도의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 보험료 지원형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형편임. 이는 기본적으로 자부담에 대한 고려에 의해 ‘임의가입’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4-20>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현황(단위: 명)

구분	산재보험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국민연금
2016년 신규	238	984	
2016년 누적	1,165	1,542	82

- 한국의 문화예술생태계는 창작과 수익 구조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기본적인 사회보장 체계는 공공 차원에서의 선제적 투자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음
 - 실제로 90년대 후반부터 논의되어 왔던 예술인공제회 모델이 자리를 잡는데 실패한 것은 자조모델이 자리 잡기 힘든 한국 문화예술생태계의 경제적, 관계적 빈곤함이 자리 잡고 있음
 - 특히 생태계 내 양극화가 여타 분야와 다르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며 이 부분이 비예술인들에게 각인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술인 다수의 사회보장에 대한 비문화예술분야를 설득할 수 있는 ‘사회적 정당성’의 토대가 취약한 것도 사실임

43) 사회보험 통합: 2011년 기존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어 오던 사회보장체계의 징수업무를 통합하였음. 이는 한편으로는 징수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운영상의 요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편적인 사회보장에 대한 실질적 통합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기도 함

-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는 일차적으로 예술인의 생활수준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책임과 동시에 예술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사회적 통합’의 관점에서 복합적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예술인사회보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에 대한 지원으로 협소화되어 왔던 것에서 벗어나 예술인의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사회보장 체계로의 인입이라는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함
 - 이런 관점은 민간 생태계의 관점과 당사자의 관점과 상이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정부의 정책은 사회보장 체계의 정책적 효용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가질 필요가 있음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 방향

- 저부담 고지원 구조를 ‘응능형 부담구조’로 전환
 - 자기부담의 문제 때문에 현재 사회보험 보장체계는 ‘임의가입’ 형태로 유지되고 있으나 이럴 경우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이 시혜성 정책으로 머물 개연성이 큼
 - 실제로 프랑스의 앙페르미팡 등의 예술인 복지제도는 자부담 비율을 전제로 설계가 되어 있으며 독일의 예술인사회보장 체계도 자부담이 전제로 되어 있으며 강제가입 방식임
 - 따라서 오히려 필요한 것은 예술인들의 부담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자부담 구조를 개선하는 것임. 즉 사회보장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응능형 구조가 아니라 응능형 구조를 전제로 구축될 필요가 있음

구분	지원 내용	월 보험료 (원)	예술인		문화예술사업자		지원 상한 (1개월 기준)
			예술인 부담	재단 지원금	기획업자 부담	재단 지원금	
근로자인 예술인	고용보험	21,700원	4,550	4,550원	6,300원	6,300원	예술인: 36,050원 사업장: 37,800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126,000원	31,500	31,500원	31,500원	31,500원	
프리랜서 예술인	국민연금 (자영업자가입자)	126,000원	63,000원	63,000원			예술인: 63,000원

[그림 4-3] 현행 사회보험지원 제도 현황

- 당장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구조이기 때문에 의무가입 방식으로 전환하고 일차적으로 예술인활동증명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산업 내 부담금 구조를 설계하고 적용함으로써 사회보험 체계를 통한 산업생태계 선순환 구조의 기초를 구축함
 - 당장 적정수준의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체계를 만들어 독립적인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현재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건이라도 사회보장 체계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필수적인 것은 실제 문화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이윤의 재분배에 대한 것으로 독일의 <예술가사회보험료 안정화를 위한 법>에서와 같이 고용주 및 저작권사용자의 부담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도입함. 독일의 경우, 정부: 예술인: 사용자 = 5: 2: 3의 구조임

분류	세분류
작품 실사용자 (Verwer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사, 언론사 ▪ 극단, 오케스트라, 합창단 및 이와 유사한 회사(공연 및 전시에 해당하는 목적을 지닌 경우) ▪ 극단, 콘서트, 객연 등의 감독 및 이와 유사한 회사(공연 및 전시에 해당하는 목적을 지닌 경우) ▪ 라디오/TV 방송사 ▪ 영상/음악 제작자 ▪ 박물관, 갤러리 및 미술품 거래회사 ▪ 광고 및 홍보 대행사 ▪ 버라이어티 쇼 및 서커스 회사 ▪ 예술 및 출판 활동에 관련된 교육기관 등

[그림 4-4] 독일 예술인사회보험법 상 작품 실사용자의 구분

- ‘보장과 보충’ 원칙의 적용
 - 예술인 최저생활기준과 같은 보편적인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대신, 장르별, 산업별 특수성에 따른 차등적 사회보장은 보충하는 방식으로 제도설계
 - 자칫 개별 특수성이 강조될 경우, 문화예술생태계 내의 형적 확산을 제한하는 고립 효과에 머무를 가능성이 큼

(2) 주요 사업 내용

- 예술인 최저생활기준의 마련 및 제도 확산
 - 예술인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게 최저생활기준이 생활보장과 더불어 활동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있음. 예술인 최저생활기준은 기존의 사회보장체계에서의 최저생활기준을 근거로 해서 ‘예술활동’에 대한 사항을 보충함으로써 제시가 가능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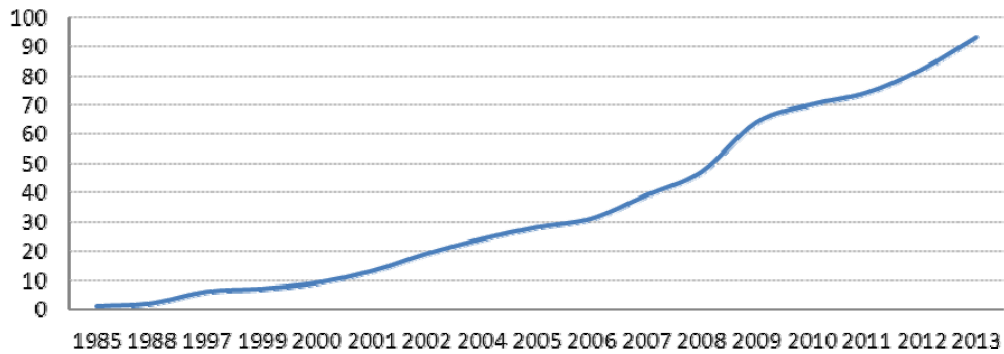
- 사회보험의 사회통합적 성격에 따라 활동증명 시 의무가입 제도화
 - 최소 자부담 부분을 낮춰서 적어도 활동증명 예술인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체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예제도를 두어 비가입 대상을 예외적으로 적용함
- 「예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예술인에 대한 ‘근로자 의제’ 명시
 -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사회보장 체계를 활용한다는 것은 당장 사회보험 체계로의 실효성 있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통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부칙 등의 방식으로 적용에 대한 융통성을 두더라도 예술인복지법 상의 일반원칙으로 예술인에 대한 근로자 의제를 통해서 기존 사회보장 체계로의 통합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예술인사회보장 전달체계 구축
 - 〈예술비전 2030〉 등의 지역 예술인복지비전을 수립한 서울시, 별도의 기구를 만든 부산시, 등과 함께 예술인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기존 산업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사용 기업에 대한 사회적 부담 체계 마련

3 예술공간 인프라 및 맞춤형 지원 확대

가. 예술 창작 인프라 조성

1) 배경 및 목적

- 예술 창작의 인프라로서 창작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최근 유희공간 활용이나 지역재생의 한 방안으로 인식되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조성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임
 - 전국 창작공간의 연도별 증가 추세는 다음과 같음
 - 2000년 이후 큰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로 지자체 주도로 설립·운영되고 있음



[그림 4-5] 창작공간 현황

<표 4-21> 지자체 별 창작공간 현황

구분	1985	1988	1989	1999	2000	2001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정부주도	0	0	0	0	0	0	1	0	0	0	0	0	1	0	0	0	0
지방주도	0	0	0	0	0	1	1	1	1	1	5	3	10	3	0	3	6
재/사단법인	0	0	1	0	1	0	0	2	0	0	1	0	2	1	2	2	3
민간단체	0	0	2	1	1	1	2	1	1	0	1	2	2	0	0	1	1
기업	0	0	0	0	0	0	0	0	0	1	0	0	0	1	1	0	1
개인들이 모여서	1	1	1	0	0	1	2	1	2	1	1	3	0	1	1	2	0

* 출처: 김연진(2013), 창작스튜디오 현황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창작공간은 예술가에게 안정적 창작 환경을 제공,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될 뿐 아니라, 지역 문화 시설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며,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의 장르별 창작을 넘어서 장르 융·복합형 창작이 시도되고 있음. 사회의 창조적 역량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창작공간의 이러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차원에서의 법적,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또한 예술가 개인의 창작공간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지역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개인 창작공간에 대한 지원 사업도 일부 시도 되고 있음
 -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민간창작공간 운영지원 사업으로 2인 이상 활용하는 창작공간(아틀리에 및 작업실, 연습실, 민간 레지던시, 공방, 스튜디오 등)에 대해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 방향

- 창작을 진흥하고자 하는 정책과 예술가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창작 공간 지원 정책이 혼재되어 운영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창작의 진흥과 창작 공간 지원 정책을 구분하여 추진
 - 창작 공간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예술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수요와 필요를 충족하기 힘들며, 최근의 경향이 예술가 개인적 작업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시민 등 다양한 기관, 대상과의 협력적 예술 프로젝트를 지향하고 있고,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요구함에 따라, 창작 진흥을 위한 프로젝트 기반의 지원방식으로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
 - 그러나 창작기반환경으로서 창작 공간 자체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개인작업실 및 아틀리에, 연습실 등 예술가 개인의 창작 공간에 대한 지원도 요구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상보적으로 설정
 - 창작 진흥 정책은 중앙정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립·추진하고, 창작 공간에 대한 지원 정책은 당해 지방정부에서 추진함으로써 상보적으로 운영⁴⁴⁾

44) 프랑스의 경우, 창작 공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함께 지원하고 있음. 예술가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보험기관 성격의 예술가의 집(maison des artistes)에 가입된 예술가를 대상으로, 성격에 따라 문화부에서 직접 관장하거나 산하기관, 지방정부에서 재단 형식으로 예술가의 작업실과 주택을 관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 제 1항 관련 별표2의 규정에 따르면, “예술창작스튜디오”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어, 창작 공간의 조성이 지방정부의 고유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창작 공간 지원 정책이 지방정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
- 따라서 중앙정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수립·시행하는 창작 공간 조성 및 지원 사업을 조율, 종합하며, 창작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상보적으로 추진

(2) 주요 사업 내용

● 법제적 위상 확립

- 창작 공간에 대한 등록 기준을 마련하여 창작 공간을 문화시설의 범위 내에 포함하는 방안 및 개인·민간 부문 창작 공간에 대해서도 등록 제도를 통해 공공문화시설에 준하는 지위를 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의 포괄적 문화시설 규정에 포함하는 방안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전면 개정 시, 창작 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 포함 및 시행령 상의 문화시설 규정에 창작 공간 포함
- 장르별 개별법에 포함하는 방안은, 공연법에서 공연연습장을 포함하였듯이, 각 장르별 개별법에 창작 공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의 근거로 활용하도록 하며,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르별 문화시설 (공연장, 미술관)등과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임. 그러나 이 경우, 한 시설 내에 다양한 장르의 창작 공간이 함께 운영되고, 장르 간 교류 및 협업을 강조하며, 타 분야와의 융·복합을 지향하는 창작 공간의 성격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한계점 내포

● 창작 종합 지원 플랫폼 운영

- 창작 공간의 수가 증대되고, 주체 및 성격도 다양화함에 따라, 이를 종합적으로 조화·조율하고 지원할 플랫폼 운영 필요
- 창작 공간의 다양성과 자율성은 보장하면서도 상생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마련. 특히 합리적인 목표의 설정과 평가체계를 정비하여 이를 근거로 안정적인 지원 도모
- 창작 공간 현황 파악 및 각 창작 공간의 인력, 시설, 장비, 운영 프로그램 등의 기본 정보와 참여 예술가의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센터 운영
- 이와 함께, 각 창작 공간에서 시행한 프로젝트 과정 및 결과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창작 아카이브 설치 및 운영
- 비자 문제와 같이 개별 창작 공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지원 등 국제 교류를 위한 지원 기구 역할 수행
- 페스티벌, 오픈 스튜디오, 심포지엄 등 통합 사업 추진

● 창작 ‘과정’ 지원 프로젝트

- 작품이나 전시, 공연 등 창작 결과를 전제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혁신적·실험적인 작품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예술적 상상·아이디어가 구현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지원이 중요함
- 장르 및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예술적 상상·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모든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여, 과정 단계별로 지원하는 프로젝트 운영
- 상상·아이디어 단계 지원 차원에서는 여행, 인터뷰, 취재, 세미나, 구술채록, 사진·영상 기록 등 다양한 형태의 리서치 지원 등이 가능하며, 지원에 대한 결과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예술가가 지원 공모 시 결과 형식을 제안하고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
- 파일럿 프로젝트 지원 단계에서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본격 프로젝트의 구상을 위하여 다양한 형식의 소규모 파일럿 프로젝트를 지원
- ‘노르직 컬쳐 포인트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이 유사 사례라 할 수 있음

<표 4-22> 노르직 컬쳐 포인트 문화예술지원 프로젝트 사례

구분	전(前) 프로젝트 (Pre-project)	파일럿 프로젝트 (Pilot-project)	본격 프로젝트
내역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리서치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기 위한 소규모의 PILOT PROJECT	시간과 재정 등 정략한 구조가 확립된, 독립된 전체 프로젝트
지원 내역	최대 13,000 유로	최대 40,000 유로(1년 제한, 전체예산의 75% 이내에서만 지원)	최대 10만 유로 (3년 제한, 전체 예산의 50% 이내에서만 지원)

● 창작공간 운영 인력 교육

- 창작 공간 운영 매니저, 기획자 등의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이미 창작 공간에서 활동 중인 기존인력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및 자기개발 지원 프로젝트 시행
- 학예사, 연구사 등과 같이, 창작 공간 운영자에 대해서도 법제적 지위 부여 방안 모색
- 무대, 조명, 음향, 미디어 등은 물론 다양한 장비의 제공과 기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테크니션의 육성과 배치 지원

● 테크니션 지원 사업

- 프로젝트 중심 창작 공간으로 그 활용도가 제고되고, 지역 예술가의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서도 전문 시설 장비의 보유와 활용이 중요
- 이를 관장하는 테크니션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창작 공간에서 실제로 상주하는 전문 테크니션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음

- 특히 장르 간 협업,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 등 첨단 기술 의존도가 높은 사례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에도, 테크니션의 육성과 현장 지원 필요성 강조
- 주기적인 수요 조사를 통해 테크니션 지원 범위와 규모 파악 후, 상주 인력의 지원과 테크니션뱅크 운영을 통한 필요 기간제 지원 병행
- 장기적으로는 창작 공간에 최적화된 테크니션 육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필요

3) 추진 시 유의점

- 창작공간의 문화시설화를 위해서는 창작공간 조성을 위한 등록요건과 규정 등 법제적 기준 마련이 필수적임. 그러나 다양한 유형의 창작공간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법적 기준 마련이 어려우며, 현행 문화시설 기준으로 제시될 경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창작공간을 비인가 시설로 배제하게 되는 부작용 야기
- 따라서 법제화가 창작공간의 활성화에 발목 잡지 않도록 미등록 창작공간에 대한 규제보다 등록된 창작공간에 혜택 중심으로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겠음

나. 문화·예술 아카이브 조성 및 운영

1) 배경 및 목적

- 문화적 산물을 체계적으로 후대에 전승하는 것은 국가 문화역량의 표상이며, 미래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질 문화자원으로서의 예술아카이브 축적 및 공공성 보전이 필요
 -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Digital Second Life 세계와 그 안에서의 인간의 인지적 반응이 미래의 삶과 사회 경제 체계의 근간이 될 것임
 - 그런 사회에서 개인의 예술적 창조물뿐만 아니라 사회의 문화적 커뮤니케이션의 흔적 등, 모든 “인간적인 것”이 새로운 자본주의 서비스의 핵심자원이 될 것임
 - 따라서 문화예술아카이브에 문화자원의 개념을 적용하고 그것의 공공성⁴⁵⁾ 보호 장치가 필요
- 문화예술 아카이브의 필요성과 역할⁴⁶⁾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대
 - 문화유산의 보존, 후대 전승하여 문화에 대한 역사적 전통과 정통성 확보
 - 지식기반 경제 사회의 국가 경쟁력의 원천 역할
 - 연구와 학술적 기능
 - 교육적 역할
 -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의 역할
 -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위한 원천자료 제공
 - 예술관련 기관 및 제도의 투명한 경영과 책임행정 유도 기능
 - 예술 발전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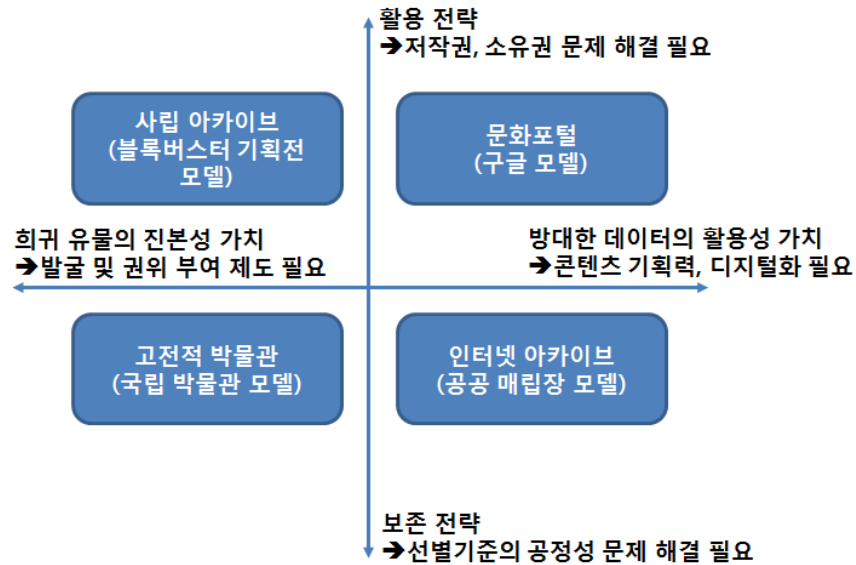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 방향

- 기술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아카이브 개념의 모호성과 가변성을 고려하여, 협업할 영역은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담당 역할은 선택 집중 설정
- 진본성과 제도적 권위 지향성을 지양하고, 콘텐츠로서 폭넓은 활용을 지향하는 전략 수립

45) 황동열은 문화예술아카이브의 6가지 특성으로 공익성, 비시장성, 공정성, 독립성(자율성), 전문성, 협력성을 제시하였는데, 이중 전문성과 협력성을 제외한 나머지의 특성을 <공공성>으로 종합할 수 있음

46) 김이경 외(2011), 황동열 종합 재구성



[그림 4-6] 아카이브의 지향 가치와 운영전략 구분

- 보존과 활용, 비용과 가치 사이의 딜레마적 상황에 대응하여, 한 가지 솔루션식 처방이 아닌, 기존 제도/기관들이 스스로 상호협력 및 진화적으로 지식기반 서비스로 수렴토록 하는 전략 적용
- 국가 차원의 폭넓은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과 병행하여 기존의 아르코예술자료원을 예술창작물에 집중한 (가칭)<국립예술아카이브>로서 전문화 및 운영개선
- 영역을 아우르는 새로운 정책리더십의 주도로, 기관 단위의 전략이 아닌 국가 정책 차원의 종합적 전략 수립 필요

(2) 주요 사업 내용

- 국가차원의 문화예술아카이브 마스터플랜 수립
 - 공공/민간의 자료관, 도서관, 박물관 전문가 및 포털 콘텐츠 기획자 공동 연구 형태로 수립
 - 기관 차원의 전략이 아닌 국가 차원의 비전, 기술적 표준, 네트워킹 전략 수립
 - 미래 기술 발전까지 염두에 둔 호환성 높은 공동 데이터 구조 개발
 - 기존 아르코예술자료원, 국립극장공연예술박물관, 국립영상자료원 등 국공립 예술 아카이브들 간의 역할 조정 및 협력 방안 정리

- 유관 기관들의 아카이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공공기관 중심으로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수행과정 중 추가적인 노력 없이 아카이브가 구축되도록 역량 제고 교육 시행
 - 공공기관 간 호환성을 고려한 공동 데이터 표준 제공
 - 공공기관 아카이브 개선 프로젝트 지원 제도 운영
 -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 등 기존의 공공 디지털아카이브들 간의 상호 호환성 제고
 - 문화예술아카이브를 공공성을 지키며 활용할 민간 IT기업들과 제휴로 기술 개발 및 콘텐츠 공동기획 추진
- 디지털 정보의 공공 저장소와 공공 매립지 조성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과 연동하여, 여력이 없는 민간 예술단체들을 위한 공공저장소 제공
 - 민간에서 더 이상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웹사이트들을 모으는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기존 오아시스 사이트의 개선 활용 고려
- 아르코 창작지원 사업과 연계한 (가칭)국립예술아카이브 구축
 - 아르코예술자료원과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를 통합하여 (가칭)국립예술아카이브 구축
 - 매년 아르코 및 전국 문화재단 창작지원 작품 중 우수 작품 선정하여 영상 아카이브 구축 지원
 - 아르코예술자료원의 기존 수장자료의 재디지털화 및 보존 작업을 통한 유실 방지
 - 원로 예술가 지원과 연계하여 (가칭)국립예술아카이브 유산기증 및 공공저작권화 캠페인 전개
- 국립 예술기관 및 우수 창작지원 작품의 영상화 후 국립예술아카이브로 통합 활용
 - 국립극장, 국립극단, 국립오페라단, 국립무용단 등의 우수 공연작품의 영상화 작업 후 통합 아카이브 구축
 - 예술의 전당 영상화사업 (SAC ON SCREEN)을 아르코 지원 우수 창작품에 확대 시행 및 국립예술아카이브로 통합 관리
 - 미래 고급 영상디스플레이 매체를 활용하여 거실 예술영상라이브러리 서비스 개발⁴⁷⁾

47) “예술 전하는 삼성 TV ‘더 프레임’, 소더비 경매장 전시” 아시아경제 2017.07.14일자

- 아카이브 구축 및 자료 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아카이브 구축 관련하여 매년 안정적 예산 편성하며, 공공기관 간 협력 등 관련사업의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가 될 법 조항 신설 (별도 법 제정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 (가칭)국립예술아카이브의 저작권 신탁관리 및 저작권 수입을 활용한 아카이빙 사업 목적 기금 조성
 - 전문예술박물관의 전시 등,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예술아카이브 기증 자료의 활용도 제고
 - 자료 기증자 예우 프로그램 개발 및 기증 활성화 캠페인 전개
- 문화예술아카이브 전문인력 양성
 - 아카이빙 및 예술관련 전문성과 통합적 기획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 기존 국공립 아카이브 및 박물관 종사자들 간의 교류, 신기술 변화에 대응한 문화자원 기획 역량 강화 교육 시행
 - 아카이브 관련 인력 채용 시 문헌정보학 전공자 이외 정보화 산업 및 문화콘텐츠 기획 및 마케팅 전공자까지 대상 인력 확대

3) 추진 시 유의점

- 현실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선택 필요
- 비용 < 효용 < 가치 관점으로 성과 인식 전환
 - 장기 비전구현의 핵심요소인 <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기반이 되는 관계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단위로 <성과주의 예산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어야 함
 - 이 경우 투입된 비용대비 산출 성과는 <문화산업 콘텐츠화, 마케팅 효과 등 효용> 차원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문화자원의 공공성, 다양성, 인간성을 지키는 가치> 차원에서 보도록 인식전환 필요
- 미래 기술과 문화예술 지형의 변화를 예측하여, 한 세대 빠른 접근 필요
 - 행정기관의 대응 속도가 기술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전략 수립 시 이미 진부한 전략이 되어버리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 시 미래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응 전략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함
 - 향후 광범위한 검색뿐만 아니라 자료에 담긴 데이터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분류까지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비하여 인간이 할 역할은 자료에 대한 비평, 연구결과와 감흥을 덧 붙여 디지털 콘텐츠로 재창조하는 역할이 중요할 것임

다. 문화예술 허브공간 조성

1) 배경 및 목적

- 다양한 예술실험과 참여적 예술 활동을 진흥하는 새로운 유형의 문화예술 공간 필요
 - 탈장르, 탈경계의 예술실험, 장르간 융·복합, 타분야·타학문간 융합 경향이 강조되면서 이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술 공간이 요구되고 있음
 - 이러한 문화공간에서는 창작·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수준의 정보 및 프로덕션 가이드 제공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생산하는 기반 환경 조성이 강조됨
- 유희공간이나 폐산업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문화공간으로 재 조성하는 사례 대두
 - 유희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리모델링을 통한 조성비용 감소와 함께, 근대건조물 및 산업유산의 문화적 활용이라는 의미 부여
 - 최근 마포석유비축기지, 구의 취수장이 각각 문화비축기지와 거리예술창작센터로 재탄생되었으며, 당인리 화력발전소와 서계동 열린문화공간도 새로운 문화시설로 재조성 논의 활발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 방향

- 서계동 열린문화공간을 복합문화관광시설로 조성
 - 현재 국립극단 공연장 및 연습시설로 활용 중인 서계동 열린문화공간(구 국군 수송부 이적지)을 특화된 복합문화관광시설로 건립하여, 서울 중심부의 문화벨트이자 상징적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 조성 추진
 - 대·중·소 공연장과 아트 비즈니스, 팝업스토어, 문화센터, 아카이브, 어린이 체험 시설 등의 특화시설을 건립하여 공연예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조성
 - 국고(관광진흥개발기금)과 민자 유치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1.03, AHP가 0.528)로 사업시행 타당성 확보
-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문화창작발전소로 조성
 - 국내 최초 화력발전소(1930년, 1호기 준공)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지하화가 결정됨에 따라, 지상부는 공원화하고 폐지되는 발전설비(4, 5호기)를 활용하여 문화창작발전소로 조성하는 계획 추진

- 과거 산업화 견인의 근본동력인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던 화력발전소를 미래 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창조력(Creative Power)”을 “생산(Power Station)”하고, “전파(Substation, Annexation)”하는 문화창작발전소로 조성함으로써 산업유산을 창조적으로 승화한다는 의미 부여
- 기능적으로, ①다양한 형태의 수용이 가능한 쇼케이스 공간과 ②창작과 놀이가 결합된 예술놀이터, ③융·복합 예술 연구 실험 공간인 랩(LAB) 및 ④관련 자료의 집적과 공유를 위한 아카이브를 조성하여, 융·복합 예술을 견인하고 국가 사회의 창의성을 진흥하는 역할을 수행

(2) 주요 사업 내용

● 서계동 복합문화관광시설 건립 계획(안)

- 서계동 복합문화관광시설은 창작, 실연, 유통, 교육, 인재양성 등 문화예술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산업적·문화적 인프라 완결 및 특성화된 콘텐츠의 문화예술과 관광의 연계를 지향
- 특히, 자생력 있는 (공연)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원천자원의 아카이빙을 통한 창조 자원 제공에서부터 기획/제작사를 위한 창작물 거래소, 실연이 가능한 쇼케이스 및 실험공간 제공, 예술가/기획사 및 소비자가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예술 유통관리,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문화 소비활동 촉진을 통해 예술가와 소비자, 행정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아트비즈니스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총 부지면적 7,488.63㎡에 건축면적 4,057.00㎡, 건축연면적 43,446.59㎡의 규모로, 공연시설(대/중/소 공연장)과 복합업무시설(아트비즈니스 지원 및 업무/상업 시설)을 다음과 같이 건립하도록 함

<표 4-23> 서계동 복합문화관광시설 건립 계획(안)

구분			면적(㎡)	비고
공연장	대공연장	복합	5,147.22	
	중공연장	연극	7,723.09	
	소공연장	어린이 전용극장		
		실험극		
	사무			
	소계		12,870.31	
	라운지		1,172.09	
	특화시설	아트비즈니스	5,862.20	
		팝업스토어		
		문화센터		
아카이브				
어린이체험시설 등				

구분	면적(㎡)	비고
업무시설	8,204.60	
판매시설	1,992.55	
근린생활시설	2,854.63	
소계	20,086.07	
실내 주차장	6,500.00	
기계/전기실	3,992.20	
소계	10,490.20	
총 연면적	43,446.58	

- 총사업비는 1,745억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재원조달방식은 국고(관광진흥개발기금):500억 원으로 부지를 마련하고, 민자 1,236억 원을 유치하여 건축하도록 제안

●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계획(안)

-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는 실험적 예술의 창작과 참여적 예술문화의 진흥을 위한 ‘복합문화예술공간’을 추구하며, 이를 위하여 ①장르 구분이 없는 새로운 예술형태의 실험과 제작, ②예술과 타 영역의 만남을 진흥하는 각종 활동의 지원, ③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연구 및 모델 개발, ④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생산하는 프로그램 개발, ⑤지역·환경과 예술의 상호관계 증진을 위한 연구 및 활동, ⑥창작·연구·향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의 수집 및 토론의 장 제공, ⑦산업유산 활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 4호기와 5호기 중, 4호기는 발전소의 원형을 활용한 “화력발전소 예술체험관”으로 조성하며, 5호기를 리모델링하여 전시·공연 쇼케이스와 랩, 예술놀이터, 아카이브, 전시 및 사무공간을 조성하도록 함

<표 4-24>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계획(안)

조성방향	도입시설		기능	
탈경계 융복합 지향	전시· 공연 쇼케이스	공연장	무주대공간 + 높은 층고의 터빈홀 활용다양한 활용과 규모에 대응	
		전시장	동시대 미술에 최적화된 전시공간 발전소 구조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공간 활용	
참여적 예술문화	Creative 랩	랩	유사 R&D 시설, 기존 창작공간의 허브 + Think Tank 역할 탈장르, 융복합 다양한 예술실험 전개하는 플랫폼 방식의 운영	
		작업공간 (워크룸)	랩과 연계 운영(시각예술, 공연예술, 미디어아트 등 제작공간) 장비와 테크니션 지원, 관련 산업/ 업체 연계	
장소성의 보전	예술 놀이터	예술 놀이터 / 예술마켓	소규모 공간, 자투리 공간의 적극적 활용(예술적 관입) 소규모 예술집단의 자유로운 활동거점 예술적 관용성, 실험성의 극대화 창조적 에너지의 원천, 지속적 점화의 의미(홍대 젠트리피케이션과 대비) 상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안적 예술소비의 장	"화력 발전소" 예술 체험관

조성방향	도입시설	기능
장소성의 보전	아카이브	화력 발전소 체험공간 폐 발전소의 있는 그대로를 전시 콘텐츠로 활용 화력발전소 원형 보전을 통한 장소성 유지 및 강화 발전소 체험전시와 예술 활동의 연계
	예술 아카이브	예술자료의 집적, LAB 산물의 보관, 축적, 공유, 확산
예술소비/ 산업연계	전시 및 사무 공간	예술 전문 서점, 독자적 출판/디자인 기능 강화
		멀티숍, 편집숍 등의 독자적 판매시설 운영
		전시+공연+예술담론+식음이 이루어지는 대안 예술공간 성격
		문화창작발전소 운영 -> 관련 산업 비즈니스 입주

- 건축연면적은 21,770㎡이며, 이중 4호기 활용면적이 5,360㎡, 5호기 면적이 16,410㎡임
- 예상되는 총사업비는 다음과 같이 431억 원(부가가치세 미포함) 수준으로 산정

<표 4-25>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총사업비(안)

구분		금액 (원)	비율(%)
공사비	전체시설 공사비	38,246,626,630	87.15
부대비	설계비	2,004,123,235	5.24
	감리비	2,248,901,646	5.88
	시설부대비	87,957,241	0.23
	설계보상비	573,699,399	1.50
총 건축 비용		43,161,308,151	100
㎡ 당 비용 (연면적 21,770㎡)		1,982,605	

* 부가가치세 미포함

3) 추진 시 유의점

- 선 운영(전담)조직 마련으로, 논의 과정 및 파일럿 단계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주도
 -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전담)조직을 조속히 설치함으로써, 수요검토, 다양한 실험 결과를 토대로 최적 대안을 설정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한 다양한 가능성 탐구
 -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유보기간은 물론, 사업 추진의 지연으로 생성되는 휴지기간, 설계 및 시공기간, 개관 전 시험가동 기간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파일럿 프로젝트 진행
 - 당인리 화력발전소에 적용가능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는 국제적 프리미엄 아티스트의 장소 특정적 프로젝트와 국제적 건축가들의 파빌리온 프로젝트 혹은 폴리(Foley), 국제 세미나, 장소 특정형 픽션 및 영상 설치작업, 젊은 작가들과 신생공간들을 중심으로 한 아트페어 및 컨벤션, 레이크 파티 및 패션쇼 등이 검토된 바 있음

라. 예술공간 문화재생 확대

1) 배경 및 목적

-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국토부, 안행부, 농림수산부 등의 각 부처는 환경정비,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도입했던 전면 재개발·철거 방식이 도시의 복합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환경, 문화, 역사적 측면에서의 도시정체성 회복에 초점을 두는 ‘마을 만들기’의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함
- 2013년 6월에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의 제 2조 1항 ①을 보면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도시재생법이 비록 ‘도시재정비’에서 ‘도시재생’으로 개념을 변화시켰고, 도시기반시설확충, 도시경쟁력 제고 및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하였지만,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가속화 되는 고령화, 개발에 따른 양극화 등의 문제는 아직 남아있으며, 여전히 물리적 정비 등 양적변화 이외의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적극적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음
- 다른 한편 문체부는 2007년 [근대산업유산창작벨트화시범사업]을 포천, 군산, 대구, 아산, 신안 등 5개 지역의 방치된 산업시설을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2013년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을 진행함.(산자부와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교육부, 문체부가 함께 실시한 부처합동사업임)
 - 정책용어로서 문화재생이 비로소 사용되기 시작하며, 이때 문화재생은 ‘문화(로)재생’ 또는 ‘문화(를 통한)재생’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됨.
 -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으로 2014년에 안산스마트허브 문화재생사업, 시흥공구상가 창공 프로젝트, 광주소농농공단지 아트팩토리사업, 영월농공단지 박물관고을사업 등이 추진됨
- 문체부는 2014년에 한국공예진흥원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 그룹을 구성하고 시설 중심 조성 형식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술과 장소가치 중심의 구축방식을 표방,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예술로 공간 재창조 사업]을 시행함
 - 문체부는 도시재생이라는 용어 대신에 문화재생이라는 개념을 선택함으로써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과 차별을 보이면서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기 시작함

- 총괄기획자 선정, 리모델링이 이루어기 전에 공간을 활용한 시범운영 프로젝트 적용 등 기존의 사업방식과 달리 지역주체들에게 사업의 가치와 의미, 과정을 이해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 다시 말해 ‘과정 관리’를 중심으로 컨설팅과 사업방식을 가이드 함.
- 부천삼정동소각장 문화재생사업, 담양 남송창고 예술재생사업, 광명 업사이클링센터사업 등은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인천아트플랫폼과 정선 삼탄아트마인은 콘텐츠 운영지원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됨
- 이와 더불어,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2014년 「문화도시 문화마을」 사업을 착수, 그 첫 해에 문화도시로 남원시를 선정, 문화마을은 공주 상신마을, 부여 규암마을이 선정됨
- 본 사업(문화도시 문화마을사업)을 ‘문화도시’ 지정사업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명명하였고, 문화마을은 2017년 32곳에서 2018년 25곳으로, 문화도시는 2017년 20곳에서 2018년 26곳으로 조성될 예정임
- 문체부의 2018년 사업계획에는 문화재생과 관련한 신규 사업 중의 하나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이 있음
- 지역의 문화적 개성과 고유성, 특수성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문화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시문화 기록 및 활용’ 사업을 위해 15개소 지원, ‘문화재생 커넥터 활동 프로그램’을 위해 15개소 지원할 예정임
- 이 외에도 문체부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연연습공간 조성(서울, 인천, 부천, 춘천,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생활문화센터를 조성(2017년 기준 81개소 운영, 47개소 공간 조성 중), 2018년에는 유휴공간 및 창작공간 등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센터(한국형 아난탈로)를 본격 착수, 신규조성을 하고자 함
- 그러나 앞으로 유휴공간을 예술공간으로, 또 예술공간이 공동체와 커뮤니티에서 문화재생으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 커뮤니티에 근거한 새로운 형태의 생활방식의 이해와 수용, 재생산 터전의 재구성이 뒤따라야 할 것임⁴⁸⁾
- 문화예술의 가치와 삶의 질, 그리고 장소의 질에 대한 미래적 관점에서의 제고
- 예술공간을 통한 문화재생이 가능하려면 자율의 문화, 공동성과 공유성 그리고 호혜적 가치가 보장되는 패러다임이 사업에 관통되어야 함
- 또한 복잡성이 증가하고 전통적인 시스템의 적용이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첨단기술이 매개된 문화콘텐츠 생산과 소비, 참여주체와 대상의 변화도 상당할 것으로 예견되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야 함

48) 사례 : <http://artnetworking.org/221>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의 “문화공간 조성을 활용한 선진 도시재생 성공 사례 비교연구_밴쿠버 그랜빌아일랜드, 베를린 쿨트어브로이어 사례를 중심으로”

- 예술공간의 문화재생 확대의 목적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수동적 신체감각에서 능동적 문화(문명)의 감각으로 회복되도록 해야 하며, 공동의 이해와 지식생산에 있어서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협력적, 개방적 문화공간이 조성되도록 기획, 구성하여야 함
- 따라서 예술공간의 문화재생 확대는 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여 ‘공생의 문화’와 ‘좋은 삶의 터’를 만들기 위한 토대이자 지역의 소거점이라고 볼 수 있음
 -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자존감, 미래에 대한 비전, 기쁨과 몰입의 경험, 일상생활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한 행복감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타인 및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각을 회복하고, 토론과 합의를 통한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음
 -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학업성취, 자발적인 사회참여, 주체적인 지성으로 성장할 수 있음
 - 창의성 기반 산업의 성장에 있어서 기초적 소양을 갖춘 인적자원 배양토의 역할 가능
 - 주민의 일상적 공간과 예술공간이 문화재생으로 확장됨으로써 거주민의 삶의 터가 안전하고 안정된 정주공간이자 삶의 터를 침범하지 않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음
- 주민의 일상적 공간과 예술공간이 문화재생으로 확장됨에 따라 매력도 높은 장소로서의 관광자원 역할을 할 수 있음. 그렇지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거주민의 일상적 삶의 터가 안전, 안정된 정주공간이자 사적영역이 침범되지 않도록 균형잡힌 계획수립이 필요함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 방향

- 공간에 대한 다양하고 변화하는 관점 정리 및 생활문화공간과 행위공간의 이해
- 주민 예술가와 예술가 주민을 위한 기반 지원 : 주민으로서 지역에 정주하는 또는 정주하고자 하는 예술가에게 ‘예술가 임대주택’ 제도 등의 도입과 동아리 활동이나 학습공동체를 통해 예술행위의 일상을 누리는 주민이 점차 주민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 제공
- 단계별 예술공간 조성의 과정관리 : 유희공간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사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극복이 가능한 공간도 존재함. 접근성이 좋은 공간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간, 리모델링이 가능한 공간과 증개축이 필요한 공간 등 공간의 활용에 따른 콘텐츠를 사전에 기획, 조성하는 과정에서의 다양한 실험과 도전 허용

- 챌린지 공간조성 : 청년을 중심으로 공간조성의 기회 제공. 미래 도시를 구상하며 예술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공간조성 및 운영(예: 경기문화재단 경기 상상캠퍼스)

(2) 주요 사업 내용

- 공간과 지역주민의 관계 맺기
 - 공간, 지리, 역사, 건축, 시설, 인문, 예술,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팀 구성, 각자의 관점에서 지역의 유희공간에 대한 조사연구 및 공간조사 선행
 - 지역소재 대학교, 평생학습지원센터, 지역문화재단, 박물관, 문화원 등의 지역기관들이 협력적, 통합적 연구모임을 통한 지역문화매개인력 육성(※ 문체부, 교과부 등의 타 지원사업과 적극적 연계)
 - 점층적 학습공동체 조성·지원 : 유희공간의 역사적 의미와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유희공간의 이해 및 활용도를 스스로 끌어낼 수 있는 교육 및 학습 수행
 - 동아리 활동이나 학습공동체를 통해 예술행위의 일상을 누리는 주민이 점차 주민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 제공
- 주민 예술가와 예술가 주민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 마련
 - 지역에 정주하는 또는 정주하고자 하는 예술가에게 ‘예술가 임대주택’ 제도의 도입을 통해 예술가 주민으로 유도
 - 주민으로서의 예술가와 아마추어 주민 예술가의 교감프로젝트 상설화(※생활문화 동아리 지원사업과 연계)
- 유희공간 발굴 및 활용을 위한 ‘과정관리’ 방식의 예술공간 조성
 - 최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하는 컨설턴트 구성 및 지원
 - 컨설팅과 시민의견도출 과정을 포함한 공간조성의 ‘시간’ 지원
- 챌린지 공간조성을 통해 청년예술가에게 도전과 실험, 실패와 재도전의 기회 제공
 - 시대적 소명을 다하여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유희공간들 중의 일부를 지역청년 예술가에게 제공
 - 청년예술가를 중심으로 예술을 기반으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실험과 도전이 허용되는 실험적인 미래도시공간 조성 및 운영기회 제공

- 조성 중인 생활문화센터 및 새롭게 조성되는 공간에 지역미디어센터 기능 탑재
 - 미디어리터러시를 위한 시민 접근성 우선의 생활문화 거점형 공간 확산
 - 예술공간을 새롭게 조성할 때뿐만 아니라 생활문화센터, 문화예술교육센터(한국형 아난탈로), 상상구현터(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등의 조성공간과 연계, 지역미디어센터의 기능이 탑재된 공간 조성 및 운영.(지역미디어센터의 세포 확장 및 미래준비형 콘텐츠의 융복합 효과)

3) 추진 시 유의점

- 예술가와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만들 때 예술가와 주민의 지향점과 목적이 다를 수 있음. 이에 대한 사전 교감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반드시 가동해야 하며 서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 주어야 함
- 주민 주체성을 강조하여 주도적이고 능동적 참여를 요구하게 되는데 역설적으로 주민혹사가 되어 사업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는 경우가 있음. 이에 대해 설계에서부터 세심한 관리가 요구됨
- 평범한 주민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지자체의 예산 배정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예산’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누가 도시의 일상생활의 질을 좌우할 것인가라는 논쟁에 대한 질문에 ‘주민주체’라는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임
- 예술공간 확대를 통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은 외부 관광객을 유인하는 요소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주민들의 일상적 삶의 안정을 깨트리거나 지역경제활성화의 구체적인 결과가 없을 경우 주민의 거부감이 커질 수 있음
- 젠트리피케이션은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관이 개입했을 경우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문화기본권에 입각, 주민들이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과 관리가 요구됨. 지표를 통해 문화기본권이 얼마나 지켜지며, 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지원해야 보충될 것인지를 지표를 통해 측정, 이를 근거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마. 장르집중형 문화공간 조성

1) 배경 및 목적

- 전환기에 들어선 문화기반시설 정책
 -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데서 가장 기초가 되는 사업이 문화기반시설의 보급, 확충임
 - 1980년대부터 문화예술회관으로 대표되는 문화시설 확충이 본격화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문화 발전이 모색되었음
 - 2016년 현재 979개의 도서관, 826개의 박물관, 219개의 미술관, 229개의 문예회관, 228개의 지방문화원, 114개의 문화의집 등 모두 2,595개소의 문화기반시설이 운영 중임

<표 4-26> 전국문화시설 현황(단위: 개소)

합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소계	국립	지자체	교육청	사립	소계	국립	사립	대학	계	국립	사립	대학			
2,595	979	1	725	232	21	826	379	351	96	219	55	150	14	229	228	114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6 문화기반시설총람(p.9)에서 재구성

- 도서관과 박물관(미술관 포함)은 1지자체당 4개소를 넘어섰고, 종합예술시설인 문예회관의 경우에도 1지자체당 1개소에 근접하고 있어 시설 개소수를 기준으로 한 양적 보급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이제부터의 문화시설 정책은 시설 보급이 아닌 프로그램의 공급과 시민 참여 활성화가 주요 목표가 된다고 볼 수 있음
- 장르 전용공간 현황 및 장르별 특화 문화공간 조성 필요성 제기
 - 한편으로 예술분야에 한정해서 보자면, 종합예술시설인 문예회관의 지역적 보급이 일단락된 반면, 개별 장르 관점에서 요구되는 전문화된 문화공간은 공연장 가운데 콘서트홀, 박물관 가운데 미술관이나 문학관이 전용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는 정도임
 - 국립국악원을 비롯한 전통예술 장르의 경우 전수회관을 비롯한 장르 특화 시설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상황
 - 문학관의 경우 전국에 100여 개소의 지역문학관이 운영 중인데, 이 가운데는 도서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문학 장르 특유의 문화공간으로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문학진흥법 제정에 따른 시설로서 법적 위상이 바뀌었음. 그리고 지역문학관의 운영 발전을 토대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이 법에 근거하여 추진 중에 있음

- 다만, 개별 문학관에 따라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으로 등록하여 운영 중인 문학관도 다수 존재함
- 지역단위의 문화공간 가운데는 서울무용센터나 서울연극센터와 같이 장르별 종합공간이 운영 중에 있음. 서울무용센터의 경우 무용연습실과 안무가 레지던시 공간, 정보지 발간, 서울문화재단 무용지원사업 등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장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르별로 특화된 문화공간을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예를 들어 문학관은 도서관, 박물관, 아카이브 기능이 혼합된 복합적 기능을 하면서도 장르면에서는 ‘문학’이라는 단일 장르시설로서의 아이덴티티가 강한 시설로, 건립시 해당 장르 생태계의 지속적 발전에 크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 방향

- 문화시설의 양적 확충에서 질적 공급으로 전환
 -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으로 대표되는 문화시설 확충 정책은 전국 자치구를 기반으로 한 균형 공급 정책에 따라 양적 확대 위주로 추진되었음
 - 최근에 연습실이나 레지던시 등 ‘창작공간’의 공급과 생활문화공간의 확충이 문화시설 공급 정책의 새로운 흐름을 이루고 있음
 - 201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보면 문화시설의 양적 확대는 일단락되었고, 오히려 과잉 공급 또는 가동률 저조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임
 - 전문적인 예술시설은 예술 생태계의 발전 과정에 조응하여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특화된 문화시설의 공급이 요구되는 상황임
- 장르별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장르를 중심으로 맞춤형 시설의 공급
 - 장르 융합 등 새로운 예술 환경 속에서 모든 문화시설이 장르 중심으로 재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그러나 공연이나 전시, 자료관, 교육 등 기능별 시설에 장르 활동이 참여하는 방식을 보편적 구조로 하더라도 장르별로 종합기능을 갖춘 ‘허브공간’이 만들어지면 장르 생태계 발전에 매우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예를 들어 문학이나 무용과 같이 시장에서 ‘자생력’이 취약한 장르의 경우 장르단위 허브 공간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하되 기존 시설과의 기능 연계성을 고려하여 추진
 - 장르 전문 문화공간의 경우 문예회관과 같이 기존 문화시설이 담당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수요를 집약하여 추진되어야 함

- 기존 문화시설에서 일반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능은 기존 문화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하나의 공간에서 몇 개의 기능을 혼합하여 배치하였을 때 시너지가 분명하고, 해당 장르 진흥의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되, 필요시 주변 문화시설을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장르 특화시설이 용이한 측면이 있음

(2) 주요 사업 내용

● 지역단위 장르 전문시설 확충

- 예술 창작 지원 관련 공간 정책인 ‘창작공간’(레지던시 포함) 조성 시 장르 공간으로서의 특성 반영
- 서울시의 경우 장르 전용 창작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레지던시형 창작공간에서 종합 기능을 갖춘 장르별 창작지원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실험을 하고 있음
- 서울시 사례를 모델로 하되, 다른 광역 지자체 단위의 장르 전문시설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사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
-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재정 보조를 포함하여 장르 시설 간 네트워크 지원 등 정부와 지자체의 협업 모델 구축

●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 및 운영

- 국립한국문학관은 문학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

<문화진흥법>

- 제18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문학관으로 국립한국문학관을 설립한다.
② 국립한국문학관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그 밖에 국립한국문학관의 조직과 운영,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자체 대상으로 국립한국문학관 부지 공모를 실시한 바 있으며, 당시 24개 후보지가 응모하였으나 부지 선정에 앞서 국립한국문학관의 운영 방향과 기능 설정을 선행하자는 문학계 의견에 따라 부지공모사업이 중단된 바 있음
- 국립한국문학관은 ‘문학박물관’의 기능을 핵심 기능으로 하면서 일부 도서관 기능과 아카이브 기능을 통합한 라키비움(Library + Archive + Museum = Larchiveum)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음

- 국립한국문학관의 세부 기능을 보면, ① 문학관 자료 수집 기능, ② 문학관 자료 관리보존복원 기능, ③ 문학관 자료 이용 기능, ④ 문학관 자료 조사연구 기능, ⑤ 문학관 자료 전시 기능, ⑥ 문학관 자료 교육 기능, ⑦ 문학관 자료 교류 기능 등임
 - 문학 진흥법에 따른 창작 지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담당하고, 국립한국문학관은 문학관 자료를 기반으로 이선에서 문학 진흥을 위한 베이스캠프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 향후 추진 일정은 국립한국문학관의 기능 설정, 국립한국문학관이 관리할 문학관 자료의 범위와 수집 계획의 수립, 건축물 규모와 입지의 선정, 건립 기본계획 수립, 설계, 시공, 개관의 순서로 추진되어야 함
- 국립무용센터 설립 및 운영
- 가칭 국립무용센터는 십수년 전부터 무용계에서 제기되어온 과제의 하나임
 - 그러나 실제 무용계에서 제기된 국립무용센터의 기능은 매우 다양한 상황이며, 한국 현실에서 요구되는 기능 설정은 미확정되어 있는 실정임
 - ‘국립무용센터’라는 명칭은 프랑스 사례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데, 프랑스 문화부는 1998년 무용예술의 창작, 보급, 교육, 연구, 안무개발 등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음악·무용·연극·공연국(DMDTS) 산하에 국립무용센터(이하 CND, Centre national de la danse)를 설립하여 운영 중임
 - 프랑스 국립무용센터는 전문자원팀(Ressources professionnelles), 교육팀(Formation et Pedagogie), 창작·보급팀(Creation et Diffusion), 학술·연구팀(Memoire et Recherche)으로 부서가 편제되어 있으며, 소재는 파리 외곽인 팡탱에 있음

<표 4-27> 프랑스 국립무용센터의 주요 기능

주요 기능	내용
공연을 포함한 행사 개최(Spectacle, performance, fete, exposition, colloque)	• 무용공연, 다양한 퍼포먼스 공연, 축제, 전시, 콜로키움 등 개최(무용센터 공간 활용)
워크숍 개최(Camping)	• 전문가 대상 워크숍, 일반 대중 무용 체험 단기 프로그램
작은 전시회 개최(La Galerie-expositions)	• 무용, 퍼포먼스를 주제로 다양한 소규모 전시 개최(영상, 사진 등)
레지던시 운영(Residence: Mise a disposition de studios, Artistes associes, Laboratoire)	• 창작 레지던시 운영(4가지 종류: 실험적공연 레지던시, 무용창작 레지던시, 이미지/영상 레지던시, 무용컴퍼니 레지던시)
해외교류(Caravane Un CN D mobile)	• 프랑스 내, 해외의 무용단, 대중들과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출판(Editions)	• 테마별 무용 관련 서적, 무용가 관련 서적(biographie), 무용사(史) 관련 서적, 센터에서 진행하는 전시관련서적, 무용 교육 관련 서적(현대무용관련)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Formation)	• 무용가 양성과정, 무용관련 평생교육 과정, 학위과정(무용교육자 국가 학위과정) 아마추어 대상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장학제도 운영
무용도서관 운영(Mediatheque et collection)	• 온오프라인 무용관련 도서관 운영

주요 기능	내용
전문 무용수 대상 실용 정보 제공(Ressources professionnelles)	• 오디션 및 직업 관련, 프로젝트 지원 방법, 대표 무용 컴퍼니 공연목록화 등
무용관련 예술교육 운영(Education artistique et culturelle)	• 일반인 대상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어린이, 성인 포함)
연구 지원(Recherche et Repertoires)	• 무용관련 유산(문화유산) 연구, 무용관련 박사연구과정 지원, 무용공연목록의 대중 공개(교육)
국립무용센터 회원 관리(La carte CN D)	• 국립무용센터 회원카드(유료) 발급, 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문화향유 프로그램 운영

- 프랑스는 국립무용센터 외에도 국립영상센터(CNC), 국립연극센터(CNT) 등 장르 기반 지원기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별도의 문화예술지원기관이 없는 프랑스식 모델에 최적화한 구조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적인 예술지원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의 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장르 공간의 경우 그 기능 설정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여 함
- 가칭 국립무용센터가 설립된다면, 그 주요 기능은 ①연습실 등 무용 창작공간으로서의 기능, ②무용가 및 무용단체 레지던시 기능, ③무용 관련 자료 아카이브 기능, ④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 교육 기능, ⑤무용수 직업(커리어) 관리 지원 기능, ⑥국제교류 플랫폼 기능, ⑦무용 페스티벌 및 워크숍 기능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예술지원체계의 지역문화재단으로의 중심 이동을 고려한다면, 국립시설보다는 지역단위 시설(예-서울무용센터)로서 설립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3) 추진 시 유의점

- 장르별로 특화된 문화공간의 조성에서 가장 유의할 점은 기계적 형평성을 근거로 모든 장르와 지역에 균등 배치 방식으로 공간을 조성하기보다 사전에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임
- 장르별로 특화한 문화공간의 조성이 장르 간 형평성 문제로 제기되면, 장르 간 무한 경쟁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국립한국문화관의 경우 법정 기관으로 설립하는 경우이지만, 건립 추진에 앞서 기능 설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국립무용센터의 경우에는 해외 사례 조사를 비롯하여 한국의 예술지원체계 및 문화공간 조성의 흐름을 반영하여 그 성격과 기능을 설정해야 할 것임
- 지역 창작공간의 조성의 경우 현재 지역별로 조성, 운영 창작공간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토대로 운영 체제의 발전, 신규 공간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간 조성 및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

제3절 예술향유 저변 확대

1 예술의 접근성 향상

가. 지역기반 상주예술단체 활성화

1) 배경 및 목적

- 새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가 문화예술영역의 핵심과제로 제시되어 있음.
 - 이러한 의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예술향유의 저변확대 관점에서 모든 국민의 예술활동 및 향유에 관한 참여기회 보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적인 접근거리, 즉 ‘지역’을 구심점으로 예술향유 및 예술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예술향유에 있어 여전히 지역 간 편차 및 문화예술관련 자원 도시-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로 인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예술활동 자체가 나와는 상관없는 예술가 혹은 예술단체들만의 영역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간과하기 어려움
- 이는 곧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예술가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절실히 필요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함
 - 각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동네)의 문화예술자원을 지역적이면서도 동시에 지구적으로 드러내는 예술의 역할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 하겠음
- 이런 배경에서 지역기반 상주예술단체의 활성화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단체)들의 창작활동 환경을 구축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들의 예술창작활동이 지역 내에서 주민들에게 공감되고 사회적 가치로 확산될 수 있는 토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임
- 더 나아가 지역기반 상주예술단체의 활성화는 지역에 기반한 예술생태계의 선순환적 발전 토대를 견고하게 구축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음
 - 지금까지 시도되어 온 상주단체제도의 경우 지역 내 역량이 축적되는 방식보다는 산발적으로 파편화되는 경향이 나타났음을 간과하기 어려움
 - 지역기반 상주예술단체의 활성화는 중앙, 광역, 기초 단위의 예술시장(장르별) 실태 파악과 지역기반 예술 아카이브 조성을 바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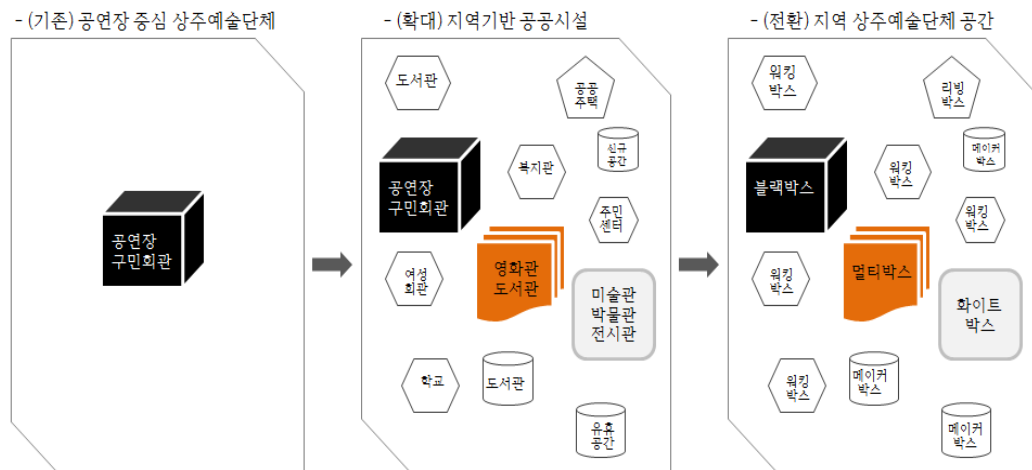
- 지역기반 상주예술단체 활성화는 지역과 소통하는 예술, 지역이 지원하는 예술로 주민 연대감 대폭 강화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출발할 필요가 있음
 - 예술가(단체)들의 창작(연습, 제작, 셋업, 발표 등) 과정을 동네주민들과 공유하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하는 방안 모색. 동시에 예술인 창작(제작) 공간, 발표의 장과 피드백,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결과물의 유통/매개를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야할 것임
 - 지역의 문화행사-예술교육-일자리 지원을 연계한 공공시장 발굴 및 확대 추진 (예: 청소년문화카드, 문화예술패스 등 도입)
 - 지역사회의 이슈와 연관된 예술을 촉진하고, 이를 발전케 하는 지역기반 예술사업 구상 및 추진
- ‘공모와 심사’로 줄 세우는 것이 아닌 협약 등 예술생태계 구축에 도움 되는 방식으로의 상주예술단체를 선정하는 정책적 방안 모색
 - 지역 소재, 관계, 활동 예술가(단체) 실태파악 및 네트워킹을 우선 실행하고, 지역 문화재생 중심주체로서 예술가(단체) 성장을 촉진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공공예술시장을 지역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을 함께 고려해야할 것임
- 주민 접근이 용이한 공공시설 내에 상주예술단체 전면 도입하는 한편 공간 활용 방안의 경우 다양한 유형별 정책적 접근을 모색
 - 공연장,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구민회관, 여성회관, 영화관, 주민센터, 학교(초, 중, 고/폐교), 고택 등의 공간 발굴 및 새로운 공간 확대
 - 1개의 예술단체 상주가 아닌 지역기반 여러 예술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상주공간의 기능과 형태에 따른 유형별 공간조성 및 무상사용 지원 방안을 모색

<표 4-28> 지역기반 상주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활용 예시(안)

유형	명칭	활용 형태	정부 공약
창작 안정화	워킹 박스	공유 연습실, 공동 사무실/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공간 활용 창작공간 청년기획+예술인 공간
	리빙 박스	청년, 활동가, 예술가, 기획자 등의 공동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창작+주거 통합형 지역콘텐츠 주거 인프라
창작 활성화	메이커 박스	제작, 공방, 4차산업 활동, 의상, 봉제, 목공, 수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이커 스페이스 예술과학기술 융합
거점 플랫폼	블랙 박스	연극, 무용, 음악, 마임, 연희, 퍼포먼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극장, 실버극장
	화이트 박스	미술, 시각, 영상(멀티미디어) 가상(증강)현실, 3D, 서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은미술관 디지털 미디어랩 조성
	멀티 박스	문학, 영화, 교육, 학습, 연구 네트워킹 등의 복합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난탈로, 작은 영화관 생활문화동아리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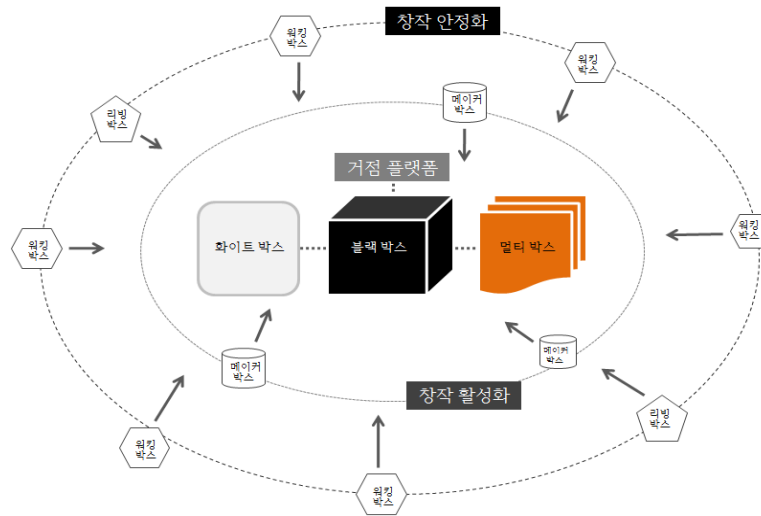
(2) 주요 사업 내용

- 장르+활동 융합 형 지역 상주예술단체 공간 발굴/개선(리모델링) 사업
 - 국민 도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역 상주예술단체 공간 확보
 - 기존 사업을 지역기반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지역 공간을 활용한 지역 상주예술단체 공간 발굴 전략 모색



[그림 4-7] 지역기반 상주예술단체 활성화 방안(예시)

- 국민 예술향유 지속성을 위한 상주예술단체 공간조성 및 지원체계 구축 (공유 사무실, 연습실, 창고, 제작실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및 물품, 집기 구비)



[그림 4-8] 지역상주예술단체 공간 및 역할/기능 개념도(예시)

- 주민참여/지역기반/지역자원 과정중심의 예술활동 제작지원
 - 필수 지원 : 상주예술단체 3인~5인에 대한 지역 예술복지 플래너로 활동인건비 지급 (1년~2년 단위 월 급여 200만원 지급_세진)
 - 차등 지원 방안 탐색, 적용
 - 지역 가산점
 - ✓ (가칭) 지역 청소년 문화카드, 문화예술패스와 상주예술단체 활동 매칭
 - ✓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제공 우수지역 → 매칭투자 면제

<표 4-29> 지역기반 예술활동 지원방식의 유형별 예시(안)

구분	유형	활동사항	지원사항
주민 참여	동아리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동아리 예술강사 참여 창작 과정-결과(발표)에 주민동아리 연계 	필수지원에 관한 연속지원 가산점 부여
	제작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소상공인, 공장, 공방, 인쇄업 주민 창작물 스탭 및 제작부분 참여 	
	발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작 결과물(발표)에 지역주민 참여 정도 	
지역 기반	지역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제 추진 주체 참여(위원/기획/스텝 등) 축제 프로그램 참여(공연/전시/연주/집필 등) 	제작지원 70% 지역매칭 30%
	지역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재생 사업 참여 (커뮤니티/위원/활동 등) 지역재생 프로그램 예술활동 참여 	제작지원 50% 지역매칭 50%
지역 자원	지역콘텐츠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예술가 커뮤니티/지원기관/자치구 참여 공론의 장을 통해 지원 창작물 최종 선정 	워크숍, 토론회 연구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스토리, 공간, 인물, 역사, 이슈를 소재로 하는 창작물(지역 공연-국내 공연) 	제작지원 100% (동별 2개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예술제 등의 초청/교류/진출 확정시 	진출비용 100%

- 지역 생태계 & 예술생태계 ‘동행’ 구축 사업지원
 - 지역별 예술가(단체) 탈장르 거버넌스 구축, 네트워킹 추진 사업
 - 지역재생, 문화재생, 예술마을만들기 연계사업 추진 지원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스타트업 등의 비즈니스 협력 개발 지원
 - 지역 대학과 공동으로 4차 산업, 미래기반 예술 프로젝트 연구 지원

3) 추진 시 유의점

- 국민의 예술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지역 내 예술창작지원에 대한 고려와 동시에 창작과 향유가 선순환 될 수 있는 ‘지역의 예술생태계’ 구축을 우선순위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을 중심으로 예술가들의 사회적 가치, 사회적 공헌에 관련한 예술가(단체)-지역 주민들 간의 학습과정이 필요함
- 문화예술지원시스템 등록 예술가(단체) 정보를 광역차원 보다는 기초(자치구단위) 차원까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지역기반 상주예술단체에 필요한 시설과 단체의 ‘동행 협약서’ 표준을 제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각 사업별 예산이 아닌 지역별 전체예산 설계가 필수이며 지역문화재단과 공동수립 혹은 연계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역기반 상주예술단체의 공간발굴/확장/개선/리모델링은 도, 시, 자치구의 역할임을 지자체 역시 함께 정책적 인식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예술단체 인건비 지급, 제작비 운영, 소통 채널링은 문화재단의 역할로 분담 필요
- 또한 지역기반 상주단체의 안정적 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단년 지원체계가 아닌 다년 지원체계의 도입과 같은 국가/지자체 차원의 지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사례와 같이 3년 단위 지원사업 트랙의 도입 검토에 대한 목소리가 예전부터 지속되어왔는바,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검토가 필요함

나. 능동적 예술향유 지원기반 마련

1) 배경 및 목적

- 최근 1인 가구의 급증 및 고령층 인구의 증가로 예술향유 방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1인 가구의 급증, 특히 고령층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연간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예술체험에 대한 경험여부를 조사해보면, 여전히 장르별, 지역별, 계층별 격차가 여전하며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이 많지 않음
 - 청소년의 문화향유방식은 일반적으로 단순체험(관람)에서 직접참여(교육) 및 전시발표(창조)로, 그리고 문화공동체(나눔) 등의 형태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
 - 그러나 문화예술행사 관람의 경우 영화에 집중되어 있고 문학,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무용 등 순수예술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이 현실임
 - 일반적으로 문화예술 소비실태를 보면 10대와 20대의 경우는 취향, 시간, 재정적인 요인으로 인해 ‘관람’ 형태의 수동적인 예술소비가 많으며,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예술소비는 30대에 집중되어 있음. 또한 60대 이상의 노령층은 전반적으로 예술향유의 기회가 저조함
- 새 정부의 정책은 ‘쉽표 있는 삶’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여가시간 확보, 생활문화 확산, 문화격차해소 및 인간다운 삶의 구현에 초점을 두고 있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지난 정부 이후 ‘표현의 자유와 정의로운 사회’를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의 예술 가치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능동적 예술향유기반의 확대를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는 새정부가 강조하는 지역과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라는 국정과제와도 긴밀히 맞물려 있는 과제라 할 수 있음
 - ‘인간은 본질적으로 심미적 존재’라고 인정한다면 예술은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형식을 만드는 시도’이자 ‘아름다움과 감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표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음
 - 전 국민의 예술향유를 지향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희열감과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며, 감동과 기쁨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해 주는 가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임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 방향

- 기존의 문화패스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청소년 문화패스’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누리 실버문화패스’ 도입
- 지역별·저소득층 청소년의 생애최초의 예술경험 기회 제공과 노년층의 편리하고 접근성이 높은 예술 활동 기회 제공은 기호(taste), 선호(preference), 효용(utility)의 사회적 학습을 통해 가능하며, 이를 위해 감성의 차별을 줄일 수 있는 ‘문턱넘기(Point Of Entry)’ 프로그램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문체부는 2014년에 문화/예술인 패스를 시범 시행하였음. 이후 예술인패스는 한국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음. 기존의 문화패스에 대한 유용성 점검필요

(2) 주요 사업 내용

- 기존의 문화패스 명칭을 ‘청소년 문화패스’로, 기존의 문화누리패스에 더하여 ‘문화누리 실버문화패스’ 도입
 - 2015년부터 시행했던 ‘문화패스’는 전시 및 공연장마다 다르게 운용되는 청소년(13세~18세) 할인제도를 청소년 및 대학생으로 할인연령을 확대(13세~24세) 운영됨
 - ‘문화패스’의 경우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으로 신분, 연령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패스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대상 기관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관할 문화재단 포함)이며,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의 경우 30% 할인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지역의 문화예술기관들은 강좌, 공연, 체험, 전시 등의 경우 무료 혹은 저렴한 티켓가격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효과성이 떨어짐
 - 문화패스(청소년과 대학생), 문화누리카드(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 나눔티켓(문화누리카드 소지자 및 사회복지사, 통합문화이용권 담당자), 사랑티켓(24세 이하의 청소년과 65세의 고령자) 등 다양한 방식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지원·할인제도가 있지만, 보다 능동적 예술향유를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 재학 중(※ 현행 법률상 청소년은 9세~24세,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3세~19세가 되는 해 바로 직전해의 12월31일까지, 청소년증 발급대상은 13세 이상~18세 이하임. 또한 법적노인연령 기준은 만 65세 이상임

- 기존 문화패스 사용 ‘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인정, 예술향유의 적극적 기회로 인정
 - 기존의 문화청소년 문화패스 사용자의 연령대는 일반적으로 재학 혹은 재직 중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자율적, 능동적 예술향유를 위한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음
 - 재학 중인 학교와 재직 중인 직장에서 청소년 문화패스 사용 ‘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예술향유의 적극적 기회를 갖도록 유도
- 기존의 문화노년층의 경우 법적노인연령을 적용,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문화누리 실버문화패스’를 제공함.
 - 문화누리카드는 나이와 상관없이 문화복지 차원에서 제공된 것이라면 ‘문화누리 실버문화패스’는 소외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화누리카드의 확장형이 되는 것임
 - 문화누리카드가 제공하는 개인별 연간 7만원(2018년 기준)에서 추가비용을 고려하여 ‘문화누리 실버문화패스’의 비용 책정 필요
 - ‘문화누리 실버문화패스’의 적용대상은 일차적으로 소외계층이나, 중장기적으로 ‘소득 크레바스(crevasse, 빙하가 갈라져서 생긴 좁고 깊은 틈을 의미함)’의 시기에 들어가는 노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확장 고려

3) 추진 시 유의점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의 경우 2018년 정부예산안은 821억3백만 원임. 기존 개인별 연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만원 인상한 안임. 중장기적으로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게 하려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다양한 경로의 예산확보가 중요함
- 문화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향유의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덜 구축된 지역에서는 문화예술 공급의 다양화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의 어려움이 발생함. 또한 노년층의 경우 직접 사용하기 보다는 타인에게 나눠주는 경향도 보이고 있어서 노년층의 예술향유 기회확대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장애요인이 됨.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다. 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 확대

1) 배경 및 목적

- 지난 10여 년 간 장애인 예술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이 시행되어 왔지만, 장애인 예술 지원정책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의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는 문제점, 장애인 예술지원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모사업 확대의 필요성 등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장애인 예술의 주류화와 공정한 지원체계 등을 마련하여 장애인 예술 참여 확대 및 장애인 예술 창작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임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 방향

- 장애인 예술정책 주류화
 - 장애인 예술 진흥정책이 문화체육부 예술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는 방향 설정
- 장애인 예술 참여 확대 및 장애인 예술 창작 역량 강화
 - 장애인 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 예술 프로그램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방향 설정
 - 문화기반시설에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 방향 마련
 - 창작 공간 마련, 전문인력 양성, 후원체계 구축 등을 통한 장애인 예술 창작 역량 강화 방향 정립
- 장애인 예술 공정한 지원체계 구축
 - 지역의 풀뿌리 장애 예술인, 예술단체의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공정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방향 정립

(2) 주요 사업 내용

- 장애인 예술 주류화 정책
 - 장애인 예술 진흥정책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 마련
 - 예술인 파견, 생활예술센터 조성, 공연장 상주제도, 서울아트마켓, 문화예술교육 강사 파견, 전문예술단체 및 법인 제도, 예술인 창작 준비금 지원 제도 등의 예술정책과 사업 전반에 장애인 예술 정책이 녹아들 수 있는 체계 마련

- 장애인 예술 참여 확대 및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 역량 강화 사업
 - 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예술 프로그램 지원 사업 : 2017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사업인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운영 프로그램, 학교 예술강사 파견 사업 등에 장애유형별에 맞는 장애인 예술 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장애인 예술 참여 확대
 - 전국 문화기반시설에 장애인 접근성 제고 : 공연장, 전시장, 도서관, 박물관 등 전국 문화기반시설에 장애인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편의시설 마련
 - 장애 예술인/예술단체 창작 공간 마련 : 대학로에 장애인 전용 소극장 1곳을 마련하여 장애인 공연예술 발전의 발판 마련, 접근성 높은 공공 공연장(아르코소극장 등)의 장애인 대관 방안 마련, 지역의 유희공간 및 기존 문화시설(생활문화센터 등)에 장애 예술인 창작공간을 조성하여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장르별 예술가를 선발하여 창작 레지던시 제공 등
 - 장애인 창작준비금 지원 정책 시행 : 대부분 비장애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정책(2016년 4,000명의 예술인에게 최대 300만원 지급)이 장애 예술인에게도 지원 확대 정책 마련
 - 장애인 예술 전문인력 양성 : 장애인 예술 분야의 독특한 감성 미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애 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예 : 장애인 아트 워커 art worker), 장애인 예술가와 비장애 예술가와의 공동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전문가 양성 등
 - 장애인 예술 후원체계 구축 : 장애인 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업과 장애인 예술의 협력 체계 마련, 장애인 예술 생산품 정부·공공기관 우선구매 기회 제공 확대 등
- 공정하고 투명한 장애인 예술 지원체계 구축 사업
 -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역량 강화: 장애인 예술 지원사업의 실무를 맡고 있는 (재)장애인문화예술진흥원의 기관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명확한 업무 범위와 성과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약 체결이 필요하며, 동시에 지원기관으로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 교육이나 현장과의 소통 기회, 기획사업 비중 확대 등 추진
 - ‘함께누리 지원사업’의 편중 문제 완화: 함께누리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의 유일한 장애인 예술 지원 사업인데, 전체 약 70억의 예산중 23%(약16억, 5개 사업) 가량이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총연합회에 지원되면서 편중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⁴⁹⁾ 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총’에 대한 지원의 집행, 평가, 결과보고 등이 객관적이고 세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재원 쓰임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이루어졌다는 사실임.

49) 이중 2개 사업(아트페어 및 미술교류전)은 당초 장애인미술협회가 추진하던 사업이었으나, 장애인미술협회에 대한 검찰수사의뢰 조치로 장애인문화예술총연합회가 대행한 것으로 파악됨

이러한 편중된 지원방식은 결과적으로 중앙과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풀뿌리 장애인 예술가 및 예술단체들에게 돌아갈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 할 수 있음. 이를 완화하기 위한 원칙 등의 마련이 필요함

- 장애인 예술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확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양한 예술지원사업이 모든 예술인과 단체, 장르를 가로질러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하듯이 장애인 예술 지원사업도 장애 예술인과 단체, 장르를 가로질러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체계를 필요로 함.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해당 정보만을 보고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현 상태에서 필요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임

3) 추진 시 유의점

- 장애인 예술진흥은 공공영역의 책임이라는 인식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의지와 노력
 - 장애인 예술은 비장애인 예술과 달리 시장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 분야이며, 공공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장애인 예술은 시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함
 -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내 장애인 예술 지원을 위한 독자적인 조직 마련
- 장애인 예술진흥을 위한 적절한 재원 확보
 - 현재 장애인 인구수 대비 예술지원 예산 중 장애예술 지원 예산의 비중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장애인 예술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예술의 수요와 요구 등을 파악하여 향후 장애인 예술 진흥을 위한 적절한 재원 확보가 이루어져야 함
-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문체부의 관계 설정 노력
 - 2015년 설립된 장애인 예술 진흥 기관인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장애인 예술 지원 역할은 2005년 팔길이원칙 실현을 위해 위원회 제도를 채택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 지원 역할과 비슷한바, 2017년부터 장애인 예술 진흥을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문화부와 의 명확한 관계 정립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임. 하지만 일반 예술계와 다른 장애 예술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약의 현실성 제고가 필요함
 - 예컨대, 장애예술인단체가 직접 국회의원을 통해서 특정 예산을 확보한 경우 문체부 예산으로 반영되었다고 해도 해당 단체에 그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계적인 협약이 아니라 현 단계의 자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라. 탈북민/이주민 예술활동 기회 제고

1) 배경 및 목적

- 2017년 6월 기준으로 탈북민은 30,805명⁵⁰⁾에 달하지만 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관련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즐기지 못함
 - 2016년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인 2,049,441명⁵¹⁾으로 전체 인구의 약 3.9%정도에 달하지만 탈북민과 같은 이유로 문화생활에 적극 참여하지 못함
- 탈북민 정책은 통일부, 이주민 정책은 법무부-여성가족부 중심으로 이뤄져서 탈북민과 이주민을 주체(대상)으로 한 문화예술정책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
 - 탈북민 대상 문화예술정책은 2015년부터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하나원과 이탈주민 아동의 공부방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교육 정도에 불과함. 또한 이주민 대상 문화예술정책은 2012년부터 진행 중인 ‘무지개다리사업’ 정도라고 할 수 있음
 - 탈북민, 이주민 스스로도 문화예술 관람 및 체험보다 한국사회 내 경제적 및 사회적 적응에 역점을 두고 있어 문화적 요구가 높다고 보기 어려움
- 기존 탈북민 및 이주민정책이 한국사회의 동화형 적응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014년 5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이제는 이들의 문화향유와 문화적 표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환경조성 및 기회제공이 필요함. 더불어 탈북민 및 이주민들이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 방향

- 첫째,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자체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전달체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접근방식을 취하는 게 바람직함
 - 탈북민 및 이주민은 문화예술 활동보다 다른 사안(예를 들어 경제 안정, 교육기회 획득, 가정 및 사회의 차별 철폐 등)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욕구와 문화예술 활동을 접목시키려는 정책수립이 현실적임⁵²⁾

50)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reahana.or.kr/intro/eGovHanaStat.jsp> 참조

51)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6 참조

- 문화예술을 탈북민 및 이주민의 개인의 문제, 나아가 사회 문제로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하는 일이 필요함. 사회적 사안과 분리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참여율이 높지 않으며 문화예술 활동의 의미 부여하기에 성공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기존 탈북민 및 이주민 정책을 담당하는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문화예술 참여 기회 제공이 현실적임⁵³⁾
- 사회적 사안과 분리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참여율이 높지 않으며 문화예술 활동의 의미 부여하기에 성공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둘째, 탈북민과 이주민은 각각 단일 집단으로 설정하는 정책뿐 아니라 문화예술 관심도, 인구사회학적 속성에 따라 맞춤형 정책사업을 진행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탈북민의 경우, 대학생은 문화예술 관람빈도가 많으며 노년층은 경제활동에서 제외되어 문화예술 참여가 가능한데 이 같은 속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문화예술 정책을 펼쳐야 함
 - 이주민의 경우,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의 성격에 맞는 그리고 국가별 성격에 걸맞은 세분화된 문화예술 정책을 펼쳐야 함
- 셋째, 문화다양성 정책의 취지에 걸맞게 입국 이전의 문화 정체성을 한국사회에 걸맞게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함
 - 이 같은 정책을 실현해야 기존의 동화형 적응정책이란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음
 - 탈북민과 이주민이 익숙한 문화예술을 기초로 새로운 문화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음
- 넷째, 탈북민과 이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 정체성을 기존 한국사회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
 - 차별과 편견이 아닌 고유한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 남한 시민과 탈북민,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해야 함

52) 예를 들어 구직을 원하는 탈북민에게는 직업교육 현장에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 거주지역 내 차별로 고민 중인 이주민에게는 주민센터 등에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차별금지를 주제로 한 예술작품 감상 등을 실시하는 것이 대안임

53)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현재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우선적 방안일 수 있음

(2) 주요 사업 내용

● 문화누리카드의 확대

- 탈북민의 대부분은 현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지만 남한 시민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교과관련 도서구입에 주로 사용하고 있음
- 이주민의 문화누리카드 사용현황은 분명하지 않지만, 발급자의 사용양태는 유사할 것으로 추정됨
- 탈북민과 이주민에 한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음. 현재의 문화누리카드 연간 한도액 6만 원이지만 2022년까지 10만 원으로 증액될 계획임. 이를 고려할 때, 탈북민의 경우, 10만 원 증액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늘리고, 도서구매 비율을 50%로 한정하여 다른 문화예술 관람을 유도할 수 있음

● 탈북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 탈북민의 문화육구 계발을 위해서는 현재 하나원, 이탈주민 자녀 공부방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대안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했지만 입시준비로 한 달 동안 휴강하는 등 효과가 많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 전국 23개의 하나센터 가운데 반 이상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점을 감안하여, 탈북민-남한주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진행. 현재 인천하나센터에서는 남북한 노인을 각각 25명씩 정도로 ‘하나청춘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 및 만족도가 높은 편임

● 이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 현재 진행 중인 ‘무지개다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함은 물론 각 지역에 산재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의식주와 관련된 한국문화 적응이 아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신설
- 이주민과 기존 한국사회 구성원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주제(소재)는 두 가지로 설정함
- 첫 번째는 한국 문화예술에 대한 적응이 아니라 보편적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임
- 두 번째는 이주민 모국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으로 기존 한국사회 구성원의 참여도를 제고함

- 탈북 예술인 네트워크 확대 및 창작지원
 - 현재 활동 중인 탈북인 예술단체는 문화예술 행사뿐 아니라 (상품 판매)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예술 수준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 개인 단위로 창작활동을 하는 탈북 예술인, 북한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았지만 활동 중단 중인 탈북 예술인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이들이 탈북민과 남한시민에게 ‘사상성 없는’ 북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탈북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창작지원 심사체계를 구성하여 수준 높은 탈북예술인 양성
-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 진행
 - TV 시청 또는 영화관람 탈북민 및 이주민의 주된 여가활동이지만 영상물과 현실에서 혼동을 겪는 일이 많음
 - 입국 이전 북한, 모국에서 시청한 한국TV(특히 드라마)와 자신의 현실이 다른 데서 오는 혼동과 어려움임
 - 영상물이 현실을 미디어의 논리에 따라 재현한 창작(허구)이고, 미디어가 현실을 어떻게 재현하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함
 - 남한 시민들 대상으로는 탈북민 및 이주민이 출연하는, 탈북민 및 이주민을 재현하는 프로그램을 비판적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함

3) 추진 시 유의점

- 입국 이전의 정체성을 활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에서 유의할 점은 한국사회에서 허용 가능한 정도에 한정해야 함
 - 다만 모든 문화정체성이 보호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함
 - 예를 들어 탈북민의 수령 찬양, 이주민의 일부다처제 등은 한국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음
- 탈북민 및 이주민 대상 프로그램 진행에서 생활문화(의식주)를 소재로 하는 경우를 배제하고 상대적으로 수준 높은 문화예술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현재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서 보듯이 실제 부처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음을 고려하면 중앙단위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앙부처와 직접 소통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함
 - 프로그램 진행현장인 하나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실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델 발굴이 필요함

2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가. 유/아동 및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다각화

1) 배경 및 목적

- 유/아동 및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부족 및 편파성
 - 2016년 유/아동 및 청소년 학령인구의 35.7%만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수혜대상이며, 그중 70%는 초등학생에 집중 및 장국악강사 지원이 전체 지원의 약 50% 차지
 - 현재 정책 개입 효과가 가장 큰 유아 문화예술교육은 수혜규모가 1% 미만이며, 이는 향후 아동, 청소년기로 이어지는 학습효과 및 문화자본 격차의 원인으로 작용
 -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의 절반 수준인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소외·특수대상 위주로 운영되어 유/아동 및 청소년 대상 사회문화예술교육 부족
- 장르별 예술기량교육에서 통합형 미적체험교육으로 수요 전환 및 요구 다양화
 - 현행 유/아동 및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대부분은 소수 장르(8개), 오케스트라교육 등에 제한된 1인 강사 파견의 단순하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지원효과 미흡
 - 유/아동 및 청소년기 문화예술교육 효과는 향후 생애 전반에 걸쳐 1) 문화적 감수성 및 공감능력 2) 예술적 창의·창발성 3) 지속적 문화취향 및 자발적 문화소비역량 등으로 발현되므로 대상과 수요별 다양한 내용, 방식의 맞춤형 지원 요구 확대
- 따라서 생애초기 문화예술교육 중요성을 인식한 지원방식 개선 및 지원 확대
 - 기량형 취미교육을 넘어 미래사회가 중시하는 3C 역량이 배양될 수 있는 ‘미적체험형 통합예술교육’ 접근 방식 도입 및 적용 검토⁵⁴⁾
 - 유/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생애초기 문화예술교육 확대에 관한 사회적 합의 마련
 - 생애초기 문화예술교육 재정 지원 확대 및 체계화, 제도·조직·사업 개선
 -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 보육, 교육, 여가 등 다양한 정책 영역과 연계 강화

54) 여기서의 3C란 유네스코가 제시한 것을 의미함. 3C : 소통·협력·창의성(Communication·Collaboration·Creativity)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 방향

-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 및 공정·공평한 지원체계 구축
 - 학교(교사)가 아닌 실제 최종수요자인 유/아동, 청소년의 니즈파악(수요조사)을 통한 정책 개선안 마련
 - 장르별 예술기량교육이 아닌 장르/교과/주제 등 통합형 문화예술교육으로 방향 전환
 - 자발적 문화소비역량을 키우는 직접 참여형, 활동형으로 운영방식 개선
 - 학교와 일상을 넘나들며 연결되는 문화예술교육 참여 기회 확대 및 다각화
 - 유아, 아동, 청소년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심화되도록 연계적 지원 강화
 - 소득 격차가 문화예술교육 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문화예술교육의 보편적 지원체계 마련(정규교육과정 개발, 신설, 확대 및 인력 양성, 공간/시설 조성 등)
- 대상별 특화사업 다각화 및 지원방식 질적 개선
 - 유/아동 및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예술의 유희성(놀이성), 표현성, 창작성 등 3대 성격을 중심으로 실제 예술창작과정을 경험해볼 수 있는 양질의 환경 제공
 - 대상별 수요와 특성, 효과를 고려한 특화사업 개발 확산
 - 교과 통합 예술교육 보편화 및 교사-예술가 협력수업 등 운영방식 다각화
 - 현장 예술교육 실천 전문가 중심의 사업 설계 및 프로그램 개발
 - 기타 장애가 있는 소외·특수계층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다각화
- 문화예술교육을 매개하는 물적, 인적 자원의 전문성 제고
 - 효과적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매개하는 기반으로 공간인프라 조성 확대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개선 및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제도 질적 보완
 - 문화예술교육 수행을 지원(기획·조정·진행 등)하는 매개 전문인력 신규 양성
- 관련 기관 및 민관 협력을 통한 효과·효율적 수행 구조화
 - 현행 문화예술교육사업 수행구조(중앙에서 제시하는 전국 공통 지침에 의한 지역별 대응 및 실행체제)의 개선이 필수적이며, 지역별 권한과 책임이 함께 배분되는 분권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사업 기획 및 운영 자율화 기반)구축해야 할 것임
 - 지자체-교육청-광역문화재단 협력 체계화를 통한 효과적 수행구조 확립 (서울시, 경기도 모델 참조). 지역분권형 책임운영방식 적용으로 중앙-지역 사업운영 협약 및 이행 평가 체계화
 - 민관 협력의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상시모니터링체계 마련으로 정책의 질 관리

(2) 주요 사업 내용

- 유/아동 및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
 - 생애초기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종합계획 수립 (정책방향, 전략 및 사업 개발 등)
 - 보육, 교육, 놀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융복합 가능한 예술교육방법론 제시
 - 연차별 세부실행방안 연구(대상별 지원사업 개발) 및 평가체계 개발
- 생애초기 문화예술교육의 대상별 특화사업 개발 및 지원 다각화
 - 스스로 학습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다양한 수요 반영의 프로젝트형 지원 중점
 - 교육 대상과 교육 운영 예술가(예술강사)가 함께 성장하는 더블지원방식 설계
 - 다양한 체험형 학습 및 공연, 전시 등 창작활동 연계/기반 지원 모델 개발
 - 유/아동 및 청소년 발달단계 고려한 세분화된 특화사업 운영 모델 개발
 - 예술교육 레지던시, 연구환경(Lab) 조성 등 새로운 운영방안 모델링
 - e-learning, 가상/증강현실(VR/AR) 등 기술과 문화예술교육 융합 활성화

<대상별 특화사업 참고 사례(서울문화재단 어린이·청소년 창의예술교육사업)>

<예술로 돌봄> :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교실 대상(보육) + 통합예술교육 (1인)

- 돌봄교실 특화 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 기반 보육 지원형 통합예술교육

<예술로 플러스> : 초등학교 고학년 일반교과 대상(교과) + 통합예술교육 (2인 팀티칭)

- '국어/사회/수학으로 예술하기' 등 일반교과와 2개 장르 예술교육을 통합한 교육과정 개발 운영, 2017년 서울시내 80개 초등학교 380학급 규모로 서울시교육청과 협력 지원

<예술로 함께> : 중학교 자유학기제 or 창의적 체험활동(교과) + 인문예술교육 (3인 팀티칭)

- 인문적 텍스트와 철학적 질문법, 발상법을 연계한 2개 이상 장르 통합예술교육 운영, 2017년 서울시내 81개 중학교 540학급 규모로 서울시교육청과 협력 지원

-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제도 개선 및 운영 다각화
 - 대상별 수요와 특성에 맞춤형(=프로젝트형) 지원 확대(강사 파견 지양)
 - 교육과정 연계의 경우, 장르별 교육 중심 보다는 통합예술교육 시범사업⁵⁵⁾ 등 다양화된 프로그램 시범도입 및 적용 확대 모색
 - 폐교, 유휴교실/공간 등 활용한 학교·지역사회 내 문화예술교육 공간 발굴 및 조성
 - 학교 내 상주예술가, 문화코디네이터 운영방안 모색
 - 예술가-교사 협력수업 활성화 및 관련 수업 모델 개발 연구 지원

55) 가령,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예술로 플러스 모델에서의 2-3인 이상 팀-티칭 방식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지역 문화자원(공간, 시설, 인력, 역사, 전통, 문화재 등) 연계 운영 확대
-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유아교육 공적투자 효과는 초중등교육의 2.5배)
: 새정부 교육정책 기조(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지원)에 따라 0~5세 유아 단계별 지원 특화 ⑤ 0~3세(1단계) 예술감각교육, 3~5세(2단계) 예술놀이교육 특화
- 청소년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계한 보다 예술적인 인문/인성교육 특화⁵⁶⁾
- 학령인구 감소와 다문화인구 증가 추세를 반영한 연령별(교급별) 균형 지원 추진

<표 4-30> 인구대비 대상별 적정지원규모 산출 및 연차별 목표계획 (예시)

구분	교육체계	지원비율	2018년	2019년	2020년.
유아	유치원, 어린이집	3%	10%	25%	40%...
어린이	초등학교	70%	70%	80%	90%...
청소년	중학교(자유학기제)	20%	30%	40%	50%...
	고등학교	10%	15%	20%	25%...

<참고사례>

1. 노르웨이 문화배낭프로젝트 (국립 문화예술교육 지원프로그램)

- 2001년 노르웨이 주정부(교육부, 문화부)와 지자체 협력으로 시작, 6~19세 모든 학생들이 전문 예술가가 제공하는 문화예술 창작에 참여하도록 지원 (음악, 연극, 시각예술, 공연예술, 영화, 문학, 문화유산 등 분야 망라)하며, 학교 교육과정 내 문화예술활동에 학년별 특정시간 이상 참여하도록 지원함. 수업은 워크숍방식으로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짐. 학생들이 특정 장르에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예술을 경험하고 예술 창작에 참여하여 자유로운 문화예술 표현을 통해 모든 형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참여와 체험, 창작 등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임

2. 벨기에 어린이기초예술원 ABC(Art Basics for Children) : 공간 기반 일상 미적체험교육

- 브뤼셀시의 지원으로 지역 내 폐공장을 재활용해 2000년 오픈한 예술교육 실험센터. 유/아동 및 청소년, 학교 교사,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장르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특히 어린이 청소년에게 예술과 교육의 경계에서 미적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연구 개발해 운영함.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그림연극과 창의스토리텔링, 자연과 미학, 가드닝과 요리, 건축과 디자인 등

3. 예술-교과 통합수업(arts-integrated curriculum)

- 핀란드 등 교육 선진국은 학교에서 예술-교과 통합수업 활성화, 특히 유아교육에서 모든 수업이 '창조, 자율, 협력 지향의 감각적 놀이'로 이루어짐. 기타 독일 발도르프학교, 스웨덴 Creative Schools Initiative, 미국(뉴욕) 상상력고등학교, 영국 로열오페라하우스(ROH)의 Chance to Dance, 서울문화재단 <예술로 플러스> 사례 등

4. 예술로 상상극장 (어린이 교육연극 창·제작 및 찾아가는 공연 운영 지원)

- '어린이가 있는 곳 어디나 극장이 된다'는 비전으로 양질의 어린이 참여형 교육연극 창작 및 찾아가는 공연을 지원하는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의 대표 사업. 창작 아이디어를 공모해 제작 워크숍 및 극 구성, 배우 훈련 등 공연 제작 전반을 지원하고 최종 완성된 작품은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등 다양한 지역 공간을 찾아가는 공연으로 운영됨. 소요예산은 서울시(문화재단)와 자치구(관악구청), 민간기부 등으로 다각적 재원으로 조달

56) 가령, 서울문화재단 <예술로 함께> 사례 참조: 예술 창작/표현 활동을 통한 꿈과 재능 발굴 등 진로 지도 겸 사회적 존재로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인문예술교육(인문적 사고, 발상법 + 통합예술교육) 특화 운영방식 등을 참고할 수 있음

- 유/아동 및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보편적 지원체계 마련
 - 공교육체제 내 정규교과로서 통합예술교육 운영 제도화 추진
 - 가정형편(경제수준)을 이유로 낙오되지 않도록 공정·공평한 지원체계 마련
 - 1) 유·초·중학교 교육과정 내 ‘예술활동’(유) 및 ‘예술·체육활동’(초·중)을 ‘예술 교과목’으로 확대 및 통합 운영 (교육부, 교육청 협력)
 - 2) 초등3학년 이상 ‘예술’ 교과에서 다루는 음악, 미술 외 다양한 장르 선택 확대
 - 3) 초등학교 교육과정으로 2개 이상 장르/주제/교과 통합형 예술교육 운영 제도화
- 정책전달 및 사업수행체계 개선으로 지역 문화예술교육 운영 자율권 강화
- 지역별 학령인구 기준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예산 지역 배분
- 광역시·도 단위 지역의 자율적인 사업 기획·운영권을 강화하여 지역의 수요와 여건,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맞춤형 지원 활성화 도모
- 특히 현행 복잡한 사업 구조 및 예산분담 체계 개선(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 기타 지역 내 인적자원 발굴 육성 등 지속가능한 지역 자율형 운영체제 구축 지원
-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수행, 매개) 양성
 - 강사 활동방식 및 유형 다양화⁵⁷⁾로 우수한 전업예술가의 참여기회 확대 및 사업 질 제고
 - 강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R&D) 활동 지원 신설⁵⁸⁾
 - 예술가-교사 협력수업 모델링 : 커리큘럼 및 교육과정 개발
 - 문화예술교육 매개 전문인력(기획자, 코디네이터) 양성 및 활동 지원⁵⁹⁾

3) 추진 시 유의점

-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수평적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부처 및 관련 전문기관 간에 정책 경쟁, 사업 대결의 구도에서 벗어나 협력과 상생, 공존 가능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협력체계의 구축·유지·발전을 위한 상호 약속과 성실한 노력 이행이 필요함 (협약 체결과 대국민 약속 매니페스토 실천운동 활성화, 상시 소통구조 확보 협의체 운영 등)

57) 예시 : 전임-비전임 등 활동형태 다양화, 경력 및 역량에 따른 활동비 차등 방안 고려

58) 예시 : 사업운영모델 및 프로그램 연구, 교과연계수업 개발, 예술-기술 융합교육모형 연구 등을 포함

59) 참고사례: 영국 영국 Creative Partnership ‘크리에이티브 코디네이터’, 핀란드 아난탈로예술센터 ‘문화코디네이터’, 벨기에 ABC ‘가이드’

- 향후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일자리(고용문제)만이 아닌 예술가의 창조적 사회활동으로 인식하는 정책적 인식 제고와 이와 관련된 행정 지원체계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되 예술가의 창조적 예술작업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가 창출되도록 지원방식의 목표, 내용, 방식, 효과 등에서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
 - 문화예술교육 수행에 대해 일괄적 단가 적용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며, 경력이나 수행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용역방식만이 아닌 창작지원에 준하는 지원책 마련
- 대상별 사업적용을 우선적으로 모색하기 보다는, 이를 위한 연구개발(R&D) 등이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생애 전반의 문화취향, 문화소비역량을 좌우할 유/아동 및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중요성에 대한 정책적 인식을 기반으로, 프로그램 및 사업체계 개발. 기타 연구개발(R&D), 인력양성 방안 등 기반 조성 및 체계 마련이 선행된 후 이와 연계된 단위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할 것임

나.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청,장년,노인)

1) 배경 및 목적

- 평생학습 수요 증대와 국민의 문화예술 참여 기반 확대 요구
 - 생활수준 향상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화예술 참여 의향 지속 증가. 문화예술교육 경험자의 경우 교육추가 참여의향은 미경험자의 4.5배에 이를 만큼 수요 확대가 이뤄지고 있음(서울연구원, 2016)
 - 그간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경우 소외·취약계층에 집중된 지원으로 일반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참여는 상대적 소외되었다는 비판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음
 - 일반 성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공공지원이 부족하여 백화점, 대형마트 문화센터 등 민간에 의한 유료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 (☞ 소득격차에 의한 문화격차 발생)
-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 제고 및 문화 주체로서 시민예술가 육성
 - 문화기본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2016년)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 증대 : 국민의 여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 주목
 - 청년 실업, 중년 파산, 노년 빈곤 등 생애주기별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사회적 위기를 예방, 해소하는 문화예술교육 기반 예술치유 지원 확대
 - 문화예술교육 기반의 문화다양성, 소수문화, 근로자문화, 시민문화 활성화 집중 지원
 - 문화민주주의 주체로서 자발적 문화활동, 지속적 문화소비 역량을 갖춘 시민예술가 육성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로 국민의 문화적 권리 보장 및 실천
 - 개인의 문화역량과 시민력을 강화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국민의 문화권리 증진 (사회취약계층 대상 문화복지, 문화향수기회에서 전국민 문화예술 참여로 확대)
 - 생애주기별 계층, 성별, 지역 등 특성 반영된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및 다각화
 - 생애주기별 지원 연계성, 효과성을 고려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자원의 발굴, 보호, 육성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육성
 - 일상에서 문화예술교육 참여기회, 접근성 확대를 위한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기반 마련
 - 지역 역할/권한 강화를 통해 중앙-지역 간 문화예술교육 참여 기회의 격차 해소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 방향

- 국민의 문화적 권리로서 시민의 평생학습형 문화예술교육 정책 확립
 - 민관 전문가 참여를 통한 중장기 비전 및 종합계획 수립 연구
 - ‘자발적 문화활동 및 지속적 문화소비 주체로서 시민예술가 육성’ 체계화
 - 만 19세 이상 성인 대상 문화역량 제고, 여가 증진을 중심으로 평생학습 차원의 보편적, 체계적 문화예술교육 지원계획 수립
 - 현행 분절적으로 시행되는 시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통합 및 개편⁶⁰⁾
 -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약 50%가 문화예술 관련이며 학습시장 지속 확대 추세임을 고려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평생학습 교육정책과 연계 및 교류·협력방안 모색을 통해 정책 시너지효과 제고 필요.
 - 오프라인 문화예술교육 현장 운영의 물리적, 재정적 한계를 보완하도록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육성 및 가상/증강현실(VR/AR) 등 기술 기반 문화예술교육 개발 활성화
 - 관련 부처 간 정책 협력 및 연계·협력을 통해 정책 효율성 제고⁶¹⁾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3대 지원·육성 전략(특성화, 체계화, 다각화) 추진
 - 청년, 중·장년, 노년 등 대표적 생애기를 구분하여 각 수요와 특성 반영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특성화 (생애주기별 예술치유 지원 포함)
 - 문화예술교육 5P(Program, Process, People, Place, Partner) 육성 체계화
 - 실용적 실기교육에서 취향공동체 형성, 예술치유, 사회적 예술(예술행동), 평생학습 까지 운영범위 확대 및 다각화
 - 특히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운영 확대를 위한 인프라 조성으로 접근성 개선⁶²⁾
- 문화예술교육 기반 문화민주주의 확대 및 시민예술가 육성
 - 문화예술교육 참여를 통해 소통, 공감, 공동체성 회복을 모색하는 문화민주주의 실천 공급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사업별 단발성 지원, 개별적인 지원방식 개선
 - 소외/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넘어 보편적 문화시민교육으로 확장
 - 시민 문화역량 및 시민력을 강화하는 체계적, 전문적 교육지원체계 마련⁶³⁾

60) 기존 ‘문화향수기회 확대’ 및 ‘여가문화 지원’ 관련사업 개선 및 개편 방안 모색: ex.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시시콜콜(이전 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61) 평생학습(교육부), 새터민(통일부), 군인(국방부), 가족단위(여가부), 근로생활자(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 간 협력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기관 협력 등

62) 공원, 광장, 지하철 등 일상 공간과 문화기반시설, 대학 캠퍼스, 평생교육시설 등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63) 참고사례: 독일의 ‘Volkshochschule’ 일본의 ‘가나자와 직인대학’ 등의 체계적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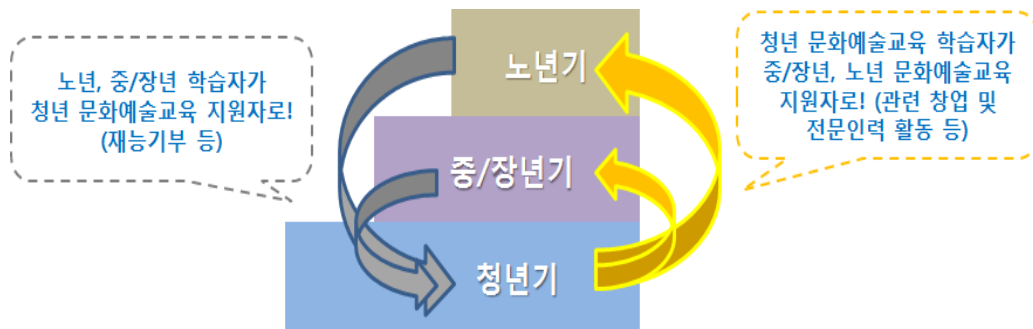
(2) 주요 사업 내용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지원방안 연구 추진
 - 최소 10년 중장기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일상적 참여를 목표로 종합계획 수립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적인 전국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개발(연구)
 - 기존 문화정책, 여가정책과 연계한 평생학습형 시민 문화예술교육 정책 개발
 - 민관 전문가 참여를 통한 수요자 중심 주체적인 시민 문화예술교육 방향 수립
- 생애주기별, 대상별 지원을 체계화한 지역별 “(가칭)시민예술대학” 시범 운영
 - 주요 생애기 계층, 연령, 성별, 지역 등의 세부 특성을 고려한 지원 특화⁶⁴⁾
 - 생애기별 대표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개별 특화프로그램 지원 보완
 - 콘텐츠, 지원방식,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생애기 간 연계성 있는 지원 모색

<표 4-31> 대상별 특화방향(안)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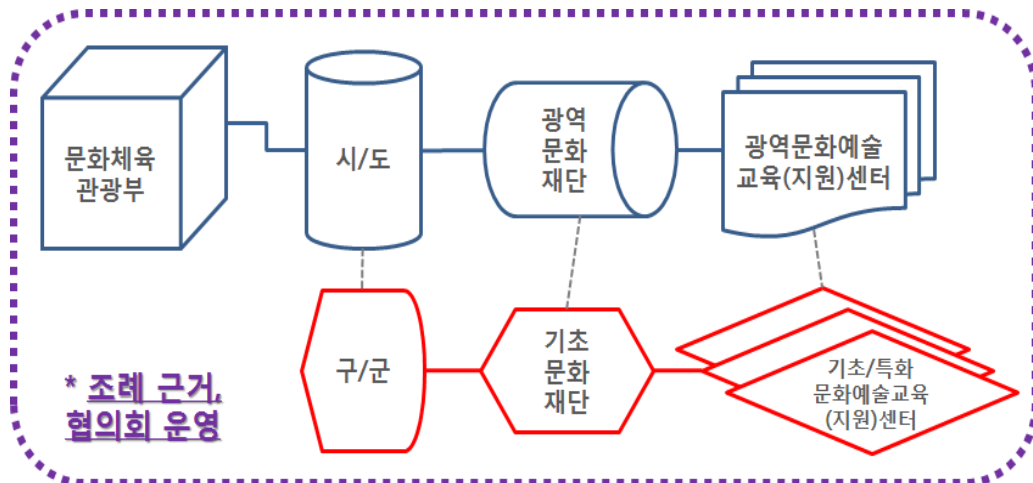
구분(대상)	주요 대상(분류)	특화 방향
청년기	대학생(취준생 포함), 실업자, 자영업자, 사무직, 노동자, 공무원, 군인, 주부, 전문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효능감, 자존감 회복(예술치유) • 소질 개발 및 취업, 창업 지원(실용예술교육, 문화활동교육) • 취향기반 공동체 육성(미적체험교육)
중·장년기	독거노인, 일용노동자, 연금생활자, 실업자, 자영업자, 사무직, 공무원, 전문직, 주부, 환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효능감, 자존감 회복(예술치유) • 단절된 사회적 관계 회복(예술치유, 미적체험예술교육) • 소질 개발 및 취업, 창업 지원(실용예술교육, 문화활동교육) • 취향기반 공동체 육성(미적체험교육)
노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존감 및 단절된 사회적 관계 회복(예술치유, 미적체험예술교육) • 소질 개발 및 재능 기부(실용예술교육, 문화활동교육) • 치매 등 질병치료(예술치유/치료)

64) 가령, 청년 취업준비생을 위한 취업 연계 문화예술교육, 중년 주부를 위한 취미공동체 육성 지원 문화예술교육, 노인 치매예방을 위한 예술치유 등



[그림 4-9] 생애주기별 지원방안 선순환 체계 (예시)

-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주체로서 시민예술가 육성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 단계별 교육과정을 통해 준전문가 수준 시민예술가 육성 및 활동기회 제공
 - 시민예술가 인증을 위한 전국 공통 운영기준 마련(광역문화재단, 교육진흥원 공동)
 - 시민예술가 활성화 지원사업 개발 및 다양한 활동 욕구에 부합하는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원(동아리 지원, 생활문화매개자 양성 등 관련 사업과 연계한 활동 확대)
 - 지역 중심 평생학습형 문화예술교육 기반 및 생태계 구축
 - 시·도 단위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 제정 지원 및 사업운영예산 매칭 지원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역할, 전문성 강화 및 위상 재정립(자율성 강화)
 - 기초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 및 지원협의회 설치 지원 방안 모색



[그림 4-10] 기초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 및 지원협의회 협력/추진체계(예시)

- 전국단위 공통사업 지원을 통해 지원 체계화 : (예시)지역별 시민문화예술대학
- 생활권역 내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활용

3) 추진 시 유의점

- 시민대상 보편적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의제를 단순히 ‘소외/취약계층 중심에서 일반시민으로’ 라는 단선적 관점에서의 정책접근 및 확대는 문화예술교육의 수혜가 구조적으로 제약되어 있는 계층에 대한 배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당히 세심한 정책적 구상과 설계가 필요함
 -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보편화 의제 차원에서 시민의 기회확대는 타당할 수 있지만, 현재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소외계층 중심이라는 비판은 사실상 전체 수혜대상(소외계층)의 1%에도 못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 소외계층 중심성이라는 비판이 수혜자로서의 중복이라는 측면보다는 소외계층을 대상화하여 접근해온 그간의 정책적 접근방식의 문제점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검토에 따라 공공지원의 수혜자로서 취약계층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방식을 세심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가령, 소외계층이 아닌 소외지역중심 관점 적용 등)
- 관련 정책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 역할 분담
 -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교육을 관장하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계된 문화체육관광부와 시·도(문화재단) 및 교육청, 기초단위 지자체(문화재단) 간 정책 실천을 위한 문화행정 소통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임. 다자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위원회 필요
 - 특히 광역,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지원 제도화를 위한 조례 제정과 센터(공간) 운영에는 관련 역할 및 예산 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지역협의회 구성을 위한 TF 운영 등 조기에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
- 지역별 (가칭)시민예술대학 커리큘럼(프로그램) 및 시민예술가 운영 질 관리
 - 지역별 운영주체가 상이하게 되므로 전국 공통의 운영모델 및 대표사업(프로그램), 운영관리 매뉴얼 등 전반적인 관리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중앙정부(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가 운영모델 연구 개발 및 운영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지역별 세부운영(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모니터링, 평가) 현장 업무는 광역 및 기초문화재단에서 수행하여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 및 자율권 강화

다. 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

1) 배경 및 목적

- 1990년대 이후 조성 붐이었던 문화기반시설은 주로 공급자 관점에서 성인대상, 관람형 활동 기준으로 설계되었던 바, 이용자 대상별 특히 유아동 및 청소년의 필요를 크게 반영하지 못하였음.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어린이·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문화시설 및 공간 수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국내 어린이·청소년 대상 놀이, 문화활동, 예술창작을 위한 공공시설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며, 이들은 대부분 청소년수련관, 키즈카페 등 체육수련시설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상업시설에 국한되고 있음
 - 특히 유아동 대상 문화예술 활동은 주로 유치원, 초등학교 등 공교육시설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나, 이들을 위한 창의적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안전한 놀이공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혁신은 새로운 공간인프라 기반 위에 탄생함
 - 창의적인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융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에 머물 때 상상력, 창발적 사고와 행위가 발현되므로, 기존 문화시설에 ‘교육적 기능·역할’ 더한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조성은 전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임

<참고사례>

- 뉴욕어린이박물관(CMA), 일본 사사야마어린이박물관, 벨기에 어린이기초예술원(ABC), 핀란드 아난탈로아트센터 등 유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공간/시설은 미래사회를 위한 창의인재 육성에 기여하려는 국가 정책으로서 문화예술교육 지원의 최근 주요 트렌드가 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서울시가 2010년 유아동 대상에 특화한 창작공간(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을 마련한데 이어 2014년 어린이·청소년 예술교육센터 10개소 조성계획을 수립, 2016년 ‘서서울예술교육센터’ 개관으로 국내 최초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조성한 바 있음
- 어린이·청소년을 중심으로 유아~노인까지 포함하는 생애주기별 보편적 문화활동 참여기반으로서 문화예술교육센터 역할 수요 확대
 - 문화예술교육 기회는 부모의 교육, 경제 수준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사교육에서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공공 지원체제로서 문화예술교육 공간 지원은 기본이라 할 수 있음
 - 안정적인 공간/시설 인프라 기반 위에 제공되는 문화예술교육은 일회적인 수동적 문화 체험을 넘어 지속가능한 자발적 문화소비역량(구매력)을 효과적으로 육성하는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음

- 이런 배경에서 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 센터조성을 통해 생애주기별 보편적 문화 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됨
 -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67-3 국민의 문화예술역량 강화’ 세부과제에서는 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조성 및 시범추진이 제시되어 있음
 - 영국의 Children’s Center⁶⁵⁾, 핀란드 문화예술교육센터⁶⁶⁾ 사례처럼 기존 문화기반 시설(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보다 작은 규모로 생활권역 내 도보로 매일 이용할 수 있고 단순 감상에서 벗어나 학교교육, 평생교육과 연계해 다양한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임
 - 생활권 내 문화예술교육 공간은 지역주민이 소통, 교류하는 문화정보의 허브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구상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교육 보편적 참여를 지원하는 하드웨어적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지역의 안정적인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프트웨어(프로그램), 휴먼웨어(예술가, 지역주민)의 참여와 경험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축적되도록 토대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임
 - 더불어 이러한 센터조성은 문화기반시설의 도시-비도시 지역 간 격차로 발생하는 문화예술 접근성에서의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 방향

- 생애주기별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기반으로서 전용 공간/시설 조성
 - 특히 어린이·청소년의 ‘예술적 놀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공간 모델 개발
 - 교육, 복지, 문화, 여가 등 다양한 영역의 수요를 담아내는 창조적 접근 기반 마련
 - 공간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존 학교,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안정적 지원 효과 제고
 - 지역의 물적·인적자원 발굴 및 활동 기반으로서 학교-지역사회 매개 역할 수행
- 인구 및 생활권역, 경제환경, 지역특색, 이용목적 등을 고려한 공간/시설 다각화
 - 대상별 특화된 성격과 기능의 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 차별화로 활용도 제고
 - 유/아동 및 노인 : 도보 이용 가능한 근거리 융복합형 센터
 - 청소년 및 성인 : 이동 편의성보다 이용 목적에 따른 특성화형 센터
 - 지역별 인구 분포 및 구성,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해 공간/시설 다양화

65) 영국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인 ‘Sure Start’ 지원과 연계하여 유/아동 및 청소년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 문화 예술 및 취미활동, 취업까지 지원하는 복합 커뮤니티문화센터라고 할 수 있다.

66) 핀란드 전역에는 약 800여개의 문화예술교육센터가 국가, 지자체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표적인 곳이 헬싱키에 위치한 아난말로 예술센터이다. 폐교를 활용해 상주 예술가 등을 운영하며 학교교육과 연계한 5x2 프로그램(초등), 지역 문화예술기관과 연계한 Cultural Course(중등) 등 다양한 융복합형 문화예술교육을 선도 확산하고 있다.

- 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모델 개발(연구)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 핀란드의 국가 주도형 예술교육센터, 일본의 폐교 활용사례⁶⁷⁾ 등을 참고로 우리만의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 및 운영모델 개발
 - 정부-지자체 간 센터 조성 및 운영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마련
 - 특히 지역의 예술가, 학부모가 센터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 중심 운영체계 마련
- 폐교, 유휴시설 리모델링 중심으로 신축 조성은 최소화하고 재정부담 경감
 - 전국 폐교 3,683개교 중 미활용폐교 408개교(2017.3월 기준) 우선 활용
 - 기타 민간의 유사기능시설 연계 활용 및 민간 소유 부지/시설 개발 시 공공기여 활성화

<서울시 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운영 사례>

1.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관악구 은천동 소재) : 소규모 특화형 커뮤니티예술센터 모델

- 주요대상 : 관악구내 거주하는 미취학 어린이~초등학생 (동반 학부모)
- 조성규모 및 방식 : 은천동사무소(2층) 리모델링(2010년 개관)
- 조성 및 운영 :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 주요 프로그램 : 예술가 창작작업을 지역 어린이와 함께 하는 <예술로 놀이터>, 소규모 어린이극 창작지원프로젝트 <예술로 상상극장>(방학 중 센터, 학기 중 지역 내 학교 및 유/아동시설 순회공연), 예술교육 기반 부모교육 <예술로 부모플러스>(연령별 프로그램 특화) 등

2.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은평구 응암동 소재) : 중규모 특화형 문화예술교육센터 모델

- 주요대상 : 서울 서북권내 초·중등학교 및 학생
- 조성규모 및 방식 : 서울시내 폐교(1호) 일부(5층 건물 1동) 리모델링(2014년 개관)
- 조성 및 운영 : 서울특별시교육청
- 주요 프로그램 : 창의영상/공연/음악/미술 등 4개 영역에 특화, 상시, 특색 및 별도(기획) 프로그램, 문화예술캠프, 교원 및 예술강사 직무연수 등 주로 학교교육 연계 지원
- ※ 서울시교육청 제2창의인성교육센터 성동구 마장동(동명초등학교 재 활용)에 2019년 개관

3. 서서울예술교육센터(양천구 신월동 소재) : 중규모 복합형 문화예술교육센터 모델

- 주요대상 : 서울 서남권 지역 초·중학교 및 학생, 지역주민
- 조성규모 및 방식 : 2003년 폐쇄된 김포가압장을 리모델링(2016년 개관)
- 조성 및 운영 :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 주요 프로그램 : "예술놀이" 콘텐츠 특화 프로그램 개발, '지역예술공동체' 육성 프로젝트 등
- ▶ 상주 예술가교사(TA) <Arts Lab>, 미디어아트 창작프로젝트, 지역커뮤니티 조성 등
-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예술교육센터 2호 강북구 미아동 신축 추진 중(2020년 개관 예정)

67) 일본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겪으면서 1990년대부터 폐교 자산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하여 현재 폐교를 재활용한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효고현 아와지시마에 있는 '노지마 스코라(scuola)', 고베시 '기타노 공방마을', 도쿄 아키하바라 '3331 Arts Chiyoda'(대안예술공간), IID(Ikejiri Institute of Design) 세타가야구 '만들기학교'(평생학습), 후쿠시마현 '니시아이즈 국제예술촌' 등 문화예술 기반 체험학습, 숙박, 특산물 가공·판매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재활용하고 있다. 대부분 민간단체가 재원을 투입해 시설 조성과 운영을 담당한다.

(2) 주요 사업 내용

- 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 센터 조성 관련 마스터플랜 연구개발 추진
 - 2018~2019년은 연구개발 진행을 통해 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센터의 각 지역 특성 고려 및 유형별 특성과 활용방안 등을 고려하되, 시설설립(공간조성) 뿐 아니라 향후 지속가능한 운영계획안을 망라한 중장기적 관점의 마스터플랜을 먼저 수립
 - 자치단체 행정구역별 인구현황 및 문화기반시설 기 조성현황, 그 외 지역별 사회, 경제, 문화적 특성 및 차별성에 대한 세밀한 분석 하에 접근되어야 할 것임
 - 마스터플랜에는 단순히 공간조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공간조성 이후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할 필요
- 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 센터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 상기 마스터 플랜 연구개발을 토대로, 2020년 이후 실제 공간 조성 계획을 실행
 - 실행계획에 따라 광역/기초 단위별 1-2곳씩을 선점하여 시범추진하고, 이후 중장기 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간조성 및 운영 확대를 모색
 - 센터 조성은 정부(문화체육관광부, 관련부처)-지자체(시·도, 교육청) 공동 추진 : 조성 예산은 국비-시·도비 매칭 조달, 조성 및 운영업무 지자체 추진
 - 복합센터, 특화센터 조성 유형별 역할, 기대효과 등 차별화 모색을 고려

<표 4-32> 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센터 유형 및 주요역할(안) 예시

구분	유형	주요역할	기대효과
복합센터 (광역형)	1) 신규 조성 (공공기여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 또는 리모델링 조성 • 복합문화예술교육센터로 중대형 규모 조성 및 개발 • 사업 개발, 운영모델 연구 • 융복합형 프로그램 개발 • 특화센터 지원 및 관리 • 전문인력 양성, 재교육 특화 • 광역문화재단 책임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문화기반시설 연계 산업효과(관광 및 직업군 개발 등 문화소비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예술가 일자리 확대 • 광역 문화예술교육 자원 발굴 및 생태계 조성
복합센터 (광역형)	2) 대학 연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캠퍼스, 인력 활용 • 권역별 특성화(대상, 콘텐츠) • 평생학습형 문화예술교육 특화(시민교육, 직업교육) • 전문인력 양성, 재교육 특화 • 민간(대학) 위탁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졸업생 취업 지원 • 예술가 일자리 확대 • 대학 시설자원 활용 • 조성, 운영비용 절감 • 교육/문화 전문성 확보
특화센터 (기초형)	1) 신규 조성 (공공기여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 또는 리모델링 조성 • 특화형 복합문화예술교육센터로 중소규모 조성 및 개발 • 구/군 1~2개 단위, 동/읍 5개 단위 기준 자원대상으로 조성 • 교육/문화시설 연계성을 포함한 자원네트워크 지원 및 관리 • 유/아동 및 청소년, 노인 특화 • 기초문화재단 책임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문화예술교육 자원 발굴 및 기초 생태계 조성 • 예술가 일자리 확대 • 학교-지역사회 매개 •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지원
	2) 교육/문화시설 연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부동산 개발 공공기여 활성화 또는 기존 교육/문화시설등 리모델링 지원 연계 • 평생학습형 문화예술교육 특화(시민교육, 직업교육) • 민간 위탁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 일자리 확대 • 조성, 운영비용 절감 • 교육/문화 전문성 확보 • 학교-지역사회 매개

- 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 협력체계 구축
 - 재정지원 및 운영관리 이원화로 지역의 자율권 강화(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 재정 공동부담(정부-지자체 매칭), 책임운영(지자체/문화재단) 또는 위탁운영(민간)
 - 지역 예술가, 학부모 등 시민이 기획, 진행, 평가에 참여하는 ‘자치운영위원회’ 활성화
 - 학교교육(교육청), 평생교육(교육진흥원) 분야와 교류 및 운영 협력
- 공공 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모델 개발
 - 국가 지원의 공공 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모델 개발(기본계획 수립연구)
 - 이용자 중심(대상별 특화형, 대상 융복합형) 센터 운영모델 개발(운영계획 연구)
 - 취미, 교양, 취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익사업 다각화로 이용률 및 재정자립도 제고

3) 추진 시 유의점

- 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 마스터플랜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개발을 선제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따른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공간조성 추진 및 실행계획 마련
 - 공간 조성의 경우 시설 설립 이후 운영비용이 클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고려한 중장기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먼저 구체화한 후 공간조성 관련 사업추진을 진행해야
 - 연차별, 지역별 수요와 조성 필요성(타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을 통한 구체적 종합 계획 수립 : 센터 성격 및 역할을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인구현황, 장기이용과제 등과 연계 기획이 필수적임
 - 공간 조성 및 이후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모색에 필수적인 예산과 비용의 효율성을 위해 민간투자 및 위탁운영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관점은 단일한 모델의 확산 적용이 아닌 대상 지역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유형을 발굴하는 관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음
 - 다만 민간 투자와 운영을 위탁하더라도 기본적인 센터 운영에 대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양한 지역 특성과 수요가 반영되면서도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의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중심 지역 문화예술공간 조성이라는 핵심 컨셉이 공통적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임
 - 문화예술과 무관한 상업시설, 혹은 민간 유사 시설/공간, 레저 및 유흥시설 등으로 운영 변질되지 않도록 공공성에 기반을 둔 설립목적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평가, 지자체 관리감독 등으로 함께 책임 관리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 기획단계 부터 관련 전문가, 운영주체, 시민 참여 보장
 - 공간 구성과 운영이 하나의 완결성을 갖도록 조성 기획부터 운영주체 참여 보장이 고려되어야 함. 이를 위해 운영단체의 조기 선정 및 공간조성 계획에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후 최소 5년 단위 책임운영을 보장해 운영 안정화 방안 모색
 - 지자체는 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 승인과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민간기관(문화재단) 및 민간단체는 센터 공간 조성 및 사업의 책임위탁운영(5년 단위 공모) 담당
 - 공간 설계 기획에서 실시설계, 공사, 감리 등 전 과정에 지역 예술가, 학부모, 학생 등 실제 이용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관련 TF, 위원회 등 설치 운영
- 타 문화기반시설과 기능 및 역할 차별화로 중복성 지양
 - 지역의 유희시설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설립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 기존 폐교 일부 활용해 조성되고 있는 지역 박물관, 미술관 등과 차별화 전략 마련

<예시>

- 생활문화센터 : 자발적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및 발표 기회 지원
- 문화예술교육센터 : 학교교육(유/아동 및 청소년), 평생교육(만19세 이상 성인)과 연계한 문화예술 최초 참여 및 학습기회 확대, 지역 문화공동체 육성 지원 허브 역할 수행

라.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운영체계 강화

1) 배경 및 목적

- 진흥원-광역센터 중심의 행정적 전달체계로 생활권 중심 수요 대응 한계
 - 현재 문화예술교육의 실질적인 추진체계는 중앙(진흥원)-광역센터(지역)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그간 최종수요자 관점에서의 실질적 현장수요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 수요중심으로 사업이 확대되어 옴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혜자의 환경과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임
 - 특히 현재 중앙(진흥원)-광역센터 중심으로 구성된 현재의 사업운영 및 추진체계는 중앙부처에서 결정된 사업을 받아 광역에서 실행하는 탑-다운(top-down)적 경직성이 농후한 소극적 전달체계이상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이로 인해 실제 지난 10여년 이상 예산과 수혜자 수의 양적 확대 성과에 대비, 공공지원으로 이뤄지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는 상당히 미흡한 상황임. 일례로,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최근 8년간 평균 8.8% 내외이고, 참여의향은 비경험자의 경우 `16년 17.4%로 `14년(20.8%)보다 오히려 감소
- 단년도 보조 사업 중심 운영에 따른 일상성 및 확장성 부족
 - 현재 진흥원과 광역센터는 매년 공모를 통한 단체, 강사 대상 보조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혜대상은 아동청소년과 소외계층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임
 - 그에 비해 인력 양성, 연구개발, 협의체 구축 등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기 위한 기반조성, 제반 여건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했음
 - 이로 인해 지원법 제정 이후 지난 12년간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교육 지원 정책은 그동안 민간 생태계가 정부의 공공지원에 의존적으로 굳어지는 한계가 노정됨
- 일상적 운영체계 구축 및 현장의 실질적 수요 대응을 통한 전 국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참여도 확대 및 정책 인지도 확산
 - 장기적 관점에서 최종수요자의 니즈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동네, 마을 등 생활권 단위까지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운영체계 기반 구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중앙-지역 간 사업운영체계의 혁신이 필수 불가결함
 - 이러한 접근은 궁극적으로 새 정부가 강조하는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문화예술의 일상성 의제의 실현의 선결조건일 수 있음.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상이한 특성과 환경적 여건을 고려한 자율적, 주체적 사업기획과 실행이 가능할 수 있는 운영체계 구축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임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 방향

- 지역별 여건과 정책 방향이 다름을 감안하여 지역주도성, 다양성을 원칙으로 추진
 - 중앙은 일원화된 방침이 아닌,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추진전략은 지자체별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함. 기본방향은 생활권 추진체계 구축과 생애주기별 다양한 대상의 접근성 확대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임
- 현재의 정책 추진체계 구조에 지역 밀착형 실행체계를 연결함으로써 생활권 단위까지 연결망 확보
 - 기초 및 생활권의 기존 인프라 자원의 적극 활용을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
 -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등 직접 경비보다는 프로그램 개발, 네트워크 형성, 유통망 구축 등 상시적, 지속적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간접 경비 중심 지원

(2) 주요 사업 내용

- 지역 밀착형 실행체계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그물망 구축 사업
 - 기초지자체 및 생활권 단위 민간 주체를 지원하되 세부 추진전략은 지역별 여건과 정책방향에 따라 자율적 설계로 추진
 - 지역별 지리적 규모, 문화예술 자원 현황,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권역 단위 거점기관 지정 방식도 검토 필요
 - 사업은 지역별로 기초지자체의 수요, 지역 내 연계 가능한 자원의 현황에 따라 권역기초 거점기관 지원 후 생활권 공간으로 확대 등 단계별로 추진하되, 생활권 중점 모델로 직접 추진도 가능⁶⁸⁾

68) 서울은 아동청소년예술교육센터 10개소 구축 예정으로 권역 중심 모델로 추진하거나, 기초문화재단이 25개 자치구 중 14개(56%) 설립되어 기초 중심 모델로 추진 가능할 수 있을 것임. 경기, 강원은 기초문화재단이 각각 42%(13개) 50%(9개)까지 설립되어 기초 중심 모델 추진 가능하며, 이미 광역-기초 간 협력 사업 및 협의회 운영 중임을 감안. 경기, 강원을 제외한 도 단위 지역은 지리적 범위 및 문화예술 자원의 편중으로 기초-생활권 단위 실행체계 구축은 어려울 수 있음. 권역별로 거점기관을 직접 지정,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대전, 광주 등은 기초재단 설치 현황 및 계획이 미비한 상황으로 광역센터가 기초 거점을 별도 지정 또는 직접 생활권 중점 모델로 운영하는 방안 모색(예: 광주 창의예술학교)

<표 4-33> 지역별 실행체계 구축 모델(안)

구분	기초 중심 모델	생활권 중점 모델	권역 중심 모델
지역	도·광역시 단위	광역시 단위	도 단위/* 서울시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 단위 연계 자원 풍부 인구 집중 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 단위 연계 자원 부족 인구 집중 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자원 편중 인구 분포 산재
추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기초 협력 운영 기초 단위 거점기관 지정 생활권 공간 지장연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지자체 직접 운영 생활권 공간 지장연계 운영 자체 기획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지자체 직접 운영 권역별 거점기관 지정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운영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 거점기관을 통한 생활권 공간의 밀착 관리 가능 주민 접근성 향상 및 지속적 참여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접근성 향상 및 지속적 참여 기대 지역 인력 발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원화된 소통체계로 안정적 운영 기대 소외지역 주민의 수요 부응 및 향유 기회 향상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권 소통, 운영체계 안정성 확보 어려움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등 유관기관 경쟁중복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등 유관기관 경쟁중복 우려 광역지자체 직접 지원에 따른 예산 투여 과다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역 단위 관리에 따른 주민 접근성, 이용도 불안정 광역지자체 직접 지원에 따른 예산 투여 과다 우려

- 그물망 구축 사업의 중점 지원대상은 청년층과 가족, 생애전환기 어르신 등 중장년층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17년 기준 아동청소년 및 소외계층 대상 사업은 전체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주민 대상 사업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참여율이 높아 전략적으로 청장년층 이상으로 대상층 확대 필요
- 지속 가능한 민간 생태계 구축을 위한 거점기관 및 생활권 공간 지원
 - 거점기관 및 생활권 단위 공간 지원을 위한 사업은 지역 내 공급과 수요를 연결하는 유통망 역할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
 - 지역 내 활동 가능한 인적 자원(단체, 강사)을 발굴하고 청·장년층의 접근성이 높은 수요처(주민자치센터, 문화기반시설, 카페 등)를 발굴하고 연결해 주는 역할임
 -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등 사업비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프로그램 개발, 인력 양성, 수요처 발굴, 협의체 구축 등 간접 지원 중심으로 추진
 - 단, 초기에는 거점기관의 인지도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나 기관의 역량에 따라 특화된 사업 모델 및 수익 모델 개발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생활권 공간도 예산 지원을 통해 탄생하면 지원 종료 시 몰락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기본적인 운영 요건과 역량을 갖춘 곳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유통망 역할을 위해서는 지역 내 인지도 확보가 필수적이며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수요처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함

- ‘포괄적 보조사업’ 본격 도입 혹은 단계적 전환을 통한 지자체별 자율적 사업 기획 여건 조성
 - 현행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편성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토요문화학교 지역 연계 사업을 “포괄보조금(‘17년 기준 총 290억 규모)”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자체별 그물망 사업과 기존 지원사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거점기관이나 생활권 공간의 지원은 기초지자체 대상 또는 민간단체 대상 직접 공모로 추진할 수 있음. 기초지자체 대상 공모는 예산 및 행정지원의 안정성이 보장되거나 활동의 경직성이 있을 수 있으며, 민간단체 공모 방식은 유연성과 다양성은 확보되나 예산 의존성 사업에 머물 수 있음
 - 지원방식은 광역기초지자체의 여건과 의지에 따라 설계하되, 지원과 관리의 범위를 민간 주체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지원기간은 2~3년 단위로 평가 및 재지정 방식을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연속 지원체제로 진행해야 함. 1년 단위 사업은 장기적 안목 없이 단기 실적 창출에만 머물 수 있음
- 지역중심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 본 사업의 핵심원칙으로 제시한 주체성과 다양성에 따라 지역별로 다양한 실험과 사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주체별 역할 관련 법제도 정비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행법상 “지역센터는 진흥원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한다”고 다소 간략하게 명기된 부분을 중앙-지역 간 역할로 구분함으로써 지역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지역센터가 단순히 중앙에서 결정한 사업을 ‘시행’하는 ‘수동적, 소극적인 주체’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을 전담하는 핵심기구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위상과 권한을 함께 부여할 수 있는 법제도 검토 및 정비 필요할 것이며, 중앙과 지역 간 역할 분담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되어 제시될 수 있음

<표 4-3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역할 분담(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단위 상호연계 협력망 구축운영 • 문화예술교육 지원협의회 운영 • 문화예술교육 정책 관련 학술 연구 및 조사 • 전문 인력 양성 및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관리 • 문화예술교육 원격교육시스템 및 정보망 구축 • 문화예술교육 관련 국제 협력 및 관련 사업 • 문화예술교육 선도 프로그램 개발운영 •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 •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문화예술교육 종합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 • 광역 내, 사군·구 단위 상호 협력망 구축운영 •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조사 • 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양성·배치 및 재교육 • 지역문화예술교육 자원·정보 관리체계 구축 •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평가 •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본 과제에서 제시한 사업과 관련한 역할은 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통한 지역센터의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 조정, 평가컨설팅 및 종합 성과관리를 담당하고, 지역센터는 거점기관 및 생활권 공간의 지정 및 관리, 거점기관이 미 지정된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기획·운영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제시할 수 있음
- 거점기관 및 생활권 공간은 공급, 수요 자원의 개발 및 연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하되, 특화 프로그램 개발, 실무협의회(수요처 관계자 포함)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

3) 추진 시 유의점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침 등 일원화된 조건을 탈피한 유연성과 자율성 확보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편성되면 연간 정례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일자리 실적 창출 등 단기적인 성과 창출에 머물 수 있음
 - 정형화된 방침과 실적 중심주의를 탈피하고 지자체별 여건과 정책 방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 추진방식도 일괄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의지와 여건을 갖춘 지자체를 우선 지원 하여 사업 모델과 우수 사례를 만들며 단계별로 확산하는 전략으로 추진해야 함
 -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기초지자체의 예산 매칭을 의무화했지만 사업 포기, 예산 매칭 지연 등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예산 의존성 사업 구조가 되지 않도록 정책적 설계 필요성
 - 초기 기반 형성 위해 직접 사업비(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가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생적 운영구조와 기반 조성을 위한 간접 지원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가 함께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음

- 거점기관 지원 시 기초지자체의 지방비 매칭, 조례 제정 등의 선결 요건을 제시하고, 거점기관의 조직(인력), 시스템 등 기본 요건에 대한 검증 후 선발함으로써 안정적인 체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음

<참고사례>

- 경기도 광명시는 2011년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자체 예산으로 광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음
- 경기도 성남시('16.6월)과 전남 목포시('17.4월)도 각각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음

●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유사중복 조정 및 협력방안 마련

- 주민자치센터는 `16년 말 기준 전국에 2,86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연간 운영 프로그램 중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64%(39,641개 중 25,323개)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부는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대학, 예술전문가 등과 연계하여 학교 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협의체를 `16년에 전국 178개 교육지원청 중 100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 평생교육 영역은 `16년까지 143개 기초지자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조례 제정 완료)되었으며 485개의 사·군·구 평생학습관 운영되고 있음. `13년부터 추진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행복학습센터)는 92개 기초지자체에 670개가 운영되고 있음
- 각 영역별로 기 형성된 협의회와 연계 또는 문화예술교육 실무협의회 운영 시 유관기관 관계자를 참여하도록 하여 서로 간 중복 방지 및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예술의 지역공헌 활성화

가. 생활예술 동아리 활성화

1) 배경 및 목적

- 우리 국민들의 ‘문화관련 동호회 참여 경험’은 지난 10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자료 : <2016 문화향수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p. 124

[그림 4-11] 문화관련 동호회 참여경험

- 우리 국민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사회적 관계’ 질이 매우 취약함
 - 2015년 OECD 발표 「더 나은 삶 지수」中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 OECD 평균은 7.2점인 반면, 우리나라는 거의 0점으로 나타남
- 생활예술 동아리활동은 다양한 소비구조를 가지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히 큼
 - 2016년 예술경영지원센터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평가」에 따르면 문화예술인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7천4백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2만 여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4-35> 문화예술인에게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단위: 억원, 명)

구분	산업분류명	지출액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강좌, 강습 등 교육비용	교육서비스	4,910	7,243	4,464	11,360.88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행사 관람비용	오락서비스	3,505	6,144	2,982	10,363.34
소계	합계	8,415	13,387	7,446	21,725.22

- 종합하면, 생활예술동아리 활동은 우리 국민들의 예술향수 증진, 사회적 관계망 및 공동체적 가치 확산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예술시장 및 예술계 발전의 주요 경제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 방향

- 생활예술 및 생활예술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 추진
 - 우리 국민들이 생활예술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에 생활예술 공감 캠페인을 전개하여 생활예술 동아리 및 애호인들의 활동기회를 확대

<사례: 영국 BBC 방송국의 'Get Creative' 캠페인>

- 영국민들의 생활예술 인식 제고와 참여 활동 증진을 위해 유명인들의 생활예술 활동 소개 및 일반 국민들의 생활예술 동아리활동 사례 및 콘텐츠를 TV, 라디오, 페이스북 등에 소개

-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지원 및 협력 추진체계 구축 지원
 - 지역별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 정비
 - 지역별 생활예술 교류 ·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생활예술 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계층 간 예술향수 격차 해소 및 사회병리적 문제 완화
 - 차상위 계층, (청년)장애인, 노인 등 사회, 경제적으로 생활예술동아리 활동이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여 사회, 경제적 소외계층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확대를 도모
 - 우울증, 집단 왕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활예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건강, 자존감, 사회성을 회복토록 함
 - 은퇴 고령인의 경우 사회적 관계 단절과 여가시간의 적절한 활용 부족 발생
 - 해외 이주민의 한국 사회 안착 어려움과 선주민과의 융합 문제 해소

<사례: 성남시 문화다양성 지원사업 사례(2012~2014)>

- 그림 생활예술 동아리가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미술 교육을 실시. 교육 과정에서 기존 동아리 회원과 공동 작품 전시회 개최. 교육 후 이주 여성들은 동아리 회원으로 가입, 지속적 활동 유지

- 생활예술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및 운영의 지속 지원
 - 생활예술 동아리들의 연습 및 발표, 그리고 모임 공간의 지속적 확대 및 운영 지원

<사례: '문화의집'의 지역 이관 후 쇠퇴 사례>

- 90년대 '문화의집'의 경우 지역 이관으로 전환 후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기능과 역할이 위축, 축소

- 문화예술교육-생활예술 동아리-도시 재생 등 영역 간 연계 체계 마련
 - 개인이 문화예술을 배우고(學), 익혀서(習), 실천할 수 있는(行)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활동 관계망을 구축하고 사적 취향활동이 공적인 사회활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활동 체계 마련이 필요
 - 새 정부 추진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에서 나타나는 외부 유입 예술가 공동체 및 문화로 인해 선주민 공동체와 문화가 쇠퇴하는 것을 방지

(2) 주요 사업 내용

- (가칭) '5500만 예술가' 캠페인
 - 매월 '문화가 있는 날' 생활예술 동아리 및 생활예술 애호인 누구나가 동네, 직장, 공공 공간, 문화기반시설 등 어디서든지 직접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행사를 지원
 - KBS 또는 EBS 등 공영방송과 연계한 생활예술 인식 공감 기획 캠페인과 공동 추진
- (가칭) '희망의 생활예술' 프로젝트 추진
 - 사회, 경제적 소외 지역 주민, 귀농/귀어/귀촌인, 청년 장애인, 은퇴 고령인 대상 생활예술 동아리활동 활동 지원
 - 국립 의료 또는 보건 기관, 예술치유 센터, 사회보호관찰소, 노인 데이케어센터 등 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생활예술 동아리 활동을 장려
 - 해외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하는 생활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문화다양성 사업과 연계 추진)
 - 교육/매개/활동지원은 예술가들이 '생활예술 촉매자' 역할을 담당토록 하여 예술가 고용기회를 창출(※ 예술인 복지재단 '예술가 파견 사업' 연계 추진)

- 생활권형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지속 지원
 - 생활문화센터는 생활예술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일종의 ‘사회간접 자본(SOC)’임
 - 향후 생활권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 또는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생활권형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운영을 지속 지원하여 생활예술 동아리들의 활동 거점 공간 확보와 운영을 지속 확대해 나감
 - 기존 문화마을 및 생활문화공동체 사업과 국토부 추진 도시재생 사업 연계
 - 새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에 추진한 문화마을 및 생활문화공동체사업을 연계하여 대상지 주민들의 생활예술 동아리활동을 지원
- 생활예술 지역 협력형 지원사업 추진
 - 공모방식을 통한 3년 약정 지원 사업 추진
 -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지역 생활예술 연합회, 미디어센터 등 지역 내 생활예술 담당 기관 간 협력체들의 협력 사업을 지원(1억 정액 지원)
 - 지원조건 : 3년 내 관련 조례 제정, 지역 내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교류활동, 지역 특성 생활예술 사업 시행(하드웨어 조성사업 제한)
- 전국 생활예술 동아리 축제의 지역 순회 개최
 - 공모방식을 통해 10월 3째 주 토요일 비수도권 지역에서 매년 순회 개최
 - 지원조건 : 관광형, 지역특산물 축제 등 지역 축제와 차별되는 전국 생활예술 동아리 참여 축제 개최에 한하여 지원

3) 추진 시 유의점

- 생활예술 동아리 직접지원은 자생성과 자발성 훼손 위험이 있으므로 지양해야 함
 - 생활예술 동아리 구성과 유지는 철저히 동아리 자체 의사결정과 회비부담으로 이루어져야 함
 - 장르 간 교류활동의 경우, 장르 연합회를 중심으로 자체 회원제와 회비납부로 운영. 이에 대한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사례: 우크렐레 연합회 주관 전국 행사 개최>

- 우크렐레 연합회가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동호회 또는 전문단체들이 회비 납부 또는 참가비 지급을 통해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다만, 사회, 경제적 소외층 또는 소외지역 생활예술 동아리활동은 사회적 목적 하에 지원
- 공공지원은 교류 및 협력 활동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효과적 지원 역할 구분 필요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지원 영역 구분을 통해 효율적 지원 체계 마련
 - 중앙정부는 지역 간 교류 및 협력활동, 부처 간 협력사업, 공간 조성 등을 지원
 - 지자체는 매개인력 지원, 동아리 연합축제, 동아리 협력네트워크 운영 등을 담당

<사례: 전북 '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 충북 '생활문화예술플랫폼'>

- 전북과 충북은 지역 자체적으로 동아리 매개 인력사업과 동아리 협력네트워크를 운영
- 생활예술의 지역 자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 협력형 사업 추진에 있어 기존 단체들의 기득권 강화와 전문예술단체들의 외형적 '생활예술 갈아타기' 현상 우려
 - 지역 내 생활예술사업이 기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생활예술 지원 또는 활동 단체 중심으로 제한되어 지역 내 생활예술 협력 네트워크 확장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 관련 기관들의 예산 독점 및 '나눠 먹기'가 우려됨
 - 전문 예술단체의 경우 기존 활동을 생활예술 활동으로 포장하여 실질적 생활예술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 우려됨

나. 지역특화 공공예술 및 사회예술 프로젝트 추진

1) 배경 및 목적

- 한국 공공예술 정책의 과거와 현재
 - 근대주의 예술이 독자적 영역으로 성장하면서 사적 영역과 시장예술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는 반성 아래 예술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개념과 제도로 발전하였음
 - 한국의 공공예술은 주로 미술장르와 연관해 기념비조각을 비롯해 건축물미술품과 기타 공공미술 프로젝트 중심으로 양적성장을 지속해왔음
- 공공예술의 제도적 문제점들
 -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에 비해 공적인 제도로서의 제 역할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에 직면해왔음
 - 기념비 조각의 상투적인 내용과 형식들은 미술비평의 대상에서 제외될 정도로 창작 영역에서는 관심 밖의 일이며, 건축물미술품 또한 거둬드는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들에 봉착해 있고, 새로운 공공미술 프로젝트들도 제도화 이후 10여년이 지나면서 시범사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공공예술의 지역적 특수성 제고
 - 이에 지역특화 공공예술 개념으로 공공예술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정책대안이 필요한 시점임
 - 지역특화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통하여 새로운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예술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관한 새로운 개념과 제도를 창출해야 함
- 사회예술 현상에 대한 비평과 법/제도적 차원의 접근
 - 공공예술의 대리/보충 체제로 등장하고 있는 사회예술 현상이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활성화 단계에 있음
 -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예술 현상들을 체계화하여 공공예술 개념과 함께 예술의 사회화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음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 방향

- 공공예술 영역 확장
 - 미술장르에 국한한 공공예술을 춤, 노래, 글, 연극, 영상 등 다양한 장르로 확장하여 미술만이 예술의 공공성을 지향하는 듯한 착시를 교정함

- 공공장소에서 공적재원으로 공공적 의제를 다루는 모든 장르의 예술을 공공예술로 규정하여 위의 개념적 오류를 수정함
- 이를 위하여 미술제도에 한정된 공공성 개념 및 제도를 여러 장르 예술에 적용 또는 준용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 대안 마련 필요
- 공공예술 제도의 문제점 개선
 - 건축물미술품법의 경우 소수 작가/업자 독점현상이 점점 심화하고 있어, 서울시의 경우 특정 작가가 국가 전체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10%에 근접하는 예산을 독식한 경우도 있음
 - 음성적인 뒷거래 또한 근절되지 않아 건축주와 예술가 사이의 갑을 관계 또한 여전한 것으로 파악됨
 - 작가공모가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예술노동 권리 유기현상 또한 심각한 문제도 부각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공공미술 제도개선 논의와 합의 도출을 유도하는 정책제안과 사업실행 필요함
- 지역특성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 지자체의 공공예술 프로젝트들이 지자체의 예술행정 방향이나 수준에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아 질적 수준 저하 및 투명성 제고에 문제점 노출
 - 또한 공공예술의 기본인 장소성과 역사성에 관한 고려가 떨어지는 작가주의적 접근과 비윤리적인 창작관행이 횡행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지역특성 강화 공공예술 전략 수집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필요
- 예술의 사회화 추진
 - 기존의 예술은 예술의 입장에서 사회를 비판하고 성찰하였지만, 공공예술은 공공의 관점에서 예술을 재구조화하는 작업임
 - 하지만 공공예술은 예술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예술가를 공공의 이해에 복무하는 생산자로 취급하여 예술가의 창의성 발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공공예술의 문제를 보완할 제도로써 공적재원을 투여한 예술의 사회화 사업 추진이 필요함

(2) 주요 사업 내용

- 공공예술 법/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사업
 - 기존에는 미술장르 중심의 조사연구에 그친 결과 여러 장르 예술의 사례 조사연구 미비한 상황이므로, 다양한 장르에 걸쳐 공공예술 프로젝트 사례를 조사연구하여 재조명하고 이를 법/제도와 연결하기 위해 <공공예술 법/제도 개선 조사연구 사업> 필요함
 - 기존의 공공적 재원 및 사업체계 안에서 좋은 사례로 발굴된 경우를 포함하여 개인 및 민간단체, 시민사회 영역의 프로젝트들을 폭넓게 수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 생활예술의 관점에서 주민참여 공동체예술을 공공예술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사회/주민 영역의 문화자원 발굴의 관점도 필요함
 - 미술장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공공예술에 대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제도 개선 및 마련을 추진함
 - 미술장르의 공공미술 개념을 타 장르로 이식하는 수준이 아니라 각 장르의 특성에 맞게 공공예술 개념 및 법/제도를 개선 및 마련하는 관점이 필요함
- 공공예술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실행 사업
 - 업체공모 체제에서 작가공모 체제로의 전환이 없이는 예술가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수준 높은 공공예술 창작 및 향유가 불가능하므로 ‘문화부 차원의 강도 높은 공공예술 법/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함, 그 일환으로 <공공예술 법/제도 개선 TFT> 구성 및 운영 필요
 - 예술창작 지원 일변도의 예술정책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주문자 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예술가의 창작 영역에서 출발하는 공공예술과 시민들의 향유권 차원에서 출발하는 공공예술이 조화와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문화부 주도 공공예술사업인 마을미술프로젝트 개선을 위하여, “①미술장르 중심 탈피, ②창작자 중심의 공모사업 개선, ③물질기반의 공공예술 일변도 탈피” 등 사업기조 및 체제 개편 필요
 - 공공예술이 제도화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예술계의 변방 취급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한 비평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공공예술 아카이브 및 비평 사업> 필요함
- 사회예술 프로젝트 시범사업
 - 사회(적)예술은 예술적 실천과 사회적 실천을 창의적으로 결합한 예술로서 공공예술이 예술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작가주의 예술에 매몰하는 경우를 대리/보완하는 개념으로서, 예술이 사회와 공존하거나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활동 일반을 가리키는 예술개념임

- 공공예술이 공적 재원의 분배를 주관하는 기관이나 기업 등이 주도권을 가진 사업이라면, 사회예술은 예술가와 시민/주민이 창의적인 협업으로 추진하는 민간주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술의 사회화 차원에서 창작중심의 예술가들에게 사회적 실천의 방법과 과정을 공유하게 하며, 사회의 예술화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실천적 역량을 예술 창의력과 결합 및 협업하도록 하는 사업
- 서울시의 경우 2017년 공모사업에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을 전제로 한 공모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술을 통한 창의적 해결”을 제시하거나, “서울을 바꾸는 예술 : 청년편(Y)” 사업으로 “① Y- 아이디어 : 서울/ 사회적 이슈와 변화를 고민하는 소규모 문화예술 프로젝트 및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시드머니 지원, ② Y- 메이커스 : 서울/ 사회문제에 대한 메이커적 접근, 기술 기반의 문화예술 분야 메이커 활동 지원, ③ Y- 프로젝트 : 청년예술인, 기획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사회이슈 개입, 또는 문제 해결형식의 문화예술 프로젝트 실행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 예술계에 존재하는 사회예술의 흐름에 주목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각 지역의 사회예술 사업들과 비평적 담론을 조사·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예술 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 검토

3) 추진 시 유의점

- 공공예술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사업
 - 공공미술 중심의 법/제도를 공공예술 개념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사연구 결과를 재검토 필요
 - 실질적인 개선과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천 대안 마련 필요
- 공공예술 제도 개선 사업
 - 업체공모를 작가공모로 개선하려는 노력은 문화부 차원에서 여러 부처간 협의를 거쳐 개선 가능한 방법과 방향 제시 필요, 특히 시민사회와 정치권과 연대한 사회적 공론화 필요
- 지역특성 기반 공공예술 조사연구 사업
 - 미술장르 중심의 공공예술 개념과 영역을 극복하기 위한 정보 생산이 핵심임
- 사회예술 프로젝트 시범사업
 -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제도가 본격화한 수준에 걸맞은 사회(적)예술 프로젝트 사업 설계 및 실행 필요

다. 지역별 대표 예술 축제 내실화

1) 배경 및 목적

- 지역별 예술 축제 양적 성장
 - 1990년대 이후 국가 차원의 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정책의 결과,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투여하는 지역별 예술 축제 추진 중
 - 비엔날레의 경우,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등과 같이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발하여 자리잡은 비엔날레를 비롯해, 창원조각비엔날레, 대구사진비엔날레, 청주공예비엔날레, 공주 자연미술비엔날레, 프로젝트대전(과학 예술), 강원비엔날레, 제주비엔날레, 전남수목화비엔날레(2018예정) 등 10억 이상의 국비/지방비 투여 국제미술행사 11개 추진
- 예술 축제의 질적 수준 문제
 - 지역별 예술 축제는 선출직 지자체장의 정무적 판단을 비롯해 의회의 정치적 이해관계, 예술 창작 및 기획 전문가들의 욕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공간임
 - 이들 예술 축제는 수준의 높낮이를 객관화할 수 없는 문화현상이므로 질적 수준 문제를 지표화 할 수는 없음
 - 그러나 다수의 예술 축제가 타성에 젖어 유사한 콘텐츠의 반복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정책 필요함
- 지역별 예술 축제의 차별화 및 균형발전 필요성 대두
 - 같은/비슷한 장르 예술 축제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차별화 하여 전국적으로 고르게 예술생태와 문화향유가 분포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함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 방향

- 지자체 예술행정의 전문성 제고
 - 지역별 예술 축제의 1차적인 문제는 예술행정의 비효율과 불투명에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부산비엔날레의 경우, 현직 예술가/교수를 집행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조직운영 문제와 예술행정의 불투명성 문제가 불거지고 예술감독과의 불화가 비윤리성의 문제로 불거지는 등 문제가 많았지만 연임에 이르는 등 비전문적인 예술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음

- 부산 이외의 많은 도시에서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예술행정의 전문성과 현장의 종사자들 사이의 괴리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나고 있음
- 이에 지자체 예술행정의 전문성 제고는 예술 축제 내실화의 첫걸음이자 완결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이므로 축제 운영 주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예산 안정성 담보
 - 예산확보가 관건인 대규모 예술 축제들이 존폐 위기에 서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경우 지자체의 정무적 판단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지역의 예술 역량이나 주민의 향유권과 동떨어진 예산 배치 발생
 - 따라서 장기간 지속한 예술 축제의 경우, 일몰제 등으로 불안정성을 키우지 말고 축제의 역사성을 토대로 예산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함
- 차별화 및 균형발전 추진
 - 기획의 전문성과 예산의 안정성을 전제로 차별화와 균형발전 두 축을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국가단위 정책사업 추진할 필요 있음

(2) 주요 사업 내용

- 예술 축제 조직 및 운영 체제 개혁
 - 예술 축제 추진체는 유형별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단법인, 사단법인, 조직위원회, 추진위원회 등 다양함. 문제는 이러한 추진체의 인사에 지자체의 정무적 판단이 강하게 작용하여 전문성 부재한 인사행정이 횡행하고 있음
 - 따라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지역 예술 축제의 추진방식에 민관협업 방식 도입이 필요한데, 기존의 재단 사무처/사무국이 전문성을 강화하여 정무적 판단에 좌지우지 하지 않을 안정적인 조직 구축이 필요함
 - 현재의 예술 축제 조직은 1-2년 단위 예술감독 체제로서 콘텐츠와 네트워크의 연속성 없이 해마다 새로운 인력, 추진방향 등으로 지속가능성 담보에 어려움
 - 조직 정비 및 민관협업 체제 구축을 위하여 공공과 민간의 행정 및 축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술 축제 조직 및 운영 컨설팅 사업>을 통하여 전면적인 조직 및 운영 체제 개혁을 유도해야 함
- 일몰제 전면 재검토 및 (가칭)<국가 브랜드 예술 축제 프로그램> 도입
 - 일몰제 전면 재검토 및 국가 브랜드 예술 축제 지원프로그램 도입은 지역 단위의 균형발전 토양 속에서 자라나서 제대로 자리잡은 축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 한국의 대표적인 지역 예술 축제인 광주비엔날레의 경우, 2013년부터 10억 이상 지원 7회 이상 배제 원칙을 적용하여, 규모 있는 국비지원이 어려워진 상태이며, 10억 미만으로 신청할 경우 타당성 검토하여 지원 가능한 상황임
 - 이는 행정이 정한 일방적인 원칙에 따라 지역의 대표 예술 축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로서, “일몰제 전면 재검토”를 통하여 공적 재원의 지속가능성 담보 요구가 전국각지에서 제기되고 있음
 - 예컨대, 광주비엔날레의 국비지원은 30% 규모였는데, 이마저도 일몰제 적용으로 어려운 형편인데, 차제에 문화부 차원의 입장 정리와 규제위원회에 문제제기, 기재부와 협의 업무협약 및 법제도 개선 필요함
 - 나아가 지역 예술 축제의 수준을 넘어 국가의 대표적인 문화브랜드로 자리잡은 예술 축제의 경우, (가칭)〈국가 브랜드 예술 축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예산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함
 - 예컨대, 1996년 문화부에서 세계적인 축제 육성을 위해 ‘문화관광축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던 외국 관광객 분산 효과 등 지역관광 콘텐츠의 확장에 기여한 것을 벤치마킹하여 브랜드형 예술축제 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난 20여년간 문화관광축제는 7회에 걸친 등급제도 개선과 3회의 지원제도 변경을 통해 현재의 4등급제와 차등 예산지원 제도를 도출하였는바, 그간 이루어진 등급산출 제도, 평가제도, 차등 지원제도 등을 〈국가 브랜드 예술 축제〉의 선정과 관리, 지원과 진흥을 위해 적극 참조할 필요가 있음
- 예술 축제 추진 특수법인 설립
- 기존의 예술 축제 추진체들은 대부분 지자체가 마련한 공적재원을 사단법인 형식의 민간 조직이 수행하는 것으로서, 해당 예술 축제의 추진이 조직의 존재근거가 아닌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예술 축제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와 조직의 운영을 위한 경비의 구분이 모호하여 결과적으로 축제 운영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형편임
 - 예술 축제 조직을 특수법인으로 독립시켜, 지자체의 예술행정 체제와 상생 관계 속에서 독립성과 예산 안정성을 기하여 지역별 예술 축제의 내실화를 추구해야 함
 - 이때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축제 추진체를 ‘고유 목적을 가진 특수법인’으로 독립시켜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함

- 지역별 예술 축제 모니터링 강화 : (가칭)〈예술축제컨퍼런스〉 개최
 - 예술 축제는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병행하여 보다 수준 높은 평가 기준을 세워야만 제대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음
 - 이를 위하여 예술 축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현장에서 이뤄지는 표피적인 방문, 설문, 인터뷰, 양적 평가 등의 방식을 탈피하여 이루어져야 함
 - 모니터링 결과를 공론장에 공표하고, 각 지역별 특수성을 살피되 전반적으로 질적 수준 향상을 모색하는 비평의 장으로, 문화부 주최 또는 후원의 (가칭)〈예술축제컨퍼런스〉 개최가 요구됨
 - 컨퍼런스는 예술행정과 기획자, 비평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의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공론장으로 마련하며, 이를 비평의 장으로 확장해야 함

3) 추진 시 유의점

- 예술 축제 조직 및 운영 체제 개혁
 - 기존의 평가 체계와 별도로 운영하면 중복 부담이 있으므로, 평가와 컨설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마련하고, 조직 및 운영 체제 개혁을 유도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며, 이때 지역적 특수성 및 기존의 이해관계와 상충할 수 있으므로 섬세한 접근 필요
- 일몰제 전면 재검토 및 (가칭)〈국가 브랜드 예술 축제 지원 프로그램〉 검토
 - 지역의 대표적인 예술 브랜드로 성장하여 국가 단위 브랜드를 형성한 경우 국가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국가 브랜드 예술 축제에 대한 정의와 범위 등을 위한 공론장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추진해야 함
- 예술 축제 추진 특수법인 설립
 - 10억원 내외의 소규모 국제 예술행사의 경우, 독립적인 운영 체제를 마련하면, 오히려 운영체제의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적정 규모에 관한 판단 필요
- 〈예술축제컨퍼런스〉 개최
 - 지역 예술 축제를 공론장으로 이끌어내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장으로 작동하도록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유도

라. 지역문학관 운영 활성화

1) 배경 및 목적

- 문학진흥법 제정(공포 2016.2.3/ 시행 2016.8.4.)에 따라 문학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
- 특히 문학진흥법에서는 공·사립문학관의 등록에 관한 조항을 두어 문학관 등록제를 도입(제21조)하였으며, 등록한 문학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0조)
- 전국 105개소에 이르는 지역문학관은 그 성격과 기능이 매우 다양하여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정의하기 어려움
 - 문학관이라는 명칭 외에도 문학촌, 기념관, 문학의집 등 다양
 - 예컨대 기념관(만해기념관, 박경리기념관), 문학촌(김유정문학촌), 문학공원(박경리문학공원), 문학의 집(문학의 집 서울, 제주문학의 집), 박물관(삼성출판박물관, 한국시집박물관), 문화관(토지문화관), 마을(백담사만해마을, 황순원소나기마을) 등
-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문학진흥법」 이 제정, 시행되면서 문학관의 법적 정의가 규정되었으며, 설립과 운영에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었음

"문학관"이란 문학관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홍보·교육하는 시설로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문학진흥법 제2조 제5호)

- 한편 문학진흥법 제16조에서의 문학관 구분에서는 국립문학관, 공립문학관, 사립문학관의 3종만 제시하고 있을 뿐 '지역문학관'에 대한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나 국립문학관을 제외한 공립문학관과 사립문학관을 통칭하는 용어 '지역문학관'을 상정해 볼 수 있음
- 지역문학관은 향후에도 지속 건립이 예상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건립 자체보다 현존 문학관의 운영 활성화라 할 수 있음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 방향

- 지역문화관 지원 정책은 문화진흥법의 제정 목적인 ‘문화 진흥’이라는 거시적 목표와 관련하여 지역문화관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정립하고, 지역문화관이 실제로 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지역문화관의 운영 활성화를 고려하여 지역문화관 지원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문화 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의 추진 : 원천 콘텐츠로서 문화 유산의 보존이 잘 이루어져야 당대의 문화, 다른 예술, 문화콘텐츠 산업이 발전할 수 있으므로 지역문화관은 문화 장르나 지역, 작가 등 개별 문화관마다의 특색 있는 주제를 기반으로 문화 자료를 수집, 보존하는 데 필요한 역량과 여건을 갖추 수 있도록 공간 조성, 설비 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운용 등을 직접 지원
- 둘째, 문화 진흥 정책과 문화관 지원 정책의 영역을 구분하되 상호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 문화 진흥 정책은 창작 지원 정책과 향유 지원 정책으로 대별되는 바 작가 레지던시를 통한 창작 지원, 지역주민의 문화 창작 및 감상 활동을 통한 향유 지원으로 지역문화관을 지역에서 문화 진흥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셋째, 건립에서 운영, 사업(프로그램)에 이르는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정립하여 정책의 추진 : 지역문화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건립비 일부 보조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향후에는 건립단계의 건립비 지원은 물론 문화 자료 공간 및 설비 시스템 구축 지원, 문화관 전문인력 운용 및 연수 지원,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 넷째, 지역문화관 운영의 자율성과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정책의 추진 : 지역문화관은 비영리기관으로서 경제적 자생력이 매우 취약하므로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지역문화관 운영 컨설팅을 통해 그러한 자생력을 갖추고, 나아가 지역문화관들 교류와 협력을 통해 운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2) 주요 사업 내용

- 시설 및 자료 관리 지원 방안
 - 지역문학관의 핵심 기능은 문학관 자료를 수집, 관리하는 데 있으며, 개별 문학관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할 때 자료 관리 설비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
 - 예시 사업을 제시해 보면, 권역별 지역문학관 공동 수장고 운영, 지역문학관 자료 보존·관리 설비 지원, 지역문학관 소장 자료 DB 구축 지원, 문학 창작공간(레지던시형) 조성 및 운영 지원, 지역문학관 연계 문학 유적지 정비 지원 등이 있음
- 문학관 전문인력 운용 활성화 지원
 - 문학 자료 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문학관 전문인력이 없으면 지역문학관의 문학 전문시설로서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움
 - 2017년부터 박물관 학예인력 지원제도를 참조한 문학관 전문인력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점검을 통해 향후 안정적 확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대부분의 문학관에서 문학관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 연수 지원 등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도서관 상주작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문학관 상주작가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함
- 문학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지원
 - 지역문학관에서는 상설전시를 중심으로 기획전시, 작은 문학 축제, 백일장, 문학영화제, 작가 초청 강연회 등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2017년 도입한 개별 문학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물론 두 개 문학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업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사업도 필요함
 - 그 외에도 지역문학관 연계 문학기행, 지역문학관 자료 출판 지원 사업도 향후 도입할 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음
- 문학관 사이의 네트워킹 활성화 지원
 - 국내외 지역문학관 사이의 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함
 - 지역문학관 공동 전시나 지역문학관 종사자 연수 프로그램, 문학관 연구 활성화 관련 학술행사나 출판 지원이 대표적 사업이 될 수 있음

3) 추진 시 유의점

- 문학진흥법에 의하면 등록된 문학관에 한정하여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학진흥법에 의한 문학관 등록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국립한국문학관 설립 시 지역문학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국립한국문학관의 역할에 대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립한국문학관이 개관하면, 지역문학관 활성화에도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국립한국문학관에서는 지역문학관 자료 보존/관리 지원, 지역문학관 특별전시 프로그램 기획 및 보급, 전국 문학관 자료 통합 DB 구축, 지역문학관 소장 귀중본 복각판 제작·보급 지원, 문학관 전문인력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협력 지원사업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임
-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문학관이 문학 창작과 향유의 거점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별 문학관이나 문학관 지원 정책에서 유의해야 함
 - 그러한 방향성 속에서 문학 자료 전시와 출판을 통한 문학 대중화, 작가 레지던시를 통한 창작 산실 및 작가 교류의 장, 지역주민 대상 문학 창작과 감상 교육을 통한 문학 전문 생활문화센터로 기능할 할 수 있을 것임

제4절 예술시장 합리화 및 내실화

1 예술시장 선순환 기반조성

가. 예술시장 투명성 제고

1) 배경 및 목적

- 예술시장의 공급 및 수요 실태 파악에 필요한 자료 부족
 - 공연예술실태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예술인실태조사, 문화향수실태조사, 미술시장실태조사 등 기존 통계자료가 해당 조사 분야 내 거시통계 위주로 공표되고 있어, 전체 시장 및 장르별 공급과 수요 실태파악에 필요한 통계 체계 개선 필요
- 거래 투명성을 전제로 한 시장 신뢰 회복 필요
 - 스태프들의 임금체불로 인한 공연 취소⁶⁹⁾, 미술품 위작 논란⁷⁰⁾ 등 시장 불투명성 논란 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자연스러운 수요가 아니라 공공 부문의 공급이 예술창작을 견인해온 상황에서 시장의 불투명성은 소비시장 위축, 해외시장 경쟁력 저해의 악순환으로 이어짐
 - * (공연) '08년~'14년 공연 관람률은 변동이 없으나 공연장 37% 증가, 종사자 29% 증가
 - * (미술) 전업작가 약 5만명, 연평균 발표작 106만점(추정) 대비 판매량 26만점(공급의 2.5%)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09~2015), 2009~2015 공연예술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15), 2016년 예술정책관 업무계획
- 예술시장 정보 부족으로 투자 등 민간 자금 유입 한계
 -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으며, 누가 버는지 알 수 없고,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알 수 없다⁷¹⁾는 문제의식이 전체 시장 상황을 대변함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 방향

- 현행 실태조사 개선 및 장르별 추가 실태 파악
 - 현행 실태조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지표를 공급 및 수요, 창작-유통-소비-향유의 가치사슬 관점에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으며, 장르별 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세부 지표 역시 보완이 필요함

69) http://art.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9/2017061900986.html

7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08/02000000000AKR201606080013000005.HTML>

71) 예술경영지원센터(2015), 예술산업 미래전략 포럼 자료집

- 정보 제공 주체에게 시장정보 구축 필요성 환기
 - 정보 제공이 궁극적으로 예술시장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임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
 - 실태조사는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진단하는 목적으로, 통합전산망의 경우 산업통계로 활용하여 소비자가 다양한 작품을 선택하고, 투자자가 시장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됨
 - 제작규모가 큰 프로덕션의 경우 다양한 제작 및 투자 파트너 모집이 필수이므로 통합전산망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가 투자자에 전송되는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기획제작자 스스로 기획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수익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됨

(2) 주요 사업 내용

- 장르별 실태조사 시행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중 개별 법에 의해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있는 분야를 제외하면 크게 공연, 미술 분야로 압축됨
 - 공연 분야의 경우, 기존 실태조사 및 공연전산망에서 연극·뮤지컬·무용·발레·클래식·오페라·국악·복합 등 8개 세부 장르로 구분하여 통계를 산출하고 있으며, 미술 분야의 경우, 실태조사에서 한국화·서양화·판화·사진·조각 및 설치·미디어아트·현대 공예·전통 회화·골동품·목기 등 10개 세부 장르로 구분하고 있음
 - 장르별 실태조사는 시장규모별 및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2~3년 주기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바, 공연 시장 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뮤지컬⁷²⁾의 경우 정책 수요에 따라 2회(2008년, 2015년) 실태조사가 시행된 바 있으며 산업현황(창제작, 유통, 교육, 해외진출 현황 등), 제작 실태, 향유 및 관람실태 등이 조사됨
 - 현행 실태조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지표를 공급 및 수요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장르별 실태조사에서는 작품 규모별 평균 제작비, 배우 개런티, 스태프 인건비 등 시장 진단에 필요한 지표 추가 생산
- 장르별 백서 발간
 - 콘텐츠산업의 경우, 콘텐츠산업 백서 외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방송영상 등 개별 장르별 백서가 발행되고 있으나 예술분야는 문화예술정책백서로만 통합 발행되고 있음

72) 2015년 기준, 공연 장르별 티켓 판매액 규모는 ▲뮤지컬 1,975억 원(54.4%), ▲연극 729억 원(20.1%), ▲양악 321억 원(8.8%), ▲복합 99억 원(2.7%), ▲국악 90억 원(2.5%), ▲무용 70억 원(1.9%), ▲오페라 63억 원(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 공연예술실태조사.

- 장르별 실태조사와 더불어 장르별 백서를 제작해 정책의 추진 전략, 예산 추이, 주요 추진사업의 성과, 법제도 현황, 국내외 산업 동향 등을 리뷰하고 세부 정책을 정비하는 근거로 활용
- 법제도를 통한 통합전산망 활성화 방안 마련
 - 예술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및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이 구축되었으나, 정보 전송주체인 기획제작사, 화랑 등의 참여율은 아직 저조한 상태⁷³⁾
 - 정보 제공 주체의 자발적인 동의 외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해 통합전산망 참여 근거 마련이 필요한 바, 공연전산망의 경우 관객수 등 정보 제공 의무 조항을 중심으로 공연법 개정 연구가 진행된 바 있음
 - 향후 통합전산망이 고도화되어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예매율, 티켓 매출액 등이 실시간으로 집계된다면 업계 내 마케팅 자료로서의 활용 가치가 제고될 것임

3) 추진 시 유의점

- 조사결과의 신뢰도 제고 위한 보완책 마련
 - 법적 추진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추가로 장르별 실태조사가 시행될 경우 조사 참여 독려가 쉽지 않기 때문에 법적 근거 마련 이전에는 조사 참여 독려를 위해 장르별 유관 협회 및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함
 - 또한 기존 실태조사에서 재편이 필요한 지표 설계 및 분석을 위해 통계작성 기관간 협의체 구성 역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통합전산망이 활성화 될 경우, 전산망을 통해 집계할 수 있는 실적 지표는 실태조사에서 제외시키는 등 조사 참여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
- 통합전산망 법제화 추진 전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 절차 마련
 - 통합전산망의 통계 공개·제공의 수위와 방법(예: 예매율 랭킹 등 박스오피스 공개 이외에도 창작/유망 공연작품 별도 소개 코너 마련 등)의 경우, 비상업 장르나 소규모 창작 단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화된 통계 산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정보 제공 주체를 전체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연 매출액 기준 등으로 제한할 것인지 등 현재 마련된 공연법 개정안의 현장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함
 - 더불어 영화입장권통합전산망 추진 초기 시행했던 상영신고 면제 등 업계의 진흥에 필요한 유인책(예: 공연투자 크라우드 펀드 조성, 마케팅 지원, 시장분석 정보 제공 등)도 향후 구체적으로 설계되어야 함

73)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은 2015년 4월부터 본격 운영되었으며, 2017년 1월부터 인터파크 등 주요 예매처와 시스템이 연동된 상태로 데이터 전송기관 수는 총 32개임 (http://www.kopis.or.kr/por/cs/kopis/info/csInfo.do?menuId=MNU_000105). 한편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은 시스템은 국내 경매회사를 통해 거래된 약 3만건의 미술작품 가격정보와 실시간 경매 거래 정보 및 시장 동향 등을 수집하고 있음(<https://www.k-artmarket.kr/>)

나. 예술 관객 패널 조사 정례화

1) 배경 및 목적

- 패널조사는 주어진 조사대상 전체를 재현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표본을 선정하고, 해당 표본을 다년간 추적하는 종단조사 방법으로서, 조사대상의 동태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과 (관찰이 어려운 개인의 이질적 특성을 통제하는 등) 계량분석의 엄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임
- 이러한 이유로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경제, 사회, 교육과 관련한 정책결정의 근거 마련을 위해 다양한 패널조사를 실행하고 있는바, 미국의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1968), 영국의 BHPS(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1991), 독일의 GSOEP(German Socioeconomic Panel, 1984) 등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⁷⁴⁾

<표 4-36> 국내 주요 패널조사 현황

통계명	작성기관	통계분야	시작연도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	1998년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	2004년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업경영	2005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국민연금공단	복지	2005년
고령화인구패널조사	한국고용정보원	복지	2006년
사업체패널조사	한국노동연구원	기업경영	200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기업경영	2006년
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	고용	2006년
한국복지패널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복지	2006년
대졸자작업이동경로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	2006년
한국교육종단조사(패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	2006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	2007년
청년패널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	2007년
재정패널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가계경제	2008년
여성관리자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고용	2008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교육	2010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교육	2013년

74) <<교수패널조사의 중요성과 발전방향>>(전종우, 2008),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VI:사업보고서>>(이종원, 2015)

-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고용, 교육, 복지, 여성 등의 분야에서 패널조사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예술정책과 관련한 창작자 또는 향유자를 대상으로 한 패널조사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예술관객의 향유 습관이나 예술관련 활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는지를 추적하고, 이러한 예술관객의 특성이 여가 생활이나 사회적 자본, 미래 계획 등과 어떠한 관련을 맺는지 등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산출하여 보다 엄밀한 정책개발의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 방향

-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성과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산출
 - 예술관객 패널조사에서는 나름의 특성을 가진 관객군을 대상으로 특정 시기의 정책성과와 관련한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각 관객군의 활동이나 특성이 변화하는 양상을 다각적으로 포착할 수 있음
 - 이러한 패널조사는 상당한 비용과 에너지가 드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설계 필요
- 패널조사 결과를 활용한 맞춤형 향유지원 정책 개발
 - 또한 예술관객의 그룹별로 장기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예술시장에서 관객군별 소비행동과 소비태도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관객의 관람시간, 빈도, 선호 장르 등에 따라 전시·공연 프로그램을 최적화 할 수 있고, 향유확대를 위한 직접 지원 및 간접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축적된 자료들은 창작자와 향유자, 정책 입안자 모두에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성과 평가 및 신규사업 개발을 위한 근거 도출 차원에서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함

(2) 패널조사 주요 사업 내용

- 대표성 있는 표본 구성
 - 연령대, 성별, 지역, 직업 등을 고려하여 약 100명 규모의 표본 추출(주요 가구조사패널의 경우 약 5천 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하지만, 본 조사는 그러한 규모의 조사가 필요한 내용은 아님)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등에 대해서도 장르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

- 예술관객 패널조사(3년 단위)

- 작은 표본수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설문지를 정교화한 후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

<표 4-37> 예술관객 패널조사 개요(안)

통계명칭	예술관객 패널조사
작성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주기	3년
작성목적	예술관객의 예술 향유, 예술 교육, 생활예술 활동 등의 실태를 연령대, 성별, 지역, 직업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개인추적 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예술 향유 및 예술 창작 지원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 축적
작성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방식 : 표본조사 - 조사단위 : 개인 - 조사범위 : 연령대, 성별, 지역, 직업 등을 고려하여 약 100명 규모 표본 추출 - 조사항목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술향유 : 향유 장르, 횟수, 관람 동기, 만족도 등 2) 예술교육 : 교육 참여 의향, 경험, 만족도 등 3) 생활예술 : 활동 빈도, 내용, 만족도 등 4) 여가생활 : 선호하는 여가생활, 삶의 질 등 5) 사회자본 : 공동체성, 사회적 소속감, 신뢰감 등 6) 미래계획 : 향후 직업적, 경제적 계획 등
특징	- 조사방법 : 면접자게식/타게식 병행

- 특정 시점에서 예술관객의 동일 집단 내부, 또는 상이한 집단 간에 어떠한 유사성과 차이점이 보이는지를 확인하고, 3년 단위 반복 조사를 통해서 특정 연령집단의 예술 향유 활동의 횟수, 종류, 선호도, 영향 등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추적하여 확인

- 예술관객 패널조사 데이터 환류체계 구축

- 데이터 구축 : 매회 조사결과에 대한 데이터 클리닝 및 가중치 산출작업을 통해 최종 데이터를 확정하여 통합 데이터 DB 구축
- 데이터 공개 : 가공 및 검증을 완료한 최종 데이터를 학술 연구, 시장 조사, 정책 개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반에 공개함
- 데이터 확산 : 조사결과의 주요 내용을 정리·분석하여 가독성이 높은 보고서와 통계 브리프의 형태로 발간
- 데이터 활용 :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관객개발 프로그램 및 향유지원 사업 개발(예: 초등학교 저학년 패널들은 대부분 예술향유 활동이 방과 후 시간과 주말에 집중되는 데, 특히 주말의 경우 부모님의 직업군에 따라 예술향유 활동의 횟수와 시간이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예상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프로그램 진행 시간이나 내용 등을 가족단위 특성에 맞게 기획·개발)

3) 추진 시 유의점

- 패널을 대상으로 한 개인 추적조사는 세심한 관리가 관건임
 - 패널조사는 다른 조사에 비해 응답부담과 작성비용이 크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조사의 체계적 관리와 자료의 효과적인 활용이 중요함⁷⁵⁾
 - 특히 확보된 패널이 탈퇴할 경우 패널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패널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바, 이를 위해서 경제적 보상과 심리적 보상, 프라이버시 우려와 불편함 해소, 그리고 조사 주체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체계적인 자료 관리와 분석을 위한 전담 조직 필요
 - 추진 방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패널조사는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데이터 활용을 통한 성과평가나 신규사업 개발을 통해서 가치를 발휘하는 것임
 - 따라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패널 자료수집과 추적, 분석과 관리를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자료수집, 수집된 자료의 처리, 자료의 심층적인 분석, 지속적인 자료 관리 및 활용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관리조직이 필요할 것임

75) <<공공부문 패널조사 효율화 방안>>(2010.05.25.)

다. 예술시장 관련 법/제도 개선

1) 배경 및 목적

- 소액다건식 직접지원 외 예술의 산업적 발전에 필요한 지원방식 다변화 필요
 - 현재까지의 공적 지원은 주로 예술 창작 지원과 국민 향수 증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예술분야에서도 제품 및 서비스 상품화, 유통망 개척,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면서 시장 영역을 통한 지원 방식의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음⁷⁶⁾
- 디지털시대 예술 부가상품 시장 확대를 위한 저작권 가이드라인 필요성 증대
 - NT Live, Exhibition on Screen 등 예술콘텐츠를 영상화하여 제공하는 서비스가 해외에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국내의 경우 콘텐츠 유통 수요가 있어도 저작권 침해나 불법복제가 우려되어 2차적 저작물 활용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이 어려운 실정임
- 청탁금지법 시행 및 국정농단 사태로 기업의 문화예술 소비심리 위축
 - 한국메세나협회가 진행한 「2016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23.8%가 청탁금지법으로 문화예술 지원 지출을 축소하거나 중단했다고 응답해 기업과 예술계가 문화예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방안이 필요한 시기임을 확인할 수 있음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 방향

- ‘예술산업’에 관한 독자적인 진흥 법률⁷⁷⁾ 필요성 검토
 - 예술의 산업적 발전과 유통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은 과거 여러 차례 논의되어 왔으며 문체부 주도로 최근 2년간 관련 세부 법령(안)까지 연구되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블랙리스트 청산 등의 논의가 시급하기 때문에 최근 관련 논의가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76) 문화체육관광부(2016), 예술산업 고부가가치 방안 마련 계획(안)

77) 2015년에는 「예술의 산업화를 위한 법·제도 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년에는 「예술산업 진흥을 위한 법령 제정 방안 연구(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독자적인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검토된 바 있음. 2016년 연구에서는 예술산업을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대중문화예술산업을 제외하여 예술산업의 범주를 정의하고자 했음

- 예술에 대한 산업적 접근의 거부감, 예술산업에 대한 범주 규정, 정책의 대상 수 및 시장이 협소하다는 등에 대한 쟁점이 여전히 유효함에도 창업 및 투·융자 지원, 시장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환경 조성 등 기존 법체계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새로운 정책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독자적인 진흥 법률 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예술시장 확대를 위한 저작권 가이드라인 정비
 - 과거 저작권 관련 법제도는 디지털기술의 발달 및 새로운 복사기기의 보급 확대로 저작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주로 정비⁷⁸⁾되었으나 2차적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미비해 이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
- 기업의 문화예술 소비 활성화 방안 마련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일환으로 개인의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가 연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항목으로 신설⁷⁹⁾되며 개인의 문화예술 소비 활성화가 기대됨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문화예술 후원에 위축된 기업이 문화소비의 주체로 거듭나기까지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만을 기대하기 쉽지 않으므로 관련 법제도 도입 검토

(2) 주요 사업 내용

- 예술산업에 관한 독자적인 진흥법안 제정
 - 산업구조 차원에서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는 예술분야의 경우, 일차적으로 간접적 지원 방식으로 예술기업의 비용 감축을 위한 기반 조성과 산업 종사자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정책이 필수적인바,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문화산업진흥법 역시 문화예술진흥법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진흥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그간 문화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는바, 예술분야 창업 기업의 경우 그동안 문화산업 및 콘텐츠산업 관련 법 체계 안에서 일부 지원의 근거를 확보하였으나 대규모 산업에 맞추어져 있는 제반 제도가 소규모 사업자 중심의 예술분야에 적절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많았음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예술 비즈니스 모델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콘텐츠산업에 비해서도 훨씬 더 고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창업 단계별 제반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지원의 법·제도적 근거가 필요
 - 또한 예술 창업의 성장에 기반이 될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따른 모태조합에 예술산업 계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법안 정비가 필요함

78) 양혜원(2014). 문화예술분야 저작권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개선 방안 연구

79) 기획재정부(2017년). 2017년 세법개정안. '18년 7월 지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공제율은 30%로 적용

-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 공연분야 가치평가 모형이 개발 중('17년 12월 완료 예정)에 있으며 (주)SK는 사회적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성과인센티브⁸⁰⁾ 평가모형을 도입함. 전자는 예술분야 특화형 프로젝트 투자 모형에, 후자는 기업 투자 모형에 적용해볼 수 있음

<표 4-38> 「예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구성

장	내용
제2장 예술산업의 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산업의 창업 지원 • 전문인력의 양성 • 예술기획전문회사 지원 • 예술산업의 투자활성화 • 예술부가상품의 활성화 • 예술용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 •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 지식재산권기반 정책 • 공동구매·공동판매 등을 위한 협동조합 지원 • 예술산업통합전산망 구축 및 운영 • 실태조사
제3장 공정한 거래질서 및 예술소비자 권익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거래질서의 조성 • 예술가에 대한 불공정행위의 금지 • 예술사업자 간의 불공정행위 • 예술소비자 보호정책 • 청약철회 • 예술소비자 권익침해 계약의 금지 • 예술소비자보호지침 • 분쟁조정

* 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2016). 예술산업 진흥을 위한 법령 제정 방안 연구.(일부발췌)

● 예술 부가상품 개발을 위한 저작권 가이드라인 제시

- OSMU(One-Source Multi-Use)와 디지털시대에 하나의 공연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되면, 향후 공연의 영상화뿐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출판 등 다양한 장르에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작자는 사전에 창작자와 2차적 저작물과 관련한 권리 관계를 계약서에 명기할 필요가 있음(2차적저작물작성권)
- 또한 공연의 홍보, 프로모션, 기록 등을 위해 공연실황을 촬영, 영상화하고 이를 복제, 발행, 배포, 전송하거나 방송국 등을 통해 방영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전송하거나 하는 등의 활동 역시 사전협의와 계약서에 명시가 필요한 부분임(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등)

80) 2017 사회성과인센티브 소개 자료, 사회적기업이 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하여 평가한 결과에 기반하여 제공되는 인센티브임. 사회 문제 해결 정도와 사회 발전 기여도의 측정·평가는 시장 가격기구를 적용하고 보수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2015년 44개 사회적 기업이 104억 원(평균 2.4억)의 사회성과 창출(27억 원 인센티브로 지급), 2016년 93개 사회적 기업이 201억 원(평균 2.2억)의 사회성과를 창출해 냈다고 밝힘

- 그러나 공연에 국내 시장 실정에 맞는 저작권료 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방송계나 라이브뷰잉이 발달한 일본 등 해외시장 사례를 참고하여 2차적저작물작성권, 부가상품 제작 등과 관련한 내용을 포괄하는 표준계약서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방송영상분야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제작사에 몰아주는 특례조항이 있고, 음악의 경우에는 저작권위탁 등이 가능한 데 비해, 공연의 경우 초기 저작협상사례나 절차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바, 음악계 사례처럼 저작위탁을 통한 신탁계약이 가능하도록 예술분야 저작신탁단체 발족도 검토해볼 수 있음
- 시각분야의 경우 표준계약서 마련부터 이루어져야하며, 국제 협력 프로젝트 추진 시 해외 제작사 및 저작권자와의 접촉과 협의 업무를 신탁단체가 위임하는 방향도 검토가 필요함
-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한 조세 감면 제도 확대
 - 2014년부터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업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16년 인증기업은 9개로 아직까지 후원 활성화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를 통한 홍보 효과 외에 기업들의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인증 혜택, 즉 벤처기업이나 지식재산경영기업 인증제도에서 제공하는 금전 혜택까지 포함하여 유인요소를 확실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⁸¹⁾
 - 또한 문화접대비 제도 외 기업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훈련비와 예술기부금 지출액 10%를 세액공제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 역시 적극 검토가 필요함

3) 추진 시 유의점

- ‘예술산업’ 진흥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추진
 - 예술의 산업적 발전을 위해 별도의 진흥 체계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들이 축적되고 있는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법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 도입 등을 단계적으로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단, 지난 정부에서 준비된 ‘예술산업진흥법’(가칭)의 경우, 해당 범주가 공연, 미술의 두 분야이나 서로간의 주요 속성이나 유통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 고려할 사항이 존재하는바, 향후 현장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법안의 구조 및 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 후 추진이 필요함
- 예술과 기업의 전략적 협업을 위해 세제 지원 혜택 외 성공사례 발굴·확산 필요
 - 재무회계, 홍보마케팅 등 기업이 가진 전문성을 ‘프로보노’의 형태로 예술단체에 제공하고, 예술단체는 기업 직원들의 창의적인 사고와 조직문화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작업을 교환하는 등 일방적인 기부와 수혜를 넘어선 협력사례 발굴 및 확산 필요

81)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15339>

라. 예술과 기업의 시너지 강화

1) 배경 및 목적

- 그간 예술지원정책은 전통적인 예술창작 및 향유 지원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어 새로운 신규 예술 수요의 발굴 및 예술영역의 확장 잠재력에는 관심이 부족했음
 - 전통적 예술시장의 활성화만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신규 예술인력의 과다공급 현상을 해결하기 어려우며, 예술창작-유통-향유라는 협소한 가치사슬을 통해 예술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존재함
- 전통적인 의미의 예술관객 확대(audience development) 전략을 넘어서 기업 및 영리부문의 신규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창출하고 예술인과 예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매개 및 연계해주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함
 - 기업 및 영리 부문이 가진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예술 또는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해결·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예술에 대한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예술적 해법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영리부문에 적합한 예술인 및 예술을 매칭시킴으로써 예술과 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
- 또한 예술을 통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유형과 방법이 제한적이고, 참여유인도 부재한바, 기업이 예술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에 보다 다양한 방법과 채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확산방안 모색 필요
 -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주요기업의 사회공헌 규모는 약 2조 9천억 원에 이르지만, 문화예술체육 분야 비율은 16.4%⁸²⁾, 한국메세나협회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는 약 2천억 원(497개 기업)에 그치고 있음⁸³⁾
 -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목적으로는 사회공헌전략의 수단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사회공헌활동의 내용은 문화예술 단체 순수지원(51.2%),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동 지원 또는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지원(20%),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6.9%), 문화예술 시설 운영(6.6%), 예술영재 지원 활동(2.8%)로 주로 문화예술단체나 사업에 대한 순수 지원활동에 집중되어 있음

82) 전국경제인연합회(2016), 2016년 주요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83) 한국메세나협회(2017), 한국메세나협회 2016년도 연차보고서.

2) 추진 방향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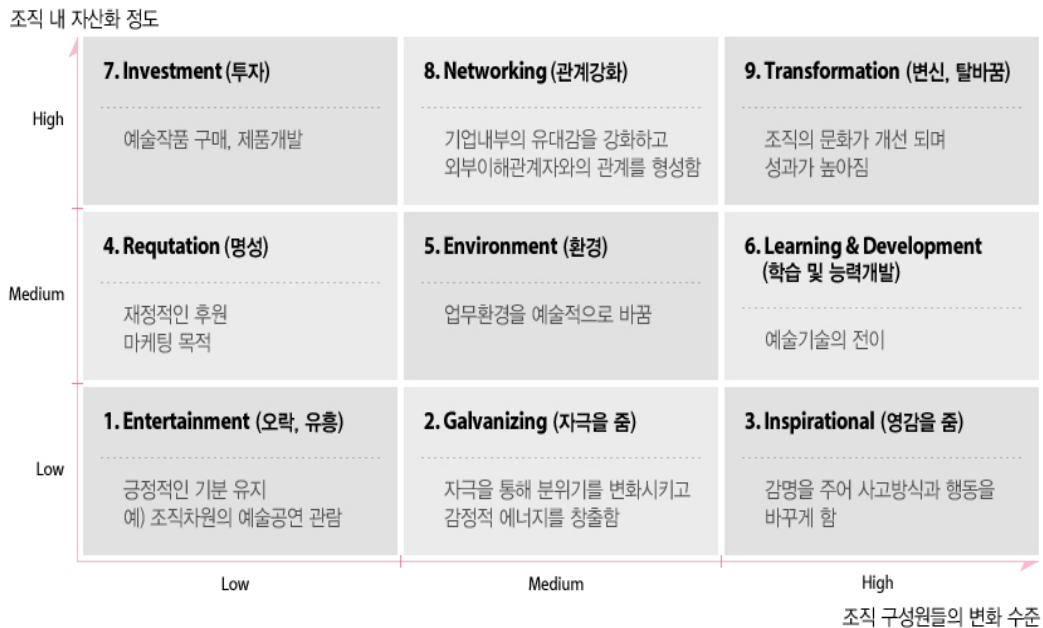
(1) 추진 방향

- ‘예술인파견지원’을 통한 예술적 개입(artistic intervention)의 확대로 예술시장 영역의 확장
 -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의 확대 및 질적 내실화를 통해 예술적 해법을 필요로 하는 기업·기관에 예술인·단체를 파견하고 이들의 ‘예술적 개입’을 통해 기업의 이슈와 문제 해결, 혁신과 변화의 창출 유도
 - 전통적인 예술애호가 관객 외에, 예술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기업·기관·단체를 새로운 예술수요자로 편입시킴으로써, 예술적 개입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인력과 신규시장의 창출
- 예술을 통한 기업 사회공헌활동 확산 지원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확보 및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추구
 - 기업의 예술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에 있어 단순한 예술지원 외에, 예술과 기업의 협업에 기반한 가치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의 형태와 채널을 다양화하는 데 정책 목표를 정위

(2) 주요 사업 내용

-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의 사업구조 다양화 및 예술적 개입을 위한 전문적 에이전시 인큐베이팅 지원
 -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구조를 ‘협업 트랙’과 ‘전문 트랙’으로 구분하여, 기업과 예술인의 수요 적합성을 제고하고 신규 시장의 창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협업트랙’은 기존에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이 지향해온 바와 같이 장르적 한계를 뛰어넘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예술과 기업의 협업을 통한 이슈 해결 및 혁신 유도
 - ‘전문트랙’은 기업이 요구하는 특정수요(조직문화 개선, 업무혁신, 인적자원 개발, 상품디자인, 홍보마케팅, 사회공헌 등)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예술적 개입 전문단체’를 인큐베이팅 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
 - ‘예술적 개입’의 전문시장이 창출될 수 있도록 예술가-기업을 연결하는 전문 에이전시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 하고, 예술적 개입 프로젝트 효과성의 중장기적 성격을 고려하여 1년 단위 프로젝트 외에 2~3년간 진행하는 중장기 프로젝트의 시행

- 타 부처 협업 확대를 통한 예술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제고
 - 현재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메세나협회 외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타 부처·타 분야와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확대함으로써 잠재적 수요자 적극 발굴
- 예술적 개입에 대한 다양한 사례 및 방법론의 개발과 확산
 - 국내외 다양한 예술적 개입의 성공·실패사례집 발간, 우수사례에 대한 표창, 성공적인 예술적 개입방법론에 대한 발굴과 공유·확산이 필수적임



* 출처: 김석진(2017)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예술인의 성장과 복지의 가능성. 웹진문화관광. 예술을 통한 기업 사회공헌활동(CSR) 확산 지원. 이 표는 Giovanni Shiuma가 제시한 예술기반 프로젝트 가치유형을 적용하여 구성한 것임

[그림 4-12] 예술적 개입을 통한 가치창출 유형

- 예술을 통한 기업 사회공헌활동 실태 파악 및 지원체계 구축
 - 예술을 통한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애로사항 진단을 위한 연구 진행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메세나협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다원화되어 있는 기업 문화예술 사회공헌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예술-기업의 매칭시스템(matching system) 고도화
 - 예술가와 기업이 상호간 수요를 적절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예술가-기업의 매칭시스템을 체계화·고도화
 - 장기적으로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과 연계하여 매칭시스템의 효율성과 신뢰성 확보

3) 추진 시 유의점

- 매출액 및 부가가치 창출 등 단기적 성과에 대한 조급증 경계
 - 기업으로의 예술인 파견 시에 매출액 증가나 부가가치 창출 등 단기적·계량적 성과만을 강조할 경우 제도적 취지가 몰각될 여지가 크므로 적절한 예술적 개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업 및 혁신 과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단순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나 예술인 복지사업으로의 변질·왜곡 방지
 -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을 단순한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만 보거나, 예술인 복지사업으로만 볼 경우 수혜자 수 증대에만 급급하여 사업의 변질·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음

2 예술계 자생력 강화

가. 예술가/단체 기업가 정신 역량 강화

1) 배경 및 목적

- 예술 기업가정신(Art Entrepreneurship)은 예술제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거나 기존의 가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및 정신을 일컫는 것으로서, 최근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는 이 개념을 주로 예술가 개인 및 단체의 커리어 관리, 작품 포지셔닝, 관객개발 전략 등을 포괄하는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지칭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음
- 따라서 예술분야에서 기업가정신은 궁극적으로 예술의 가치사슬 단계(기획, 창·제작, 유통·배급, 향유·소비, 재투자)의 선순환적 개념을 이해하는 가운데, 각 단계별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혁신 활동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미국에서는 2010년대 들어 여러 예술 대학 내에 ‘예술 기업가정신’을 전담하는 학과 혹은 강의가 개설되고 있는 추세이나, 예술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우리의 경우 그 필요성은 훨씬 높는데 비해 예술가 역량 강화, 커리어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이나 시스템 및 사회적 인식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그 사회적 가치와 함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주목도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예술계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예술가/단체들이 스스로 자신이 지닌 역량에 대해 점검하고, 자율성을 가진 경력 개발과 커리어관리, 작품 활동을 위한 포지셔닝과 브랜딩 등을 실행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사업이 필요함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 방향

- 공공 서비스로 시작하되 정규대학 커리큘럼의 변화 모색 병행
 - 필요 및 수요는 있으나 관련 교육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예술가와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을 통한 교육 및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점진적으로 교육 수요를 확인 및 확대해나가는 방식이 문제의식 해결의 현실적 방안임

- 하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정규대학(원)의 예술관련 학과 커리큘럼에 ‘예술 기업가정신’과 같은 과목을 필수과정으로 설립하여 예술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과 고민의 기회를 정규화하고, 예비 예술가들의 인식개선 및 역량구축을 제도화해나가야 함
- 수도권을 넘어서 지역 예술가/단체의 기업가정신 제고 필요
 - 수도권 중심 예술 콘텐츠들의 지역유통, 예술가/단체들의 지역 이주 현상 등으로 예술활동의 지역 확산이 가속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은 예술 역량 강화, 커리어 관리 등 기업가정신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지역의 예술가/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을 지원하여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특화 자원을 활용한 예술 프로젝트, 협업 경험 등을 활성화하여 지역예술을 진흥하고 지역의 잠재관광객 확보 및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역시 도모할 수 있음
- 공급자와 수요자의 만남의 장을 통한 상호이해 및 사회적 공감 확산
 - 예술의 공급자(예술가/단체)와 수요자(소비자/향유자) 사이의 직접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상호간의 관계 개선과 예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확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예술 기업가정신은 단순히 공급자 측면에서의 변화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수요자들의 인식 전환 및 기대감 고취 등을 통해서만 장기적인 발전의 토양을 확보할 수 있음

(2) 주요 사업 내용

- ‘예술 기업가정신’을 위한 교육·멘토링·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 현재 유사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협업을 통해 예술 기업가정신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등록’ 과정과 연계하는 등 많은 예술계 종사자들이 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함
 - 예술가 커리어 관리, 국내외 예술시장의 이해, 관객개발, 작품의 유통과 배급, 비즈니스 모델 개발, 문화예술 해외교류, 저작권 관리 및 재원조성 등 예술가/단체의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핵심적인 이슈에 대한 교육·멘토링·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 일회적인 강좌 프로그램이 아니라 입문/심화 과정 및 교육/실습 과정 등을 단계적으로 구성하여 지속적인 역량 제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단계별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후 관리 및 인력 풀(pool) 확보에 주력해야 함

- ‘예술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대학과목 개설 지원
 - 예비 예술가/단체의 기업가정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예술관련 학과 내에 예술 기업가정신 관련 과목 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예술 시장의 지형 및 현황에 기반하여 예술 활동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예술대학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해나가야 할 것임
 - 주요 예술대학과의 MOU를 체결하고 대학 내 창업지원단의 문화 분야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의 방식을 개척해나가야 하며, 구체적인 단위에서는 특강 지원 및 커리큘럼 개발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식을 도입해야 함
- 지역 예술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형’ 교육 실시
 - 지역 예술가들이 자신의 지역 시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게 돕는 예술 기업가정신 교육을 광역 문화재단을 거점으로 하여 추진함
 - 광역별로 1년에 두 차례씩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여 약 2개월간의 교육 및 기획안 수립, 약 4개월간의 프로젝트 실습을 통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새로운 예술 활동 및 실천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함
 - 연말에는 주요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발표하는 라운드 테이블 및 부스 전시 등을 포함하는 예술-기업가 포럼(Artist-Entrepreneur Forum)을 개최하여 성과 확산
- 사회적 공감확대를 위한 예술설명회 및 지역이슈 협업 사업 추진
 - 찾아가는 예술설명회 개최 : 지역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 중인 예술작품에 대해 개인 예술가나 예술 단체가 관련 공연 및 전시 등에 대해 학교, 문화센터 등을 직접 찾아가 기획, 제작 의도와 과정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함
 - 예술기반 지역 이슈 협업 사업 : 지역사회의 이슈를 예술가와 지역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이를 예술작품으로 형상화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상호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예술가/단체는 시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도전을, 향유자는 예술가 및 작품에 대한 친근한 이해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획득함

3) 추진 시 유의점

- 협업 중심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주관자의 코디네이팅 능력이 중요
 - 예술경영지원센터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협업, 문체부와 예술대학 및 광역문화재단과의 협업, 예술가/단체와 지역민들 사이의 협업 등 예술 기업가정신 개발을 위해서는 일방향적인 사업이 아닌 협업 중심 사업이 필요하며, 따라서 개별 사업 주관자의 코디네이팅 능력이 핵심적인 성공요인이 될 것임
- 전통적인 강의 형식이 아닌 실습과 프로젝트를 통한 체험형 교육이 필요함
 - 예술활동의 경제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경험이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순 강의 형식만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체험형 교육에 방점을 두어 추진

나. 예술분야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1) 배경 및 목적

- 비즈니스 모델 개념의 확산 및 예술분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⁸⁴⁾
 - 비즈니스 모델 개념은 1990년대 이후 대중화된 IT 기술, 특히 인터넷과 e-비즈니스의 출현으로 기존의 산업지형이 지각변동을 겪게 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는바, 이와 발을 맞추어 1990년대 후반부터 유럽과 북미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하는 예술 스타트업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대를 전후하여 주목할 만한 예술 스타트업의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음
 - 최근 약 40여 개의 예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예술경영지원센터, 2017), 예술 스타트업 종사자들은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스타트업 운영 시 가장 중요한 점(1위: 66.7%)이자 매우 어려운 점(2위: 28.6%)이라고 응답했음
 - 하지만 현재까지 예술 스타트업을 포함하여 예술산업과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따라서 관련 정책 역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
- 사회적 경제의 예술분야 적용에 대한 관심 확산
 - 이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비단 예술 스타트업만이 아니라 예술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조되고 있음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은 협동조합, 공제조합, 비영리조직 등과 함께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담론의 중심을 이루는 개념으로, 근자에 들어 기존의 경제활동 주체나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관심을 받고 있음⁸⁵⁾
 - 국내에서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후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역사적으로는 사회적경제 조직 중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조직형태는 협동조합이며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은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것임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방향

- 예술분야 사회적 경제의 폭발적 성장세를 지속 및 촉진하기 위한 지향점 설정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은 유럽 등에서도 예술 분야 조직의 지배적인 형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들은 이윤 외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자립을 추구하는 조직 운영형태라는 측면에서 예술 분야 자생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84) 정중은(2017) ‘예술의 산업화’ 지원정책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연구, 예술경영 연구, 제43집

85) 허은영(2011) 문화예술 분야 협동조합 제도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초기인 2007년 3개에 불과했으나 2017년 현재 총 1,776개 사회적 기업 중 210개(약 11.8%)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회적협동조합은 54개로 총 744개 사회적 협동조합 중 7.3%에 달함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 예술 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과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으로 인한 재정적 도움 등으로 인해 예술 분야 사회적기업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속 가능한 조직 안정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⁸⁶⁾
- 예술 스타트업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단계별·유형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도입’
 - 지금까지 예술 스타트업은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 체계 속에서 함께 다뤄진 경우가 많았으나, 예술 스타트업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5.2%가 독자적인 예술 스타트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⁸⁷⁾
 - 따라서 수요는 있으나 정책 대상으로 파악되지 않았던 예술 스타트업들을 집중 지원하고 관련 생태계를 빠른 시간 안에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일종의 직접 지원의 형태로서, 세세한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걸음마단계에 있는 예술 스타트업들에게 신속히 자양분을 공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가치사슬 단계 및 창업 단계별, 그리고 비즈니스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도입이 효과적일 것임

(2) 주요 사업 내용

- 예술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 예술 분야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과 사업수익 창출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것에 대해 상당함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여전히 낯선 영역일 뿐 아니라 기존의 관련 활동 전문가들 중에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가 없기 때문으로 사료됨
 - 지속가능한 예술 분야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이 등장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지식과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경험을 함께 갖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을 가진 활동가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분야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실제 현장에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운영 전문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설립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숙지해야할 내용들이 있음

86)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2015),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및 공공구매 진출사례조사

87) 정중은(2016) 예술분야 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통한 스타트업 지원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를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며, 실제로 수행해볼 수 있는 실습형 컨설팅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명목으로 맞춤형 경영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정보와 지식 공유,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바, 보다 심화된 수준의 지원정책이 필요

● 예술 창업 단계별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 준영리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보다, 투자 유치를 핵심적인 성공 지표로 삼는 예술 스타트업들은 훨씬 더 경쟁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바, 창업단계별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중인 예비창업자, 사업을 막 시작한 초기창업자, 어느 정도 경험을 갖춘 창업성장단계 기업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표 4-39> 예술창업 단계별 멘토링 프로그램 체계

구분	지원 대상	프로그램	주요 내용
피봇팅 트랙	예비 창업자	예술창업 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창업을 위한 기본 관심 충족 및 동기부여를 위한 강연, 커넥팅 프로그램 • 고관여자를 위한 정규 아카데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창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 중인 예비 창업자 		
프로토타이핑 트랙	창업 초기 단계	테크네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디어 현실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프로그램 • 3~4개월 동안 비즈니스 모델 검토, 시제품 제작, 데모데이 참가 기회 제공 • 시제품 제작비 제공(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사업을 시작한 초기 창업자 • 2년 이내 예술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트랙	창업 성장 단계	예술산업 혁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 촉진을 위한 멘토링, 펀딩, 네트워킹을 결합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민간 엑셀러레이터와 연계하여 투자 지원(정부투자: 최대 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직,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프로토타입 구현 아이디어 및 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는 창작자 		

* 출처: 정종은(2016) 예술분야 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통한 스타트업 지원 방안 연구

● 예술분야 비즈니스 모델 지원을 위한 예술창업 멘토단 운영

- 이와 같은 멘토링 프로그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한 예술가나 기획자들만이 아니라, 예술분야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전국의 많은 개인 예술가나 예술 단체 등이 ‘특정 멘토링 프로그램’의 범주 바깥에서도 접근가능한 상담, 컨설팅 등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늘리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멘토단 운영이 가장 효과적임

<표 4-40> 예술창업 멘토단 상설 운영 프로그램 체계

구분	역할	역할
기술멘토	전임멘토(3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플랫폼 개발 등 IT 기술 융합 관련 멘토링 IT 업계와의 네트워킹 지원
	원포인트 멘토(7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강이나 1:1 상담소 등을 위한 멘토 풀
예술멘토	전임멘토(3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 스타트업의 상품 및 서비스 개선 멘토링 예술계와의 네트워킹 지원
	원포인트 멘토(7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강이나 1:1 상담소 등을 위한 멘토 풀
창업멘토	전임멘토(3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BM 피봇팅, 마케팅, 펀딩 전략 등 멘토링 일반 스타트업계 및 투자자 네트워킹
	원포인트 멘토 (7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강이나 1:1 상담소 등을 위한 멘토 풀

* 출처: 정종은(2016) 예술분야 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통한 스타트업 지원 방안 연구

3) 추진 시 유의점

- 예술분야/조직/비즈니스 모델의 다양성 이해 필수
 - 문학, 시각예술처럼 개인 단위로 예술활동이 이뤄지는 장르가 있는 반면 연극, 무용, 음악 등처럼 집단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장르가 있음
 - 집단적 예술활동이 이뤄지는 장르 내에서도 오케스트라, 발레단 등처럼 예술 인력을 내부화하는 조직이 있는가 하면, 뮤지컬, 오페라의 경우처럼 프로젝트(작품)별로 외부노동시장에서 예술인력을 조달하는 경우가 있음
 - 예술관련 조직에서도 창작·실연 등 예술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예술단 외에도 공연 기획, 예술인 매니지먼트 등 매개 활동을 업무로 삼는 조직도 있으며, 설립 주체, 자금 조달방식, 법적 형태 등에 따라 조직의 유형도 다양하고 따라서 채택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도 다양함
 - 이러한 다양성을 이해하는 가운데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예술 분야 ‘성과’의 특수성 이해 필수
 - 새로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스타트업의 설립을 지원할 경우 관련 ‘성과’를 매출이나 투자 유치 등에서 뽑는 경우가 있으나 ‘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지표가 필요함
 - ‘예술성’과 ‘대중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노력에 맞는 지표 고민이 필요

다. 예술분야 전후방 연관산업 육성

1) 배경 및 목적

- 생활예술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예술관련 상품 활성화에 따라 ‘예술시장/예술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술 생태계 가치사슬의 원활한 작동 및 선순환구조 조성을 위해 전후방 연관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함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예술 창작에 필요한 용품 시장(후방 연관산업)과 예술활동의 결과물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상품 시장(전방 연관산업)에 대한 관리 및 육성은 물론 체계적인 산업 현황파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술시장 관련 실태조사들은 전후방 연관산업 부분을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생산되지 못하고 있음⁸⁸⁾
- 표준산업분류(9차, 2008년)에 따르면, 문화예술은 크게 공연예술, 시각예술, 어문예술, 대중문화예술로 분류되지만 예술의 장르별 세부산업, 창·제작을 위한 용품과 파생상품에 대한 세부 산업 분류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임⁸⁹⁾
- 따라서 예술계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예술활동을 둘러싼 가치사슬의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현황파악 및 시장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적 육성 사업이 필요함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 방향

- 정기적인 현황 파악 및 정보 확산
 - 아직까지 제대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관련 현황 통계 등이 제대로 산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후방 연관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어려움
 - 따라서 예술 분야별로 용품이나 파생 상품의 종류 등을 분류하고 이를 등록하기 위한 관리망의 조성이 필요하며, 정기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공개하고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산업 현황 분석 및 시장 조사를 용이케 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라 할 수 있음

88) 예술시장 조사설계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5)

89) 예술의 국민경제적 위상과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산업연구원, 2017)

- 전후방 연관산업과 예술시장 가치사슬간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 및 상호 발전
 - 예술용품이나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분석 및 관련 지원정책의 도입은 중국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가치사슬 단계인 예술가/단체의 창작여건을 개선하는 데 정향될 필요가 있음
 - 즉 후방 연관산업의 경우, 창·제작에 필요한 재료(용품)의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데 기여하여야 하며, 용품산업과 예술가/단체의 직접 연결을 통해 보다 쉽게 예술용품이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까지 나아가야 함
 - 또한 예술작품을 파생상품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전방 연관산업의 경우, 예술 애호가 시장을 넘어서 일반 소비자들을 예술가들의 작업과 매칭, 연결시켜 줌으로써 예술 창작 활동을 다각화하고 예술가의 활동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2) 주요 사업 내용

[후방 연관산업/예술용품]

- 예술용품통합마켓 설립 및 운영(온오프라인)
 - 한국예술용품통합마켓(가칭) 설립을 통해 예술용품관련 업체의 사업체 등록과 예술 분야별 물품 등록을 통해 용품시장의 현황 파악 및 시장 조사를 위한 통로로 활용
 - 온라인 마켓에서는 예술가/단체 및 일반 소비자의 필요물품 등록을 통해 수요 및 잠재적인 수요 파악을 실행하는 동시에 예술용품 관련 업체의 데이터 파악을 통해 공급자에 관한 현황 분석을 실행할 수 있으며 양자간의 매칭을 통한 거래 촉진도 가능함(오프라인에서는 주말 부스 운영 등을 통해서 상설은 아니지만 실제로 대면할 수 있는 장을 마련)
 - 국내 용품시장 규모 및 수입품 의존도 등을 확인하고, 수요가 확대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예술용품 분야 파악 역시 가능하며, 구매자 평가를 통해 우수용품판매업체를 선정하여 국내외 유통 시 세제 혜택 및 홍보, 자금대출 등의 직·간접적 지원 제공
- 예술 장르별 용품시장 백서 발간(매년) 및 산업통계 출간(3년)
 - 예술용품통합마켓에서 확인된 예술용품 공급, 수요 및 판매에 관한 자료를 매년 간략하게 정리하여 예술용품시장 백서를 발간함으로써 후방 연관산업 지원을 위한 데이터를 축적할 필요가 있음
 - 수입품판매 및 구매대행을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수요가 특별히 많거나 적은 용품산업에 관해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이 가능함
 - 이러한 백서를 바탕으로 매 3년마다 공급자 및 수요자 관련 데이터를 종합하고 추세 분석을 실행하며, 용품업체 전수 조사를 통해 용품산업의 시장 규모, 종사자 수, 기업체 수 등을 담은 용품산업 통계를 발간함

[전방 연관산업/파생상품]

- 전방산업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 및 Guide Book 제공
 - 예술분야별 예술가/단체(작품), 파생상품 생산가능 항목, 유관 기업체 등의 정보를 등록하여 상품제작을 원하는 기업과 예술가/단체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네트워킹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예술가/단체들에게는 각 분야의 파생가능한 상품의 리스트형식의 가이드북을 제시하여 예술활동에 있어 미리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체에게는 관련 활동을 진행한 예술가들의 작품 가이드북 배포를 통해 제작을 원하는 상품의 다양한 예술작품 소스를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힘
- ‘예술 파생상품 공모전’ 개최 및 개발 지원
 - 예술가/단체, 일반인이 직접 만든 예술 파생상품 공모전을 매년 개최하여 3단계 심사(1단계: 온라인 시민 투표 심사/2단계: 오프라인 전문가 프리젠테이션 심사/3단계: 전문가-시민 투표)를 통해 우수 제작자의 예술상품 개발 및 홍보 등을 지원하고, 가능성 있는 예술상품을 발굴 및 육성하는 계기로 삼음
 - 3단계 심사는 공모전의 피날레로서 축제 형식으로 진행하며, 1, 2단계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들이 직접 만든 예술상품의 기획과정부터 제작과정까지를 공개하고 전시하는 형태로 시민(축제 관람객)과 심사위원(전문가)의 평가를 종합하여 제품의 실용성, 매력도 등을 평가 받음
 - 최종 수상자들에게는 시제품을 양산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 기업체 연결 및 자금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개발 지원의 혜택을 제공함
- 예술 파생상품 전문 에이전시 지원
 - 국내 예술가/단체의 작품을 바탕으로 한 파생상품의 기획이나 이미 제작된 파생상품의 유통을 전담하는 에이전시의 활동을 지원
 - 특히 동남아 시장 등에서 우리나라의 식문화 등과 연결된 예술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바, 이러한 틈새시장을 개척하면서 우리 예술의 세계화와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가의 발굴과 지원 필요

3) 추진 시 유의점

- 온라인 마켓이나 플랫폼의 성공은 설립이 아니라 기민한 운영에 의존함
 - 예술시장의 전후방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의 축적이나 활용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마켓이나 플랫폼의 구축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임
 - 그러나 정부 주도로 조성된 온라인 마켓 및 플랫폼은 활성화된 성공사례가 매우 적은데, 이는 담당자들의 관료적인 접근방식으로 인해 단순 구축보다 생동하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간과된 까닭임
 - 따라서 설립 이후에 지속적인 서비스 업데이트나 인터페이스 업그레이드 등을 염두에 둔 사업 추진 필수
- 산업지원 정책으로서 자생력과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삼아야 함
 - 전후방 연관산업의 육성은 ‘산업’ 정책으로서 단순히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관련 산업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목표로 삼아서 이루어져야 함
 - 즉 예술용품의 소비자나 파생상품의 소비자가 갖는 니즈를 반영한 산업지원 정책이 도입되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예술용품을 접하고 창·제작에 도움을 받게 되는 것, 누구나 쉽게 파생상품을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예술계의 자생력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성과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임

라. 예술계 인력양성 제도 내실화

1) 배경 및 목적

- 현대 예술계에서는 창작자인 예술가 뿐 아니라 매개 인력의 창의성 또한 더 없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특히 융·복합 예술, 국제협업 분야 등에서는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싱’, ‘큐레이션’, ‘드라마투르기’ 등이 창작 못지않게 창의성이 중요시되는 분야로 인정받고 있음
- 최근 경제적, 사회적 악재 때문에 국내 예술시장의 성장세는 둔화되었지만 규모는 꾸준히 커가는 추세로,⁹⁰⁾ 향후 예술분야 각 요소의 전문성과 분업화 추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예술매개자들의 직무 역시 점점 세분화될 것으로 예상됨(해외에서는 이미 국내보다 훨씬 세분화된 직무 분류 적용 중)⁹¹⁾
 - 특히 예술계 자생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전통적인 공연기획자, 전시기획자 등에서 ‘예술홍보마케터’, ‘관객개발 전문가’, ‘아트펀드레이저’, ‘예술MD기획자’, ‘예술에이전트’ 등으로 확장 분화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전문성도 점차 인정받고 있는 상황임
 - 한편, 공연 수익 증가 등으로 무대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는 데 비해 현장 ‘스태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인데, 현재 국내 대학교육에서는 디자이너 양성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장 무대인력의 재교육을 담당하는 아코인력개발원의 연간 수용인원 또한 시장 수급과 비교할 때 부족한 실정임
 - 이러한 상황 타개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바, 예술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예술경영 현장을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기 때문에 관련 인력에게 비전을 제공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함
-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관한법률’, ‘국제문화교류진흥법’ 등 법률 제정으로 관련 전문가 양성이나 관련 활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예컨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인증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모금과 활동의 중요한 거점을 만들 수 있게 되었으며 후원 매개 활동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고,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해외 예술유통 전문가나 해외 에이전트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이 가능해짐

90) 한국콘텐츠진흥원(2016.1), <2016 콘텐츠산업전망>, ‘국내공연시장 규모는 2014년 약 6,700억 원, 2015년 약 7,000억 원 추정, 2016년 약 7,120억 원 추정(인터파크 매출액으로 시장규모 추정)

91) 추미경 외(2013.9), <공연분야예술경영 전문인력 직무구조 및 양성방안연구>, 예술경영지원센터

- 현장에서 매개자 양성 및 육성에 대한 방향성 재정립 필요
 - 지난 10년 이상 현장종사자의 재교육을 진행해온 예술경영지원센터 뿐 아니라 현재 다양한 문화예술기관에서 매개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충무아트센터(서울 중구문화재단), 종로여성개발원 등에서도 매개자 양성 또는 재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각 기관의 니즈에 의해 진행되고 있지만 교육내용, 방법, 강사 등에서 중복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예술인복지재단과 예술경영지원센터 간의 교육협력 사례⁹²⁾와 같이 기관 간의 협력과 역할 분담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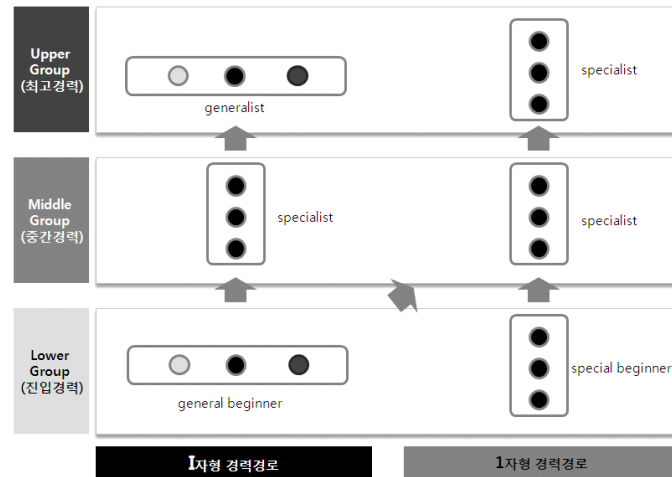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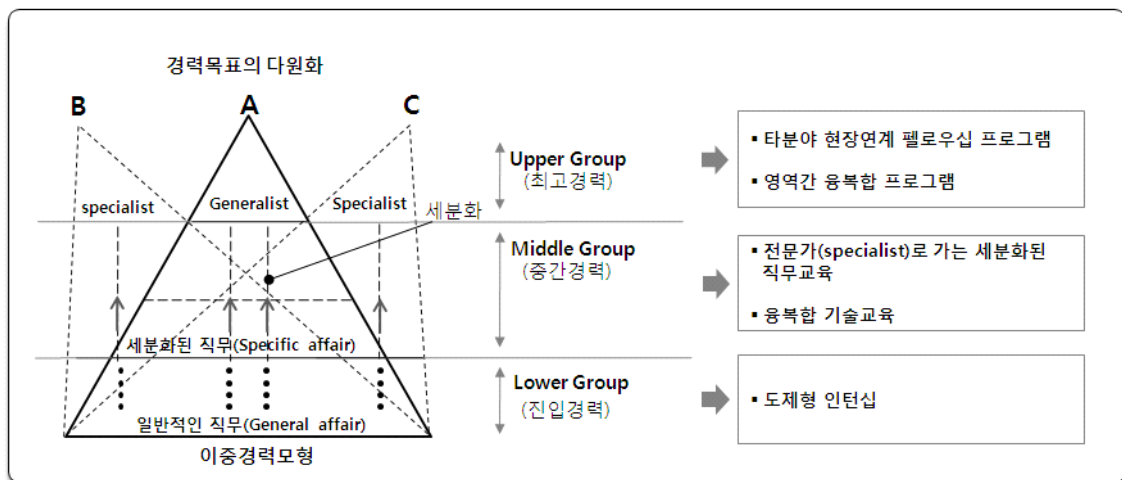
- 매개인력양성 전문기관 설립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위탁을 통한 매개인력양성에 대한 종합적 방향 설계
 - 현장의 요구, 대학교육 현황, 타 기관의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정을 설계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타깃형으로 진행하여 중복을 최소화하고 전문화할 필요가 있고, 기초교육, 이론교육 등은 최대한 온라인화 하여 접근성 증진
-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질적 교육 및 새로운 직군에 맞는 혁신 교육
 - 세분화된 다양한 직무에 대한 교육이니 만큼 이에 상응하는 전문적 커리큘럼 개발이 중요하며, 강의식, 토론식, 실습 워크숍, 멘토링 등 현재의 다양한 교육기법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현장실습(hands-on) 위주의 교육이 필수적임
 - 또한 당장 썩 먹을 수 있는 실용적 지식이 아니라도, 현대 예술현상을 잘 조망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통합적 인재 양성도 중요한 과제로, 타 장르, 타 기술과의 결합을 통한 융합적 일자리 과정 개설이 필요하며,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등 새로운 직군에 맞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교육 목표와 방법은 이중경력경로모델(dual ladder system)적용 필요
 - 아래 <그림>과 같이 기존의 I자형 경로(general beginner-specialist-generalist)에서 1자형 경로(special beginner-specialist-specialist)를 다양하게 설정할 필요

92) 2016, 2017년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파견(기업에 예술인 퍼실리테이터로 파견) 사업”을 위한 참가자 교육에 양 기관이 협력하여 진행

- 보다 구체적으로는 두 번째 <그림>과 같이 경력 진입자에게는 ‘도제형 인턴십을 통한 일반적 직무교육’ → 중간 경력자는 ‘세분화된 직무교육과 융복합 기술교육’ → 최고경력자는 ‘타분야 펠로우쉽과 영역간 융복합 프로그램’으로 교육구성 제안 가능⁹³⁾



[그림 4-13] I자형, 1자형 이중경력경로 모델



[그림 4-14] 예술경영 전문인력 양성방안 모듈

- 무대기술인력 교육은 아르코 인력개발원 역할 강화 및 지역기관 연계로 접근
 - 현장 종사자의 재교육 뿐 아니라 새롭게 입직, 전직하고자 하는 이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이 필요한 바, 아르코 인력개발원을 명실상부 ‘무대기술인 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모와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거점으로 삼아 지역의 문예회관 등과 연계하여 지역 무대기술인력이 지속적으로 실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함

93) 추미경 외 (2013. 9), <공연분야예술경영 전문인력 직무구조 및 양성방안연구>, 예술경영지원센터.

- 무대예술전문인자격검정은 공연장 취업 뿐 아니라 제작사 채용에도 적용토록 권장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2) 주요 사업 내용

- 매개인력양성을 위한 ‘예술경영아카데미’ 설립 또는 위탁 운영
 - 현장 경력자를 중심 대상으로 삼아 1자형 직업경로(career path)에 부합하는 교육을 진행하며, (예비)경력자에게도 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국내 대표적 매개인력양성기관으로서 매개인력양성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특히 대학교육에서 빠져있는 ‘관객개발 전문가 과정’ 등 다양한 세분화된 직무에 대한 교육 진행
- ‘예술경영MBA’ 과정 또는 ‘예술경영MFA’ 과정 개설
 -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지식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단체 운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장기 전략기획 등을 통해 시장 환경을 총체적으로 판단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능력 또한 필요함
 - 이를 위해서 기존 경영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과 함께 MBA 또는 MFA 과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직무교육 Webinar 과정 개설
 - 해외의 경우도 호주 예술위원회나 뉴질랜드 예술위원회와 같이 ‘Webinar’ (web+seminar의 합성어)라는 명칭으로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 늘어나는 추세임
 - 예술매개자 직무교육, 무대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기본 과목’에 대한 ‘이론 교육’을 온라인화 함으로서 접근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는바, 바쁜 예술기관 및 단체 종사자를 겨냥하여 온라인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과정 중에 정기적인 대면 실습교육 등을 통해 온라인의 단점을 극복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과정이 될 수 있음
- 지역무대기술 아카데미 운영
 - 무대기술 인력의 숫자와 수준은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가 상당하며, 지역에서는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무대 스태프를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광역단위로 지역거점대학(공연예술 전공과정 개설대학)이 광역문화재단과 협력하여 ‘무대기술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르고인력개발원은 이들과 연계를 통해 커리큘럼과 강사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대학 재학생 및 지역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음

3) 추진 시 유의점

- 대학 및 대학원 과정과의 차별화 및 협력 중요
 - 기존 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어떻게 협력하고, 보완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대학(원) 수업은 강사의 역량에 따라 내용과 수준이 결정되고 있는데 새로운 아카데미는 강사에 관계없이 균질한 수준과 내용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설립되어야 함
- 각 기관, 각 장르별로 원하는 전문가 상이 다를 수 있음
 - 각 기관과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최대한 공동의 전문가 상을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과정과 커리큘럼,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차이는 존재할 것이며, 그러한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차별적인 양성 방법을 적절한 과정 및 시기상에 배치해야 할 것임
- 단기적인 관점의 교육과정 평가 및 가시적 성과에 함몰되지 말아야 함
 - 예술계의 매개인력 교육에 대한 ‘평가’와 그 ‘성과’는 가시적으로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단기적 성과에 함몰되면 전체 교육과정이 왜곡될 수 있음
 - 특정한 상황과 방향에 걸맞은 평가와 성과에 대한 연구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함

3 해외 예술시장 진출 고도화

가. 공공부문 국제예술교류 사업 체계화

1) 배경 및 목적

-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음
 - 비영리분야 예술의 국제교류는 공공영역에서의 지원이 필수적인 분야로, 공공부문에서는 다양한 간접지원(플랫폼 지원, 이동 지원, 인력양성 등)을 통해 민간의 활동을 견인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국의 한한령, 콘텐츠산업의 위기 등으로 대두되는 한류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는바, “세계 속 한류 확산”이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되는 등 한류의 지속화와 발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계속됨
- 국제문화교류진흥법 및 시행령 제정
 - 민간, 공공 영역 그리고 지역 간 국제문화교류 증진,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양성 지원 등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됨
 -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을 통해 공공 및 민간에서의 사업과 그 역할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그간 진행되어온 국제예술교류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새로운 계획을 마련하여 실행해야하는 시점임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 방향

- 국가 간, 지역 간, 기관 간 협력강화를 통한 민간 교류지원
 - 국가 또는 공공 기관 간 협력으로 민간 교류를 공동으로 보장하며, 민간은 그것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함
 - 민간교류를 추진하는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플랫폼 지원, 네트워크 지원, 모빌리티 지원, 연구 지원 등 간접지원을 강화하여 체질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필요함
- 해외 거점기관 역량 및 서비스 강화
 - 해외문화원 등 해외 거점기관의 국내외 상호 정보 및 컨택 포인트 제공 등 ‘매치메이커’로서의 역할 강화가 요구됨

- 교류 사업의 직접 수행보다는 현지 기관이 한국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매개기능을 확대하여 보다 큰 틀에서 촉진자 역할을 자리매김해야 함
- 예술교류 정보 제공 서비스
 - 민간에서는 쉽게 축적하기 어려운 자료, 데이터,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홍보, 제공하여 국제교류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공공부문 교류를 체계화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임
- 국제문화교류 인력 양성 지원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국제문화교류 분야로의 진입을 수월하게 해야 하는바, 인력의 수준과 교류 정도에 맞게 단계별로 지원이 필요
 - 현지 기관(해외 축제, 마켓, 비엔날레 등)의 중기 연수 프로그램 지원, 전문 인력 간의 인력 교환 지원 등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해나가야 함

(2) 주요 사업 내용

- 국제예술교류 네트워크 사업
 - 다양한 권역 및 지역 간 교류 네트워크 또는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예를 들어 동아시아, 한-아랍, 한-동유럽, 중미, 북미 간 네트워크 구성 및 지속적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진
 - 민간 개인과 단체가 이를 플랫폼 삼아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 정향되어야 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교류단계별 지원을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교류의 심도를 점점 높일 수 있게 설계가 필요함
- 국제예술교류 공동기금 창설
 - 권역 및 지역 간 예술가들의 협업(공동제작, 공동 프리젠틱 등) 증진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공동기금 조성이 필요한바, 공동기금 창설은 협력의 강도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됨
 - 정부차원 및 공공 차원에서 국제공동기금조성은 규정상의 제약(예를 들어, 정부기금은 자국예술가에 지원되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어려울 수 있으나, 공동기금을 ‘큰 주머니’로 생각하고, 국내에서 출연한 자금(기금)은 주머니 속 ‘붉은 구슬’로 타국에서 출연한 자금의 ‘푸른 구슬’로 규정하고, 색깔(성격)을 바꿀 수 없는 ‘붉은 구슬’은 특정한 목적(한국예술가 지원)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면 법적인 문제를 피해서 운용할 수 있음

● 상호교류의 해(시즌) 사업 확대

- 그간 ‘국가대 국가’ 간 교류 사업은 수교 기념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해왔는데, 많은 경우 이는 ‘불꽃놀이’ 행사처럼 일회성의 성격을 가지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음
- 공공 차원의 국제 교류 행사는 민간 차원의 지속적 교류의 문을 열어주는 효과가 없다면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플랫폼’으로 새롭게 정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연간 또는 반기, 분기 별로 해당 국가 및 권역과의 ‘상호교류의 해’를 통해 집중적인 문화예술교류를 진행함으로써 교류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바, 지난 2015~16년 “한-불 상호교류의 해”와 2017년 현재진행중인 “한-영 상호교류의 해”가 좋은 예가 될 것임
- 해당 국가와의 문화예술 작품교류, 인력(예술가, 기획자, 행정가 등 활동가)교류, 문화포럼 개최 등, 양국 기관과 기관 간, 민간 대 민간 간의 지속적 교류의 출발점으로 활용하여 일회성 교류를 탈피해야 함
- 프랑스의 경우 1985년부터 ‘시즌’ 또는 ‘상호교류의 해’ 모델을 통해 약 60여 개 나라와 밀접한 문화예술교류를 진행하여 왔으며, 현재는 문화예술 뿐 아니라 학술, 교육, 관광, 체육, 청소년, 경제 교류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로 프랑스문화원 본부(Institut Fran aise)는 전담 부서(P le des Saisons)를 설치해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 중임

<2018~2022 주요국 수교기념 현황>

2018년 : 필리핀 (수교 60주년)
 2019년 : 덴마크, 브라질(60주년) 폴란드, 헝가리(30주년),
 2020년 : 스웨덴, 노르웨이, 말레이시아(60주년), 러시아, 체코, 루마니아(30주년), 스페인(70주년)
 2021년 : 네덜란드, 그리스, 호주(60주년)
 2022년 :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뉴질랜드, 이스라엘, 이란(60주년), 우즈베키스탄(30주년)

● 해외 한국문화원 역량강화 및 협력 사업 확대

- 지금까지 해외의 한국문화원은 원장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원장 개인의 관심과 능력에 따라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좌우된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는데, 이보다는 현지인에게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게 돕는 일관성 있고 공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해외 한국문화원을 관통하는 일관된 브랜드를 만들고 서비스 코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으며, 국제예술교류에 대한 강력한 비전을 수립 및 공유하고 현지에서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분명히 정립되어야 할 것임

- (매개기능 강화) 해외문화원의 다양한 역할 중 예술교류 매개 기능을 강화할 필요 있음. 문화원이 현지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현지 기관·단체와 국내 기관과 단체가 교류할 수 있도록 매개하고, 현지기관이 한국단체와 함께 관련 사업을 진행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확산 효과도 큼. 그러기 위해서 현지 네트워크를 넓히고 현지 기관·단체에 지속적으로 국내기관 및 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미팅’을 주선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 활용 제고) 이를 위해서는 국내와 현지의 예술계를 잘 아는 전문가의 현지 근무가 필수적인 바,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연 및 전시 기획자 파견 제도를 개선하여 활용함으로써 실질적인 매개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인력 풀을 갖추는 것이 선결조건임
- 공공 및 민간교류 정보 수집 및 제공
 - 국제예술교류에는 처음부터 ‘물리적 거리’, ‘언어 및 문화적 차이’ 등으로 정보의 장벽이 존재하므로 민간 개인/단체가 그 장벽을 극복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부족함
 - 이 부분이 국제예술교류의 가장 큰 장애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 분야 공공기관에서 해당분야 교류관련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 분류, 가공하여 통합관리하고 이를 민간영역에 서비스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한 중심 기관 설치, 예산 및 인력 확보가 이루어져야 함
- 국제예술교류 전문가 육성사업
 - 권역별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능적 전문성을 갖추고 ‘권역별’ 예술교류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필요함
 - 이와 같은 권역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속적인 현장경험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해외 한국문화원에 공연 및 전시 기획인력을 10개월 정도 파견하여 해당 권역의 교류 전문가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현지 해외기관 및 단체에 예술매개 관련 경력자를 파견하거나, 한국기관과 현지 기관 간 인력교환 근무의 형식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적절한 해외 파트너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국내기관 또한 해외 전문가를 수용할 수 있는 예산, 조직 등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임

3) 추진 시 유의점

- 국내 공공기관 간 긴밀한 협력 필요
 - 교류해야할 지역과 국가가 일치하는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교류활동을 진행하면 비용 및 현지 홍보면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국내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
- 국제교류활동의 제약이 되는 비자문제 해결 모색
 - 장기간 체류가 핵심인 국제예술교류 전문가 육성사업은 비자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가 어려움
 - 이에 대해 문체부와 외교부 등 정부 부처간 협조 역시 필수적인 과제임

나. 해외 예술유통 전문 에이전시 교육 및 지원확대

1) 배경 및 목적

- 문화예술분야의 사업체수 증가 대비, 국내예술시장의 성장률은 높지 않은 상태
 - 지난 5년간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사업체수가 20% 가까이 증가하고 문학과 대중문화 예술이 각각 11%, 10% 가량의 증가세를 보이는 등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체 수는 연평균 7.8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⁹⁴⁾
 - 2015년 매출액 기준 약 3,874억 원 규모인 공연시장의 경우 2007년 대비 시설, 단체, 종사자, 매출액 등이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3년 사이 그 성장 폭은 별로 높지 않으며,⁹⁵⁾ 2015년 기준 약 3,904억 원으로 추정되는 한국 미술시장의 경우 2013년 이후로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음⁹⁶⁾
- 예술분야 종사자 및 단체들의 활동범위를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시장으로 확대하여 수출 활로 모색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 해외진출에 있어, 국제교류 과정에서 파생된 간접적 시장 진출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예술 유통을 통한 시장 진출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예술분야에서 해외진출의 경우 국가 간 상호 호혜적 차원에서의 교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파생된 간접적인 시장 진출과 병행하여, 구체적인 현지 시장 분석과 다양한 작품/상품 개발 등 능동적 해외시장 개척을 통하여 수용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활동 한계를 벗어나 해외시장에서의 활동 범위 확대가 필요
- 해외진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비용/고위험 요소를 상쇄하고, 효과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에이전시 중심의 ‘매개적’ 진출 방식 고려가능
 - 매개적 진출은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되는 ‘고비용/고위험’ 요소를 상쇄하고 단계적 진출에 있어 직접 진출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음⁹⁷⁾
 - 예술분야 해외시장진출의 선례로서 한류의 경우 국제화 초기단계에서 해외 진출 시장 강력한 현지 유통채널의 확보를 통해 해외 시장에 진입하였음

94) 산업연구원(2016), 「예술의 국민경제적 위상과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95) 예술경영지원센터(2016), 「2016 공연예술실태조사」

96) 예술경영지원센터(2016), 「2016 미술시장실태조사」

97) 정종은·김현경(2017) 「예술분야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 연구에서는 예술분야 해외시장 진출을 공공부문 중심의 국제교류에서 파생된 간접적 시장 진출, 에이전트나 라이선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매개적 시장 진출, 현지와의 파트너십이나 현지 법인 설립 등의 직접적 시장 진출이라는 단계적인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음

- 현지의 기존 유통망과의 네트워크를 지니고, 해외시장 진출에서는 글로벌 수요조사
와 해외 현지 정서에 맞는 콘텐츠 연결을 담당하는 매니저급 인력의 역할을 통한
현지 진출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최근 문학 분야에서 현지 유통망과의 연결고리를 지닌 예술유통 전문 매개인력(에이전
시)들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
- 언어를 통하여 예술적 가치가 전달되어 문화적 장벽이 가장 높은 분야라고 여겨져
온 문학부문에 에이전시를 통한 성공적 해외진출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2015년
소설가 한강과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의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수상, 천명관의 『고령
화가족』 미국의 〈월드 리터러처 투데이(World Literature Today)〉의 주목할 만한
2015년 번역도서로 선정, 배수아 『철수』 뉴욕 PEN 번역상 최종후보 노미네이트,
정유정의 『7년의 밤』 독일 〈차이트〉가 뽑은 베스트 추리소설 9위에 선정 등⁹⁸⁾
- 장기적 관점의 해외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에이전시 중심의 매개적 진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유통체계의 매개 전문성 및 효과성 제고가 필요함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 방향

- 해외진출 전문매개인력의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 예술분야 해외시장 진출의 구조 및 생태계 하에 현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
유통 전문 매개인력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 방안 마련
 - 매개적 해외진출의 초기 단계에서는 강력한 현지 유통망을 활용하여 현지 판매와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콘텐츠의 현지화를 공동 기획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 참여한 에이전시들이 경험을 축적하고 영역을 확보하면서, 이후 매개적 진출
을 본격화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함
- 신진 수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시장 진입 지원 방안 마련
 - 예술분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창조적 역량을 지닌 신진 매개인력의 육성과 업계
진입을 위한 현장 활동 지원
 - 해외시장에서 활동 가능한 유통 전문인력의 경우 시장조사 및 상품기획에서부터 유통
과 판매까지 일관된 콘셉트로 마케팅 할 수 있는 역량이 매우 중요함

98) 김성곤(2016), “해외진출을 위한 한국문학의 방향”, 월간 문학사상 2016년 8월호

- 예술 콘텐츠 분야에서 활동하는 양질의 인재들이 자기계발 및 동기부여를 통해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더 큰 시장과 더 넓은 세계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예술 유통 생태계 내 활동가들의 전문 역량제고
 - 해외 진출에 있어, 매개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예술 유통 생태계 내에서의 창작자와 시장 사이에 자리하는 매개자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 인식수준이 미비함
 - 공공기관간 협업체계 및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과 병행하여, 민간의 예술분야 해외수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역할 정립 및 인식 공감을 위한 정기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
 - 또한 관련 정보 습득을 위한 교육 및 노하우 전수 코칭 등의 프로그램을 다각화하여 예술 유통에 대한 활동가들의 역량 제고

(2) 주요 사업 내용

- 해외 활동 마케터(외국인 포함) 지원 확대
 - 국내에서 유통채널을 확보하고 있는 에이전트들에 대한 직접적 지원(해외 체류비, 교통비, 행사 개최비 지원) 방식을 현재 보다 더욱 폭넓게 다각화해야 함
 - 동시에 국외에서 유통채널을 확보하고, 국내 예술콘텐츠의 수입에 관심이 있는 마케터들에 대한 지원(국내 콘텐츠 현지 수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역시 필요함
- 해외 수출 관계자 네트워크 관리 및 정기적 초청행사 개최
 - 국제문화교류 차원의 해외인사 초청과는 차별화된 트랙으로,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해외의 주요 에이전시(문학, 공연, 시각분야별 매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실무적으로 국내 창작자, 기획자 등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건본시 시장으로서의 국제교류 행사 기간 외에도 정기적인 초청을 통해 국내 예술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독려하고, 참석자들을 국내 예술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해 네트워킹 행사 필요
- 시장 중심의 예술분야 전문 마케터에 대한 육성 및 지원
 - 프로듀서형 에이전트 육성(공연분야): 해외진출 시 국제교류 단계에서는 제대로 논의되기 어려운 작품(또는 창작자)에 대한 개런티 협상, 해외진출 시 현지에서 작품을 순회하기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소통, 일회성 진출이 아닌 극단의

레퍼토리 확립 및 브랜드 구축을 위한 협력 등의 종합적 역량을 지닌 프로듀서형 에이전트 육성 및 지원

- 출판 유통 에이전트 양성(문학분야): 실질적인 의미의 해외시장 진출에 성과목표를 정향하고, 초기 콘텐츠의 선별에서부터 최종 계약과 해외 유통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프로세스로서 정교하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매개자 육성 및 지원
- 시장 내 예술콘텐츠 유통 전문가에 대한 단계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예술콘텐츠 유통과 관련한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나, 업계에 진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심화과정에 이르는 활동가들의 스펙트럼을 담아내기에 부족한 상황임
 - 활동 경력별로 단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심화 단계의 전문가들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 마련, 해외시장 진출 전문가의 해외진출 가이드 코칭 프로그램 등 전문적 영역에 대한 심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운영 필요

3) 추진 시 유의점

- 에이전시 개인의 성과가 아닌 국내 예술계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구축
 - 에이전시 등 유통 전문가들이 공공지원을 통해서 형성한 네트워크 및 노하우 코칭 등이 개인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국내의 해당 분야 내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민간 협력망을 조직하고 이를 공유 네트워크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장치 및 기회를 마련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에이전시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창작자-시장 연결이라는 에이전시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구조나 사업 추진 방식이 투명하지 않아서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음 이와 같은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우선 국내와 해외를 연결하는 에이전트의 활동 이전에, 국내 예술시장 유통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장기적인 생태계 발전이 가능할 것임

다. 예술기관/단체의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 지원

1) 배경 및 목적

- 예술분야의 경우 국내 시장 규모가 영세하여 해외 시장과의 동등한 조건에서의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수출을 위한 준비 비용도 높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이를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이 필요함
 - 이에 예술분야에서는 다양한 해외진출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상 국제 교류 차원의 행사지원, 또는 단기 사업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외시장 진출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는 것은 요원한 상황임
- 예술분야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외 진출 콘텐츠의 특성에 기초한 해외시장 진출의 구조를 세분화하고 이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시장 내에서의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치 및 협력 체계 마련, 다각적 해외진출 경로에 대한 구조 진단을 세밀하게 진행함으로써 각 분야별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로 확보 필요
 - 장기적 관점에서 해외 시장에서의 국내 예술분야 기업(단체)들이 위험부담을 줄여 적극적인 시장 활동 할 수 있도록 만·관 협업체계를 고려한 지원 사업 설계가 필요하며, 동종 분야 기관/단체 간의 공동제작 및 합작 등을 통해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이 요구됨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 방향

- 단기적·일회적 지원에서 중장기적·체계적 지원 정책으로의 전환
 - 현재의 예술분야 해외진출 정책은 해외시장을 위한 상품 및 콘텐츠 선정, 유통 지역 내 포지셔닝 등의 미시적 수준의 마케팅 전략 수립에 머물러 있음
 - 해외진출을 위한 각국(또는 지역)의 문화적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예술 유통의 구조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각 구조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과정을 통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
 - 시장에서의 고비용/고위험 요소를 상쇄시킬 수 있는 거시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현황 진단과 구조 파악,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접근을 통한 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높이는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장르와 지역별 유통 전략의 융합적 전략 수립을 통한 시장 진출 가능성 타진
 - 기 활용되고 있는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지역별 해외진출 전략을 참조하여 예술분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연계지점을 파악하는 등 장르와 분야의 융합, 또는 장르와 지역의 융합적 전략 수립 등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 모색 필요
 - 예술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적 해외진출 로드맵을 수립과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 추진체계 마련 필요

(2) 주요 사업 내용⁹⁹⁾

- ‘예술분야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형 투자 개발사업’ 발굴
 - 현재 타 부처에서 시도되고 있는 PPP 사업 추진 체계¹⁰⁰⁾를 벤치마킹하여 ‘예술분야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형 투자 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따른 지원 방식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직접 보조금 지원 보다는 투자적 지원 방식으로 민간에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자체적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이 더욱 중요함
- 지역별 마케팅 전략 연구 및 조사 확대
 - 예술 콘텐츠 해외 진출의 경우 국제 교류 차원의 다수의 공공지원 사업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사업 성공에 대한 책임성이 떨어지고 전략적 접근이 부재한 실정임
 - 이에 지역별 예술 향유층에 대한 마케팅 전략 연구와 이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여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정보 기반의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함
- ‘(가칭)예술콘텐츠 해외시장 진출지원 협의체’ 구성 등 협업체계 마련
 - 예술분야 해외진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복수의 기관 간에 ‘(가칭)예술콘텐츠 해외시장 진출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최신 정보의 교환 및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한 노하우 등을 공유
 - 각 지역별 진출 사례집 발간 및 진출을 위한 유의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각 지원 사업들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효과성이 검증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됨
 - 기관 간 협력 체계를 통하여 각 분야별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교류 모임을 주선하여 장르별 해외진출의 특수성을 서로 이해하고, 해외진출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인식과 역량을 공유함으로써 네트워크 확장의 기회 마련

99) 정종은·김현경(2017) 「예술분야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00) PPP(Public-Private Partnership)은 정부(공공기관)와 민간 사업자가 협력하여 인프라 건설, 개선, 관리 및 유지 또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업 형태로, 건설 및 플랜트 중심의 사업에서 많이 적용되었으나 최근 서비스 산업 영역(의료영역 등)에서 해외 진출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의 노력이 나타나고 있음

- 문화부 산하 기구 중 예술 콘텐츠의 합작 및 현지 투자 등을 상담할 수 있는 해외 창구 마련(해외문화원의 역할 제고)
 - 지역별 해외 문화원의 국제문화교류의 역할과 관련하여, 문화원 내 행사 개최를 통한 자체 기획 프로그램 외에도 현지의 다양한 기관들과 국내의 해외진출 예술단체(기관)과의 공동제작 등을 성사시킬 수 있는 실질적 해외 진출을 위한 노력 필요
 - 기존의 ‘국제교류’ 관점의 접근에 더하여 ‘시장진출’ 차원에서 예술분야와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분리가 아닌, ‘예술 콘텐츠’로서의 융합 콘텐츠 해외진출 전략 마련과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지역별(각국의) 수출거점 기구(영리활동 가능) 운영 필요

- 프랑스의 앙스티투트 프랑세(L'Institut français)의 경우 문화예술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프랑스와 함께 공동제작을 실행하고 관련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로서 프랑스 예술콘텐츠(순수예술에서 문화산업콘텐츠 포괄)의 수출의 해외거점기구로서 역할 수행

3) 추진 시 유의점

- 예술분야와 문화산업 분야의 공통점과 차별점 인식 필요
 - 문화산업 분야와 순수예술분야의 경우 유통과정에 있어 방식과 타겟 설정에 차이가 있는 바, 문화산업 해외시장 진출의 전략수립 과정을 참조하여 적용하되 예술분야(장르별, 유통 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술분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특화된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해외시장 진출 확대의 궁극적인 주체는 민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함
 - 예술분야 해외시장 진출의 전략적 접근은 결국 정부주도형 사업 추진이 아닌, 민간 주도형 사업 추진을 통해 결실을 맺을 것임은 분명한 사실임
 - 예술분야에서 정부주도형 사업 추진은 예술시장에서의 상품에 대한 선입견을 가져올 수 있으며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불필요한 제약 조건을 불러올 수도 있음
 - 따라서 민간부문에서 생산된 독창적 예술콘텐츠가 민간 전문가들끼리의 합의와 계약에 의해 현지 시장에 노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도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바, 관련 정책은 정부주도형 사업 추진이 아니라 민간주도형 사업들이 많이 시도되고 다양한 층위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자양분을 공급하는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제5절 미래기술 수용 기반 조성

1 기술친화 참여기반 조성

가. 예술인을 위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워크숍' 운영

1) 배경 및 목적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합 활성화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 예술가의 출현, 예술가와 인공지능의 협업 활동, 빅데이터 기반의 예술 창작 활동, 가상세계에서의 예술 활동 등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예술 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
 -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과학기술은 예술의 재료나 도구로서의 기능에 한정되지 않고, 예술과의 융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예술의 형식과 지향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예술생태계 및 가치사슬체계의 변화
 - ICT 분야 전문가들과 예술가의 협업, 예술가와 소비자의 예술 협업, 예술 분야 전문가와 비예술 분야 전문가의 융합 활동 등 과학자, ICT 전문가, 소비자, 타 분야의 전문가 등과의 다양한 인적자원의 예술협업 활동이 활성화되고 일반화될 것으로 예측됨
 - 예술 창작, 유통, 소비의 경계가 약화되고, 창작 자체가 유통과 소비로 직접 연결되는 가치사슬 체계가 이미 부상하고 있음
 - 또한 사물인터넷 기반 초연결사회의 발전으로 '유비쿼터스 예술미디어 환경'이 조성되면서 자동차산업 등 기존의 비예술 분야가 새로운 예술시장으로 포섭 또는 확장될 것으로 전망됨
- 예술가들의 4차 산업혁명 리터러시 역량 강화 필요
 -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과 예술에 관한 논의는 2016년 후반부터 대두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에 대한 예술가들의 인식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미디어 아트분야에 한정되어 있음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관련하여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 빅데이터 기반 콘텐츠 개발 등 주로 콘텐츠 산업 차원에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술분야와 연관한 정책적 접근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4차 산업혁명이 예술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최신 및 미래 트렌드 인식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예술가치 창조 체계 및 예술생태계 변화에 대한 인식공감을 확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 방향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예술가 인식 공감 환경 조성
 - 예술분야의 경우, Arts & Technology에 대한 논의는 주로 미디어아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예술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거시적인 인식은 부족하다고 평가됨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워크숍’은 대상 예술가의 범주를 Arts & Technology 기반의 미디어 아티스트 뿐 아니라 예술가 전체로 확대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술가들로 하여금 각자의 다양한 층위에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함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예술가 인식 및 정책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파악된 수요를 바탕으로 예술인을 위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워크숍의 방향과 과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견지에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워크숍’ 태스크포스를 예술가 중심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프로젝트 기반’의 예술과 기술 인력 협업 경험(collaborative experience) 활성화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에 대한 예술가들의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에 대한 지식정보 공유 뿐 아니라 예술가들로 하여금 핵심기술 분야의 전문인력들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과 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예술창작 프로젝트 실험 및 연구 개발 환경을 조성하여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과 함께 이를 적용한 미디어에 대한 인식 역량 강화가 요구됨
- 융복합 기반의 협력과 네트워크 플랫폼 활성화
 - 이러한 인식 및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술가와 예술가, 예술가와 소비자, 예술가와 비예술가 등 예술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소통 및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 환경 조성이 이루어져야함
 -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을 통한 자발적인 협업 환경을 조성하여 향후에는 워크숍 단계를 넘어서는 생산적인 계기와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주요 사업 내용

- 4차 산업혁명시대의 ‘New Arts & Technology 아카데미’ 운영
 - 4차 산업혁명시대의 예술 트렌드와 예술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인식 역량과 새로운 예술형식에 대한 창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술가, 예술경영자, 문화행정가 등을 대상으로 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기술을 적용하고, 체험하고, 실험할 수 있는 새로운 예술 창작 스킬 및 연구개발 (Skills & Development)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 주요 교육연수 내용으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예술의 가치와 위상, 4차 산업혁명시대의 예술트렌드와 예술 가치사슬체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이해 및 예술창작 시스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예술경영과 문화정책, 4차 산업혁명시대의 예술소비자 특성, 빅데이터 활용 기반 예술창작과 예술경영, 4차 산업혁명시대의 예술산업과 지적재산권 등을 꼽을 수 있음
 - 미래 잠재 예술가들의 4차 산업혁명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는 거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며, ‘New Arts & Technology 융합 기획자 양성 과정’ 역시 운영하여 기획역량 제고의 기회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New Arts & Technology 융합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
 - 아카데미의 형식을 넘어서, 예술가들로 하여금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예술 활동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및 창작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과제가 존재함
 - 이와 관련하여 가칭 ‘New Arts & Technology 융합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을 개발하여, 다양한 유형의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커뮤니티 지원사업의 내용은 학습 커뮤니티 활동, 실험적인 창작 활동, 다양한 인적자원의 네트워킹, 커뮤니티 성과 공유 워크숍, 커뮤니티 공간 지원 등 다각적으로 설정
- 예술-과학기술 융합랩(Creative Labs on the Science, Technology and Arts) 운영
 - 예술가들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기술과 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예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혁신기반으로서 ‘융합랩’ 운영 필요
 - Creative Labs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Lab 형태, R&D 테마, 운영체계는 이용자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함(인공지능 기반 예술 Lab, 가상현실 기반 예술 Lab, 빅데이터 기반 예술 Lab, ICT기반 무대기술 Lab 등 다양하게 구성)

-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활용하여 예술 창작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 데이터, 지식과 정보 등을 갖춘 Lab을 대학 및 지역 등에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
- 4차 산업혁명시대의 New Arts 전시, 공연 및 Festival 개발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예술 프로젝트의 연구, 창작, 발표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의 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예술가들의 참여를 촉진함
 - 이와 관련하여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들이 예술과 융합하는 형태의 지원 사업을 실행하고, 그 성과들을 바탕으로 전시, 공연 및 페스티벌을 개발하여 새로운 예술 활동의 공유의 장이자 마켓 플레이스로 활용해야 함
- 국제 포럼/컨퍼런스 등 공유 및 협업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예술에 관한 국제 포럼 및 국제 컨퍼런스를 개발, 브랜딩 함으로써 예술가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경험과 지식정보 공유 및 협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네트워킹 플랫폼으로 활용
 - (가칭)‘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예술-기술-과학 융합 포럼’을 발족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 4차 산업혁명시대의 예술인 통계체계 구축
 -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예술인들의 인식과 태도, 핵심기술 활용 실태, 기술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업 경험, 애로사항, 정책 수요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및 관리하기 위한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조사통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3) 추진 시 유의점

- 예술과 기술 ‘융합기획자’의 역할이 요구됨
 - 예술과 기술 융합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예술과 기술 융합 기획자 (New Arts & Technology Manager)를 양성하여 예술가와 과학자의 연계를 촉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활용
 - Arts & Technology Manager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한 지식정보와 경험 및 인적 네트워크 기반이 취약한 예술가들의 기술 접근성과 창조적 활용을 촉진
- 융합적 예술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예술인을 위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워크숍은 새로운 예술생태계 모델 연구를 바탕으로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예술형식이 창조, 유통, 재창조될 수 있도록 개방성, 다양성, 실험성, 융합성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술분야와 콘텐츠산업 분야 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콘텐츠 산업 분야의 시설과 장비들의 예술적 활용도를 증진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부문(비영리예술조직,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정부 등 공공부문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도 중요
 - 예술창작 분야와 예술향유 분야 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예술가와 예술소비자의 상호 소통 및 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식정보 서비스, 교육연수, 지원사업, 연구개발 사업 등 관련 예술정책 사업들 사이의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함

나. IOT 기반 스마트 씨어터/갤러리 건립

1) 배경 및 목적

-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기술은 모든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하고 인터넷상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의 하나로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이며, 이를 장소에 활용하여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는 것에 산업적 차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국면 중 하나인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를 견인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전 세계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국내 사물인터넷 준비 현황을 알 수 있는 NAC 스코어는 52.5%로 전 세계 주요 국가 중 12위를 차지함¹⁰¹⁾
- 사물인터넷은 산업계의 집중적인 투자와 함께 ‘비콘’(beacon)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근거리 통신기술이나 스마트 밴드 등 웨어러블 기술의 발달로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영역이며, 이러한 첨단 기술을 접목한 예술공간의 조성 및 이를 활용한 예술 창작과 향유 활동의 혁신은 더는 미루어둘 수 없는 과제임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 방향

- IOT 기술을 통한 새로운 관람 문화 확산 및 체계적인 데이터 축적
 - IOT의 핵심 기술을 공연장과 전시관에 적용한 스마트 씨어터와 스마트 갤러리를 통해 끊임없이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첨단기술을 예술 관람에도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관람 문화를 확산함
 - 이와 동시에 예술공간 경영자나 개별 창작자 및 제작사들은 과거에는 포착하기 어려웠던 구체적인 관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서, 향후 자신들의 작업 방향이나 운영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음
- 예술과 체험의 융합으로 예술 접근성 및 예술시장 확대 효과
 - 스마트 씨어터와 스마트 갤러리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예술 공간에 새로운 체험을 더함으로써 기존 예술 향유자들의 기대와 관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새로운 향유자들을

101) NAC 스코어는 사물인터넷 성장여건을 만들기 위한 적절한 투자와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점수를 의미함(Accenture, 2015)

예술적 경험으로 유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예술과 디지털 기술의 만남을 목표로 공연 및 전시관람 시스템을 첨단화하는 것은 기술개발 지원 자체가 아니라 예술 접근성 확대 및 예술시장 확대 효과를 직접적으로 겨냥하여 실행되어야 함

(2) 주요 사업 내용

- 스마트 인비테이션(관람객 행복 지수에 따른 공연 및 전시제안)
 - 스마트 씨어터 및 갤러리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관련 앱을 다운 받을 경우 매일 한번 씩 ‘행복 지수’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회원 등록자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할 때 행복하게 느끼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함
 -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스마트 씨어터의 공연이나 스마트 갤러리의 전시 프로그램이 회원등록자의 취향에 부합하는 내용일 경우 안내 메시지와 초대장을 자동 전송하며 해당 초대장 제출시 티켓 할인을 제공함
 - 행복 지수 분석과 함께 기존에 관람했던 전시나 공연을 분석하고 이에 관련한 사용자 프로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전시 및 공연 관람에 대한 개인 추천 시스템 운용
- 스마트 어드미션(입장 및 관람 편의)
 - 공연장 및 전시실 입구에 비콘 기술을 활용한 단말기 본인인식으로 입장 시간 단축
 - 예술 공간 입구에 있는 키오스크에 오늘의 기분 혹은 컨셉을 입력하면 그에 부합하는 전시나 공연, 또는 전시와 공연 감상의 포인트에 관한 정보 제공
 - 지정된 좌석의 온도 설정시스템을 통해 자동온도 맞춤 서비스 및 편의시설의 온도체크를 통한 실내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
- 스마트 투어링(조명/카메라)
 - 스마트 씨어터나 갤러리의 조명들에 센서와 카메라를 설치하여 모든 관객들이 앱을 통해서 현재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전시실이나 편의시설을 확인하고 해당 공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위치 파악 및 이동을 위한 동선 서비스 제공
 - 한 자리에서만 관람할 수 있는 공연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도별 무대 카메라를 확인하고 원하는 위치의 공연/작품을 관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연장 안에서만 공연의 놓친 부분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앱 운용
 - 전시 프로그램의 경우 미리 설정해둔 즐겨찾기 작품 인근에 접근했을 때 진동울림 설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작품별 관객 선호도 데이터를 다각적으로 축적함

- 페이스페인팅을 통한 관객들과의 사후소통
 - 공연이나 관람을 마친 이후 앱이나 밴드를 통해서 가장 오랜 시간 머물러 감상했던 작품이나 가장 맥박이 빨리 뛰었던 공연장면과 관련한 이미지를 페이스페인팅의 형태로 사람의 손이 아닌 기계로 원하는 부위에 그려주는 시스템 개발
 - 스마트 씨어터나 갤러리에서 본인의 무의식적인 경험 및 인상의 결과물을 파악하게 하는 것으로 매우 차별적이고 기억에 남는 사후 소통 방식이 될 것임

3) 추진 시 유의점

- IOT 시대의 씨어터·갤러리의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
 - NIC는 2025년까지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혁신적인 6대 와해성 기술 중 하나로 IOT 기술을 선정하였는바, 사물인터넷 기술을 단순히 호기심 충족 차원에서 전시품이나 공연장에 적용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됨
 - 초연결시대에 예술활동과 관여되는 공간, 작품, 창작자,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오감 전체를 활용한 소통 및 체험을 촉진하는 패러다임 전환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임
 - 따라서 단순히 한, 두 개의 공간을 조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래의 공연장/전시관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과 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토대이자 테스트베드로써 스마트 씨어터와 갤러리를 조성해야 함
-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단계적 접근 필요
 -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스마트융합 환경이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적인 예술 서비스공간에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과제로서, 일단 중앙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예술시설 건립이나 리모델링시 이러한 전략을 반영하여 상징적인 공간 조성
 - 이를 바탕으로 국민체험형 스마트 예술공간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후속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다. 국공립시설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및 운영

1) 배경 및 목적

- 전 세계적으로 메이커 운동과 메이커 스페이스가 급격히 확산 중
 -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메이커(Maker)를 ‘기술을 가지고 노는 아마추어 제작자이자 취미공학자’로 새롭게 정의하며 메이커 운동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음
 - 국내에도 2011년 메이크(Make:) 잡지 발간과 메이커페어 서울(Maker Faire Seoul)을 기점으로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함
- 우리나라는 공공 주도의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과 운영이 특징
 -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조사 결과 국내 메이커 스페이스는 2017년 6월 기준으로 약 120개로, 공공 운영시설이 약 70%, 민간 운영이 약 30%로 나타나나,¹⁰²⁾ 이마저도 개방형 메이커 스페이스에 한정하면 공공 운영의 메이커 스페이스가 거의 대부분임
 -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무한상상실, 콘텐츠코리아랩, 중기청 시제품제작터, 산자부 사업의 아이디어팩토리 등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 또는 지원 중에 있음
- 시민의 창의적인 창작활동을 확장하며 건강한 예술생태계를 조성하는 차원의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과 운영을 도모
 - 메이커 스페이스는 누구나 아이디어를 실물화하는 창작과 제작 활동을 본인주도로 경험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협업과 공유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됨
 - 전문 예술인들의 작업에 조응하는 시민예술, 생활예술로서 메이커 스페이스의 창의적인 활용법들을 개발해나간다면 건강한 예술생태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임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 방향

- 조성 중심의 정책을 넘어 내실 있는 운영에 방점을 찍은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 추진
 - 현재까지 공공에서 조성한 메이커 스페이스의 공통된 문제는 ‘부실한 운영’과 ‘저조한 이용률’로 집약됨
 - 획일적인 장비 구성과 프로그램, 미숙한 운영인력, 부족한 운영예산, 메이커 스페이스 자체의 비즈니스모델 확립 실패 등 다양한 원인이 지적되고 있음

102) 한국과학창의재단, <2017 메이커 문화 확산 네트워크 데이 발표자료>, https://www.makeall.com/board/board/file_board/25/

- 이제까지 공공 주도로 설립한 메이커 스페이스의 한계 지점들을 분명히 평가하고,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에서 그치지 않고 ‘내실 있는 운영 계획’을 포함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지역/생활기반 제작문화 플랫폼으로서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및 운영 정책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및 운영사업은 해당 지역과 커뮤니티에 일상문화를 제고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개별 메이커 스페이스 차원에서 연결 가능한 네트워크 자원을 잇고,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계획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 기관의 미션과 특성, 해당 지역의 맥락 등을 고려한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및 운영 추진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을 비롯하여 각 지자체 문화재단 및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생활문화센터 등의 국공립 문화시설과 기관을 1차 대상으로 둘 수 있음
 - 각 기관 고유의 미션과 시설별 특성에 맞게 기관별 고유 콘텐츠를 연계한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및 운영을 추진 할 수 있으며, 이 때 각 기관의 지역적 맥락과 닿아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계획이 전제되어야 함
 - 이를 종합하여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조성 시설을 결정해야 할 것임
- 성과 중심을 넘어 창의적인 활동과 놀이에 초점을 맞춘 사업 관리 운영
 - 타 부처에서 운영하는 메이커 스페이스는 창업과 창직의 성과목표로 관리되어 메이커들의 창의적인 활동과 활발한 공유문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평가가 많음
 - 예술정책의 거점 기관으로서 만들어질 ‘메이커 스페이스’는 만드는 과정 자체에 더 주목해야하며, 창의적인 만들기와 놀이, 공유문화가 어떻게 예술과 교통하는지 관찰하며 장기적인 효과성 검증을 인내할 수 있어야 함

(2) 주요 사업 내용

- 국공립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및 운영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 국내외 메이커 스페이스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화예술정책 차원의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및 운영이 담보해야 할 기본적인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 또한 국공립 문화시설은 물론 관련된 민간주체의 니즈를 파악하여 메이커 스페이스의 조성 및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연구가 필요함
 -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시 전체적인 체계와 유형,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구상을 도출하고, 타 부처의 사업과 차별화된 사업관리운영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임

- ‘기획형’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및 운영 사업
 - 국공립 문화시설 중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의 의지와 적합도가 높은 시설을 지정하여 시범적인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가령, 기관의 의지와 부합할 경우 상징적으로 ‘백남준아트센터’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접근성이 좋은 공예 중심의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는 독특한 기획을 바탕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우선적으로 조성할 수 있음
- ‘기능형’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및 운영 사업
 - 상징성이 있거나 집중 욕성이 필요한 공간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하는 ‘기획형’ 사업 외에도 도서관이나 미술관, 박물관의 기능에 부합하는 형태의 ‘기능형’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사업이 도입되어야 함
 - 예컨대, ‘무한상상실’ 운영을 경험한 도서관이 일부 존재하며 이들은 도서관의 진화 차원에서 메이커 스페이스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는데¹⁰³⁾, 이처럼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의지가 있는 기관에 한해 조성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함
 - 단, 이 경우 기관의 미션과 특성, 해당 지역의 맥락과 메이커 스페이스의 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메이커 스페이스 인스트럭터 양성 사업
 - 기존의 국공립 문화시설에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담할 운영인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외부 전문 강사의 역량에 기대어 운영된 경우가 많았음
 -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의 핵심은 운영자의 역량과 콘텐츠로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메이커 스페이스 인스트럭터’를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정기적인 연수 프로그램, 기술 워크숍, 포럼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인스트럭터 양성학교를 운영하여 종합적인 양성과정을 기획할 수 있음
- 메이커 스페이스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 지원 사업
 - 정형화된 장비 사용법 교육을 넘어, 각 메이커 스페이스의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기 위해 메이커 스페이스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된 커리큘럼을 공유·확산하는 체계를 반영한 지원 사업을 추진함
 -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자발적으로 프로그램 갱신을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은 ‘메이커 운동’의 정신에도 부합하는 핵심 과제라 하겠음

103) 장윤금, <공공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구성 및 프로그램 분석 연구>, 2017.2

- 메이커 스페이스 네트워킹 사업

- 메이커 스페이스 이용자 간의 공유와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전국 메이커 스페이스를 연결하고 소통·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이때, 기존의 네트워크 연결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메이커페어 서울 등 전국을 대상으로 지역 단위의 메이커 페스티벌에 전략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3) 추진 시 유의점

- 메이커 스페이스의 다양화 및 지속적인 운영 재원 확보 중요

- 유형별/장르별/수준별 메이커 스페이스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조성되고 운영되어야만 메이커 스페이스가 일종의 문화예술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임
- 기본적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는 유료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나¹⁰⁴⁾, 이용료와 후원만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곳들에 대해서는 자생성 확보를 전제 운영비 일부 지원 필요

- 필수 장비 확보가 중요하지만 사람과 커뮤니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인식

- 메이커 스페이스에는 통상적으로 보유나 활용이 쉽지 않은 장비가 있어야 하며, 재료의 보관과 재활용 자재의 활용 등을 위해 반드시 창고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 이러한 장비와 공간이 확보된 만큼 추후 예산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해당 메이커 스페이스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과 그들의 커뮤니티라는 점을 명심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창의적인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유연한 운영방안, 적절한 평가방안 마련 필요

- 통상적인 '9to6'의 시설운영으로는 메이커 스페이스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하며, 특히 취미로 진입하는 메이커들을 위해 야간 운영을 비롯한 유연한 운영방안을 도입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의 접근이 아닌 이용자 커뮤니티와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기획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음
- 또한 '문화예술 거점으로서의'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은 타 부처에서 흔히 발견되듯이 단순히 해당 창작물로 창업 또는 창직을 이룬 수치로 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관련 문화의 확산이나 생활예술 활동의 발전 등 그 자체의 효과성 평가 체계를 수립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104) 공공 운영의 메이커 스페이스 다수가 무료 또는 무료로 가까운 사용료를 받음에 따라 민간 차원의 메이커 스페이스가 자립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됨. 민간 운영의 메이커 스페이스와의 건강한 공존을 위해서 반드시 적정 사용료를 책정하여 운영해야 함

라. 문예회관 혼합현실(MR)거점화 사업지원

1) 배경 및 목적

-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가상공간의 등장과 기존 공간의 변화
 -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컴퓨터 내에 구축한 가상현실(virtual reality)과 물리공간의 영역에 가상공간을 결합한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보다 더욱 혼성적인 개념의 ‘혼합현실’(mixed reality) 공간이 주목을 받고 있음
 - 이러한 관심의 기술 발전이 전통적인 off-line(현실)과 on-line(가상) 간의 융합을 이끌어 내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면서, 전통적인 공간과 가상공간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세계와 역할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임
 - 혼합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공연 기술의 개선(예: 무대 효과의 시뮬레이션)은 물론 혼합기술을 적용한 공연 콘텐츠 및 체험 콘텐츠 등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문화예술 분야에서 혼합현실 기술의 활용 가능 영역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문예회관의 새로운 역할모델의 필요성
 -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인 발전에 따른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감상 중심의 공간으로서 문화예술회관의 역할에도 장소와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난 수용자 참여 공간으로의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함
 - 예컨대, 과학기술의 단순 전시공간이던 과학관의 경우 체험, 교육 기능과 더불어 새로운 기술의 테스트 베드로 진화 발전 중임
 - 마찬가지로 지역마다 존재하면서 예술 감상의 공간으로 기능해온 문예회관의 전통적인 역할 위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혼합현실 기술을 활용한 예술적 실험의 역할 및 지역민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새로이 부여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 방향

- 공연예술과 혼합현실 기술 기반의 C.A.T.(Creative Arts Technology)랩 조성
 - 지역사회 상시적인 공연장이라는 문예회관의 기본적인 특징을 반영하여 혼합현실 기술의 개발과 적용, 피드백이 실제 공연 현장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테스트 베드로서의 플랫폼 역할을 모색

- 혼합현실의 빠른 기술적 발전 속도와 선진사례의 모방 또는 벤치마킹이 어려운 특성 상 기술 환경에 대한 분석과 발전방향에 대한 예측을 위해 창조적 혁신 모델인 Living Lab 개념을 차용하여 실제 공연의 제작 실연 공간인 문화예술회관을 혼합현실과 공연예술의 결합하는 실험공간으로서 혼합현실 Lab의 역할 모델 구축
- 혼합현실을 적용한 공연콘텐츠의 개발 및 혼합현실을 활용한 기존 공연 제작 과정의 개선, 관객 대상의 혼합현실 체험 콘텐츠의 개발 등 문화예술회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의 제작과 실연의 전 과정에 대하여 다각적이며 다층적으로 혼합현실 기술의 적용 방안을 모색

<리빙랩의 개념¹⁰⁵⁾>

- 리빙랩이란 MIT media lab의 William J. Mitchell 교수가 제안한 사용자 중심의 연구 방법
-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기술, 문화적 환경에서 실제 사용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관찰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완성
- 사용자 주도의 개방형 혁신모델로 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환경에 대하여 사용자 중심의 해결책 및 대응 방안을 도출

● 쌍방향 수요자 중심의 혼합현실 거점 구축

- 문예회관 혼합현실 거점의 수요자는 혼합현실 기술을 활용한 공연을 제작할 공연자와 공연의 관람과 감상을 위한 관객 등으로 공연의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혼합현실 거점의 수요자라고 할 수 있음
- 공연자와 공연을 위한 혼합현실 기술 개발, 관련 인력양성, 사업화 모델 개발과 관객과 내방객 대상의 혼합현실 체험, 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 등 공연자와 관객 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Two-track 접근 필요

(2) 주요 사업 내용

● 권역별 거점 플랫폼 구축

- (구조적 개방성)개방형, 융합형, 참여형 Lab의 구축 및 다양한 참여자들의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과 네트워크 중심의 열린 공간 구축 추진
- (권역별 거점 구축)문화예술회관의 수요와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서울경기(2개), 경상권(2개), 전라권(2개) 충청권(1개), 강원권(1개) 등의 권역별 거점을 선정
- (단계별 거점 확산)광역별로 거점 문화예술회관을 선정한 후 기술적 성과를 지역의 여타 문화예술회관으로 확대

●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 (거점 간의 네트워크) 기술적 성과 및 인적 자원의 교류방안 모색과 성과 확대방안 모색, 기술적 측면에서 혼합현실을 통한 콘텐츠 제작 및 시연 노하우 공유

105) 자료 : 송위진, (2012), Living Lab: 사용자 주도의 개방형 혁신모델, Issues & Policy, (59), 1-14.

- (교육 프로그램) 공연자를 위한 혼합현실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관객, 방문객을 위한 혼합현실을 적용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동시적 운영
- (유료화, 상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혼합현실 기술의 성공적인 적용을 유도하고, 공연자의 콘텐츠에 대한 수익성을 높여 콘텐츠의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료 콘텐츠의 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

<표 4-41> 연차별 사업추진 개요

구분	연차 (거점 별 예산)	내용 개요
거점 플랫폼 구축	1-2년 (1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회관 기반 혼합현실 거점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술 전문가 공연자 협업 모델 개발 거점 플랫폼 간 네트워크 및 인력pool 구축
운영 및 활성화	2-4년 (7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 방문자 체험 프로그램 혼합현실 공연 콘텐츠 개발 및 유료화 상업화 모델 개발 혼합현실 거점 플랫폼의 안정화
성과 확산	4-5년 (5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역별 거점 간 성과 교류 및 인적 교류 중소 지역 거점 구축으로 성과 확산

● 혼합현실 기술팀 운영

- 혼합현실을 실제 공연과 적용하기 위한 상주 기술팀을 운영하여, 기술 개발 및 공연 노하우 축적과 성과 확대를 위한 인적 교류의 자원으로 활용
- 혼합현실 기술을 활용한 기존 공연의 제작 방식 개선, 혼합현실 적용 공연 콘텐츠 제작을 주도할 전문 인력 확보

3) 추진 시 유의점

● 전문인력 확보 방안 마련이 관건

- 혼합현실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및 배출이 본격화되지 않았으며, 공연 관련 전문지식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인력은 더욱 극소수로 혼합현실 거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인바, 공연 기술 인력의 혼합현실 기술 재교육을 비롯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문 인력 조기 확보가 중요 과제임
-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 혼합현실 및 공연 전문인력이 참여 할 수 있는 구조를 통해 인력풀(Pool)을 느슨하게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단순 인프라 구축성 사업 지양

- 혼합현실 관련 기술의 빠른 발전과 상용 디바이스 및 관련 장비 등의 짧은 제품 주기로 단순 디바이스 중심의 인프라 구축은 쉽게 낙후화되고 운영 어려움에 처할 것임
- 플랫폼과 네트워크 중심의 거점을 구축하여 혼합현실 기술과 공연관련 전문인력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하고, 거점과 거점 간의 공유·확산으로 확장성과 유연성 확보

2 범용기술 예술융합 R&D촉진

가. 예술분야 인공지능·증강현실 육성 사업

1) 배경 및 목적

- 최근 심층인공신경망과 딥러닝의 발전으로 인공지능 분야가 큰 발전을 이룩하면서, 다양한 지능형 어플리케이션들이 상업화되고 있음
 - 특히, 이전에는 인간의 고유한 영역으로 여겨졌던 바둑, 글쓰기, 작곡, 미술 등의 영역에서도 흥미로운 결과들이 이어지면서 앞으로는 예술 분야에도 인공 지능의 응용이 확대될 것이 명약관화함
 -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넥스트 렘브란트 프로젝트, 구글의 딥드림 프로젝트¹⁰⁶⁾, 작곡 로봇 쿨리타, 작곡 앱 험온 등이 미술과 음악 분야에서 화제를 모았고, 구글에서는 로맨스 소설 인공지능 작가 등을 개발하고 있음
- 또한 ‘포켓몬고’ 현상에서 알 수 있듯이,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기술은 현대인들에게 독특한 체험을 가능하게 하고 산업-경제적 수요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닌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기술들은 실제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대체하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보조해주고 예술가들이 새로운 문화 영역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돕는 기술로 이해되어야 할 것임
-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국내 예술 분야에 적용하는 융합 프로젝트를 시도하여 우리 예술발전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
 - 새로운 형태의 예술창작 원동력으로 예술분야 인공지능 개발에 조속히 돌입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서 우리 나만의 컨텍스트에서 인공지능 창작의 가능성과 한계를 시험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106) 현재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술 ‘창작’이 가장 활발한 분야가 바로 시각예술 분야임. 마이크로소프트가 네덜란드 기술자들과 ‘넥스트 렘브란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공동 개발한 AI는 알파고와 같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렘브란트의 작품을 분석 및 학습하여 렘브란트의 화풍을 그대로 재현한 그림을 그려내는 데 성공했음. 구글 역시 딥드림이라는 이름의 미술 인공지능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다양한 화가들의 화풍을 반영하여 많은 작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작품들은 구글 본사에서 진행한 전시회 등에서 많은 인기를 모으며 팔리기도 했음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 방향

- 인공지능 기반의 예술 콘텐츠 저작 도구 개발
 -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들을 활용하여 더욱 손쉽게 다채롭고 질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예술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작 도구를 개발하여, 예술가들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예술 작품을 새로운 방식으로 창작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이를 통해, 예술 작품의 경계 및 범위를 확장해나갈 수 있고 또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다가올 미래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융합형 예술/문화 영역들을 개척해나가야 함
 - 이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단순 창작 분야들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인공지능 기술들을 문화-예술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새로운 창작 영역과 수요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임
- 스마트폰과 가상현실 헤드셋을 이용한 전통예술 체험 콘텐츠 개발
 - 최근 발전된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적재적소에서 전통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앱과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 우리나라 곳곳의 문화 유적지, 박물관 등에는 항상 그 지역 소재 또는 인물에 관한 전통 예술작품들이 존재하는 데, 이러한 작품들은 대부분 단순한 기초 정보들만 소개되는 등 제한적 서비스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스마트폰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해당 작품과 관련한 시·청각 콘텐츠를 제작하여 방문객 또는 관람객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작품의 내용과 당대의 현실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가상현실 콘텐츠들이 통합 관리되고 사용하기 편리한 앱 형태로 제공될 경우, 포켓몬고 현상과 같은 폭발력을 지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2) 주요 사업 내용

- 생성 기술을 이용한 인공지능 기반 저작 도구 개발 연구
 - 최근 인공지능 연구에서 다양한 생성모델(예: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variational auto-encoder)이 발전함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을 생성해내거나 모사해낼 수 있는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기 시작하였음

- 예컨대, 사용자가 찍은 사진을 특정 화가의 화풍을 따르는 그림으로 변형한다던가, 사용자가 간단한 스케치를 통해 밑그림을 그려주면 그 위에 자동으로 색채와 세부 사항들을 생성하여 완성하는 기술들이 이에 해당함(Isola et al., 2017).
- 이러한 기술들은 수많은 영상이미지들을 이용하여 학습한 인공지능망을 통해 가능하며, 적절한 조건들을 부여하면 원하는 특성들을 분석하여 작품에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음
- 현재 인공지능의 창작 능력 자체는 아주 제한적이지만, 기존 데이터에 기반한 모사와 변형 능력은 탁월하기 때문에 창작을 보조해주는 도구로서의 역할은 계속 확장될 것으로 기대됨
- 이와 같이 국내의 기술을 활용하여 예술분야의 인공지능 저작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술가/단체와 기술자/단체가 컨소시움을 이루어서 관련 분야의 이슈와 필요 기술을 확인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내용의 인공지능 제작 도구를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문화분야(예술계) 전문가들과 기술분야(인공지능)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기반 예술’의 필요사항들을 논의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예술가 또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과 목적, 제작 가능성 등을 망라하여 설계 과정까지 포함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
- 관련 기술 개발 로드맵과 함께 정책 효과 담지를 위한 계획 역시 꼼꼼하게 수립함
- 인공지능 기반 그림 또는 문학 창작 도구 개발
 - 이상과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예술의 각 분야별로 인공지능 기반 창작 도구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바, 현재 민간분야의 투자가 미약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일종의 마중물 사업으로서 이러한 인공지능 저작 도구 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음
 - 먼저 인공지능 그림 제작 도구들은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 다양하게 변형 가능한 범용적 모델로써 구현을 원하는 특성을 직접 모델링 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제한적이고 일률적인 제작 도구로써 예술가들 또는 사용자들에게 외면 받지 않는 도구가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인공지능 글쓰기 도구들은 인공지능의 언어생성 모델과 방대한 작품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하여, 사용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련한 다양한 참고자료들을 자동으로 추천해주고 또한 문장 표현을 제안해주는 도구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인공지능의 언어모델들은 다양한 글쓰기 모드와 특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 가능하여 원하는 장르에 맞는 글쓰기를 구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나아가서는 특정 작가들의 필체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문장들을 추천해주는 기능을 갖추어야 할 것임

- 물체, 위치 및 장소 인식 기반의 증강현실 예술 콘텐츠 사업
 - 인공지능 기술들, 특히 인식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현실 공간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용이해졌고 이를 활용해 적재적소에서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나, 아직까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부족한 상황임
 - 스마트폰의 GPS정보와 카메라로부터 얻어진 주변 환경 정보를 활용하면, 촬영되고 있는 영상 안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시각적·청각적으로 제공해주는 것이 가능하며, 특히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면 영상 내에 실시간으로 가상의 물체를 놓고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재현하는 것이 가능함
 - 이를 활용하면, 박물관이나 유적지 등에서 특정 유물과 관련한 역사적 인물을 보여준 다거나, 유적지에서 역사적 사건을 재현한다거나, 미술관에서 작품들에 관한 정보를 시청각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음
 - 인공지능과 증강현실에 기반한 역동적 콘텐츠들을 기존의 전통예술 작품들과 연계하여 체험 및 소비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전통문화자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여 교육 효과 및 방문 수요 증대에 활용할 수 있음
 - 인공지능 기반의 추천 시스템들을 통해 사용자의 성향을 분석하여 관심사에 더 알맞은 정보들을 선별하여 제공하는 것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위치를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시각화하는 동시에,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증강현실 헤드셋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체험의 강도와 종류의 다각화하게 된다면, 문화예술 감상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임

3) 추진 시 유의점

- 인공지능 기반 제작 도구 개발 시 사용될 데이터들에 대한 저작권 문제
 - 미술 또는 문학작품 제작을 위한 인공지능 도구들은 모두 방대한 기존의 미술 또는 문학 작품 데이터들을 사용하여 인공지능 모델들을 학습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사용된 데이터들이 일정부분 작품들에 반영될 수밖에 없음
 - 이것이 일정 수준을 넘어 갈 경우 생기는 저작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저작 도구들은 최종 작품들이 기존의 학습데이터와 가지는 연관정도를 분석하여 저작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기술들을 탑재하여야 할 것임
- 콘텐츠 제공 앱과 사용자 간의 편리한 인터페이스가 중요
 - 제작도구와 콘텐츠 앱들은 아무리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용자와의 편리한 인터페이스가 결여된다면 성공하기가 어려움
 - 따라서 인공지능 저작도구나 증강현실 콘텐츠 등 어떠한 기술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성능의 가장 중요한 척도로써 사용 편의성이 고려되어야 함

나. 예술관객 빅데이터 분석 연구

1) 배경 및 목적

- 소셜미디어, IoT(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기 등의 확산에 따라 빅데이터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주목 받고 있고 국내외에서 빅데이터 시장은 크게 성장하는 추세이나, 예술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구나 정책은 부족한 상황임
 - 빅데이터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로, 국내 빅데이터 시장은 2015년 2,770억 원에서 2021년 12,274억 원으로 평균 26.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한국과학기술정보원, 2016)
 - 이에 반해 국내 문화예술 종사자의 70.4%가 처음 듣거나 들어본 적은 있으나 정확히 모른다고 답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인식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예술 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맞춤형 정책과 지원사업이 필요한 상황임
- 예술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수준을 높임으로써, 관객들의 예술 향유를 확대하고 예술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내 예술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예술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영국,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과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며 정부 차원의 투자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바, 가령 영국 잉글랜드예술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영국국립과학기술예술재단(NESTA), 예술·인문연구지원회(Art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AHRC)와 공동으로 7백만 파운드의 ‘예술분야 디지털 R&D 기금’을 통해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분야 간의 협업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음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 방향

- 예술 분야 빅데이터 리터러시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
 - 예술가나 기획자, 예술교육 종사자 등의 아카데미 과정을 마련하여 예술분야에서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인지도 향상 노력이 필요함 (예: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17년 예술경영아카데미 정규과정 중에 데이터 분석 마케팅 과정을 신규 도입하였음)
 - 전문 교육 과정 도입을 통해 volume, velocity, variety 등을 핵심적인 특성으로 삼는 빅데이터의 추출 및 분석 방법을 체득한 예술분야 빅데이터 전문가의 배출이 필요함

- 예술 종사자들의 빅데이터 활용 제고
 - 빅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기존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의사결정을 직관의 영역에서 과학적 분석의 영역으로 가져온다는 의의가 있음
 - 따라서 예술과 관련한 빅데이터의 통합 수집에서부터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정확한 분석과 공유, 사용자들의 맞춤형 활용이 용이한 예술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등을 통해서 예술분야의 다양한 장르 및 가치사슬 단계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함
- 새로운 융합기술 도입을 통한 예술 빅데이터 연구 첨단화
 - 생체신호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예술 관객 빅데이터 연구를 통해서 예술의 새로운 가치를 모색 및 창출할 수 있으며, 일반 국민들의 예술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임

(2) 주요 사업 내용

- 예술 빅데이터 스쿨 개설
 - 예술 분야 내 빅데이터 인지도 및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예술 종사자 대상 빅데이터 활용을 높일 수 있는 전문 교육이 필요함
 -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예술경영아카데미 정규과정으로 ‘예술 빅데이터 이해 과정’을 개설하여 일반 예술종사자 대상 빅데이터 개념과 활용도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예술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과정’을 마련하여 예술 분야에 특화된 빅데이터 전문 인력을 양성함
- 예술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 빅데이터는 방대한 양의 다양한 데이터 구축이 우선이나 현재 예술 분야 특성 상 데이터 축적과 활용 환경이 매우 제한적인바, 예술 분야의 데이터를 통합 구축하고 또한 타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더욱 정확한 가치 분석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예술 분야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개발이 필요함
 - 또한, 정형 데이터 외에도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의 오피니언 마이닝 기법 등을 도입하여 현재 트렌드, 관객, 잠재 수요 분석 등 공공/민간 예술 단체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

● 과학기술 융합 예술 관객 빅데이터 연구 지원

- 관객의 소비 패턴이나 니즈의 단순 분석 외에도 예술과 첨단 과학기술 간의 융합을 통한 예술 관객 분석을 통해 예술 분야의 새로운 시장 창출 가능성을 모색해볼 수 있음
- 동공 분석, 행동 인식 등 다양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예술 관객 분석 연구를 통해 예술 창작과 향유의 폭넓은 발전 가능성을 고민해볼 수 있는바, 가령 관객 성향과 반응 분석, 잠재 수요 예측 등을 통해 관객의 예술 향유를 활성화시키고, 예술 분야 신기술 도입 지원을 통해 예술 창작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는 등 과학기술 융합 예술 관객 빅데이터 연구 지원으로 예술의 파급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음

<예술 관객 빅데이터 적용을 위한 주요 연구분야(예시)>

1. 동공 움직임 분석 연구

- 아이트래킹은 노동자의 움직임을 분석해서 시선 고정 순서, 고정 위치, 고정 빈도 등 시각 행동 정보를 데이터화하는 기술로, 소비자 연구나 광고/홍보 효과 측정 외에도 디자인, 영상,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고객의 안구움직임을 추적하여 피자 주문을 받는 태블릿 메뉴판,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노동자 움직임을 인식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는 스마트 안경, 사용자가 눈만으로 조작 가능한 노트북 등)
- 공연이나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관객 시선 연구를 통해 일반 관객의 작품 관람 형태 등을 파악하여 관객들의 예술 관람 실태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술 작품이 관객 개인의 시선 변화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기술 연구를 통해 예술 창작과 감상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2. 관객 표정 분석 연구

- 미국 디즈니연구소,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캐나다 사이먼프레이저 대학교는 얼굴 표정 분석을 통해 관객 반응을 평가하는 딥러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음. FVAEs(factorized variational autoencoders)라는 기법으로, 관객들이 웃거나 미소 짓는 표정을 몇 분간 분석하여, 이후 진행될 영화에서 관객 반응을 예측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음. 연구팀은 4대의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된 400석 규모 극장에서 '정글북', '주토피아' 등 유명 영화를 상영하며 관객 표정을 모니터링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3,179명 관객의 16만 개 안면 신호를 포착하였음¹⁰⁷⁾

3. 생체 신호 측정 연구

- 생체신호는 심전도, 뇌전도, 근전도, 맥파 등 사람의 신체에서 발생하는 신호에 대하여 측정하는 값으로, 생체신호 측정 센서가 내장된 밴드, 손목시계, 의복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등장으로 생체신호의 측정, 분석, 전송이 용이해졌음. 예술 관객 대상 생체 신호 측정 연구를 통하여 향후 예술 작품을 관람하는 관객의 성향 및 활동, 만족도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며, 이를 예술 공간 사물인터넷과 연결하여 예술 관객 대상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4. 딥러닝 적용 행동 인식 연구

- CCTV를 통해 취합되는 영상 데이터를 딥러닝 방식으로 자동 분석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비용과 인적 오류를 줄이는 기업용 플랫폼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음. 예술 공간 내 예술 관객의 동선 및 행동 분석을 통해 예술 관람 환경 개선, 관객 서비스 향상, 관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음

107)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20356>

3) 추진 시 유의점

- 예술 분야의 빅데이터 인지도 개선 및 활용도 제고 시급
 - 예술 종사자들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을 고려할 때,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전문 교육을 통해 빅데이터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예술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예술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예술 현장의 수요와 니즈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연구 과제의 단계별 개발 필요
 - 첨단 과학 기술과 융합한 예술관객 빅데이터 연구는 잠재적으로 예술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예술 시장 확대를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예술 현장에서의 니즈와 수요, 활용도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실효성 있는 연구 과제 개발을 통해 예술 분야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기술을 우선 도입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예술 종사자들이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손쉽게 자신의 작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다. R&D 사업 지원 및 모델 프로젝트 발굴·시연 지원

1) 배경 및 목적

-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기술 발전은 예술분야에서 단순한 표현양식의 변화를 넘어 내용과 감상의 방법에 이르는 근본적인 변화를 추동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의 기술은 이미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새로운 차원에서 촉진하고 있으며, 오페라 로봇 ‘미온’ 등 로봇틱스 기술 역시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임
- 현재 예술분야의 R&D 구조는 원천 기술의 개발을 통해 성과물을 생산하고, 그 이후 한 참 뒤에 예술 콘텐츠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는 ‘step by step’ 구조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서 실제 적용까지 장시간이 소요됨
 - 이 과정에서 기술 R&D 전문가와 콘텐츠 생산자, 즉 예술가 사이의 상시적인 소통 채널이 부족하여 실제로 필요한 기술이 개발되지 못한다는 평가도 제기되어 왔음
-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기술 발전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향후에는 기술·예술 융합형 선도적 프로젝트(flagship project)를 빠르게 도출하여 가시적인 모델로 삼아야 함
 - 기술 R&D와 예술 활용이 접목된 새로운 융합 콘텐츠 개발·시연을 선도적 프로젝트 단위로 통합하여 R&D 결과물이 시연에 즉시 적용 및 검증 가능한 사업 구조 필요
 - R&D 전문가, 예술가, 관계 분야 전문가를 망라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실효성을 담보하고, R&D결과를 곧바로 예술 콘텐츠로 시연함으로써 R&D 방향과 내용에 피드백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Test bed) 기능 역시 수행함

2) 추진 방향 및 내용

(1) 추진 방향

- 문화예술 R&D+시연 패키지 지원의 모델 수립
 - (R&D+예술 콘텐츠 시연) 4차 산업혁명 관련 R&D 분야와 예술장르(공연, 음악, 미술, 문학)의 긴밀한 융합을 목표로 기술 개발 R&D와 예술 콘텐츠 시연을 패키지로 묶어서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을 시도해야 할 것임
 - 문화예술R&D와 콘텐츠 시연지원을 통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예술의 대중성 확보와 기술의 적용 영역 확장을 통한 신기술 개발 촉진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지원 방식을 모색함

< UBS('16)의 4차 산업혁명 준비평가 보고서에서 주목한 문화예술 R&D정책>

- Digital R&D Fund for Arts and Culture 2012~15(영국 예술 위원회) : 총 700만 유로 규모, 53개의 프로젝트를 지원, 예술가-기술-연구자의 협업 유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예술향유방식과 접근성 제고에 집중
- Mobile. In Touch with Digital Creation 스위스 예술 위원회 : 총 1,800만 CHF(스위스 프랑) 인터랙티브 디지털 예술에 대한 창작 지원 중심으로 VR 컨퍼런스 Virtual Reality Live행사에 VR예술체험의 형태로 결과물 전시
- 두 사례 모두, R&D 단계에서 협업을 통한 기획/개발과 예술 향유 단계를 고려한 결과물 유통/소비 모두에 있어서 융합과 협력을 기본으로 설계하고 있음

● 기술과 예술, 장르와 분야 간 협업을 통한 융·복합 모델 도출

- 예술 장르 간 크로스오버, 기술 영역 간 교차 적용, 예술과 기술 간 융·복합을 통해 다양한 창작 능력의 촉발 및 사회·문화적 다양성과 독창성 증진에 기여함
- 전문가와 비전문가, 예술가와 비예술가 간의 협업 활동을 통한 기술과 예술 간의 혼종성을 통한 창의적 결과물을 도출하되, 원천기술의 확보를 위한 R&D가 아닌 다양한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예술 콘텐츠로의 적용에 대한 R&D에 초점을 맞춤

(2) 주요 사업 내용

● 문화예술 R&D+시연지원 플래그십 프로젝트(예시)

- 3개 예술 분야, 1개 융·복합 분야 등 4개 사업 영역에 대해 기존 예술분야 연구사업보다 큰 규모의 플래그십 지원사업 시행
- 공학분야의 기술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예술분야 현장 적용을 겨냥한 방식과 목표를 가지고 첨단 기술 R&D 및 시연 지원 사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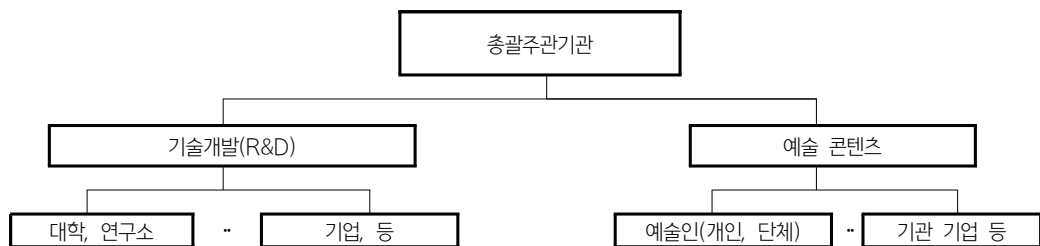
<표 4-42> 주요 장르별 R&D 사업추진 개요

구분	기술 분야	연구 단계	수행기간	예산(단위 : 억원)		비고
				R&D	시연지원	
공연	로봇기술, 인공지능, 지능형 조명, IOT, 몰입형 음향기술 등	개발	2년	20	20	
		시연	1년			
시각	VR, CGI, 로봇기술, 인공지능 화가 등	개발	2년	15	15	
		시연				
문학	인공지능 작가/동화구연 등	개발	1년	5	5	
		시연	1년			
융합	융합 장르+복합 기술	개발	2년	10	10	
		시연	1년			

● 문화예술 플래그십 R&D 사업 추진체계

- R&D 기관과 예술 콘텐츠 시연자 간의 협업구조를 담보로 컨소시엄 형태를 기본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수
- 각 과제별로 총괄주관기관은 예술콘텐츠의 발굴 시연단체에 주도권을 주고 기술개발 주관기관과의 R&D는 물론 기술 개발 후 시연의 세부기능까지 총괄하여 사업을 수행
- 기술개발 주관 및 참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 등으로 구성하고, 예술 콘텐츠 참여기관은 예술인(개인, 단체), 기업 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

<표 4-43> 문화예술 플래그십 R&D 사업의 추진체계



3) 추진 시 유의점

● 사업의 자율성과 유연성, 연계성과 지속성 확보 필요

- R&D예산과 시연지원(민간경상보조) 예산 항목 상의 차이 등 정책 단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여 새로운 사업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해야함
- 또한 단순 시의성에 영합하여 ‘4차 산업혁명 키워드 보여주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연구 및 시연 패키지 사업의 지속성과 연계성이 담보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 결과물과 영향력이 지속가능한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 미래 기술과 예술 콘텐츠 사이의 소통을 위한 각별한 관심 필요

- 기술개발과 예술 콘텐츠 시연자간의 소통의 부재 또는 상호 신뢰의 부족으로 사업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관리 및 소통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 따라서 사업 추진체계에서 언급한 컨소시엄 구성시에 사업 추진시 필요한 세부 기능별 역할 분담을 지나치게 정형화하는 대신에 컨소시엄 내에서 합의 결정(참여기관이 중복 기능 수행 가능)하게 하는 등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미래 기술과 예술 영역의 결합은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나 실패의 위험 또한 비례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사업의 성패에 대한 단순 계량적 판단보다 영향력과 혁신 자체 의미와 성과에 대한 정성적 판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예술정책 미래비전과 전략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

정중은(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기반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최보연(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기반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김연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기반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연구원

이정미(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기반정책연구실 연구원)

한지연(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기반정책연구실 연구조원)

집필진

곽동근(메타기획컨설팅 팀장)

권용민(한국문화예술위원회/박사)

김상철(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김석홍(예술경영지원센터 전문위원)

김세훈(숙명여자대학교 부교수)

김은희(예술경영지원센터 팀장)

김재순(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팀장)

김종휘(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 관장)

김연진(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현경(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김해보(서울문화재단 본부장)

박소현(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기반정책연구실장)

서우석(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손경년(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양혜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유상진(생활문화진흥원 팀장)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정미(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임미혜(서울문화재단 본부장)

임학순(가톨릭대학교 교수)

전병태(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중은(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창호(한국문화예술위원회/박사)

조민수(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조현성(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보연(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해민영(예술경영지원센터 팀장)

허은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홍기원(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예술정책 미래비전과 전략 연구

발 행 인 : 도종환

발 행 처 :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전화 (044) 203-2000 팩스 (044) 203-3447

<http://www.mcst.go.kr>

연 구 기 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 행 일 : 2017년 10월

인 쇄 처 : 더크리홍보 주식회사